



#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조한범 | 권재범 | 박지원 | 이재현  
이현태 | 최윤정 | 황재호





#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 연구책임자

조한범(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권재범(한국외국어대학교 계약교수)  
박지원(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연구위원)  
이재현(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현태(인천대학교 교수)  
최윤정(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황재호(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 종합연구 사업(4/4년차)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KINU 연구총서 21-34

---

발행일	2021년 12월 30일
저자	조한범, 권재범, 박지원, 이재현, 이현태, 최윤정, 황재호
발행인	고유환
발행처	통일연구원
편집인	통일정책연구실장
등록	제2-02361호 (97.4.23)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화	(대표) 02-2023-8000 (FAX) 02-2023-8296
홈페이지	<a href="http://www.kinu.or.kr">http://www.kinu.or.kr</a>
기획·디자인	세일포커스(주)(02-2275-6894)
인쇄처	(주)디자인여백플러스(02-2672-1535)
ISBN	979-11-6589-078-0 979-11-6589-063-6 (세트)
가격	16,500원

---

© 통일연구원,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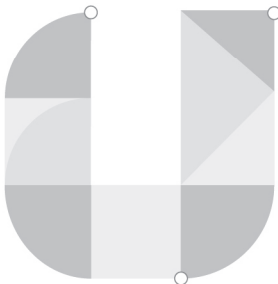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02-734-6818), 사무실(02-394-0337)



#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 차례

요약 .....	11
I. 서론 .....	21
II.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을 위한 중·장기 및 근미래 전략 .....	31
1.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의 중·장기 전략과 정책과제 .....	33
2.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을 위한 근미래 환경과 전략 .....	94
III. 신남방정책을 위한 근미래 주요사업 추진방안 ...	119
1. 경제통상 .....	122
2. 사회문화 .....	169
3. 외교안보 .....	203
IV. 신북방정책을 위한 근미래 주요사업 추진방안 ...	245
1. 경제통상 .....	247
2. 사회문화 .....	278
3. 외교안보 .....	311

V. 결론 .....	339
1. 근미래 신남방정책 추진방안 .....	343
2. 근미래 신북방정책 추진방안 .....	345
3. 평가 및 시사점 .....	347
참고문헌 .....	353
최근 발간자료 안내 .....	373

## 표 차례

〈표 II-1〉 신남방정책의 주요 목표 및 추진과제 .....	35
〈표 II-2〉 한-아세안 경제분야 협력 계획 및 성과 .....	38
〈표 II-3〉 한-신남방 국가 정상회담 개최 현황 .....	53
〈표 II-4〉 한-신남방 국가 간 안보분야 협력 현황 .....	55
〈표 II-5〉 신북방정책의 주요 분야 및 추진과제 .....	60
〈표 II-6〉 한국과 신북방지역 국가 간의 경제통상 분야 협정/양해각서 체결 현황 .....	62
〈표 II-7〉 한국과 신북방지역 국가 간의 사회문화 분야 양해각서 체결 및 행사 사례 .....	71
〈표 II-8〉 신북방지역 국가들과의 고위급 및 실무진 회담 .....	76
〈표 II-9〉 중앙아 3국의 한반도평화정책 지지 사례 .....	79
〈표 II-10〉 해외 한국문화원의 기능과 역할 .....	84
〈표 II-11〉 신남방 및 신북방 지역 국가의 ICT 발전지수(IDI) .....	89
〈표 II-12〉 신남방 및 신북방 지역 국가의 글로벌 보건안보지수 .....	91
〈표 III-1〉 신남방 국가 경제성장률 전망치 비교 .....	123
〈표 III-2〉 신남방지역 무역원활화 조치 이행률 .....	133
〈표 III-3〉 인도의 지역무역협정 구분 및 참여 현황 .....	136
〈표 III-4〉 2019~2020년 인도 유무선 인터넷 가입자 수 .....	140
〈표 III-5〉 선택과 집중을 위한 한국의 경쟁력 확보 가능 분야 .....	142
〈표 III-6〉 신남방 국가의 ICT 발전지수 .....	162

〈표 Ⅲ-7〉 신남방 국가의 글로벌 혁신지수 .....	163
〈표 Ⅲ-8〉 국가별 세대 인구비율 추이 .....	173
〈표 Ⅲ-9〉 한국의 주요 유관기관 해외 네트워크의 지역별 분포 .....	191
〈표 Ⅲ-10〉 한국과 아세안의 영향력 조사 .....	195
〈표 Ⅲ-11〉 2017년 이후 신남방 국가 상호 정상 방문 일지 .....	206
〈표 Ⅲ-12〉 아세안 지역의 코로나19 상황 .....	214
〈표 Ⅲ-13〉 공적개발원조를 통한 대동남아 보건협력 사업 .....	232
〈표 Ⅳ-1〉 신북방 국가들의 4차 산업혁명 대비 혁신역량 평가 (2020년) .....	248
〈표 Ⅳ-2〉 러시아 NTI 9대 전략분야(시장) .....	249
〈표 Ⅳ-3〉 러시아 극동지역 선도개발구역 지정 현황 .....	254
〈표 Ⅳ-4〉 러시아 기술의 한국기업 활용사례 .....	262
〈표 Ⅳ-5〉 한중국제협력시범구 발전 구도 .....	270
〈표 Ⅳ-6〉 한중국제협력시범구의 주요 지원정책 .....	271
〈표 Ⅳ-7〉 러시아 인공지능 분야 발전을 위한 과제 .....	273
〈표 Ⅳ-8〉 신북방 국가의 의료시스템 평가(2021년) .....	280
〈표 Ⅳ-9〉 연해주 방문 외국인 관광객 추이(2017~2019년) .....	284
〈표 Ⅳ-10〉 러시아의 한류현황지수(2018~2020년) .....	285
〈표 Ⅳ-11〉 러시아 내 한국이미지와 인식변화(2019~2020년) .....	285
〈표 Ⅳ-12〉 외교부의 코로나19 대응 포괄적 긴급지원 프로그램 .....	289



〈표 IV-13〉 한국의 소프트파워 순위변화(2017~2019년) .....	295
〈표 IV-14〉 K-방역 3T(Test-Trace-Treat) 국제표준화 분야(18종) ...	298
〈표 IV-15〉 블라디보스톡 입항 크루즈 관광객 수(2016~2019년) .....	304
〈표 IV-16〉 신북방 국가별 관광객 유치 전략: 코로나19 소멸단계 .....	309
〈표 IV-17〉 신북방 국가별 한국유학생 수(2020년 기준) .....	310

# 그림 차례

〈그림 I -1〉 과제 개념도 .....	28
〈그림 II -1〉 한국-신남방 국가들 교역 규모 .....	39
〈그림 II -2〉 한-신남방지역 주요 국가 간 교역 규모 .....	42
〈그림 II -3〉 신남방 국가 국민들의 한국 방문 숫자 .....	46
〈그림 II -4〉 한-아세안 상호방문객 .....	46
〈그림 II -5〉 한국에 방문한 아세안 유학생 및 공공분야 연수생 .....	48
〈그림 II -6〉 2019년 방한 아세안 국민들의 국적 비율 .....	50
〈그림 II -7〉 한국-신북방지역 주요 국가들 간의 교역 규모 .....	65
〈그림 II -8〉 한국-중앙아시아 5개국 간의 교역 규모 .....	69
〈그림 II -9〉 한국에 대한 러시아 국민들의 이미지 .....	72
〈그림 II -10〉 신북방 국가들의 방한 규모 .....	74
〈그림 II -11〉 한-몽 그린벨트 조림사업 .....	81
〈그림 III -1〉 2025년 인도 경제의 강점과 기회 .....	126
〈그림 III -2〉 인도 Make in India의 25대 중점 육성분야 .....	130
〈그림 III -3〉 2021년 기준 국가별 디지털 채택률 비교 .....	141
〈그림 III -4〉 인도 5대 산업회랑 MAP .....	147
〈그림 III -5〉 신남방지역의 다자 FTA 체결 구도 .....	150
〈그림 III -6〉 한류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	174
〈그림 III -7〉 디지털 연계 문화유산 관리 모델 개념도 .....	190
〈그림 III -8〉 신남방정책의 평화부문 협력 어젠다 .....	208

〈그림 Ⅲ-9〉 KOIP의 구성 개념 .....	227
〈그림 Ⅳ-1〉 신북방정책 협력대상국과의 교역 .....	258
〈그림 Ⅳ-2〉 신북방정책 협력대상국과의 투자 .....	259
〈그림 Ⅳ-3〉 신북방 국가에 대한 디지털·혁신산업 협력 이원화 전략 .....	264
〈그림 Ⅳ-4〉 동북3성과 한중국제합작시범구 위치 .....	269
〈그림 Ⅳ-5〉 마즈다-솔러스 엔진조립 신공장 .....	275
〈그림 Ⅳ-6〉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코로나19 일일 감염자수 변화 ...	279
〈그림 Ⅳ-7〉 극동지역 중심의 관광협력 활성화 전략 .....	293
〈그림 Ⅳ-8〉 신북방지역에서 한국의 문화전략 전개 개념 .....	297
〈그림 Ⅳ-9〉 전 세계 크루즈 여행객 수(2009~2020년) .....	302
〈그림 Ⅳ-10〉 스키 리조트 '고르니 보즈두흐' 전경 .....	305
〈그림 Ⅳ-11〉 근미래 신북방정책 외교안보 전략 목표: 전통 안보와 신안보를 포함하는 포괄적 평화협력 구상 .....	338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은 4강 외교에 편중된 한국 외교의 공간을 확장하는 동시에 한반도의 평화·번영 및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국제 전략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미래 전략의 모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토대로 근미래 주요 사업을 각각 경제통상, 사회문화, 그리고 외교안보 분야로 나누어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II장에서는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의 중·장기 전략과 정책과제에 대한 평가와 아울러 근미래 환경 및 전략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은 경제통상, 사회문화, 외교안보 영역에서 다양한 성과를 거두어 왔다. 하지만 일부 사업 중 가시적 성과가 미진하거나 진척되지 않은 부분도 존재한다.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협력국 간 쌍방향성이 아닌 한국 중심의 일방향적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과 성과들이 특정 국가에 치중되어 있다는 평가가 존재한다.

향후 신남방정책 및 신북방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대상 지역을 둘러싼 경제통상, 사회문화, 외교안보 분야와 관련한 근미래 환경의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신남방 및 신북방 지역 모두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포괄적 안보위협에 부상,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등과 같은 변화가 예측된다. 신남방지역 근미래 환경의 경우 경제통상 분야에서 미중 무역 분쟁의 지속과 코로나19 등으로 타격받은 경제를 회복시키려는 노력이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MZ세대의 역할 확대, 민주주의 및 세계화에 대한 가치 재해석 현상 강화, 초국경적 질병 및 감염병 등으로 인한 사회안전망에 대한 관심 증가 등의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강대국 간의 경쟁 심화, 비전통

및 인간안보 문제의 부상 등과 같은 환경 변화가 예상된다.

신북방지역 근미래 환경 변화의 경우 경제통상 분야에서 역내 국가들을 중심으로 디지털 경제 및 혁신산업 육성이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한 변화가 예상되며, 특히 신북방지역 국가들의 보건 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한 협력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안보 분야의 경우 역내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 격화, 미국과 러시아 간의 대립, 그리고 미국에 대응한 중국과 러시아 간의 밀착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과를 높이기 위해 향후 해당 지역을 둘러싼 근미래 환경 변화에 조응하여 주요사업들이 제시될 수 있다. 신남방정책을 위한 근미래 전략의 경우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역내 국가들의 산업화 및 경제성장 지원, 소그룹 자유무역주의 대응 및 새로운 가치사슬(value chain) 구축, 디지털 전환 및 기후변화 공동 대응 전략 등이 제시될 수 있다. 사회문화 분야의 경우 교육 및 연구 ODA, 문화 ODA, 한류와 디지털 접점의 확대,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ASCC) 보건·의료 실천 목표 달성의 기여 등이 제시될 수 있다. 외교안보 분야의 경우 한국형 인도-태평양 전략의 정립 및 추진, 중견국 외교에 기반한 대신남방지역 접근, 비전통 안보 협력, 인도와의 외교안보 협력 강화 등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신북방정책을 위한 근미래 전략의 경우 경제통상 분야에서 신북방지역 국가들과의 연계를 통한 디지털 경제 및 혁신산업 육성, 극동지역 및 동북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거점화 등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문화 분야의 경우 보건의료 및 헬스케어 분야 패키지형 협력, 극동중심의 관광기반 공고화 및 협력 활성화, 소프트파워 강화를 통한 상호 신뢰기반 구축 등이 가능할 것이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한국 주도의 역내 다자

채널 구축, 미래지향적 양자협력 플랫폼 구축, 북방국가와의 협력을 통한 한반도 긴장완화 등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III장에서는 신남방정책을 위한 근미래 주요사업을 경제통상, 사회문화, 외교안보 분야별로 분석했다. 경제통상 분야의 경우 신남방지역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미중의 지경학적 경쟁으로 촉발된 가치사슬의 파편화가 심화되면서 성장동력 확보가 절실하다. 글로벌 및 역내 가치사슬을 재구축하고 신남방지역 경제의 지속성장과 복원력 회복을 지원하는 것은 지역 공동의 번영에 기여하는 길이다. 따라서 근미래 경제통상 파트너십은 신남방지역 국가들의 성공적인 산업 공업화 이행과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보호주의가 확산되는 추세에서 통상질서 재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신남방지역 경제발전 단계 및 분야별로 필요한 지식·경험·제도·인프라 등 전방위 협력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기반하여 산업 구조 고도화를 지원하는 글로벌 가치사슬(GVC) 협력, △디지털포용 혁신기금(DIIF)을 설치하여 디지털 문해율을 높이는 인적역량강화 사업 및 미개발지역 디지털 인프라 구축 지원,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등 기후변화 대응 분야 한국의 정책·경험 공유, 신기술 공동 개발과 사업화, △전략적인 RCEP 및 CEPA 업그레이드 이행과 CPTPP와 같은 소다자 지역협약체 참여를 우선 추진사업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회문화 분야의 경우 지역전략의 성공을 위한 중·장기적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대한 인식 수준 제고와 교감의 확대가 필요하다. 신남방정책은 상호 이해 증진을 통한 사람공동체 달성을 목표로 하고 쌍방향적 인적·문화교류 확대를 목표로 한 전략과 실천과제를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신남방지역에 보다 밀착하여 근미래 사회

문화의 변화상을 포착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한국과의 협력 수요를 유연하게 반영하며 나아가 한국과 신남방지역이 상호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수요-역량 결합형 협력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류 등을 통해 얻은 문화적 소프트파워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여타 부문으로의 확산 및 연계를 통해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국가에 대한 호감도와 신뢰도 제고와 나아가 지역 리더십 함양의 토대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상기의 전략 방향에 따라, 신남방정책 사회문화 주요사업으로 △신남방지역 사회문화 이해의 키워드인 MZ세대(18~35세)로 아세안·인도 전체 인구의 50% 이상 차지)에 대한 관심 증진과 교육, 문화, 연구 교류 활동 확대, △디지털을 매개로 한 문화 교류 ODA, OTT 등 플랫폼을 활용한 디지털 공공외교 추진, △코로나19로 중요성이 높아진 인간안보 실천을 위해 한국의 감염병 대비 정보통신기술(ICT)과 기기 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의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일정한 성과가 도출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과거 동남아 국가들이 한국의 대동남아 외교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던 일관성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적으로 동남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했다. 장기적으로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도 갖추었다. 다른 한편 신남방정책의 경제, 사회문화 분야는 빠른 진전을 보인 반면 외교안보 분야의 구조적 문제와 추진 주체의 관심 부족 등은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평가된다. 한편 한국과 동남아 국가를 둘러싼 환경은 외교안보 분야의 전략적 협력의 필요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미중 강대국 경쟁이란 변수는 한국이나 동남아 모두에 큰 전략적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적으로 비전통 안보와 인간안보 문제의 심각성, 해결의 필요성도 함께 대두되고 있다.

제반 환경과 신남방정책의 성과 및 한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 추진 방향의 설정이 필요하다. 첫째, 점차 지역 국가들의 동의를 얻어 확대되고 있는 인도-태평양이라는 새로운 지역 범위 인식에 대한 한국의 대응이 필요하다. 아세안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는 만큼 이 과제는 신남방정책과 연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신남방정책을 핵심에 놓는 한국만의 인도-태평양에 대한 관점(Korea Outlook on the Indo-Pacific: KOIP)을 천명할 때다. 그리고 이 안에 기존 아세안, 인도뿐만 아니라 오세아니아의 도서국가, 서남아 국가까지 포괄하고 한반도 문제와 유기적 연계를 추진해야 한다.

둘째, 인도-태평양지역으로 넓어진 한국의 외교안보적 관점뿐만 아니라 신남방정책에 핵심에 놓고 있는 아세안 지역을 고려할 때 지역 중견국으로서 한국의 역할에 대한 위상 재정립이 요구된다. 한국은 강대국은 아니면서 선진국에 진입했다. 동시에 개발도상국을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개도국의 입장을 잘 이해한다. 이를 적절히 조화시켜 동남아의 목소리를 듣고 선진국에 옮기고, 선진국의 요구사항을 동남아에 전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지역 소다자 제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코로나19 상황뿐만 아니라 이미 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비전통, 인간안보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협력의 방향이 필요하다. 특히 신남방정책의 핵심 대상이 아세안 지역이 비전통, 인간안보 문제에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분야의 확대가 필요하다. 기존 아세안과 인도에 대해서 보건의료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 통합 분야 협력을 통해 아세안 국가의 회복, 사이버 안보, 데이터 안전 분야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또한 해양 분야에서는 한국, 동남아 공통의 관심사인 불법어업 관련 협력이 유망하다.



마지막으로 신남방정책에 포함되었으나 협력이 지지부진했던 인도 방면에 대해서도 근미래에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해양협력 분야와 방위산업 분야에서 협력할 필요가 있다. 이 분야는 한국과 인도의 공통 관심사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안보분야에서 인도 측의 협력수요가 크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IV장에서는 신북방정책을 위한 근미래 주요사업을 경제통상, 사회문화, 외교안보 분야별로 분석했다. 우선,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신북방지역 국가들의 디지털 경제 및 혁신산업 육성, △러시아의 극동지역 및 중국의 동북지역 개발을 추진 배경으로 제시하고, △신북방 국가 디지털 혁신 협력의 이원화, △유라시아 경제 편입을 위한 러시아 극동 및 중국 동북지역의 거점화를 추진 목표로 제시했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 수요 증가, △극동지역 중심의 관광 활성화 필요, △한국 대중문화 콘텐츠 및 한류의 지속적 확산을 정책 추진의 필요성으로 분석한 후, 이를 기반으로 △의료보건 및 헬스케어 분야 패키지형 협력, △극동 중심의 관광기반 공고화 및 신북방·동북아 평화조성 기여, △소프트파워 강화를 통한 상호신뢰 기반 구축을 추진 목표로 설정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미중 경쟁 및 미러 대립 격화, △중러 관계 밀착, △한반도 정세의 경색 국면 지속, △감염병 방지 등 신안보 이슈의 대두, △신정부 출범 등의 상황 속에서 평화와 번영을 표방하는 신북방정책이 더욱 중요해졌음을 추진 배경으로 강조하면서, △전통 안보와 신안보를 포함하는 포괄적 평화협력 추진, △신북방 국가들과의 협력과 연대로 외교의 다변화 추구를 추진 목표로 제시했다. 이러한 신북방정책의 분야별 근미래 환경과 전략 분석하에서 미중 전략경쟁 구도 속에서 한반도 분단체제와 동아시아 패러독스 해소를 위해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역내 다자협력관계 형성을 추구하는 한국 정부에 다음과 같은 정책 추진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신북방정책의 경제통상 분야에서 한국은 신북방지역 국가들의 디지털 경제 및 혁신산업 육성 현황을 감안해 공동 디지털 생태계를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혁신산업 협력의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러시아 등 기술 선진국들의 기술 수요를 파악하고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을 형성해서 혁신산업 협력의 확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러시아 극동 지역의 선도개발구역 및 중국 동북의 한중 국제협력시범구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각국 정부와 적극적인 정책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이와 같은 경제협력을 통해서 러시아 극동과 중국 동북을 향후 한국이 극동지역과 동북지역을 넘어 유라시아 경제로 진출하는 거점지역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둘째, 신북방정책의 사회문화 분야에서 한국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중앙아시아 각 국가와 의료보건 시스템을 구축하고 방역체계를 협력해야 한다. 중앙아시아 지역은 의료보건체제가 부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이 국제표준화된 K-방역모형을 보급함으로써 의료보건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의료보건 협력은 일회성이 되거나 단순한 지식 전달의 차원에서 진행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의료보건 협력의 토대를 닦는 데에 중점을 뒀야 한다. 한국과 러시아, 일본 등을 잇는 환동해 크루즈는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신북방지역 국가들과의 문화교류를 확대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한류의 확산을 계기로 신북방 국가에서 한국문화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접점을 확대해야 한다. 해당 국가에 설립된 한국문화원의 문화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외교안보적 관점에서 한국 정부는 포괄적 평화협력과 외교 다변화를 추진해야 한다. 미중 간 경쟁구도 속에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신북방 국가들과 공동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독자적인 완충지대를 형성해야

한다. 주요 과제로는 △한국 주도의 역내 다자 채널 구축, △미래지향적 양자 협력 플랫폼 구축, △신북방 국가 협력을 통한 한반도 긴장 완화 유도 등을 선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역내 다자 채널 구축’의 세부 방안으로는 중간국 대화체 건설, 신안보 공동대처 플랫폼 결성 주도(신북방 보건 안보 이니셔티브, 탄소중립 이니셔티브) 등을, ‘양자 협력 플랫폼’으로는 북방 주요국과의 정상회담 및 고위급 회담 정례화(최고위급 동방포럼 참여), 한러 2+2(외교, 국방) 전략대화체 신설, 다자·양자 공공외교 채널 활성화 등을, ‘북방 채널을 통한 한반도 긴장 완화’ 방안으로는 ‘한-중앙아 협력포럼’이나 ‘한국-중앙아시아 다이얼로그 플러스(+)' 산하에 한반도-중앙아 비핵화 논의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은 미중을 중심으로 한 4강 외교를 넘어선 다변화의 모색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은 선진국 위상에 부합하는 한국의 국가발전전략이자 세계전략으로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동시에 해결해야 할 과제를 내재하고 있다.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의 3P 기조의 관철을 위해 평화(Peace)와 번영(Prosperity) 부문 간 균형과 조화가 필요하며, 특히 사람(People)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입체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역내 국가에서 한국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인식이 보다 확고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쌍방향 교류의 정립을 위해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에도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의 기조는 유지되어야 하며 발전적으로 진화되어야 한다.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성찰적 평가를 바탕으로 한국형 세계전략의 본격화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한반도,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 근미래 환경, 근미래 전략, 경제통상, 사회문화, 외교안보

# Near-future Strategies and Major Tasks for New Southern and New Northern Policy

*Cho, Han-Bum et al.*

The New Southern Policy (NSP) and the New Northern Policy (NNP) have the characteristics of an international strategy designed to expand the capacity of Korean diplomacy, focused on diplomacy with the four major powers (the U.S., China, Japan, and Russia), while promoting peace, prosperity, and national development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near-future strategies of the NSP and NNP. Based on the comprehensive evaluation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NSP and NNP, this study presents policy tasks by dividing major tasks required in the near future into areas of economy and trade, society and culture, and diplomacy and security. Chapter II evaluates the mid- to long-term strategies and policy tasks of NSP and NNP and analyzes the near-future environment and strategies. Next, Chapter III analyzes the major tasks needed in the near future for the NSP in each area of economy and trade, society and culture, and diplomacy and security. Lastly, Chapter IV analyzes major tasks of the near future for the NNP in each area of Economy and trade, society and culture, and diplomacy and security.

NSP and NNP are also meaningful in that they sought to diversify South Korea's foreign policy beyond diplomacy with the four major powers, mostly focused o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s South Korea's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and global strategy, the NSP and NNP have made certain achievements that have elevated Korea to the status of advanced countries. However, they still have inherent challenge that need to be resolved. First, balance and harmony between peace and prosperity should be attained to fully implement the 3P principles of NSP and NNP, along with more active and diversified investment in people. Efforts need to be made to raise the awareness of South Korea's status and role more firmly among the regional countries, and various measures must be devised to promote two-way exchanges. In the future, the principles of NSP and NNP must be maintained and evolved further. In addition, a Korean style global policy should be fully pursued based on the introspective evaluation on the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the NSP and the NNP.

**Keywords:** Korean Peninsula, New Southern Policy, New Northern Policy, Near-future Environment, Near-future Strategy, Economy and Trade, Society and Culture, Diplomacy and Security

# I. 서론





탈냉전 이후 세계는 새로운 질서재편 과정에 있다. 동서 진영 간 구도는 해체되었으며,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양강체제는 다극화경향을 보이고 있다. 탈냉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형태의 국제분쟁이 증가하는 역설적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테러, 기후 변화, 그리고 팬데믹 등 현대인류가 공동으로 직면한 새로운 위협의 등장에 따라 전통적 안보개념은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인간안보(human security)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탈냉전기 국제분쟁의 증가와 인류공동의 위협의 부각에 따라 초국경협력과 지구촌차원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지만 국제기구의 역할은 한계가 있으며, 강대국들은 국제적 책임보다 자국우선주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국제질서의 다극화와 아울러 무극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오늘날 한반도와 동아시아는 두 개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우선 현대사회의 새로운 위협이다. 코로나19 사태로 현대사회는 전대미문의 위협을 경험했으며, 한반도·동아시아도 예외가 아니다. 코로나19 사태는 보건·의료의 영역을 넘어 정치, 경제, 안보 등 지구촌 전반에 전대미문의 피해를 초래했다. 코로나19 사태는 하나의 사례일 뿐이며 인류는 이미 현대사회의 고유한 새로운 위협에 직면해 있다. 비극적인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사고에 이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현재 진행형이다. 코로나19 사태는 한·중·일을 포함한 역내 모든 국가 공동의 문제이며, 후쿠시마 원전사고도 동아시아 전역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비무장지대(Demilitarized Zone: DMZ)와 남북 접경지역에서는 말라리아와 아프리카 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 솔잎혹파리병 등이 지속적으로 발병하고 있다. 남북한의 공유하천은 수인성 전염병의 통로가 될 수 있으며, 홍수도 남북 양측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 남북한은 경계를 넘는 공동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한반도 분단체제와 동아시아 패러독스는 역내의 구조적 위협이다. 분단체제는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 전역의 안보적 긴장의 원인이며, 북한의 핵문제 해결은 당연한 안보적 과제에 해당한다. 빈곤과 경제위기에 직면한 북한의 국방비 비율은 세계 최고수준이며, 한국도 일반국가 평균보다 2배 이상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다. 남북한의 200여만 명에 달하는 청년들은 같은 민족끼리 총구를 겨누고 있는 현실이다.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를 기반으로 중국은 팽창주의적 군비증강을 가속화하고 일본은 과거에 대한 성찰적 반성을 결여한 채 전쟁이 가능한 보통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긴밀한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에 있는 한·중·일 간에는 외교안보적 불신과 정서적 거리감이 상존하고 있다. 동아시아 패러독스의 현실이다. 한반도 분단체제와 동아시아 패러독스는 역내 생활세계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구조적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당연한 위협은 개별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각 국가 간 그리고 지구촌 전체의 초국경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제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으며, 국경을 차단하는 봉쇄적 고립주의 방역을 선호한 국가들도 성공적인 방역성과 도출에 한계를 보였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에서 코로나19는 가장 큰 확산세를 보였다. 코로나19 사태는 현대의 위협은 국경을 초월하며, 따라서 고립주의가 아니라 포용과 협력을 통한 인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한반도 분단체제와 동아시아 패러독스는 역내 기존 국제질서의 근간이라는 점에서 개별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남북한, 미국, 중국, 그리고 유엔은 한반도 정전체제의 주요 당사자이며, 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하는 미국의 연합전선과 중국, 러시아 등

북방 안보네트워크는 역내 국제적 갈등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로 인한 고비용 구조는 역내 각국 모두의 부담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해소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미 동아시아는 갈등과 대립으로 점철된 근대 역사로 인해 천문학적인 물적, 인적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냉전체제 해체 이후 유럽은 협력의 확대를 통해 높은 수준의 정치, 경제, 외교안보적 통합체인 유럽연합(Europe Union: EU)의 창설에 성공했다. EU는 경제협력에서 출발해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결국 높은 수준의 정치 통합에 성공했다. EU는 공동의회와 공동화폐를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회원국 간 안보적 긴장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동아시아 역사 다자협력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신질서를 지향해야 하는 이유이다.

2021년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는 사상 최초로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그룹에서 선진국그룹으로 변경했다.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적 위상을 확보했으며,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 기술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2021년 한국은 KF-21 보라매로 세계에서 13번째 전투기 개발국가가 되었으며, 7번째 잠수함발사 탄도 미사일 개발국가로 등극했다. 한국의 국방력은 세계 6위 수준이다. BTS, 기생충, 오징어게임 등 한류는 세계를 매료시키고 있다. 이제 한국은 지역국가를 넘어 글로벌 코리아로 거듭나고 있다.

2021년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한미정상은 한반도와 지역을 넘어 글로벌 이슈에 협력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한미동맹은 한반도 범위를 넘어 글로벌 동맹으로 진화했다. 한미동맹의 탄생배경이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이었으며, 그 공간적 범위가 한반도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미협력의 범위는 전 세계적으로 확장된 셈이다. 결국 한국의 국제적 역할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반도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며, 한국은 이제 세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보했다. 한국의 세계전략이 보다 중요해진 이유이다. 역대 정권은 한국의 국가적 위상변화에 따라 한반도를 넘어서는 세계전략을 모색해 왔다. 그 출발점은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이다. 북방정책을 통해 한소 및 한중 수교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한국의 국가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소 수교를 통해 한국은 북방으로 가는 통로를 개척했으며, 한중 수교는 한국 경제발전의 중요한 동력을 제공했다. 현재 한중 간 교역규모는 전체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는 적극적인 한일관계 개선 노력을 통해 햇볕정책의 국제적 기반조성에 노력을 기울였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통해 한일관계가 개선됨으로써 김대중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일본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었다. 노무현 정부는 동북아중심국가론을 통해 한국의 제고된 위상에 맞는 역내 국제적 역할을 모색했다. 이라크 파병 등 한미동맹이 한반도의 범위를 넘어서기 시작한 것도 노무현 정부 시기였다.

이명박 정부의 신아시아구상은 2009년 3월 이명박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순방 중 발표한 아시아 외교 구상이다. 신아시아구상은 그동안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4강에 치중됐던 한국 외교의 지평을 넓혀 아시아를 중시하겠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신아시아구상은 외교의 4대 목표를 △아시아권 모든 국가와 FTA(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체결 등 경제 교류 확대,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주도적 참여, △아시아 각국과 맞춤형 경제협력관계 구축, △아시아에 대한 역할 및 기여의 증대로 설정했다. 신아시아구상은 중국과 일본에 상대적으로 뒤쳐진 아시아 외교를

강화해 아시아와의 관계를 재정립시키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었다.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Eurasia Initiative)는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묶고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북한의 개방을 유도해 한반도의 평화를 도모하는 구상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유라시아 국제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하나의 대륙 △창조의 대륙 △평화의 대륙 등을 골격으로 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공식화했다. 구체적으로는 부산-북한-러시아-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계하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ilk Road Express: SRX)와 전력·가스·송유관 등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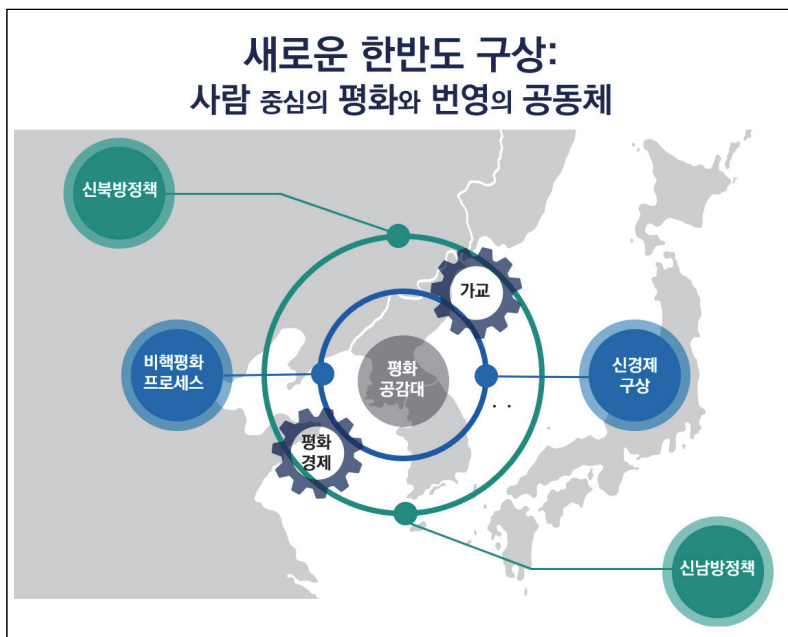
한반도의 공간을 넘어서는 역대 정부의 여러 정책은 일정한 성과를 도출했지만 동시에 일정한 한계를 내재했다. 특히 본격적인 한국형 세계전략으로서의 성격이 미약했다고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통일정책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목표로 설정하고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를 3대 전략으로 제시했다.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전략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역할의 강화를 도모하는 것이며, 관련된 세부 국정과제는 △국민외교 및 공공외교를 통한 국익증진, 주변 4국과의 당당한 외교협력,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등이다.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번영의 축’인 동시에 ‘평화의 축’의 의미를 내재하고 있다.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지정학적·지경학적 가치를 내재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역내 국제질서의 평화·번영의 선순환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비핵·평화프로세스와 신경제구상의

구현을 통해 한반도문제 해결의 양대 축이며, 이를 통해 새로운 한반도질서의 형성이 가능하다. 한반도 분단체제의 해소는 그동안 제약되었던 유라시아대륙과 태평양해양권 간 교통·물류체제의 획기적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3.1절 경축사에서 3.1 독립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새로운 100년의 화두로 ‘신한반도체제 구상’을 천명했다. 신한반도체제는 수동적 냉전질서였던 과거 100년과 차별화된 미래 100년의 새로운 능동적 평화질서를 향한 비전이다. 새로운 한반도는 전쟁 걱정 없는 한반도와 번영하는 동아시아의 선순환구조에 방점이 있다. 이는 아래 그림으로 도식화될 수 있다.

〈그림 1-1〉 과제 개념도



출처: 나용우 외,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서울: 통일연구원, 2020), p. 20.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협력의 범위를 남방과 북방으로 확장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한반도-남방-북방을 연계하는 평화의 축과 번영의 축을 입체적으로 구성할 경우 한반도와 역내 신질서의 형성이 가능할 것이다.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이 본격화될 경우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역내 다자협력이 강화된다는 점에서 한반도 분단 체제와 동아시아 패러독스 해소를 위한 우회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은 한국형 세계전략을 본격화하는 마중물로서의 의미가 크다. 이미 세계국가로서 위상을 정립한 한국의 외교는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통해 유라시아대륙과 태평양전역으로 확장될 수 있으며, 이는 한국형 세계외교와 국제전략의 기반이 될 것이다. 한국의 국가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한국형 세계전략 및 국제전략은 긴밀한 연관관계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의 본격화가 필요하다.

향후 3년 내외의 근미래는 북한 비핵화라는 당면과제의 해결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종료되는 동시에 신정부 출범이라는 국내정치적 환경변화에 해당한다. 아울러 선진국으로 진입한 한국의 세계외교와 국제전략의 본격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은 시의적절하며 일정한 성과를 도출했지만 동시에 해결해야 할 과제를 내재하고 있다.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의 종합적인 평가를 토대로 미래지향적인 정책추진 동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특히 현 시점에서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의 근미래 전략의 모색을 통해 정책적 일관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미래 전략의 모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3년차(2020년) 연구를 통

해 현재까지 추진되어온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3년 내외의 근미래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의 추진전략과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토대로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각각 경제통상, 사회문화, 그리고 외교안보 분야로 나누어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본 연구의 전체총괄은 조한범, I 장 서론은 조한범, II 장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을 위한 중·장기 및 근미래 전략의 1절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의 중·장기 전략과 정책과제는 권재범, 2절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을 위한 근미래 환경과 전략은 권재범·조한범 공동, III 장 신남방정책을 위한 근미래 주요사업 추진방안의 1절 경제통상과 2절 사회문화는 최윤정, 3절 외교안보는 이재현, IV 장 신북방정책을 위한 근미래 주요사업 추진방안은 박지원·이현태 공동, V 장 결론의 1절 근미래 신남방정책 추진방안과 2절 근미래 신북방정책 추진방안은 황재호, 3절 평가 및 시사점은 황재호·조한범이 공동으로 작성했다. 황재호는 본 연구관련 사업인 통일연구원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 국제학술회의 개최 등 연구 관련 국제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하였다. 본 연구의 진행과 출판을 위해 윤신화 연구원과 이순화 행정원이 많은 지원과 함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 II. 신남방정책 · 신북방정책을 위한 중 · 장기 및 근미래 전략







# 1.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의 중·장기 전략과 정책과제

## 가. 문재인 정부 정책 추진의 성과와 한계

### (1) 신남방정책의 성과 및 한계

2010년대 이후 아시아 지역에서는 무역과 기술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 심화, 새로운 종류의 안보 위협의 부상 등으로 인해 안보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맞추어 미국과 중국은 물론이고 일본, 인도, 대만 등과 같은 지역의 주요 국가들은 자국의 안보 확립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신남방지역<sup>1)</sup>을 겨냥한 다양한 지역 전략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과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Belt and Road Initiative)’,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 인도의 ‘동방정책(Act East Policy)’, 대만의 ‘신남향정책(New Southward Policy)’ 등이 추진되는 데 있어 신남방지역 국가들은 핵심 파트너국가들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에도 신남방지역은 경제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외교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은 지금까지 경제적으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강 국가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을 뿐만 아니라, 외교·안보적 접근 역시 이들 국가에 편중되어 있었다. 때문에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한국은 구조적으로 두 강대국 사이의 전략적 선택을 강요받는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했다.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보다 유연하고 폭넓은 전략적

---

1) 본고에서는 한국의 신남방정책 대상 지역인 아세안과 인도를 신남방지역으로 칭하기로 한다.

선택지를 마련하기 위해 기존 4강 중심의 외교에서 벗어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들어 신남방지역이 한국에 경제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부상하게 됨으로써 이 지역이 한국에는 그간 편중되어 있었던 4강 외교에서 벗어난 또 다른 선택지로 인식되었다. 결국 한국 역시 이 지역에 대한 접근 강화를 모색하게 된 바, 이러한 노력은 2017년 11월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 발표를 통해 구현되었다.

신남방정책은 아세안(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10개국과 인도를 포함하는 신남방 국가들과의 교류 협력 규모 및 외교 관계를 4강(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수준으로 격상시켜 기존 4강 외교의 편중성을 완화하고, 이들과의 교역규모 역시 대중국 교역규모(200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하여 한국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는데 주요 목적을 가지고 있다.<sup>2)</sup> 그리고 이러한 목적 아래 문재인 정부는 2018년 8월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후 몇 차례에 걸쳐 신남방정책 아래 3개의 주요 추진방향과 16개 주요 추진과제 등을 발표하였다(〈표 II-1〉 참고).

문재인 정부는 〈표 II-1〉에서 알 수 있듯 사람(사회·문화), 상생번영(경제·통상), 평화(외교·안보) 등 3개 분야의 정책 목표 아래 2017년 이후 현재까지 다양한 과제들을 추진 중에 있다.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 온 과제들의 성과와 한계(문제점)에 대한 구체적 평가는 다음 절에서 다룬다.

---

2) 최재덕,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상호연계 모색: 지정학과 지경학의 상호보완성을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7권 4호 (2019), p. 322.

〈표 II-1〉 신남방정책의 주요 목표 및 추진과제

구분	목표	추진과제
<p>사람 공동체 (People)</p>	<p>교류 증대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 (2020년까지 상호방문객 연간 1500만 명 달성)</p>	<p>① 상호방문객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관광 콘텐츠 개발 및 홍보 확대</li> <li>• 국내 무슬림 여행 환경 개선</li> <li>• 비자제도 개선</li> </ul> </p> <hr/> <p>② 쌍방향 문화교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홍보 거점 인프라 확충</li> <li>• 문화행사 계기 한류 확산</li> <li>• 아세안 대상 콘텐츠 교류 활성화</li> <li>• 아세안 문화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이해 증진</li> </ul> </p> <hr/> <p>③ 인적 자원 역량 강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학생 초청 규모 확대</li> <li>• 공무원, 전문가 교류 확대</li> <li>• TVET(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기술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강화</li> </ul> </p> <hr/> <p>④ 공공행정 역량 강화 등 거버넌스 증진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정부 협력 확대</li> <li>• 공공행정 협력 확대</li> </ul> </p> <hr/> <p>⑤ 상호 간 체류 국민의 권익 보호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노동자 체류 및 고충 처리 사업 지원</li> <li>•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및 권익 보호 및 증진</li> </ul> </p> <hr/> <p>⑥ 삶의 질 개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개발 지원을 통한 지역주민 생활수준 향상</li> <li>• 환경, 보건위생 역량강화</li> <li>• 산림활용 지역 소득 증대를 위한 산림협력 강화</li> </ul> </p>
<p>상생 번영 공동체 (Prosperity)</p>	<p>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상생의 경제협력 기반 구축</p>	<p>⑦ 무역·투자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남방 주요국과 양자 FTA 체결 추진</li> <li>• 우리 금융권 진출 지원 플랫폼 강화</li> <li>• 우리 기업 금융접근성 강화</li> <li>• 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li> <li>• 항공협정 진전</li> </ul> </p>

구분	목표	추진과제
	(아세안: 2020년 교역액 2000억 달러 / 인도: 2030년 교역액 500억 달러)	<p>⑧ 연계성 증진을 위한 인프라 개발 참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 인프라 발굴, 개발 및 수주 지원</li> <li>• 스마트시티(smart city) 네트워크 협력</li> <li>• 항만개발 협력</li> <li>• 인도네시아 인프라 시장 진출</li> <li>• 신남방국가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 협력</li> </ul> <hr/> <p>⑨ 중소기업 등 시장진출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타트업 교류, 협력 생태계 활성화</li> <li>• 우리 중소기업 입주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li> <li>• 한-신남방 중소기업 간 기술교류 협력 강화</li> <li>• 유망 분야별 시장진출 지원</li> </ul> <hr/> <p>⑩ 신산업 및 스마트 협력을 통한 혁신 성장 역량 제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차 산업혁명 대응 공동 R&amp;D 협력 강화</li> <li>• 과학기술 협력기반 마련</li> <li>• ICT 협력거점 구축 및 기술인력 양성</li> <li>• 신남방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li> <li>• 첨단 보건의료 기술협력 확대</li> </ul> <hr/> <p>⑪ 국가별 맞춤형 협력 모델 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네시아 기간산업 진출 확대</li> <li>• 말레이시아 한류-할랄 기반 소비자산업 협력</li> <li>• 베트남 TASK(Technology Advice and Solution from Korea, 생산현장 애로기술 지도)센터 구축</li> </ul>
평화공동체 (Peace)	평화롭고 안전한 역내 안보 환경 구축 (2019년까지 아세안 10개국 순방 및 정상 방한 등 전략적 협력)	<p>⑫ 정상 및 고위급 교류 활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개최</li> <li>• 정상외교 적극 활성화</li> </ul> <hr/> <p>⑬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협력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신남방국가 지지 확보</li> </ul> <hr/> <p>⑭ 국방·방산 협력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아세안 국방차관회의 연례화</li> <li>• 신남방지역 방산 협력 확대</li> </ul>

구분	목표	추진과제
		⑮ 역내 테러·사이버·해양 안보 공동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아세안 국제범죄 수사역량강화센터 설립</li> <li>• 해양쓰레기 공동조사 및 수거 사업</li> <li>• 한-메콩 생물다양성센터 구축</li> </ul> <hr/> ⑯ 역내 긴급사태 대응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 지원</li> <li>• 산불재난관리센터 시범사업</li> <li>• 훼손된 습지(이탄지) 복원 및 보전</li> </ul>

출처: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개최,” 2019.4.30., <[http://www.nsp.go.kr/kor/post/reportView.do?post\\_id=115&board\\_id=10&cpage=1&LANG=kor&s\\_type=all&s\\_text=전체회의](http://www.nsp.go.kr/kor/post/reportView.do?post_id=115&board_id=10&cpage=1&LANG=kor&s_type=all&s_text=전체회의)> (검색일: 2021.5.14.) 내용을 중심으로 저자 재구성.

### (가) 경제·통상 분야

상생번영 공동체 부분에서 한국은 무역 및 투자 증진, 그리고 한국 기업의 신남방 국가 진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를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설정하고 있으며, 신남방정책이 추진된 이후 이 부분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들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

먼저 한국은 신남방 개별 국가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협력을 추진하며 한국기업의 시장진출 및 무역 촉진 등을 위한 여러 가지 기반들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특히 신남방정책 추진 이후 한국은 자동차와 철강, 석유화학, 제약 및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남방 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추진 중에 있거나 계획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 분야에서는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해 내기도 했다(<표 II-2> 참고). 그리고 이와 함께 현재 한국은 아세안 국가들과 함께 고속철과 물류, 아세안 고속도로(ASEAN Highway) 등과 같은 인프라 개발에도 적극 참여 중이다.<sup>3)</sup>

3) 이혁구, “한국과 대만의 對아세안 경제정책 비교,” 『비교경제연구』, 제26권 2호 (2019), p. 132.

〈표 11-2〉 한-아세안 경제분야 협력 계획 및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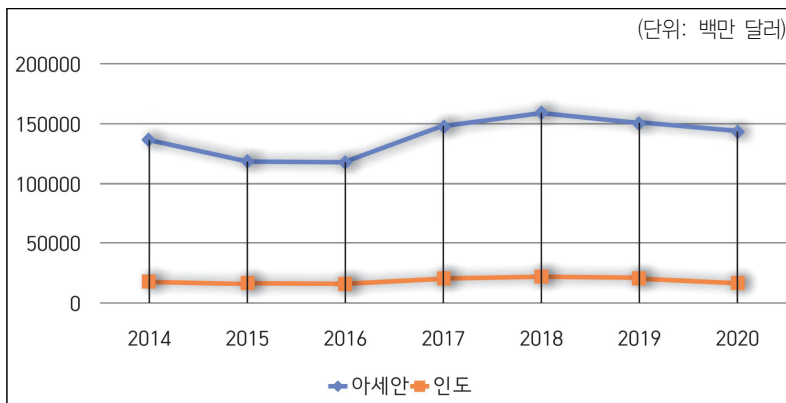
협력국	분야	내용
인도	자동차	기아차 30만 대 규모 완성차 공장 착공(2019)
	R&D	공동 R&D, 인력 교류를 위한 미래전략그룹 설립 합의
	연구기관	한-인도 연구혁신협력센터 공동 설립
	인프라	뭄바이(Mumbai) 남부 해안도로
	기술지원	중소기업기술교류센터 설립(2018.7.)
인도네시아	철강	포스코-인니 열연공장 추가 건설(2016~2020 상반기)
	석유화학	롯데케미칼-인니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2020년 착공)
	기술지원	중소기업기술교류센터 설립(2018.4.)
	민간펀드	한-인니 민간 VC(Venture Capital) 공동펀드 조성(75백만 달러, 2017.12.) 인니 핀테크 및 물류 2개 기업 투자
	제약	국내 9개 제약업체 현지법인 설립(~2018)
베트남	연구기관	V-KIST(Vietnam-Korea Institute of Science Technology, 한국-베트남 과학기술원) 착공
	인프라	롱탄(Long Tan) 신공항 기본계획 합의(2018)
	기술지원	TASK 센터 설립(애로기술지원, 2019)
	스타트업	코리아스타트업센터 설치 추진
싱가포르	R&D	한-싱가포르 혁신 기술협력 MOU 체결(2018.7.)
	스타트업	코리아스타트업센터 설치 추진
태국	기술지원	중소기업기술교류센터 설립(2019)
말레이시아	기술지원	중소기업기술교류센터 설립(2019)
	인프라	코타키나발루 신도시 개발 협력
라오스	인프라	8번 국도 개량협력

출처: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재인용: 나용우 외,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서울: 통일연구원, 2020), pp. 48~49.

신남방 국가와의 협력이 확대되면서 한국과 신남방 국가들 간의 교역규모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4년에서 2016년 사이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 간의 교역 규모는 감소추세에 있었으나, 신남방정책이 발표된 2017년부터는 양자 간 교역 규모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후 한국과 아세안, 한국과 인도 간의 무역규모는 다시 감소추세에 접어들기는 했지만, 코로나

19와 같은 불가피한 외부적 요인이 작용했던 2020년을 제외하고는 양자 간에는 1500억 달러 정도의 교역 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그림 II-1〉 참고).

〈그림 II-1〉 한국-신남방 국가들 교역 규모



주: 1) 한국과의 수출입 금액을 합산한 자료임.

2) 아세안에는 브루나이를 제외한 9개 회원국 포함.

출처: K-stat, “수출입 총괄.” <<https://stat.kita.net/stat/kts/ctr/CtrTotalImpExpList.screen>> (검색일: 2021.5.15.).

말레이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등과 같은 일부 신남방지역의 개별 국가들을 겨냥한 맞춤형 협력 모델 개발에 있어서도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2019년 이후 동남아의 주요 무슬림 국가이며 ‘글로벌 할랄 시장의 선도국가’라고 평가받는 말레이시아와 한류와 할랄을 기반으로 한 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바 있으며, 몇 가지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기도 했다.<sup>4)</sup> 무엇보다 말레이시아는 체계적인 할랄 인증체계와 할랄 관련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으며, 중동 국가들과의 교류도 활발하기 때문에 할랄시장 개척을 위한

4) 위클리공감, “한류로 쑥쑥 크는 글로벌 할랄시장 선도국,”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9.10.21.,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65779>> (검색일: 2021.5.15.).



핵심 교두보 중 한 곳으로 평가받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말레이시아와 할랄산업 확산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글로벌 할랄시장 공략을 위한 협력의 발판을 마련하였고, 특히 K-푸드와 접목하여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는 바, 실제로 한국기업과 말레이시아 현지 기업의 합작품인 ‘대박라면’이 현지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도 했다.<sup>5)</sup>

또한 한국은 2019년 베트남에 전문인력교육과 기술지도, 시험·인증 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하는 ‘태스크(TASK) 센터’를 설립하고 연말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sup>6)</sup> 이를 통해 한국은 다양한 산업 분야를 아우르는 양국 기업 간 비즈니스 연계 강화를 도모하고 제3국으로의 공동진출을 모색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은 캄보디아와의 산림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주민 소득 증대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sup>7)</sup> 한국은 캄보디아와의 첫 번째 공적개발원조 사업으로 자연휴양림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특히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에는 아마존 및 콩고 분지 지역과 함께 세계 3대 열대우림으로 손꼽히는 산림지역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산림의 개발과 관광자원화를 통해 주민들의 소득기반을 육성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한국은 한-메콩 산림협력센터를 설치하고 한국인 산림휴양림 조성 전문가를 캄보디아에

5) 위의 글: “무슬림 관광객 급증…할랄 시장 확대에도 ‘할랄 공식 인증 식당’은 14곳뿐 (종합), 『아시아경제』, 2018.9.27.,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2018092709432847584>> (검색일: 2021.5.15.).

6) 산업통상자원부, “한·베트남 ‘소재부품 협력센터’ 연말 가동,”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9.10.22.,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65853>> (검색일: 2021.5.15.).

7) 산림청, “캄보디아와 자연휴양림 분야 협력 강화 업무협약,”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2.26.,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38574>> (검색일: 2021.5.15.).

과견하는 등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2021년 현재 양국 간 산림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하는 등 산림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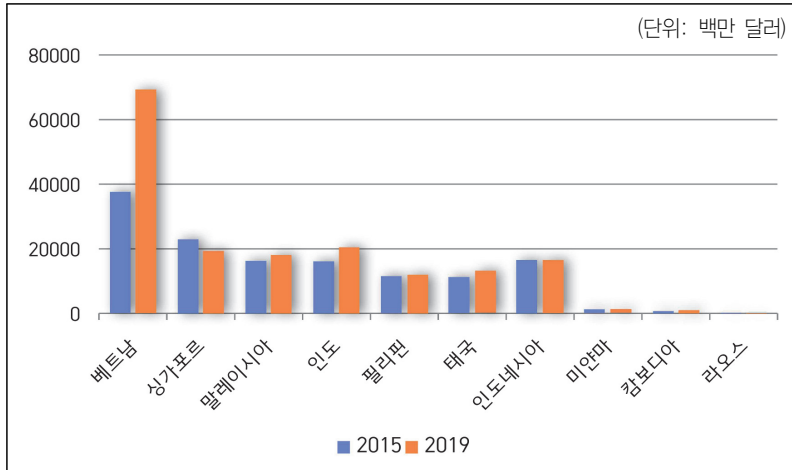
하지만 이 분야에 대한 한계 역시 발견된다. 우선 신남방정책 경제통상 분야에서의 문제점 중 하나로 특정 국가에 대한 편중성을 지적할 수 있다. 한국은 신남방정책 발표 이후 인도 및 아세안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이 지역에 대한 투자 확대, 한국기업 진출 등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신남방지역 대상 국가들 중 한국의 무역 및 투자가 특히 베트남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은 신남방정책 아래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경제통상 분야에서의 사업들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한국과 신남방 국가들과의 무역 규모를 통해서 잘 드러난다. <그림 II-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019년 기준으로 한국과 베트남 간의 무역 규모(약 692억 달러)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압도적이며, 특히 2~4위에 위치한 인도(약 206억 달러), 싱가포르(약 194억 달러), 말레이시아(약 181억 달러)와의 무역액 총합보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신남방정책이 추진되기 전인 2015년에도 한국과 베트남 간의 무역 규모는 다른 국가들보다 더 큰 상황이었지만, 신남방정책 이후 한국과 다른 국가들 간의 무역 규모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거나 소폭 감소한 데 비해 한국-베트남 교역 규모는 증가 비율이 2배에 육박하며 가장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sup>8)</sup> 즉, 한국의 무역은 신남방 국가들 중 베트남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러한 경향은 더 심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8) 한국과 베트남 간의 교역 규모는 2015년 약 375억 달러에서 2019년 약 692억 달러로 증가했다. K-stat, “수출입 총괄,” <<https://stat.kita.net/stat/kts/ctr/CtrTotalImpExpList.screen>> (검색일: 2021.5.15.) 자료 참고.

〈그림 11-2〉 한-신남방지역 주요 국가 간 교역 규모



주: 한국과의 수출입 금액을 합산한 자료임.

출처: K-stat, “수출입 총괄”

아울러 신남방 국가들에 대한 한국의 투자 역시 베트남에 집중되어 있다. 2018년 1월부터 9월까지 한국의 대아세안 투자 건수는 총 3,312건이었는데, 이 중 약 60%가 베트남을 대상으로 한 투자였으며, 투자금액 역시 베트남에 24억 7천만 달러가 투입되어 전체 아세안 국가 투자액 중 5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sup>9)</sup> 결국 한국과의 무역 규모나 한국의 대아세안 투자규모를 살펴볼 때 베트남에 대한 편중성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 대해 베트남을 제외한 다른 신남방 협력국가들의 비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기도 했다.<sup>10)</sup>

한편, 한국과 신남방지역 주요 국가들과의 양자 FTA 체결 부분

9) 신준호·이동준·하지훈, “우리나라 신남방정책 주요 교역국과 무역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건전한 통관질서 확립을 위한 관세사 제도의 개선과 관세행정의 대응』 ((사)한국관세학회·관세국경관리연수원·중앙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중앙대학교 한국연구재단 신남방시장 진출연구 일반공동연구팀 공동주최 (사)한국관세학회 2020년 정책세미나 및 춘계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2020.6.27.), p. 220.

10) 위의 글, pp. 219~220.

역시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지 않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은 2020년 12월 인도네시아와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를 위한 정식 서명을 체결한 바 있으나, 다른 주요 국가들과의 FTA 체결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현재 한국이 신남방 국가들과 양자 FTA를 체결한 사례는 싱가포르와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가 있는데, 이 중 싱가포르와의 FTA는 2006년, 인도와의 FTA는 2010년, 베트남과의 FTA는 2015년에 각각 발효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신남방정책 추진 이후 신남방 국가와 체결한 양자 FTA는 인도네시아와의 CEPA가 최초이며, 현재까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sup>11)</sup> 물론 신남방정책 발표 이후 한국은 필리핀(2019.6.), 말레이시아(2019.6.), 캄보디아(2020.7.)와의 양자 FTA 체결을 추진하기 시작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이들 국가들과의 FTA는 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신남방정책이 발표된 지 약 3년이 넘는 시점에서 한국이 신남방 국가들과의 양자 FTA 체결한 사례는 인도네시아가 유일하며, 한국과 신남방 국가들 간 무역 및 투자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는 목표 역시 향후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나) 사회문화 분야

한국 정부는 ‘사람(people)’ 공동체를 위해 신남방 국가들과의 인적교류 확대, 문화교류 확대를 통한 상호이해 제고, 교육프로그램 및 지원 확대를 바탕으로 한 인적 자원 역량 강화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일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 이원석, “2021년, 달라지는 한국의 FTA 환경은?”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통상 이슈브리프』, 제1호 (2021), p. 1; 산업통상자원부,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 정식 서명,” 대한민국 브리핑, 2020.12.18.,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27815>> (검색일: 2021.5.15.).

먼저 한국은 신남방 국가 국민들의 한국 방문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선 한국 정부는 법무부와 신남방정책 특별위원회 등의 협조 아래 동남아 주요 국가들의 관광객 대상 비자 발급 및 출입국 편의를 제공해 오고 있다.<sup>12)</sup> 한국 법무부에서는 2018년부터 신남방 국가와의 인적교류 및 방한 관광객 확대를 목적으로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일부 국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10년간 유효한 복수비자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였고, 이후 그 대상과 국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있다.<sup>13)</sup> 또한 2018년부터 동남아 3개국(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의 국민들과 인도 국민들에 대한 단체 비자 제도를 도입하였고, 2018년 11월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단기비자 수수료 면제 조치를 시행하기도 했다.<sup>14)</sup> 이와 함께 2018년 현지 비자센터를 베트남에 2개소, 인도네시아에 1개소 설치하여 현지 국민들이 보다 간편하게 한국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고 있다.<sup>15)</sup> 한편, 한국과 베트남은 2020년 12월 회담을 통해 2021년 1월부터 ‘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기로 합의하며 양국 기업인이 상대국을 단기 방문할 시 14일간의 격리기간을 면제하고 바로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sup>16)</sup> 따라서 한국 정부는 신남방정책 아래 신남방

12)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개최,” 2019.4.30., <[http://www.nsp.go.kr/kor/post/reportView.do?post\\_id=115&board\\_id=10&cpage=1&LANG=kor&s\\_type=all&s\\_text=전체회의](http://www.nsp.go.kr/kor/post/reportView.do?post_id=115&board_id=10&cpage=1&LANG=kor&s_type=all&s_text=전체회의)> (검색일: 2021.5.15.).

13) 법무부, “[체류관리과] 신남방국가와의 교류 확대를 위해 비자제도 개선한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8.11.23.,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05205>> (검색일: 2021.5.15.).

14) 국무조정실·문화체육관광부, “2022년 외래관광객 2300만명, 관광 일자리 96만명 이룬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9.4.2.,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59696>> (검색일: 2021.5.15.).

15)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개최.”

지역 국민들의 한국 방문을 촉진시키기 위해 이들 국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비자제도 개선 조치들을 추진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입국절차 편의제공이라는 소기의 목표는 달성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외국 관광객들의 한국 방문을 촉진시키기 위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류 문화를 활용한 관광홍보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국은 2019년 11월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이전부터 신남방 국가 대상 환대주간을 운영하는 한편 현지에서 ‘한국문화관광대전’을 개최함으로써 한국의 관광자원을 신남방 국가들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오고 있다.<sup>17)</sup> 일례로 한국은 인도네시아 수라바야(2018.3.)와 태국 방콕(2018.11.)에서 한국문화관광대전을 각각 개최한 바 있으며, 한국 드라마 촬영지 등을 중심으로 한 한류 관광상품을 개발하기도 했다.<sup>18)</sup>

이러한 노력들은 신남방 국가 국민들의 한국 방문 증가로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그림 II-3〉 참고). 특히 2015년 아세안 9개 국가(브루나이 제외) 국민들의 한국 방문 규모는 약 160만 명이었는데, 2019년에는 그 규모가 269만 명으로 증가하며 4년 만에 약 6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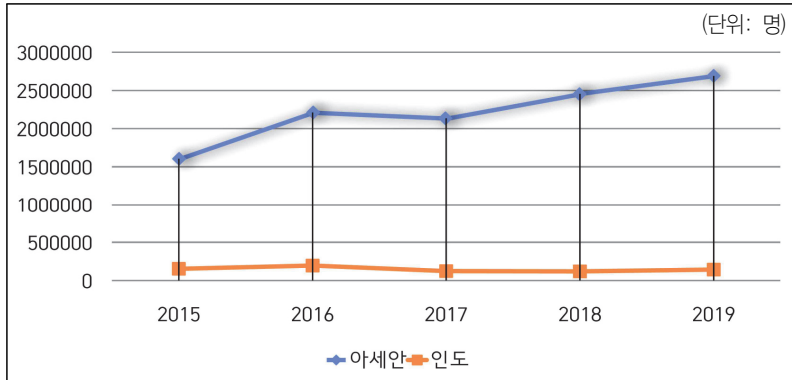
---

16) 외교부, “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 2021.1.1.(금)부터 시행키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12.4.,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25089>> (검색일: 2021.5.15.).

17) 국무조정실·문화체육관광부, “2022년 외래관광객 2300만명, 관광 일자리 96만명 이룬다.”

18)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개최,” 2018.11.8., <[http://www.nsp.go.kr/kor/post/reportView.do?post\\_id=32&board\\_id=10&cpage=2&LANG=kor&s\\_type=all&s\\_text=전체회의](http://www.nsp.go.kr/kor/post/reportView.do?post_id=32&board_id=10&cpage=2&LANG=kor&s_type=all&s_text=전체회의)> (검색일: 2021.5.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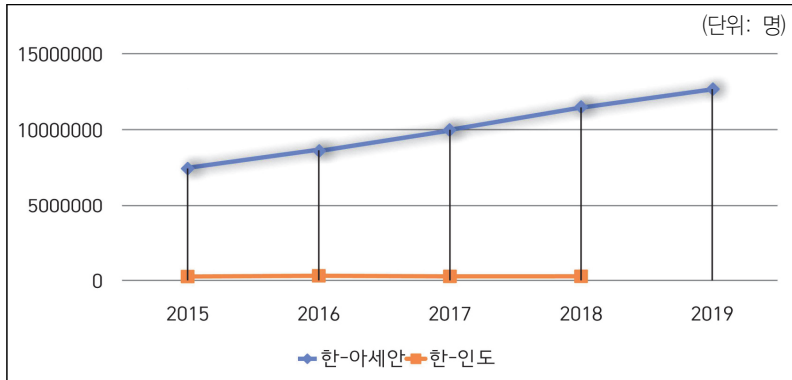
〈그림 II-3〉 신남방 국가 국민들의 한국 방문 숫자



주: 아세안 10개국에는 브루나이를 제외한 9개 국가가 포함됨.

출처: 한국관광 데이터랩, “방한 외래관광객,” <<https://datalab.visitkorea.or.kr/datalab/portal/tst/getEntcnyFrngCustForm.do>> (검색일: 2021.5.15.).

〈그림 II-4〉 한-아세안 상호방문객



주: 1) 아세안 10개 국가 중 브루나이를 제외한 9개 국가 국민들의 한국방문 통계와 한국인들의 아세안 9개국 방문 통계를 합산함.

2) 2019년 한국 관광객의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 방문 데이터는 누락되어 있어 이곳에서는 제외됨.

출처: 한국관광 데이터랩, “방한 외래관광객”; 한국관광 데이터랩, “국민 해외관광객(목적지별),” <<https://datalab.visitkorea.or.kr/datalab/portal/tst/getDirmoNatiCustForm.do>> (검색일: 2021.5.15.).

이와 함께 한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아세안에 대한 한국인의 이해 제고와 인식 개선 등을 위한 노력도 진행 중이다. 무엇보다 아세안

문화원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을 통해 아세안 개별 국가들의 문화와 언어, 풍습 등을 소개하는 한편 워크숍과 학술회의, 강의, 전시회 등을 개최하면서 한국인들에 아세안 국가들의 다양한 모습들을 소개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 역시 한국인들의 아세안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한국인들의 아세안 방문으로도 이어지는 데 일조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한국과 아세안 국민들의 상호방문 역시 매년 10% 내외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sup>19)</sup> 2018년에는 처음으로 1,000만 명 이상을 기록하기도 하는 등, 한국을 방문하는 아세안 국민들의 숫자가 증가하는 동안 아세안의 국가들을 찾는 한국 관광객들의 숫자 역시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II-4〉 참고).

결국, 한국과 아세안 사이에서 상호방문객의 숫자가 증가하는 현상은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추진해 온 상호방문객 확대라는 과제가 가지적인 성과를 도출해 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신남방지역 국민들에게 한국의 문화와 관광지를 홍보하는 사업들이 긍정적 효과를 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에게 아세안을 이해시키고 소개하는 전략들 역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신남방 국가들을 대상으로 정부장학사업 수혜인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18년 개최된 한-아세안 정상회의 이후 한국은 아세안에 대한 무상원조 2배 확대, 1억 달러 규모의 ‘신남방지원펀드’ 추가 조성, 한국판 ‘폴브라이트 장학 프로그램’ 시행 등을 결정한 바 있으며, 한-메콩 협력기금 역시 기존의 112만 달러에서 2020년까지 300만 달러로 확대하기로 하였다.<sup>20)</sup> 이와 함께 한국은 2022년까지 현재 수준에서 수혜인원을 2배 이상 확대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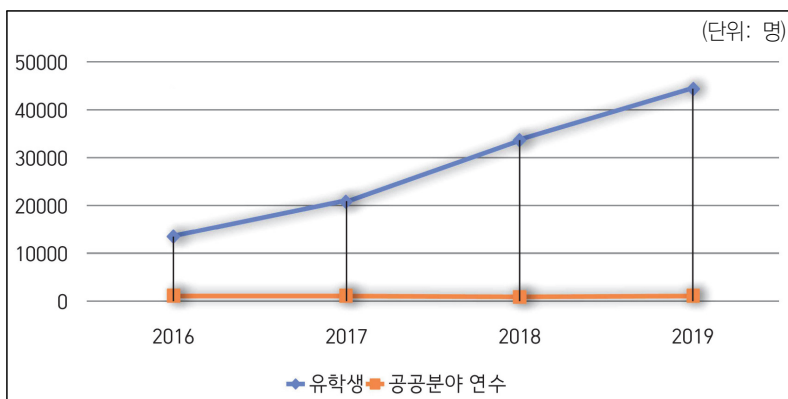
19)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개최.”

20) 이진영, “한국 정부의 공공외교와 공적개발원조(ODA)의 정합성: 신남방정책(New Southern Policy)을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제28권 2호 (2020), p. 189.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활용해 아세안 지역 대학의 학자에 대한 장학사업도 신설하기도 했다.<sup>21)</sup>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한국을 찾는 아세안 지역 유학생의 증가라는 성과로도 이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한국을 찾는 아세안 국가 출신 유학생들은 2016년(13,467명)에서 2019년(44,414명) 사이 3.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I-5> 참고).<sup>22)</sup>

<그림 II-5> 한국에 방문한 아세안 유학생 및 공공분야 연수생



출처: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2019.12.20., <[http://www.nsp.go.kr/kor/post/reportView.do?post\\_id=180&board\\_id=10&cpage=1&LANG=kor&s\\_type=all&s\\_text=전체회의](http://www.nsp.go.kr/kor/post/reportView.do?post_id=180&board_id=10&cpage=1&LANG=kor&s_type=all&s_text=전체회의)> (검색일: 2021.5.15.).

반면 사회문화 분야의 경우 여러 가지 사업 추진 결과 한-아세안 간의 상호방문객 증가 등과 같은 긍정적인 성과를 도출해 내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점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국내 무슬림 여행 환경 개선 분야는 아직 성과가 미진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방한 무슬림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한 인프라가 여전히 제대로 갖춰

21)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개최.”

22)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2019.12.20., <[http://www.nsp.go.kr/kor/post/reportView.do?post\\_id=180&board\\_id=10&cpage=1&LANG=kor&s\\_type=all&s\\_text=전체회의](http://www.nsp.go.kr/kor/post/reportView.do?post_id=180&board_id=10&cpage=1&LANG=kor&s_type=all&s_text=전체회의)> (검색일: 2021.5.15.).

지지 못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주관 아래 정기적으로 할랄레스토랑 위크를 개최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한 무슬림 관광객들의 규모를 감안하면 한국 내 할랄 인증 레스토랑의 숫자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받는다.<sup>23)</sup> 실제로 2017년 한국을 찾은 무슬림 관광객 숫자는 2013년의 64만 명에서 약 20만 명이 증가한 86만 명을 기록했지만 2018년 기준으로 약 200여 곳의 무슬림 친화 식당 중 할랄 공식 인증을 받은 레스토랑은 14곳에 불과했다.<sup>24)</sup> 대구의 경우를 살펴보면 2020년 현재 대구·경북 지역에도 많은 무슬림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지만 이곳에는 할랄 공식 인증을 받은 레스토랑은 단 한 곳도 없고 무슬림 친화 음식점만 약 30곳 정도 위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25)</sup> 무슬림의 경우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축된 고기를 주로 섭취하는데, 한국에서는 공식적으로 할랄 인증을 받는 곳이 턱없이 부족해 이들을 위한 여행환경은 여전히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할랄 음식점 이외에도 무슬림 여행객들을 위한 다른 종류의 관광 인프라 구축 역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부산의 경우만 하더라도 신남방정책이 추진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무슬림 관광객들을 위한 기도실이 부족한 실정이다.<sup>26)</sup> 부산에는 2020년 12월 현재 21곳의 무슬림 기도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중 13곳만이 상설 기도실이며, 이마저도

23) “무슬림 관광객 급증…할랄 시장 확대에도 ‘할랄 공식 인증 식당’은 14곳뿐(종합),” 『아시아경제』.

24) 할랄 공식 인증 레스토랑은 엄격한 인증을 거쳐 재료준비에서부터 조리까지 모든 음식들이 이슬람 율법 아래 만들어지는 식당이고, 무슬림 친화 음식점은 공식 인증을 받지 않았지만 할랄 음식의 일부를 취급하는 식당을 의미한다. 위의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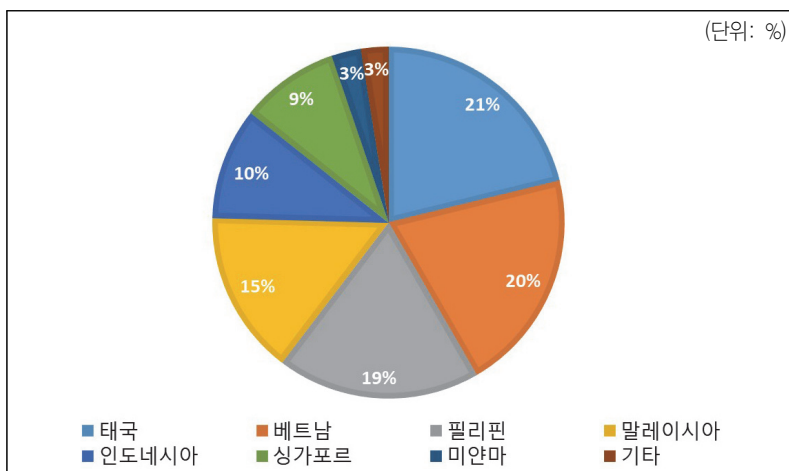
25) “대구경북 관광의 해” 선포…‘할랄 음식점’은 태부족,” 『KBS 뉴스』, 2020.1.6.,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356784&ref=A>> (검색일: 2021.5.15.).

26) “할랄 친화 도시 ‘부산’ 가능성 높아,” 『리더스경제』, 2020.12.31., <<https://www.leaders.kr/news/articleView.html?idxno=226234>> (검색일: 2021.5.15.).

세족실이 갖춰진 곳은 7곳, 남녀 예배실이 구분된 곳은 단 한 곳에 불과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sup>27)</sup>

결국 한국 정부는 신남방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내 무슬림 여행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슬림 관광객들을 위한 할랄 공식 인증 레스토랑 및 기도실의 숫자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방한 무슬림 관광객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내 무슬림 여행 환경 개선 노력은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II-6〉 2019년 방한 아세안 국민들의 국적 비율



출처: 한국관광 데이터랩, “방한 외래관광객.” (<https://datalab.visitkorea.or.kr/datalab/portal/tst/getEntcnyFrgrnCustForm.do>) (검색일: 2021.5.15.)

이와 함께 한국을 찾는 아세안 국민들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특정 국가의 편중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실제로 2019년 한 해 동안 한국을 찾은 아세안 지역 국민들의 국적을 살펴보면 태국(571,610명), 베트남

27) 위의 글.

(553,731명), 필리핀(503,868명), 말레이시아(408,590명), 인도네시아(278,575명), 싱가포르(246,142명) 등의 순인데, 이중 태국과 베트남, 필리핀 3개국 국민들의 방한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이 <그림 II-6>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들 상위 3개국 국민들의 비율은 아세안 9개국(브루나이 제외) 전체 방한 관광객 중 약 60%를 차지하고 있어 태국, 베트남, 필리핀 3국의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특정 국가 국민들이 한국을 많이 찾는다든 것은 신남방정책 추진 과정에서 다른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한국 홍보, 문화교류사업 등의 파급력이 기대만큼 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한국과 신남방지역 간 상호방문객의 숫자 역시 여전히 불균형하게 나타나고 있는 바, 상호방문객 확대라는 목표 아래 추진되는 사업들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 간의 상호방문객 규모 중 아세안을 찾는 전체 한국 관광객들의 비율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78%를 기록하고 있다.<sup>28)</sup> 특히 2015년 전체 상호방문객 중 한국 관광객의 비율은 78.4%였으나 신남방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한 2018년에는 78.5%, 2019년에는 78.7%를 기록하여 비율이 줄어들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한국과 아세안 간의 쌍방향 방문객 확대라는 목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절대적인 관광객 규모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도출해 온다고 볼 수 있으나, 여전히 한국 관광객의 비율과 방한 아세안 관광객 비율 간의 불균형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은 아직까지 일방향 적인 방문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28) 한국관광 데이터랩, “방한 외래관광객,” <<https://datalab.visitkorea.or.kr/datalab/portal/tst/getEntcnyFrngCustForm.do>> (검색일: 2021.5.15.); 한국관광 데이터랩, “국민 해외관광객(목적지별),” <<https://datalab.visitkorea.or.kr/datalab/portal/tst/getDtrmcNatiCustForm.do>> (검색일: 2021.5.15.).

을 보여준다. 아울러 신남방 국민들을 겨냥한 한국 내 관광자원의 개발과 홍보 등의 파급력이 가시적 효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다) 외교안보 분야

현재까지 신남방정책 아래 추진되고 있는 외교안보 분야 과제의 경우에 일부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 역내 평화 정착 및 신남방 국가들과의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추진해 온 양자 간 정상 및 고위급 교류 활성화 분야를 꼽을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은 신남방 국가들과의 정상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실제로 신남방 국가 정상들과의 회담 성사 등을 바탕으로 중요한 성과를 거뒀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신남방정책 발표 이후 아세안 및 인도 정상순방 계획을 수립, 이행해 온 바 2017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양자 및 다자 수준에서 신남방 국가 정상들과의 회담을 개최해 오고 있다(〈표 II-3〉 참고).

한국은 신남방정책 추진 이후 신남방 협력국들과의 양자 회담을 적극적으로 개최해 오고 있으며, 그 결과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인도와의 각각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포함해 대부분의 국가들과 2회 이상의 정상회담을 개최해 오고 있다. 그리고 2019년 9월 태국·미얀마·라오스 순방 당시 이들 국가들과의 정상회담을 끝으로 아세안 10개 국가들과의 정상순방을 완료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등과 같은 정상 간 다자회담을 주도적으로 개최하기도 했으며, 이를 통해 신남방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 정비, 역내 안보와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국과의 정상급 외교채널 구축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11-3〉 한-신남방 국가 정상회담 개최 현황

구분	회담국	시기	비고
양자	인도네시아	2017.11.	인도네시아·베트남·필리핀 순방
		2018.9.	
		2019.6.	G20 정상회담 참석
	베트남	2017.11.	인도네시아·베트남·필리핀 순방
		2018.3.	
	필리핀	2017.11.	인도네시아·베트남·필리핀 순방
		2018.6.	
	싱가포르	2018.7.	싱가포르·인도 순방
		2018.11.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2019.11.	
	브루나이	2019.3.	브루나이·말레이시아·캄보디아 순방
	말레이시아	2019.3.	브루나이·말레이시아·캄보디아 순방
		2019.11.	
	캄보디아	2019.3.	브루나이·말레이시아·캄보디아 순방
	태국	2019.9.	태국·미얀마·라오스 순방
		2019.11.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미얀마	2019.9.	태국·미얀마·라오스 순방
	라오스	2019.9.	태국·미얀마·라오스 순방
인도	2018.7.	싱가포르·인도 순방	
	2019.2.		
	2019.6.	G20 정상회담 참석	
다자	아세안 정상회의	2018.11.13.~18.	
		2019.11.2.~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한·메콩 정상회의	2019.11.25.~27.	
	아세안+3 정상회의	2020.11.12.~14.	

출처: “[文정부 4년] ⑤ 주요일지,” 『연합뉴스』, 2021.5.7., <<https://www.yna.co.kr/view/AKR20210506089800001?input=1195m>> (검색일: 2021.5.16.).

이와 함께 한국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신남방 국가들의 지지 확보’라는 과제에 있어서도 중요한 성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 2019년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의장 성명에서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지지하는 아세안 국가들의 입장이 포함되었으며,<sup>29)</sup> 같은 해 2월에 개최되었던 한국과 인도 간의 정상회담에서는 인도 모디 총리가 “비핵화와 평화를 향한 여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sup>30)</sup>

아울러 한국은 몇몇 신남방 국가들과의 국방분야 고위급 전략대화를 활발히 진행 중이다.<sup>31)</sup> 특히 신남방정책이 발표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은 국방당국자 간 전략대화를 베트남과 6회, 싱가포르와 4회, 인도와 3회, 태국 및 필리핀과 각각 2회,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1회 개최해 오며 이들 국가들과의 안보·전략적 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sup>32)</sup>

이와 함께 한국은 역내 안보와 평화정착을 위해 신남방 국가들과의 협력을 추진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몇 가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일례로 한국은 최근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SEAN Defense Ministers Meeting Plus)’와 ‘아세안 지역포럼(ASEAN Regional Forum)’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아세안 국가들과의 군사·안보적 관계를 한층 확대해 나가는 등 역내 안보 협의체 참여를 통한 지역 평화 증진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29) 나용우 외,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서울: 통일연구원, 2020), p. 66.

30) “모디 인도 총리 ‘한반도 비핵화·평화 위해 최선 다할 것,’” 『중앙SUNDAY』, 2019.2.23., <<https://news.joins.com/article/23393784>> (검색일: 2021.5.17.).

31) 서승원, “한국과 일본의 대아세안 안보정책: 신남방정책과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비전, 그리고 역외 중간국의 전략적 영향력,” 『비교일본학』, 제48권 (2020), p. 72.

32) 위의 글, p. 72.

2017년 이후 미얀마와의 「국방협력에 관한 양해각서」(2017.9.), 베트남과의 「국방협력에 관한 공동 비전 성명 및 상호군수지원협정(Acquisition and Cross-Servicing Agreement)」, 캄보디아 및 브루나리와 「국방협력에 대한 양해각서」(2018.9.), 태국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등을 체결함으로써 역내 테러 및 해양 안보 등과 같은 비전통안보 이슈에 대한 공동 대응과 호혜적 국방·방산협력 증진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들을 신남방 파트너 국가들과 마련해 오고 있다(〈표 II-4〉 참고).

〈표 II-4〉 한-신남방 국가 간 안보분야 협력 현황

협력국	내용	시기
미얀마	한-미얀마 국방협력 양해각서	2017.9.
베트남	한-베트남 국방협력에 관한 공동 비전 성명	2018.4.
	상호군수지원협정	
캄보디아	한-캄보디아 국방협력 양해각서	2018.9.
브루나이	한-브루나이 국방협력 양해 각서	2018.9.
태국	한-태국 군사정보보호협정	2018.9.

출처: 서승원, “한국과 일본의 대아세안 안보정책: 신남방정책과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비전, 그리고 역외 중간국의 전략적 영향력,” 『비교일본학』, 제48권 (2020), p. 72.

동시에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한국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살펴보면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성과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신남방지역 국가들과의 방산협력 확대라는 목표 아래 추진되고 있는 한국의 노력은 여전히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 신남방정책 추진 이후 신남방 국가들 중 한국과 방산협력을 활발히 진행하는 국가로 인도네시아를 꼽을 수 있는데, 그 이외의 다른 국가들과의 방산협력은 활발히 진행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sup>33)</sup> 일례로 한국과 인도는



2020년 2월 한국 방산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무기 연구·개발·시험 협력 등의 내용을 포함한 ‘방산협력 로드맵’에 최종 합의하며 양국 간의 방산협력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기도 했으나, 자주포 사업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양국 간의 방산협력사업은 활발히 추진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sup>34)</sup> 또한 한국은 최근 필리핀의 경전차 사업에 도전했으나 경쟁국가(이스라엘)에 사업을 내준 바 있으며, 2021년 4월에는 인도에 경전차 공동개발을 제안했으나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는 상황이다.<sup>35)</sup>

인도네시아와의 방산협력 역시 2010년대 초반부터 정부 주도의 적극적 지원 아래 추진되어 왔던 점을 고려하면,<sup>36)</sup> 최근 지속되고 있는 한국-인도네시아 간의 방산협력과 몇 가지 성취들은 신남방정책의 성과라고만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더욱이 현재 인도네시아와 진행 중인 협력 사업(한국형 전투기(KF-X) 공동개발 사업, 잠수함 건조사업) 역시 최근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 등으로 인해 정체되어 있거나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협력 중인 한국형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의 경우 인도네시아 정부가 경제난을 이유로 한국에 지불해야 하는 8316억 원 중 6044억 원 가량의 지급을 계속 미뤄오고 있으며, 오히려 미국이나 프랑스 등으로부터 첨단 전투기 수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33) 한국은 필리핀을 포함한 아세안 일부 국가들과 인도에 T-50 고등훈련기, K-9 자주포 등을 수출하고 있으나 이는 신남방정책 발표 이전부터 진행되던 사업들이다. 따라서 T-50 및 K-9 자주포 수출을 신남방정책의 성과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34) “한국·인도 국방장관, ‘방산협력 로드맵’ 합의…인도 진출 한국 방산 기업 ‘규제 완화,’” 『뉴스웍스』, 2020.2.5., <<http://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0478>> (검색일: 2021.5.17.).

35) “한화디펜스 ‘K21-105’ 인도 수출길 오르나,” 『더 구루』, 2021.4.29., <<https://www.theguru.co.kr/news/article.html?no=21074>> (검색일: 2021.5.17.).

36) 전중호, “방산수출 지원정책에 관한 정책네트워크 연구: T-50 인도네시아 수출 성공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혁신연구』, 제24권 1호 (2016), pp. 113~143.

나 양국 간 사업이 가시적 성과를 내기까지 많은 장애물이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37)</sup> 한편, 한국은 인도네시아와의 2차 잠수함 건조사업도 진행 중이며, 세 척의 잠수함을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주한 상황인데, 이에 대한 계약금 역시 인도네시아가 지불하지 않아 큰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38)</sup> 결국 신남방지역 국가들과의 방산협력은 현재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이 진행 중에 있으나 현재 난관에 부딪혀 있으며, 여전히 담보 중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이외의 국가들과의 방산협력은 실질적으로 진행 중인 사례가 드물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은 신남방정책 발표 이후 지속적으로 신남방 국가들과의 해양안보 공동대응,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협력, 수자원 공동관리 등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이 분야에 대한 양자 간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강조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수자원 공동관리 분야를 제외한 다른 분야(생물 다양성이나 초국가범죄 문제)들에 대한 양자 간의 협력 성과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일례로 한-메콩 생물다양성 센터의 경우 2026년 미얀마 네피도(Naypyidaw)에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을 뿐 지금까지도 설립에 대한 논의만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sup>39)</sup> 또한 초국경

37) “KF-X 손절하나… 인도네시아가 수상하다 [박수찬의 軍], 『세계일보』, 2021.2.27.,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226515652?OutUrl>> (검색일: 2021.5.16.).

38) 한국은 2011년 인도네시아와의 계약을 맺고 한국의 기술 이전 및 인도네시아 현지 생산 방식을 통해 세 척의 잠수함을 인도네시아에 인수하기로 약속한 바 있으며, 2017년, 2018년, 2021년에 세 척의 잠수함 인도가 완료되었다. 그리고 이때의 1차 사업과 별개로 양국은 같은 방식으로 세 척을 추가로 인도하기로 합의한 2차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나 인도네시아는 아직까지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 “인도네시아 현지서 한국 잠수함 인도식,” 『아시아경제』, 2021.3.17.,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31714124650346>> (검색일: 2021.5.17.).

39) “‘한-메콩 고위관리’ 화상회의… 사람·변영·평화 동반자 관계 구축 논의,” 『아시아경제』, 2020.7.17.,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71620343031329>> (검색일: 2021.5.17.).

범죄 대응을 위한 한-아세안 간 협력 문제의 경우, 2019년 11월 불법 마약이나 사이버 범죄, 인신매매 등과 같은 초국가적 범죄와 관련해 한국과 아세안 간의 공조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 ‘한-아세안 초국가범죄 장관급 회담’이 개최되기는 했으나, 이후 양자 간의 실질적 협력 플랫폼이라 할 수 있는 ‘한-아세안 국제범죄 수사역량 강화센터’ 설립에 대해서는 여전히 큰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sup>40)</sup>

## (2) 신북방정책의 성과 및 한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한국은 신남방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도모하는 동시에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국가 등 신북방지역 국가들과의 경제적 협력 확대를 위한 노력을 추진하게 되었다. 신북방지역은 한국에 경제적으로나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인데, 먼저 이 지역은 발전 잠재력이 크며 시장으로서의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곳으로 평가받는다.<sup>41)</sup>

특히 러시아는 신동방정책이라는 이름 아래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을 창설하고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일대일로로 주요 협력 지역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또한 카자흐스탄의 ‘누를리 졸(Nurly Zhol)’, 우즈베키스탄의 ‘우즈베키스탄 발전전략 2017-21’, 투르크메니스탄의 ‘2024 사회경제 발전전략’, 키르기스스탄의 ‘2040년까지 지속적인 국가발전전략’, 타지키스탄의 ‘2030년까지 국가발전전략’ 등과 같이 신북방지역 국가들 역시 각자의 대외

---

40) “한-아세안, 초국가범죄 장관급회의 첫 개최…‘공조 강화,’” 『뉴시스』, 2019.11.28., <[https://newsis.com/view/?id=NISX20191128\\_0000844649&cID=10201&pID=10200](https://newsis.com/view/?id=NISX20191128_0000844649&cID=10201&pID=10200)> (검색일: 2021.5.17.).

41) 나용우 외,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pp. 88~89.

정책과 중·장기적 경제발전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모색하는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첨단과학기술이나 기타 자원들을 활용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새로운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바, 신북방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추진은 이들 개별 국가들의 정책과 적절히 조응할 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도 서로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신북방지역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활성화와 네트워크 조성을 통해 상호간의 교류, 협력의 연결고리를 잇게 된다면, 한국으로서는 남북문제를 해결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번영과 평화를 위한 우호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6월 북방지역과의 경제협력을 주관하기 위한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이하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국가들, 동유럽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강화 전략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즉,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기반으로 유라시아 지역 국가와의 교통·물류 및 에너지 등 각 분야의 협력과 연계성 강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남·북한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경제협력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이 신북방정책의 주요 내용이며 목표라 할 수 있다.<sup>42)</sup>

이러한 목표를 위해 신북방정책에 있어 지금까지 여러 중점 분야 및 추진과제 등을 포함한 로드맵이 제시되어왔으며, 최근에는 ‘사람’, ‘번영’, ‘평화’라는 세 가지의 축 아래 8개 분야 70개 과제가 선정되어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표 II-5〉 참고).

---

42)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신북방정책이란?” <<http://www.bukbang.go.kr/bukbang/>> (검색일: 2021.6.7.).

〈표 II-5〉 신북방정책의 주요 분야 및 추진과제

분야	과제구분	추진과제
K-방역·보건의료	단기과제	01. K-방역 경험·지식공유 02. 보건의료 역량 강화 03. ICT 기반 서비스 제공 04. 의료 해외진출 확대 05. 보건의료 분야 ODA
	장기과제	06. 보건·의료 협력 강화
문화·교육 교류	단기과제	07. 우수 유학생 유치 08. 유라시아아카데미 운영 09. 한국어 및 한국학 보급 10. 한류 확산 및 지속 11. 수교 계기 기념행사 12. 문화교육 분야 ODA
	장기과제	13. 보건·의료 협력 강화 14. 북방지역 전문가 양성 15. 인적문화교류 확대 16. 문화공동체 형성
농수산 교역	단기과제	17. 농식품 시장개척 18. 농업 다이얼로그 개최 19. 곡물유통망 다양화 20. 스마트팜 수출 확대 21. 우수품종 개발·보급 22. 농수산 분야 ODA
	장기과제	23. 농기자재 수출 확대 24. 맞춤형 농업 기술협력 25. 수산협력 강화
금융·통상·혁신 플랫폼	단기과제	26. 한-러 혁신플랫폼 27. 전자무역플랫폼(KTNET) 28. 한-러 투자펀드 설립 29. 한-유라시아 펀드 투자 30. 금융지원 강화 31. 투자진출 지원 32. 중소기업 진출 확대
	장기과제	33. FTA 등 협정 체결 34. 중앙은행 간 협력 강화

분야	과제구분	추진과제
디지털·그린 협력	단기과제	35. 디지털정부 협력 36. 과학기술·ICT 협력 37. 신산업 협력 38. 수자원 협력 39. 친환경에너지 협력 40. 산림협력 활성화 41. 디지털·그린 분야 ODA
	장기과제	42. 보건·의료 협력 강화
산업인프라	단기과제	43. 한·중 국제협력시범구 44. 연해주 산업단지 45. 스마트시티 구축 협력 46. 조선 해양플랜트 협력 47. 산업·인프라 분야 ODA
	장기과제	48. 산업인프라 기반 강화
통합네트워크 구축	단기과제	49. TSR 이용 활성화 50. TCR 블록트레인 활성화 51. 국제철도협력기구 협력 52. 동아시아철도공동체 53. 남북철도연결 54. 신규 항공로 개설 55. 전력망 연계 다자협약
	장기과제	56. 북극 항로 개척 57. 북극 항만 개발 58. 한·중·일 전력망 연계 59. 남·북·러 전력망 연계 60. 한러 LNG 협력 61. 한러 PNG 협력
지역별 맞춤형 협력	단기과제	62. K-방역 경험·지식공유 63. 광역두만강개발계획 64. 정상 및 고위급 교류 65. 한-중양아 협력포럼 66. 한-러 지방협력포럼
	장기과제	67. 초국경 관광협력 68. 정상 및 고위급 교류 확대 69. 양자협력 강화 70. 소다자협력 발전

출처: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신북방정책 추진방향 및 정책과제: 8대분야 70개과제,” <<https://www.bukbang.go.kr/bukbang/policy/0004/0001/>> (검색일: 2021.6.7.).

## (가) 경제통상 분야

한국은 2017년 신북방정책 발표 이후 한국-신북방지역 국가들 간의 경제통상 협력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진행하였고, 일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한국은 초국경 경제협력 추진, 유라시아 복합 물류망 구축, 천연가스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과제들을 설정하고 이러한 과제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써왔다. 그 결과 한국은 2018년 이후 러시아와 12건 이상의 양해각서 및 협정들을 체결하면서 철도공사, 북극 LNG 협력, 혁신 플랫폼 구축, 의료특구 조성 등을 위한 제도적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 있는 성과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표 II-6〉 참고).<sup>43)</sup>

〈표 II-6〉 한국과 신북방지역 국가 간의 경제통상 분야 협정/양해각서 체결 현황

대상국가	내용
러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러 서비스 및 투자 분야 FTA 협상 개시 위한 공동선언문 (2018)</li> <li>• 한-러 철도공사 협력 위한 양해각서(2018)</li> <li>• 한-러 ICT 협력 양해각서(2018)</li> <li>• 북극 LNG 협력 위한 양해각서(2018)</li> <li>• 한-러 혁신 플랫폼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2018)</li> <li>• 지방협력포럼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2018)</li> <li>• 한-러 전력분야 협력 정부 간 양해각서(2018)</li> <li>• 한국 KT와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추진을 위한 포괄적 양해각서 (2020)</li> <li>• 한-러 산업기술협력데스크 설치 및 운영 양해각서(2019)</li> <li>• 모스크바 스콜코보(Shchyolkovo) 국제의료특구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2018)</li> </ul>
몽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도협력 양해각서(2019)</li> </ul>

43) 나용우 외,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pp. 100~101; 청와대, “한국-러시아 12건의 MOU, 별도의 MOU 7건도 체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8.6.22., <<https://www.korea.kr/news/blueHouseView.do?newsId=148851822>> (검색일: 2021.6.6.).

대상국가	내용
카자흐스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카자흐스탄 국립농업대학교-농업기술실용화재단 간 업무협약 (2021)</li> <li>• 보건의료 협력 이행계획(2019)</li> <li>• 관세분야 상호인정 협정(2019)</li> <li>•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2019)</li> </ul>
우즈베키스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우즈베키스탄 보건의료 협력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양해각서 (2019)</li> <li>• 한-우즈베키스탄 투자보정협정 개정(2018)</li> <li>• 이종과세방지협정 개정(2019)</li> </ul>
타지키스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삼림협력 양해각서(2019)</li> </ul>
투르크메니스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분야 연구·교육 및 연수 등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2019)</li> <li>• 한-투르크메니스탄 경제협력 프로그램 체결(2019)</li> <li>• 한-투르크메니스탄 표준화 양해각서(2019)</li> </ul>
중앙아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중앙아 경제협의체(Korea-Central Asia Business Council)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2020)</li> </ul>

출처: 나용우 외,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서울: 통일연구원, 2020), pp. 94~95, pp. 100~101, pp. 136~137의 내용과 함께 다음의 보도자료를 종합하여 저자 재정리: 농림축산식품부, “카자흐스탄에 수출용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온실 착공,”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5.24.,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53056>> (검색일: 2021.6.24.); 산업통상자원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과 산업협력 본격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9.9.24.,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51817>> (검색일: 2021.6.24.); 산림청, “국립수목원, “한-중앙아시아 그린로드 프로젝트” 국제심포지엄 개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9.10.17.,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56220>> (검색일: 2021.6.24.).

이외에도 한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는 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선 한국은 투르크메니스탄과의 ‘표준화 양해각서’ 체결, ‘이종과세방지협정’ 개정 등을 통해 투르크메니스탄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들이 보다 더 호의적 기업환경 속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sup>44)</sup>

44) 성원용, “혁신성장 핵심 경제축 ‘신북방정책’ 외연 확장,”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9.4.26., <<https://www.korea.kr/news/contributePolicyView.do?newsId=148860389>> (검색일: 2021.5.18.).



또한 우즈베키스탄과의 ‘한-우즈베키스탄 투자보장협정’ 개정을 통해 한국기업들이 안정적인 기업환경 속에서 우즈베키스탄으로의 진출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sup>45)</sup> 카자흐스탄과는 특히 다양한 협정들을 체결하여 한국 기업들이 카자흐스탄으로 진출하는 데 있어 관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기도 했다. 일례로 양국은 ‘관세 분야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하여 양국 기업들이 상대국 세관에서 보다 신속한 통관절차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sup>46)</sup> 동시에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을 체결하여 양국 관세 당국이 승인한 우수업체를 서로 인정해 세관 절차상의 여러 혜택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기도 했다.<sup>47)</sup> 또한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순방 당시 이들 국가들과의 의료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헬스케어 사업, 병원 설립, 의료특구 사업 등에 한국기업의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발판 마련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신북방지역의 또 다른 협력국가인 몽골과도 경제통상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고 있다. 2021년 초 한국과 몽골 정부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sup>48)</sup> 이를 통해 양국은 상호 국가 내 비즈니스 환경 및 정책 동향에 대한 정보 공유, 경제통상 분야 전문가 교환, 양국 기관 및 기업 간 협력 강화 등과 같은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45) 외교부, “제13차 한-우즈베키스탄 정책협의회 개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9.3.12.,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21032>> (검색일: 2021.5.18.).

46) 성원용, “혁신성장 핵심 경제축 ‘신북방정책’ 외연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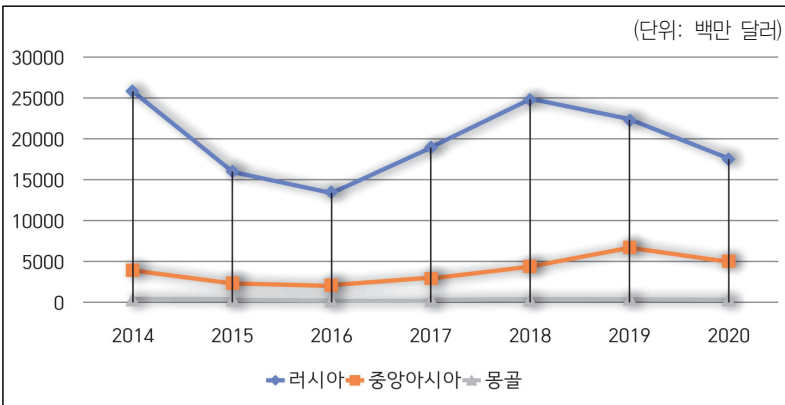
47) 산업통상자원부, “중앙아 최대 교역국 카자흐스탄과 경제협력 강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9.3.20.,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22415>> (검색일: 2021.5.18.).

48) “국내 중소기업, 몽골 등 중앙아시아 진출 기회 열린다…‘시너지 효과’ 기대,” 『뉴스1』, 2021.1.15., <<https://www.news1.kr/articles/?4181948>> (검색일: 2021.6.6.).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sup>49)</sup>

경제통상 분야의 성과는 한국과 신북방지역 국가들 간의 무역규모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은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5개국 등 신북방지역 주요 국가들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해각서들을 체결하고, 일련의 경제협력 전략회의 등을 개최하면서 신북방지역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기반 마련, 한국기업의 진출 확대 등을 도모해왔다.<sup>50)</sup> 그 결과 2017년 신북방정책 발표 이후 한국과 신북방지역 주요 국가들 사이에서의 교역은 대체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그림 II-7> 참고).

<그림 II-7> 한국-신북방지역 주요 국가들 간의 교역 규모



주: 한국과의 수출입 금액을 합산한 자료이며, 중앙아시아에는 5개국(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포함.

출처: K-stat, "수출입 총괄" (<<https://stat.kita.net/stat/kts/ctr/CtrTotalImpExpList.screen>> (검색일: 2021.5.15)).

특히 중앙아시아 5개 국가들과의 교역 규모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2016년(약 20억 달러)에서 2019년

49) 위의 글.

50) 나용우 외,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pp. 124~125, p. 131.

(약 67억 달러) 사이 양자 간 교역규모는 228% 증가하기도 했다.<sup>51)</sup> 한편, 러시아와의 교역 규모를 살펴보면 2018년 약 248억 달러를 기록한 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신북방정책이 발표되기 전인 2015년의 약 159억 달러와, 2016년의 약 134억 달러와 비교하면 2019년(약 223억 달러)의 한-러 간 교역규모는 각각 39.6%, 66.5%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인 증가 추세를 있음을 보여준다.<sup>52)</sup>

반면, 신북방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제통상 분야에서의 한계 및 문제점 역시 발견되고 있다. 먼저 신북방정책의 경우 상기한 바와 같이 한국과 신북방지역 국가들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해 오고 있지만, 현재 많은 사업들이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진행이 중단되어 있다는 한계가 노정되어 있다. 일례로 2018년 신북방경제위원회에서 개최한 제3차 회의 보고내용에 따르면 당시까지의 정책 이행 점검 결과 소다자협력 활성화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53)</sup> 무엇보다도 러시아를 포함한 소다자협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었던 나진-하산 및 접경지역 관광개발 사업 등은 실질적 진전이 전무한 상황으로 평가되었다.<sup>54)</sup> 그리고 1년 후인 2019년에 개최된 신북방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진행된 ‘9개 다리(9-Bridge) 행동계획’ 이행에 대한 점검보고에 의하면 러시아와 추진하려 했던 가스 분야 사업들 역시 중단되었거나 지연 중인 것으로

51)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 등과 같은 외부요인으로 인해 중앙아시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들과의 교역규모가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52) K-stat, “수출입 총괄.”

53) 나용우 외,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p. 110.

54)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2018.12.12., <[https://www.bukbang.go.kr/bukbang/news/0005/?boardId=bbs\\_0000000000000005&mode=view&cntId=19&category=&pageIdx=3](https://www.bukbang.go.kr/bukbang/news/0005/?boardId=bbs_0000000000000005&mode=view&cntId=19&category=&pageIdx=3)> (검색일: 2021.5.18.).

확인되었다.<sup>55)</sup>

이와 함께 러시아와의 철도 사업 역시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현재 한국과 러시아의 철도 인프라 차이나 사업 타당성 논리 등으로 인해 연해주를 중심으로 계획되어 있던 한국과 러시아 간의 철도 연결사업이 기대만큼 진척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sup>56)</sup> 뿐만 아니라 이미 한국과 러시아 간에는 2018년 ‘철도공사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가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표 II-6〉 참고), 나진-하산 프로젝트와 관련된 극동 지역 철도 연결 사업은 중단된 상황이기도 하다.<sup>57)</sup>

이외에도 다른 분야 사업들의 성과도 지금까지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기 곤란하다. 우선 러시아와 추진 중이었던 한-러 극동산림 자원 개발 및 목재 가공사업, 그리고 양식업 관련 사업들도 실질적으로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sup>58)</sup> 또한 극동러시아 지역에 해양수산 및 물류산업의 전진기지 건설이라는 목표 아래 2019년부터 논의가 시작되었던 ‘극동러시아 포디아폴스키 항만 개발’ 사업 역시 최근인 2021년 초에 이르러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보고서가 발간되었을 뿐 본 사업은 아직까지도 본격적으로 착수되지 않고 있다.<sup>59)</sup>

---

55)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제6차 회의 개최,” 2019.11.13., <[https://www.bukbang.go.kr/bukbang/news/0005/?boardId=bbs\\_0000000000000005&mode=view&cntId=33&category=&pageIdx=2](https://www.bukbang.go.kr/bukbang/news/0005/?boardId=bbs_0000000000000005&mode=view&cntId=33&category=&pageIdx=2)> (검색일: 2021.5.18.).

56) 한국의 화물열차의 경우 최대 시속 약 120km/h이지만 러시아 시베리아횡단철도 구간을 달리는 러시아 화물열차는 대부분 40~50km/h의 속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현재까지 극동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러시아 도시들의 크기나 인구 규모 역시 충분히 크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지역 항만 물동량도 부족하여 경제회랑 조성이 미흡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송민근, “한국 新북방정책과 유라시아 주요 국가와의 협력방안 모색: 중국, 몽골, 러시아를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7권 7호 (2019), p. 7.

57) 성원용, “신북방정책과 남북러 삼각협력: 과제와 발전 전망,” 『IDI 도시연구』, 제16권 (2019), pp. 69~77.

58) 위의 글, pp. 69~77.

59) “극동러시아 포디아폴스키 항만 개발 가시화,” 『부산일보』, 2021.4.1.,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40119343134721>> (검색일: 2021.6.6.).

결국, 러시아와의 경제 및 통상 협력은 여러 가지 제도적 발판은 마련된 상태이지만 지금까지 사업 추진으로 인한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내고 있다고는 평가하기 어렵다. 물론 일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 사례도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일례로 한-러 간 소재 및 부품, 장비 분야의 협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한러혁신센터(Korea-Russia Innovation Center: KRIC)가 출범하였고, 2019년에는 한국의 조선사가 러시아 측의 쇄빙 LNG 운반선 건조와 관련한 기술파트너로 선정되기도 했다.<sup>60)</sup>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연해주 지역에 50만㎡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현지 법인 설립을 위한 경영심의회가 완료되었고, 이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sup>61)</sup> 즉, 최근 연해주 한-러시아 경제협력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단계에 접어드는 등 최근 들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들은 여전히 소수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사업 추진의 초기 단계인 만큼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음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계획되어 있었던 많은 협력 사업들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현재 신북방정책의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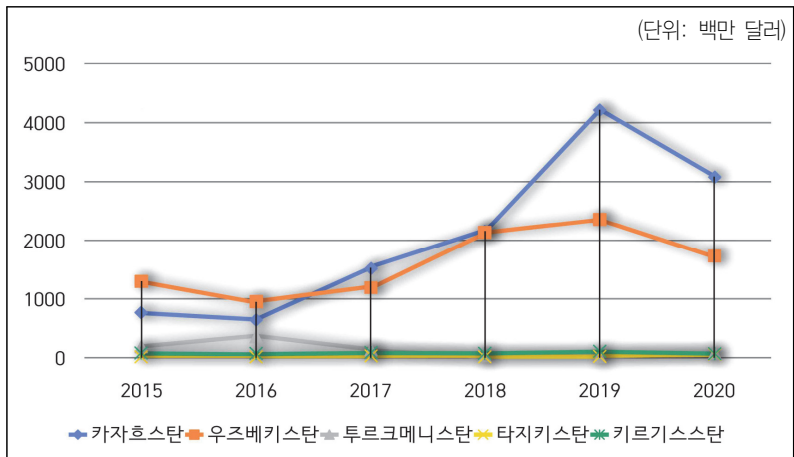
신북방정책 추진 과정에 있어서도 특정 국가들에 대한 편중성은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무역 규모 측면에서 보았을 때, 신북방지역 중 중국을 제외하더라도 러시아에 대한 편중 현상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II-7>에 따르면 한국과 러시아 간의 교역액

60)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제6차 회의 개최.”

61) “연해주 한-러 경제협력 산업단지 사업 본격 착수,” 『매일경제』, 2021.5.17.,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1/05/474222/>> (검색일: 2021.6.6.).

수 총합은 한-중앙아 5개국 간의 총합보다 더 많은 수치를 보여준다. 이는 그만큼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이 지나치게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인식을 지우기 힘들 뿐만 아니라 중양아시아 5개국이나 몽골 등 다른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등이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림 II-8> 한국-중양아시아 5개국 간의 교역 규모



주: 한국과의 수출입 금액을 합산한 자료임.  
출처: K-stat, “수출입 총괄.”

한편, 한국과 중양아시아 지역 개별 국가들 간의 무역 규모에도 불균형한 모습이 보이는데, 특히 이들 국가들과 한국 간의 무역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II-8> 참고). 한국과의 교역 규모에서 상위 2개국(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이 한-중앙아 간의 전체 교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과의 교역은 미미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과 중양아시아 5개국 간의 전체 교역액은 증가 추세에 있지만, 개별 국가들의 경우를 들여다보면 타지키스탄이나 키르

기스스탄처럼 2015년부터 큰 변화가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투르크메니스탄처럼 오히려 신북방정책 추진 이후 교역액이 줄어드는 경우도 발견되고 있어 이들 하위 3개국과의 경제교류 및 협력 확대 노력이 현재까지는 그다지 긍정적인 효과를 도출해 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 (나) 사회문화 분야

한국은 신북방지역 국가들과의 문화·교육 교류를 8대 분야 중 하나로 선정하면서 이들 국가들과의 교류 및 협력 확대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발판 마련, 다양한 문화교류 행사 개최,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 형성, 신북방지역 국민들의 방한 증가 등과 같은 주목할 만한 결실들을 맺어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선 경제통상 분야와 마찬가지로 사회문화 분야의 협력 확대를 위한 준비가 체계적으로 준비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러시아나 중앙아시아 국가들과는 문화·체육·관광·교육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양해각서가 체결되고 다양한 행사들이 개최되었으며(〈표 II-7〉 참고), 이를 통해 신북방지역 국민들과의 인적, 사회적, 문화적 교류 확대를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적 발판은 실제로도 한국과 신북방 국가들 간의 문화 교류 행사 개최 등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2019년 한 해 동안 한국은 중앙아시아 국가 중 투르크메니스탄에서 한국주간행사를 기획하여 태권도 공연, 한국영화 상영회, 한복 패션쇼, 한식 시식회 등을 진행한 바 있고, 이 행사에는 2,000명 이상의 투르크메니스탄 고위인사, 외교단, 일반 시민들이 참석하여 한국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다.<sup>62)</sup> 그리고 이와 함께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태권도 대회와 한국어 말하기 대회 등이 열려 시민들에게 한국 전통 문화와 놀이, 한글 등을 홍보하며 양국 간 문화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표 II-7〉 한국과 신북방지역 국가 간의 사회문화 분야 양해각서 체결 및 행사 사례

대상국가	내용
러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러 수교 3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 출범</li> <li>• 2020년 한러 상호교류의 해 선포 및 양해각서 체결</li> </ul>
몽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몽골 '작은도서관' 개관 사업 지원</li> <li>• 한국-몽골 교육협력 양해각서 체결</li> </ul>
카자흐스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년 '상호 문화교류의 해' 지정(수교 30주년)</li> <li>• 한-카자흐스탄 교육 분야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li> <li>• 알마티 한국교육원 시설 개선 및 원격 교육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li> </ul>
우즈베키스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프라시아 박물관(Afrasiab Museum) 전시실 환경 개선 작업 지원 양해각서 체결</li> </ul>
투르크메니스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 및 인문 협력에 관한 협정 체결</li> <li>• 투르크메니스탄 세종학당 설립</li> <li>• 중등학교 한국어반 개설</li> <li>• 투르크메니스탄 학생들의 한국 초청 연수사업 확대 실시</li> </ul>

출처: 나용우 외,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pp. 94~96의 〈표 II-3〉을 저자 재정리.

한편 2020년 한국은 신북방지역 국가들과의 외교관계 수립 기념 행사를 통해서도 문화 분야의 교류 확대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먼저 한국은 2020년 러시아와의 수교 3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다양한 문화교류 행사를 추진하며 한러 간의 문화교류를 확대했다.<sup>63)</sup> 코로나19로 인해 대규모 행사가 연기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블라디보스톡에서는 제1회 한국의 날이 개최되어 러시아 국민들을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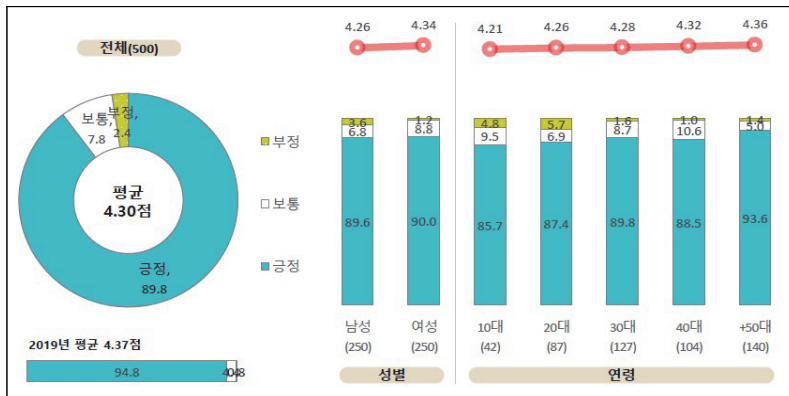
62) 외교부·한국국제교류재단, 『2019 지구촌 한류현황 I (아시아·대양주)』 (제주: 한국국제교류재단, 2019), p. 332.

63) 외교부, 『2020 주요외교계기 기념사업 결과보고서』 (서울: 외교부, 2020), pp. 8~40.



으로 한국의 드라마, 춤, 음악, 음식, 전통놀이 등이 소개된 바 있다. 이외에도 러시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말하기 대회, SNS 공모전, 관광사진 콘테스트 및 한국관광사진전 등과 같은 다양한 행사들을 개최하며 러시아 국민들이 한국의 문화들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도 했다. 또한 같은 해 몽골과도 수교 30주년 행사가 열렸는데, 이때 학술교류 행사를 포함해 한국-몽골 간 문화교류, 한국관광 홍보 행사들이 진행되었다.<sup>64)</sup> 이러한 다양한 노력들을 통해 한국은 신북방지역 국민들에게 한국의 문화 및 관광지를 소개해 줄 수 있었고, 그 결과 이들이 한국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림 II-9> 한국에 대한 러시아 국민들의 이미지



출처: 해외문화홍보원 『2020년 국가이미지 조사 보고서』 (세종: 해외문화홍보원, 2020), p. 304.

이러한 노력은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구축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로 나타나기도 했다. 현재 신북방지역의 모든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한 자료는 부재한 상황이지만 러시아의 경우를 살펴보면 러시아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한국에 대해 상당히

64) 위의 책, p. 58.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I-9〉 참고). 한국문화홍보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러시아 국민들의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는 5점 만점에 4.30점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sup>65)</sup> 이는 2019년 조사된 4.37점에 비해서는 약간 하락한 점수지만 2018년의 3.75점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2년 동안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는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66)</sup> 또한 러시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전통·대중문화 등을 홍보하고 한국과 러시아 간의 경제협력이 진행됨에 따라 한국의 경제, 문화유산, 현대문화 등을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즉, 러시아인들은 한국의 경제분야(4.19점), 문화유산(4.07점), 현대문화(3.95점) 순으로 높은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결국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형성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sup>67)</sup>

이러한 노력의 결과 한국을 찾는 신북방지역 국민들의 숫자 역시 동북아 권역(중국, 몽골)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을 찾는 중국인의 경우 2016년 8,067,722명에서 2019년 6,023,021명으로 약 2백만 명이 감소하여 같은 기간 방한 몽골인의 숫자가 79,165명에서 113,599명으로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권역(중국, 몽골) 국민의 방한 총합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sup>68)</sup> 하지만 동북아 권역을 제외한 다른 2개 권역인 중앙아시아 권역과 유럽 권역 국민들의 방한 규모는 〈그림 II-10〉에서 나타난

65) 해외문화홍보원, 『2020년 국가이미지 조사 보고서』 (세종: 해외문화홍보원, 2020), p. 3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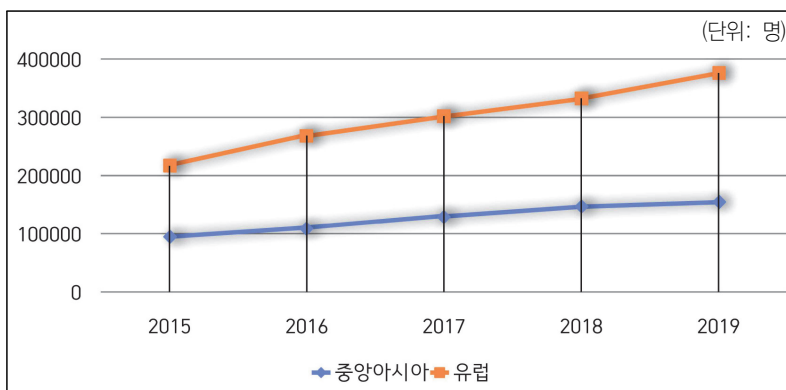
66) 위의 책, p. 304; 해외문화홍보원, 『2019년도 국가이미지 조사 보고서』 (세종: 해외문화홍보원, 2019), p. 304.

67) 해외문화홍보원, 『2020년 국가이미지 조사 보고서』, p. 305.

68) 한국관광 데이터랩, “방한 외래관광객.”

것과 같이 신북방정책 발표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유럽권역 및 중앙아시아 권역 국민들과 한국 간의 인적교류가 정책 추진 이후로도 확대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기의 성과가 만들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림 II-10〉 신북방 국가들의 방한 규모



주: 중앙아시아 권역에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5개국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럽 권역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몰도바,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조지아 7개국이 포함됨.

출처: 한국관광 데이터랩, “방한 외래관광객,” <<https://datalab.visitkorea.or.kr/datalab/portal/tst/getEntcnYFrnGustForm.do>> (검색일: 2021.5.15.).

특히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주요 국가들과의 인적교류 규모는 주목할 만하다. 한국을 방문한 우즈베키스탄 국민은 2016년 67,314명에서 2019년 88,276명으로 약 31%가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카자흐스탄 국민은 34,068명에서 52,966명으로 약 55%가 증가한 바 있다. 또한 2018년 한 해 동안 한국을 찾은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규모가 7,840명을 기록하여 모든 국가 중 4위 규모를 차지함으로써 교육 분야에서도 양국 간의 인적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했다.<sup>69)</sup>

69) 외교부, “제13차 한-우즈베키스탄 정책협의회 개최.”

## (다) 외교안보 분야

외교 및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살펴보았을 때 신북방지역 대상 국가들과의 협력사업은 신남방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사례들과 비교하면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신남방정책과는 달리 신북방정책에서 안보 영역은 8대 분야에 독립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어 명확한 목표 및 추진과제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외교 분야의 경우도 ‘정상 및 고위급 교류 확대’ 등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과제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목표 및 세부과제의 제시 여부와는 상관없이 현재까지 추진되어 온 신북방정책을 통해 한국은 러시아나 중앙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몽골 등과 전통적 및 비전통적 안보 이슈와 관련한 협력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어느 정도는 의미 있는 성과들을 만들어 내오고 있다.

무엇보다도 한국은 외교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신북방지역 국가들과의 ‘정상 및 고위급 교류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그 성과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은 신북방정책 발표 이후 러시아, 일부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국, 몽골 등 주요 협력 대상국들과의 정상회담을 개최해 오고 있으며 고위급 및 실무진으로 구성된 정부 간 회담 역시 정기적으로 개최해 오고 있다(〈표 II-8〉 참고). 신북방정책이 추진된 이래 한국은 상대국 방문이나 다자회의 등을 통해 러시아 및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각각 3회씩 개최해 오고 있으며, 이외에도 이들 국가들과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회담 등 고위급 회의를 포함한 다양한 정부 간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또한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국 순방 당시에는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정상들과 차례로 회담을 가지는 한편 이때를 전후하여 다양한 고위급 및 실무자 회담을 개최하고 있기도 하다.

〈표 11-8〉 신북방지역 국가들과의 고위급 및 실무진 회담

대상국가	회의명	일시
러시아	한국-러시아 정상회담	2017.9.6.
		2018.11.
		2019.6.29.
	한국-러시아 외교장관회담	2019.6.17.
		2021.3.25.
	제7차 한국-러시아 외교차관 전략대화	2019.4.15.
	한국-러시아 고위급 안보회의	2019.4.25.
	한국-러시아 의회 간 고위급 협력위원회	2019.5.27.~29.
	제9차 한국-러시아 산업협력위원회	2019.6.4.
	제16차 한국-러시아 자원협력위원회	2019.9.23.
제13차 한국-러시아 극동시베리아 분과위원회	2019.11.23.	
제4차 한국-러시아 국방전략대화	2021.3.29.	
중국	한국-중국 정상회담	2018.11.17.
		2019.6.27.
		2019.12.23.
	한국-중국 총리회담	2019.3.28.
	한국-중국 외교장관회담	2018.10.19.
		2019.8.1.
		2019.8.20.
		2019.9.25.
		2019.12.4.
		2020.2.16.
		2020.11.26.
2021.4.3.		
한국-중국 국방장관회담	2019.6.3.	
한국-중국 국방차관회담	2018.10.24.	
한국-중국 고위관리회의	2019.11.21.	
몽골	한국-몽골 정상회담	2017.9.6.
카자흐스탄	한국-카자흐스탄 정상회담	2019.4.22.
	한국-카자흐스탄 외교장관회담	2019.10.16.
	제9차 한국-카자흐스탄 정책협의회	2019.3.6.
	제8차 한국-카자흐스탄 경제협력공동위원회	2019.3.20.
제10차 한국-카자흐스탄 정책협의회	2020.2.11.	

대상국가	회의명	일시
우즈베키스탄	한국-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	2017.11.24. 2019.4.19.
	한국-우즈베키스탄 외교장관회담	2019.10.16.
	제13차 한국-우즈베키스탄 정책협의회	2019.3.11.
	제1차 한국-우즈베키스탄 워킹그룹 회의	2019.6.19.
	제2차 한국-우즈베키스탄 워킹그룹 회의	2019.9.25.
	제3차 한국-우즈베키스탄 워킹그룹 화상회의	2020.3.27.
	제3차 한국-우즈베키스탄 경제부총리회의	2020.5.6.
투르크메니스탄	한국-투르크메니스탄 정상회담	2019.4.17.
	제3차 한국-투르크메니스탄 정책협의회	2019.3.14.
타지키스탄	한국-타지키스탄 외교장관회담	2019.10.16.
	제3차 한국-타지키스탄 경제기술과학협력공동위원회	2019.6.25.
키르기스스탄	한국-키르기스스탄 외교장관회담	2019.10.16.
	한국-키르기스스탄 외교차관회담	2020.11.25.
	제3차 한국-키르기스스탄 경제공동위원회	2019.10.4.

출처: 나용우 외,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서울: 통일연구원, 2020), p. 119의 <표 II-17>, p. 134의 <표 II-18>, p. 139의 <표 II-19>를 재인용하였으며, 다음의 자료들을 추가하여 저자 재정리: 외교부, “제12차 한-중앙아 포럼 계기 중앙아 국가들과 외교장관회담 개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9.10.17.,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56244>> (검색일: 2021.6.7.); 외교부, “뮌헨 안보회의 계기 한중 외교장관회담 결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2.16.,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75652>> (검색일: 2021.6.7.); 외교부, “한중 외교장관회담 개최 결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11.26.,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23554>> (검색일: 2021.6.7.); 외교부, “한-러, ‘우정과 신뢰로 함께 빛나는 미래’ (‘2020-21 한-러 상호교류의 해’) 개막,”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3.24.,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42762>> (검색일: 2021.6.7.); 외교부, “한중 외교장관회담 개최 결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4.3.,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44640>> (검색일: 2021.6.7.); 국방부, “국방부장관, 제18차 아시아안보회의 참석 계기 한·중 국방장관 회담 개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9.6.3.,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34526>> (검색일: 2021.6.7.); 국방부, “국방부차관, 베이징 향산포럼 계기 한-중 양자회담 개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8.10.25.,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00592>> (검색일: 2021.6.7.).

한편 한국은 러시아와 한-러 지역국장협의회, 한-러 극동시베리아 분과위원회, 자원협력위원회, 산업협력위원회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한-러 지방협력포럼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동시에

이전부터 개최해 오고 있던 한-중앙아 협력포럼을 2019년 10월 개최된 제12회 포럼부터 장관급으로 격상하여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외교장관 회담을 추진해 오고 있다.<sup>70)</sup>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 신북방 정책이 발표된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신북방지역 국가들과의 정부 간 교류를 확대, 추진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에서의 영구적인 평화 체제 구축 정책과 관련해 중앙아시아 주요 국가들로부터 공식적인 지지를 확보한 것은 안보 분야에서의 주목할 만한 성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4월 16일부터 23일까지 7박 8일의 일정으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 국가를 순방하고 이때 각 국가 정상들과의 회담을 가진 바 있다. 당시 회담들에서 한국은 중앙아시아 3개국과 경제적 협력뿐만 아니라 안보 관련 이슈에 대한 논의도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 중앙아시아 3개국 정상은 모두 한반도 비핵화 등을 포함한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명확히 천명하였다.<sup>71)</sup> 특히 이때의 순방에서 우즈베키스탄의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대통령, 투르크메니스탄의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Gurbanguly Berdimuhamedow) 대통령, 카자흐스탄의 카심-조마르트 토크야예프(Kassym-Jomart Tokayev) 대통령은 모두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석상에서 한국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을 지지한다는 언급을 하였으며, 각국 정상들과의 회담 후 발표

70) 외교부, “제12차 한-중앙아 포럼 계기 중앙아 국가들과 외교장관회담 개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9.10.17.,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56244>> (검색일: 2021.6.7.).

71) 고재남,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아 3국 순방 성과 및 향후 과제』(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9), p. 20.

된 공동성명에서도 남북관계 발전 및 한반도의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했다(〈표 II-9〉 참고).

〈표 II-9〉 중앙아 3국의 한반도평화정책 지지 사례

카자흐스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카예프 대통령: 남북한 평화와 화해를 위해 노력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 지속적인 지지의사 표명</li> <li>• 한국-카자흐스탄 공동성명 2항: 남북관계 발전과 완전한 비핵화 및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li> </ul>
우즈베키스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한반도의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한 지지 표명</li> <li>• 한국-우즈베키스탄 공동선언 17항: 남북관계 발전과 완전한 비핵화 및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li> </ul>
투르크메니스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 투르크메니스탄은 언제나 대화와 협의를 통한 평화적 한반도 문제 해결 방식을 지지 표명</li> <li>• 한국-투르크메니스탄 공동성명 17항: 남북관계 발전과 완전한 비핵화 및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li> </ul>

출처: 고재남,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아 3국 순방 성과 및 향후 과제』(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9), p. 20; “文대통령 ‘한·카자흐, 한반도·중앙아 평화·번영 위해 협력,’” 『연합뉴스』, 2019.4.22., <<https://www.yna.co.kr/view/AKR20190422091751001?input=1195m>> (검색일: 2021.6.6.).

이와 함께 러시아 정부로부터도 한반도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얻기도 했다. 2021년 한러 국방전략대화에서 러시아의 알렉산더 포민(Alexander Fomin) 국방부 차관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양국 간의 협력을 강조하며 러시아 정부는 한국 정부의 한반도 프로세스를 지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sup>72)</sup>

72) “한러 국방전략대화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 지속,” 『뉴스1』, 2021.3.29., <<https://www.news1.kr/articles/?4256675>> (검색일: 2021.6.6.).



한국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해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 등 신북방지역 주요 파트너 국가들로부터 지지를 이끌어내고 있다. 특히 2019년 중앙아 3개국 순방을 통해 한국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정책을 이해시킬 수 있었고, 한국의 노력에 대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의 국가지도자, 주요 인사, 그리고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낸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sup>73)</sup>

한편, 신북방지역 국가들과 비전통안보 영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협력사업 역시 일부 성과가 나오고 있다. 한 가지 사례로 환경안보 분야에서의 한국-몽골 간 협력사업을 들 수 있는데, 특히 한국은 몽골 정부와 기존에 추진해 오던 사막화 방지 사업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만들어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몽골의 사막화는 한국은 물론 동북아지역의 대기오염과도 관계가 있는 바, 몽골의 사막화가 진행되면서 이 지역 환경안보에도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특히 한국 역시 매년 황사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국민들의 건강에도 위협이 되는 만큼 한국은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몽골과도 협력을 진행 중에 있다. 그중 하나가 ‘한-몽 그린벨트 조립사업’인데 이 사업을 통해 양 국가가 협력하여 황사의 발원지라고 알려진 몽골 고비사막에서의 사막화 방지 조립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그림 II-11〉 참고).

이 사업은 2005년부터 시작되어 2035년까지로 예정되어 있는 몽골 정부의 ‘사막화 및 황사 방지를 위한 그린벨트 조성 계획’을 지원하고 있다. 이전부터 실시되어 오던 사업이지만 신북방정책이 발표된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몽골과의 산림협력이 추진되어 왔고, 최근 사막화 방지를 위한 협력 사업에 대한 외부 기관의 평가 결과가 긍정적

---

73) 고재남,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아 3국 순방 성과 및 향후 과제』, p. 20.

이었던 것으로 보도되기도 했다.<sup>74)</sup>

〈그림 II-11〉 한-몽 그린벨트 조림사업



출처: 산림청, “한-몽 국제산림협력사업 평가결과 ‘매우 성공적,’” (2021.2.25. 보도자료), <[https://www.forest.go.kr/kfsweb/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3155835&bbsId=BBSMS\\_TR\\_1036&pageUnit=10&pageIndex=2&searchTitle=title&searchCont=&searchKey=&searchWriter=&searchWrd=%ec%82%b0%eb%a6%bc%ed%98%91%eb%a0%a5&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mn=NKFS\\_04\\_02\\_01&orgId=>](https://www.forest.go.kr/kfsweb/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3155835&bbsId=BBSMS_TR_1036&pageUnit=10&pageIndex=2&searchTitle=title&searchCont=&searchKey=&searchWriter=&searchWrd=%ec%82%b0%eb%a6%bc%ed%98%91%eb%a0%a5&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mn=NKFS_04_02_01&orgId=>)> (검색일: 2021.6.6).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자면 신북방지역 국가들과 외교안보 분야에 서 진행되는 협력 자체가 활발한 편이 아니다. 즉, 한국 정부는 신북방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외교안보 분야의 비중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신북방정책 역시 신남방정책과 마찬가지로 ‘평화’가 강조되고 있기는 하지만 세부 분야와 중점과제들에서는 명확한 과제가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74) “산림청 ‘한-몽 국제산림협력사업 평가결과 매우 성공적,’” 『뉴스1』, 2021.2.25., <<https://www.news1.kr/articles/?4223081>> (검색일: 2021.6.6.).

다만 ‘지역별 맞춤형 협력’이라는 분야 아래 장기과제 중 하나로 제시되어 있는 ‘정상 및 고위급 교류 확대’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성과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세부과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강조해 온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노력을 신북방지역 국가들로부터의 지지를 확보했다는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해 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나.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을 위한 중·장기 전략과 정책과제 (3년차 연구 리뷰)<sup>75)</sup>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부터 지속되어 온 신남방 및 신북방정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두 정책의 중·장기 전략 및 정책과제는 크게 인적·문화, 공동번영, 그리고 공동의 안보확립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될 수 있다.

#### (1) 인적·문화 교류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중·장기적 관점에서 신남방지역 및 신북방지역 국가들과의 인적·문화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크게 세 가지 정책과제가 제시된다. 첫째, 재외 한국문화원을 신설하고,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 지금까지 27개국 32개 해외 지역에 한국문화원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들 한국문화원은 해당 국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의 역사와 문화 등에 대한 홍보를 하고, 이를 통해 현지인들에게 한국에 대한 이해 제고, 한국에 대한 우호적 이미지 형성 등과 같은 기능을 해 온 것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해외 한국문화원은 2010년부터 2019년 사이

---

75) 나.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의 중·장기 전략과 정책과제(3년차 연구 리뷰) 부분은 다음을 참고·요약하였다. 나용우 외,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pp. 251~296.

16개소에서 32개소로 그 숫자가 증가하여 2배 정도의 성장속도를 보여주고 있어 최근 해외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를 전시, 홍보하고 다양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주최하는 첨병 역할을 해 오고 있다.

하지만 신남방지역과 신북방지역으로 범위를 좁혀보면 여전히 한국문화원의 설치 현황은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신남방지역 대상국가들 중 한국문화원이 설치된 국가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 4개국에 지나지 않으며, 이마저도 모두 신남방정책 추진 이전인 2000년대와 2010년대 초반에 설치되었다.<sup>76)</sup> 신북방지역에서는 현재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에만 한국문화원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sup>77)</sup> 결국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이 추진되던 시기에는 이들 대상지역 국가들에 문화원이 신규 설치된 사례는 전무한 바, 이는 이들 국가 국민들에 대한 한국 문화의 홍보, 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노력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sup>78)</sup>

앞으로도 신남방 및 신북방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대상지역 국가, 국민들과의 쌍방향 문화교류 추진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손꼽히는 만큼 한국 문화를 홍보할 수 있는 첨병 역할을 할 한국문화원을 이들 지역에 확대 설립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재외 한국문화원의 기능을 확대하는 것 역시 중·장기적으로 대상 국가들과의 인적·문화적 교류 확대를 위해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현재 해외에 설치, 운영 중인 한국문화원의 기능은 <표 II-10>과 같다.

---

76) 한국문화원은 2006년 베트남, 2009년 카자흐스탄, 2011년 필리핀, 인도네시아, 2013년 태국에 설치되어 현재 운영 중이다. 위의 책, pp. 251~252.

77) 현재 러시아에도 한국문화원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엄밀하게 신북방 대상지역인 극동지방이 아닌 수도인 모스크바에 위치해 있다. 위의 책, p. 251.

78) 위의 책, p. 252.

## <표 II-10> 해외 한국문화원의 기능과 역할

- 문화예술 전시, 공연 등 문화교류사업 추진
- 국제행사 등 주요 계기 활용한 문화교류 및 한국문화 소개
- 한국어, 한국역사 및 문화 강좌 등 프로그램 운영
- 한국영화, 대중가요, 드라마 등 대중문화 소개 및 체험 확대
- 문화예술, 문화산업 등 해외진출 및 마케팅 지원
- 도서관, 디지털자료실을 통한 한국 관련 정보제공
- 문화 관광 관련 정보의 수집, 보급, 교류
-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체육 분야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성화

출처: 해외문화홍보원, 『2014 재외문화원 백서』 (서울: 해외문화홍보원, 2015), p. 16, 재인용:  
나용우 외,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p. 252.

현재 한국문화원은 한국 문화를 해외에 알리고 다양한 교류프로그램 등을 통해 한국민과 해외 국민 간의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해 오고 있다. 하지만 보다 중·장기적으로 신남방 및 신북방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한국의 문화만을 소개하는 일방향이 아닌, 이 지역 국가들의 문화와 역사를 한국에도 함께 소개할 수 있는 쌍방향 문화교류, 상호간 이해 제고를 위해서는 한국 문화원의 기능과 역할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위해 해외 한국문화원을 코리아 센터로 확대, 개편하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sup>79)</sup> 한국관광공사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등과 같은 관광, 문화 분야 기관들의 해외지사나 파견 사무소들을 기존 한국문화원에 입주시키고 코리아 센터로 확대 개편하게 된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포괄적인 문화외교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국과 해당지역 국가 간의 쌍방향 문화교류 추진을 위한 국내 유관기관 간의 공조도 더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남방지역과 신북방지역의 문화, 역사 등을 한국민들에게 소개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는 것이 앞

79) 위의 책, p. 253.

으로 중·장기적 전략 추진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한국 내에 신남방 및 신북방 지역 대상국가들의 문화와 역사 등을 소개해주는 플랫폼을 확립하는 전략이 추진되어야 한다. 현재 부산에는 신남방정책의 대상지역 중 하나인 아세안을 소개하는 ‘아세안 문화원(ASEAN Culture House)’이 운영 중에 있다. 여기서는 아세안에 속한 여러 국가들의 문화를 소개해주는 것 이외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어 아세안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이해를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신남방지역 개별 국가들을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각 국가별 재한 문화원은 현재까지 한국에 설치되지 않고 있으며, 인도 문화를 소개해주는 공식 플랫폼 역시 전무하다. 신북방지역의 경우 러시아와 중국, 몽골이 자국 문화를 한국민에게 소개하는 문화원을 운영 중에 있지만 중앙아시아 국가들(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의 주한 문화원 역시 한국에 설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결국 한국인들이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정보를 얻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며, 아세안의 개별 국가들에 대한 심도 있는 역사, 문화적 이해를 제고하는데 있어서도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향후 이들 국가들의 재한 문화원을 추가적으로 설립해야 한다.

인적·문화 교류 확대를 위한 두 번째 중·장기 전략으로서 협력국을 대상으로 한 문화 관련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확대 추진해야 한다.<sup>80)</sup> 한국과 신남방 및 신북방 지역 국가들 간의 쌍방향 인적, 문화 교류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문화재나 문화연구 부분, 예술교육, 관광, 스포츠 분야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를 수 있도록 ODA 사업을 확대할

---

80) 위의 책, pp. 254~257.

필요가 있다. 특히 이를 위해 신남방 및 신북방 지역을 대상으로 ‘문화동반자 사업(Cultural Partnership Initiative)’을 확대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sup>81)</sup>

그리고 ODA의 수원국 역시 확대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의 ODA는 중점협력국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데, 중점협력국으로 지정된 국가 중 신남방 및 신북방 지역에서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미얀마,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 7개 국가가 포함되어 있다. 즉, 이들 7개 국가들을 제외한 다른 지역 국가들은 한국의 ODA 추진에 있어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신남방 정책, 신북방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보다 많은 국가들과의 문화교류 및 인적교류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더 다양한 국가들이 한국의 문화 관련 ODA의 수혜를 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협력국들과의 지속적인 문화·인적 교류 사업을 발굴하고 포괄적인 프로그램 실시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협력대상 국가들과의 기술협력 등을 포함해 다양한 지식의 공유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sup>82)</sup> 4차 산업혁명 시대 한국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신남방 및 신북방 지역 국가들과의 기술협력 역시 중요하다. 그리고 이들 국가들 역시 최근 제조업 관련한 기술의 개발과 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한국은 중·장기적으로 기술협력을 포함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 대한 협력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신남방 및 신북방 지역 국가의 해외유학생 유치사업, 기술 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확대를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

81) 문화동반자 사업이란 “개발도상국의 문화·예술·미디어 및 문화 산업 분야의 전문가들을 국내로 초청해 공동 창작과 인맥 교류 활성화를 촉진하고 전문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위의 책, p. 256.

82) 위의 책, pp. 257~261.

## (2) 공동번영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과 신남방 및 신북방 지역 국가들의 공동번영을 위한 중·장기 전략 및 정책과제로 바이오 분야 등을 포함한 신사업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그리고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협력 확대 등을 꼽을 수 있다.

우선 한국은 협력 국가들과의 바이오·제약 산업을 중심으로 한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반도체나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이 지금까지 경제성장을 위한 주력 산업이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바이오와 제약산업 역시 성장 중에 있다. 더욱이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이 사업 분야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은 자국 바이오 및 제약 사업의 성장을 위해 신남방, 신북방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최근 동남아 국가들은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신흥 제약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자국 국민들의 건강·보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며 자국 제약산업 발전 전략을 수립 중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베트남은 ‘국가전략계획’과 함께 ‘의약품법’을 제정하였고, 태국과 인도네시아도 이미 잠재력 있는 제약시장 규모를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성장이 기대되는 곳이기도 하다.<sup>83)</sup>

한편, 신북방지역 국가들 역시 최근 제약 및 바이오 산업을 비롯해 국제의료협력사업에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해당 사업들의 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등 일부 국가들은 7%라는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이 지역 제약시장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기도 하다.<sup>84)</sup>

요컨대 신남방·신북방지역 국가들 역시 최근 자국 국민의 건강,

---

83) 위의 책, pp. 263~264.

84) 위의 책, pp. 264~265.



보건환경, 의료기술 발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관심을 바탕으로 자국 제약·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과 우호적 환경 조성에 매진 중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과 바이오·제약 분야의 협력은 한국과 협력국가들 모두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이러한 협력을 위해서는 우선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홍보, 현지 문화를 고려한 전략 수립(특히 무슬림 문화권 국가들의 경우 의약·식품 제조에 있어 할랄 표준 적용 문제 등이 고려되어야 함), 그리고 현지화 전략 추진 등과 같은 정책과제가 수립되어야 한다.<sup>85)</sup>

둘째, 한국은 협력 국가들과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력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며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에 기반을 둔 기술력의 발전이 각 국가의 경제력 향상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많은 국가들이 최근 ICT 기술을 발전시키며 다양한 산업 분야와의 융합을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역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경제성장을 위해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이 필수적인데, 이러한 목적을 위해 신남방·신북방지역 국가들과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력을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신남방 및 신북방 지역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ICT 발전지수(ICT Development Index: IDI) 측면에서 전 세계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sup>86)</sup> 실제로 전 세계 IDI를 살펴보면 2017년 기준으로 세계 18위에 올라 있는 싱가포르를 제외하고 다른 국가들은 대부분 중하위권에 머물러

---

85) 위의 책, p. 266.

86) 위의 책, p. 272.

있다(〈표 II-11〉 참고).

〈표 II-11〉 신남방 및 신북방 지역 국가의 ICT 발전지수(IDI)

국가명	Global Rank 2017	IDI 2017	Global Rank 2016	IDI 2016
싱가포르	18	8.05	16	8.08
러시아	45	7.07	43	6.91
카자흐스탄	52	6.79	51	6.72
브루나이	53	6.75	54	6.56
말레이시아	63	6.38	62	6.22
태국	78	5.67	79	5.31
중국	80	5.60	83	5.17
몽골	91	4.96	87	4.91
우즈베키스탄	95	4.90	103	4.48
필리핀	101	4.67	100	4.52
베트남	108	4.43	108	4.18
키르기스스탄	109	4.37	110	4.06
인도네시아	111	4.33	114	3.85
캄보디아	128	3.28	128	3.04
인도	134	3.03	138	2.65
미얀마	135	3.00	140	2.59
라오스	139	2.91	144	2.43
한국	2	8.85	1	8.80

출처: ITU, "ICT Development Index 2017," (<https://www.itu.int/net4/ITU-D/idi/2017/index.html>) (Accessed September 6, 2021).

현재로서는 대다수의 신남방·신북방지역 국가들이 뛰어난 ICT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들 국가들은 ICT 사업을 국가차원에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추진 중이며, 각 국가 내에서는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ICT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의 가능성은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sup>87)</sup> 한국의

87) 위의 책, p. 272, p. 276.

경우 <표 II-11>에서 확인할 수 있듯 세계적으로 뛰어난 ICT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이들 국가들 사이에 ICT를 중심으로 한 협력의 가능성은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한국은 향후 신남방·신북방 국가들과 ICT 산업 등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력을 확대 추진해야 한다. 인터넷 및 모바일 인프라 구축이나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협력 역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중·장기적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다.

### (3) 공동의 안보확립을 위한 정책과제

향후 신남방·신북방지역 국가들과의 중·장기 전략 및 정책과제에는 보건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그리고 사이버 안보 및 사이버 협력 추진 등과 같은 의제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우선 보건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는 향후 다양한 위협에 협력국가들과 공동으로 대처하고 안보확립을 위해 필수적이다. 지금까지 한국과 신남방·신북방지역 국가들은 모두 메르스, 지카 바이러스, 조류독감 등과 같은 다양한 질병과 감염병으로 고통을 받은 바 있으며,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인적, 경제적 피해를 받기도 했다. 그리고 이러한 종류의 초국경적 질병 및 감염병이 앞으로 언제든지 발생하여 각 국가 국민들의 삶과 생명을 위협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문제는 이러한 감염병 및 질병에 대응하는 데 있어 일부를 제외한 상당수의 신남방·신북방지역 국가들의 역량이 뛰어나지 않다는 점이다. 글로벌 보건안보지수(Global Health Security Index)에 따르면 태국을 비롯해 몇몇 국가들은 전염병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역량에 있어 50위 내에 위치해 있지만, 이외의 국가들은 대부분 50~100위권,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브루나이 등 4개 국가는 100위권 밖의 순위에 올라 있다(<표 II-12> 참고).

〈표 II-12〉 신남방 및 신북방 지역 국가의 글로벌 보건안보지수

국가	종합 (Overall)	예방 (Prevent)	감지 (Detect)	대응 (Response)	의료체계 (Health)	규범준수 (Norms)	위험요소 (Risk)
태국	73.2 (6)	75.7 (3)	81.0 (15)	78.6 (5)	70.5 (2)	70.9 (12)	56.4 (93)
말레이시아	62.2 (18)	51.4 (35)	73.2 (28)	61.3 (16)	57.1 (15)	58.5 (45)	72.0 (33)
싱가포르	58.7 (24)	56.2 (23)	64.5 (40)	64.6 (11)	41.4 (38)	47.3 (101)	80.9 (15)
인도네시아	56.6 (30)	50.2 (38)	68.1 (37)	54.3 (30)	39.4 (42)	72.5 (7)	53.7 (106)
몽골	49.5 (46)	37.6 (73)	77.3 (20)	37.8 (90)	30.8 (69)	52.6 (72)	60.8 (69)
키르기스스탄	49.3 (47)	29.7 (109)	64.7 (39)	49.9 (44)	29.8 (70)	64.8 (20)	56.1 (96)
베트남	49.1 (50)	49.5 (39)	57.4 (51)	43.0 (73)	28.3 (74)	64.6 (21)	53.4 (107)
중국	48.2 (51)	45.0 (50)	48.5 (64)	48.6 (47)	45.7 (30)	40.3 (141)	64.4 (58)
필리핀	47.6 (53)	38.5 (71)	63.6 (41)	43.8 (68)	38.2 (47)	49.8 (84)	50.3 (124)
인도	46.5 (57)	34.9 (87)	47.4 (67)	52.4 (32)	42.7 (36)	47.7 (100)	54.4 (103)
러시아	44.3 (63)	42.9 (62)	34.1 (116)	50.1 (43)	37.6 (50)	52.6 (72)	51.4 (113)
미얀마	43.4 (72)	30.3 (106)	59.2 (47)	50.4 (41)	19.5 (111)	59.1 (40)	38.2 (164)
라오스	43.1 (73)	18.9 (165)	70.4 (34)	52.0 (34)	19.4 (112)	45.9 (113)	46.8 (133)
카자흐스탄	40.7 (83)	58.8 (17)	28.2 (133)	26.6 (143)	28.0 (77)	52.8 (66)	59.5 (72)
캄보디아	39.2 (89)	28.6 (110)	57.7 (50)	36.7 (95)	12.0 (146)	60.0 (36)	38.5 (162)
우즈베키스탄	34.3 (116)	42.6 (64)	19.4 (156)	27.8 (138)	16.0 (127)	60.5 (34)	47.8 (130)
브루나이	32.6 (128)	24.8 (129)	30.5 (127)	33.4 (110)	24.2 (88)	23.3 (195)	66.7 (49)

국가	종합 (Overall)	예방 (Prevent)	감지 (Detect)	대응 (Response)	의료체계 (Health)	규범준수 (Norms)	위험요소 (Risk)
타지키스탄	32.3 (130)	26.7 (121)	24.1 (144)	42.9 (74)	20.5 (105)	42.6 (131)	38.2 (164)
투르크메니스탄	31.8 (135)	31.0 (102)	38.6 (101)	26.0 (147)	14.4 (134)	39.3 (146)	45.1 (135)
한국	70.2 (9)	57.3 (19)	92.1 (5)	71.5 (6)	58.7 (13)	64.3 (23)	74.1 (27)

주: 괄호 안 숫자는 총 195개국 중 해당 국가의 순위를 의미함.

출처: GHS Index, "2019 Global Health Security Index," <<https://www.ghsindex.org/>> (Accessed September 6, 2021).

즉, 신남방·신북방지역의 상당수 국가들은 향후 또 발생할지 모를 전염병에 대해 여전히 취약할 가능성이 높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이들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이러한 보건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해 한국은 중·장기적으로 신남방·신북방지역 국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역내 다자협력 틀의 창설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sup>88)</sup> 예를 들어 현재 미국의 주도로 창설된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GHSA)’을 벤치마킹 하여 ‘아시아보건안보 이니셔티브(Asian Health Security Initiative)’ 창설을 제안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협력틀을 통해 각 국가들의 보건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 확대, 신종감염병 발생 시 공동대응을 위한 정보 공유 등을 추진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도 상대적으로 뛰어난 보건안보 대응능력을 갖춘 한국이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공동의 안보확립을 위한 중·장기적 전략으로써 사이버 안보 및 사이버 협력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sup>89)</sup> 현재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됨에 따라 신남방·신북방지역 국가들 역시 ICT 기술역량을 강화

88) 위의 책, p. 286.

89) 위의 책, p. 291.

하고 국가기반 시스템에 ICT 기술을 적용하는 노력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면서 사이버 안보에 대한 우려 역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뛰어난 ICT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이 이들 국가들과의 협력 여지가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중·장기적 측면에서 ‘전자정부 협력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과 신남방·신북방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몇 가지 정책과제로는 첫째, 사업 인프라 확대를 들 수 있다. 한국은 과거부터 동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의 일부 국가들과 전자정부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경험이 있다. 특히 한국은 베트남과 전자정부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인도네시아와 전자정부 협력 강화 합의 및 3년간 전자정부 협력센터 개설·운영, 태국과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 및 교육 제공, 캄보디아와 전자정부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등과 같이 꾸준히 신남방지역 국가들에 대한 협력을 지속해 왔다.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우즈베키스탄과 전자정부 협력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최근인 2020년에는 우즈베키스탄에 전자정부 및 디지털 경제협력센터가 개소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신북방지역 협력국인 몽골과도 전자정부 구축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가 체결되는 등 신북방지역 국가들과도 일정 부분 전자정부 협력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들 국가들과의 전자정부 협력사업은 대부분 세미나 개최 등과 같은 일회성이고 간헐적 이벤트가 대부분이라는 평가를 받는다.<sup>90)</sup> 향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신남방·신북방정책의 협력사업 및 과제들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협력이 진행된 인도네시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 일부 국가 이외에 보다 다양한 국가들과의 협력이 진행되어야 한다. 신북방지역의 경우 우즈

---

90) 위의 책, p. 294.

베키스탄 이외에도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 몽골 등에도 전자정부 협력센터를 신설하는 등 보다 폭넓은 지역에 전자정부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력 확보를 위한 교육센터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한편, 또 다른 정책과제로 인력확충도 진행되어야 한다. 협력국가에 여러 인프라를 설치하고 협력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고급 IT 전문가 인력이 추가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새로 충원된 인원들을 신남방·신북방지역에 파견하고, 그곳에서 활동하기 위한 재정 확보 역시 필요하다.

## 2.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을 위한 근미래 환경과 전략

### 가.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 관련 근미래 환경 전망

#### (1) 신남방정책 관련 근미래 환경 전망

향후 신남방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 대상 지역을 둘러싼 경제통상, 사회문화, 그리고 외교안보 분야와 관련한 근미래 환경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현재 신남방지역 대상 지역인 아세안과 인도는 모두 각자의 경제적 성장, 안보 확립, 사회문화적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전략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동시에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이라는 외부적 요인 역시 신남방지역의 환경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 (가) 경제통상 분야

신남방지역을 구성하는 아세안과 인도의 경우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미중 무역분쟁, 코로나19 등과 같은 다양한 외부적 요인 등

으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받았다. 따라서 코로나19 이전까지만 해도 다른 지역들보다도 높은 경제성장 추세를 보여주던 신남방지역 역시 이후 경제적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2021년 신남방지역 국가들을 중심으로 투자 및 소비심리가 회복됨에 따라 2022년부터는 차츰 코로나19 이전의 성장 속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남방지역 국가들은 코로나19 극복 및 경제회복, 성장의 동력 확보 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러한 정책들은 향후 한국 정부가 신남방지역에 대한 경제통상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근미래 환경변화를 이끌어 낼 것으로 보인다.

첫째, 신남방지역의 산업공업화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아세안 지역 국가 및 인도 모두 자국의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산업공업화를 최우선 경제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산업공업화 정책을 통해 자국의 제조업 분야 경쟁력 제고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베트남의 경우 자국 제조업 육성을 위해 2035년 전망과 2025년 베트남 산업발전 전략을 추진 중에 있으며,<sup>91)</sup> 이외에도 필리핀(Manufacturing Resurgence Program), 인도네시아(Making Indonesia 4.0), 말레이시아(Vision 2020), 미얀마(Myanmar Integrated Country Strategy (2018-2022)), 캄보디아(Rectangular Strategy Phase IV), 싱가포르(Industry Transformation Map), 인도(Make in India) 등이 자국의 제조업 분야 성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 중이다.<sup>92)</sup>

---

91) 최준환, “아세안 인공지능(AI) 중심지를 꿈꾸는 베트남,” KOTRA 해외시장뉴스, 2021.10.5.,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2/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90999>> (검색일: 2021.10.15.).

92) 김태형, “2021년 필리핀 산업 개관,” KOTRA 해외시장뉴스, 2021.7.2.,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4/globalBbsDataView.do?setIdx=403&dataIdx=189127>> (검색일: 2021.10.15.); 김동환, “[KDI 기고] 아세안의 떠오르는



둘째, 신남방지역에서는 향후 소그룹 자유무역주의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 국가들은 대부분 통상 의존도가 높은 편이며, 특히 베트남과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등 아세안 국가들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통상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인도의 경우 통상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지만 앞으로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새로운 통상 파트너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아세안 및 인도 등 신남방지역 국가들 모두 자신들에게 호의적인 무역질서 환경구축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측된다.

셋째, 근미래에 신남방지역에서는 경제통상 분야에 있어 디지털 전환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 및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움직임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남방지역 국가들 역시 지속적인 번영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인 바, 이들 국가들은 다양한 산업분야에 있어서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다. 아세안은 이미 ‘아세안경제공동체 2025’ 청사진의 중점분야 중 하나로서 디지털 경제를 채택하여 향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제공동체로서 도약하기 위한 움직임을 추진했다.<sup>93)</sup> 또한 ‘아세안 디지털통합행동계획 2019~2025(ASEAN Digital Integration Framework Action Plan 2019~2025)’ 수립을 통해 이 지역의 디지털 혁신을 위한 청사진을 수립,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한편, 인도의

---

다크호스, 인도네시아, KOTRA 해외시장뉴스, 2020.5.1.,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902/globalBbsDataView.do?setIdx=444&dataIdx=183916>> (검색일: 2021.10.15.); 조주연, “인도 제조업 혁신에 기여하는 AI,” KOTRA 해외시장뉴스, 2021.7.20.,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2/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89801>> (검색일: 2021.10.15.);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Myanmar Integrated Country Strategy,” April 12, 2019, <<https://www.usaid.gov/burma/documents/myanmar-integrated-country-strategy>> (Accessed October 15, 2021).

93) 외교부, 『한 눈에 보는 아세안경제공동체』 (서울: 외교부, 2016), pp. 11~18.

경우 이미 IT 소프트웨어 분야를 중심으로 뛰어난 디지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인도 정부는 2014년 ‘디지털 인디아 정책’을 발표하여 국내 사회, 경제분야 전반에 걸친 디지털화를 추진 중에 있다.

결국 아세안과 인도 모두 디지털경제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이는 만큼 근미래에도 신남방지역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나) 사회문화 분야

근미래 신남방지역은 사회문화 분야에 있어 MZ세대의 역할 확대, 민주주의 및 세계화에 대한 가치의 재해석 현상 강화, 초국경적 질병 및 감염병 등으로 인한 사회안전망에 대한 관심 증가 등의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현재 신남방지역의 인도와 아세안은 각각 세계 2, 3위의 인구대국이며, 특히 젊은층의 비율이 높다. 이들 지역의 MZ세대는 가까운 미래에 각 국가의 사회문화 분야에서 전면적으로 등장하여 시민의식과 문화 트렌드 형성 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아세안의 경우 역내 사회문화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사회문화공동체(ASEAN Socio-Cultural Community)’의 실현을 위한 노력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역내 국가들의 복지 및 사회보장, 사회 정의 실현 및 인권 증진, 개발격차 완화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세부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다.<sup>94)</sup> 이러한 과정에서 앞으로 아세안 각 국가의 MZ세대의 역할은 보다 확대·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 역시 MZ세대는 인구비중이 적지 않으며, 디지털 인프라에 익숙

---

94) ASEAN, “ASEAN Socio Cultural Community,” <<https://asean.org/our-communities/asean-socio-cultural-community/>> (Accessed October 14, 2021.).

하다. 아세안과 인도 모두 근미래에 MZ세대가 전면에 나서게 된다 면 신남방지역에서의 사회적 가치와 문화적 트렌드 역시 MZ세대의 영향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근미래 신남방지역에서는 민주주의와 세계화에 대한 가치의 재해석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아세안의 일부 국가들에서는 비민주적 요소들이 강화되는 한편 인도에서도 힌두민족주의의 부상으로 인한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신남방지역 국가에서는 청년층과 중산계급을 중심으로 지금까지의 비민주적이고 권위적인 국가체제에 의구심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정의와 원칙에 입각한 정부의 등장에 대한 열망이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태국과 미얀마 등에서는 시민들을 중심으로 민주주의 정부의 등장을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필리핀 등에서도 법질서의 회복을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sup>95)</sup> 신남방지역 국민들은 앞으로도 기존 정부 및 정치체제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민주주의 질서 회복, 세계화의 부정적인 효과 완화 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신남방지역 국가들에서는 다양한 사회안전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남방지역의 많은 국가들은 코로나19로 큰 충격을 받았으며, 과거부터 조류독감, 지카 바이러스, 말라리아 등 초국경 바이러스와 질병으로 피해를 입었다. 코로나19와 같은 초국경적 감염병 및 바이러스가 앞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아세안 및 인도 정부는 보건 및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세안 보건발전 고위관료

---

95) 김홍구·이미지, “태국 2020: 의심받는 ‘타이식 민주주의’와 정치과정의 변화,” 『동남아시아연구』, 제31권 1호 (2021), p. 83; 문기홍, “군부 권위주의 체제와 민주화: 미얀마의 민주화 과정과 민주주의 후퇴 현상을 중심으로,” 『아시아리뷰』, 제11권 2호 (2021), pp. 236~237.

(APT SOMHD) 회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아세안 선임국가 및 아세안 보건부장관회의(ASEAN Health Ministers and ASEAN Plus Three Health Ministers in Enhancing Cooperation on COVID-19)’ 등과 같은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sup>96)</sup> 아세안은 해양폐기물 등 해양환경 개선에 많은 관심을 보여 왔으며, 앞으로 다양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다) 외교안보 분야

향후 신남방지역에서는 강대국 간의 경쟁 심화, 비전통 및 인간 안보 문제의 부상 등과 같은 군사·안보 분야에서의 환경 변화가 예상된다.

첫째,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 간 경쟁의 주요 무대가 인도-태평양(Indo-Pacific)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미중 경쟁의 심화는 신남방지역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최근 다자영역에서 미국 영향력의 축소를 위해 ‘배타적 동아시아 지역주의(exclusive East Asian regionalism)’ 및 ‘범아시아 지역주의(pan-Asian regionalism)’ 개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신형 대국관계, 신 아시아 안보, 신형국제관계, 신형주변국관계 등의 슬로건을 통해 미국 주도 질서에 대해 대응하고 있는데, 아세안은 핵심 지역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적극적인 대중국 봉쇄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 호주와 함께 기존의 ‘포괄적 아·태 지역주의(Inclusive Asia-Pacific regionalism)’를

---

96) ASEAN, “ASEAN Plus Three Senior Health Officials Reaffirm Cooperation to Stop Spread of 2019-nCoV,” February 4, 2020, <<https://asean.org/asean-plus-three-senior-health-officials-reaffirm-cooperation-to-stop-spread-of-2019-ncov/>> (Accessed October 15, 2021); 백용훈, “아세안(ASEAN)의 보건 위기 대응과 협력: 감염병과 보건안보(Health Security),” 『동아연구』, 제39권 2호 (2020), p. 31.

‘인도-태평양 지역주의(Indo-Pacific regionalism)’로 확대 발전시켰고, 2010년대 말 이후 인도까지 포함하여 ‘4자 안보협의체’를 구성해 오고 있다.<sup>97)</sup> 미국은 동맹국 및 안보 우호국과의 ‘안보 네트워크(security network)’구축을 도모하고 있는데, 대중국 전략의 중심공간으로 아세안과 인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시하고 있다.<sup>98)</sup>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아세안과 인도의 중요성 역시 부상하고 있기에 앞으로 신남방지역을 중심으로도 미중 간 경쟁 심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근미래 신남방지역에서 비전통안보 및 인간안보에 대한 지역적 관심이 높아지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세안과 인도 등 신남방지역은 최근 코로나19는 물론이고 과거부터 다양한 감염병 및 바이러스로 많은 피해를 받아왔다.<sup>99)</sup> 또한 해양환경오염 문제나 메콩강의 수질 악화 등은 지역 생태계 파괴는 물론 지역 주민들의 실생활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등 환경안보 문제 역시 대두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필리핀, 태국, 미얀마 등 일부 아세안 국가들과 인도는 모두 테러리즘과 같은 비전통안보에 대한 위협과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남방지역 국가들에서는 전통적 안보를 넘어 인간 개개인의 존엄과 생명 보호를 목적으로 한 인간안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테러리즘이나 대량살상무기, 환경파괴와 같은 비전통안보 위협에 대한 관심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97) 정구연 외, “인도-태평양 규칙기반 질서 형성과 쿼드협력의 전망,” 『국제관계연구』, 제23권 2호 (2018), pp. 14~18.

98) 박재적, “인도·태평양 지역 소다자 안보협력: 과거, 현재, 미래,” 『통일연구』, 제23권 1호 (2019), p. 128.

99) 아세안 지역 국가들은 2000년대 이후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지카바이러스, 조류독감 등 다양한 감염병 등으로부터 많은 피해를 받은 바 있다. 백용훈, “아세안(ASEAN)의 보건 위기 대응과 협력: 감염병과 보건안보(Health Security),” pp. 15~22.

## (2) 신북방정책 관련 근미래 환경 전망

신북방지역은 정치,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신북방정책 대상국가에는 중국과 러시아 등과 같은 지역 강대국은 물론이고, 중앙아시아 및 몽골 등 최근 높은 경제성장과 활발한 대외전략을 추진하는 국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신북방지역의 근미래 환경은 경제통상, 사회문화, 그리고 외교안보적으로 지금과 다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 (가) 경제통상 분야

근미래 신북방지역에서는 디지털 경제 및 혁신산업 육성이 확대 되는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러시아를 비롯해 중앙아시아의 주요 국가들, 그리고 몽골에 이르기까지 신북방지역의 국가들은 대부분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이러한 자원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이룩해 왔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기존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이들 국가들의 경제 성장에는 한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더욱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맞춰 이들 국가들 역시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찾아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따라서 신북방 국가들은 디지털경제로의 전환과 자국 내 혁신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러시아는 신산업 부문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2015년부터 ‘국가기술 이니셔티브(National Technological Initiative) 2035’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주요 국가들 역시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국가경제전략 2030(National Economic Strategy 2030)’을 바탕으로 자국 산업의 디지털화, ICT 산업 및 창조산업(creative industry) 분야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디지털 카자흐스탄(Digital Kazakhstan)’ 계획 아래 산업전

반의 디지털 기반 구축, ICT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은 경제성장과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진행 중에 있다.<sup>100)</sup>

현재 러시아를 포함한 신북방지역 국가들의 대다수가 혁신부문 역량에 있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이들 국가들 모두 자국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제성장을 위한 새로운 동력 확보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앞으로 이 지역 전반에 걸쳐 디지털 경제화 및 혁신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은 한층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나) 사회문화 분야

신북방지역 근미래 환경은 코로나19와 관련한 변화가 예상된다. 즉, 코로나19를 계기로 신북방지역 국가들의 보건 및 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한 협력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신남방지역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신북방지역 국가들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여전히 러시아나 중앙아시아 주요 국가들, 그리고 몽골 등의 보건의료 역량은 세계적 수준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다.<sup>101)</sup> 결국 상대적으로 낙후된 국가 보건 및 의료 시스템,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인적 피해는 신북방지역 국가들로 하여금 보건 및 의료 시스템 역량 향상, 제약분야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시켜 주는 요인이 되었다.

신북방지역 국가들은 코로나19 등 초국경 전염병 및 바이러스에 취약한 편이고, 향후 이러한 위협요소들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

100) 고재남, 『러·중의 유라시아 협력 동향과 신북방정책 추진 전략』 (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9), p. 49.

101) 2019 Global Health Security Index에 따르면 대부분의 신북방지역 국가들이 세계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하위권에 분류되어 있다(〈표 II-12〉 참고). GHS Index, “2019 Global Health Security Index,” <<https://www.ghsindex.org/>> (Accessed September 6, 2021).

때문에 코로나19를 계기로 자국 내 의료 및 보건역량 향상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 국가는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역내 국가들 간, 그리고 더 나아가 역외 국가들과의 보건 및 의료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 강화해 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다) 외교안보 분야

신북방지역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역동적인 지역이다. 이 지역은 중국과 러시아라는 두 강대국의 영향권에 속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미국-중국-러시아 간의 이해관계가 얽힌 곳이기도 하다.<sup>102)</sup> 또한 이 지역은 북한 핵문제와도 관계가 있으며, 최근 다양한 대내외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정권 교체를 앞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곳이기도 하다.

향후 신북방지역은 미국-중국-러시아 3개국 간의 힘의 역학관계가 더욱 더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즉, 근미래 이 지역을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 격화, 미국과 러시아 간의 대립, 그리고 미국에 대응한 중국과 러시아 간의 밀착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sup>103)</sup> 중국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상징되는 민족주의와의 결합을 통해 기존 현상변경 역량에 희망적 사고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다양한 이슈에서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미국 내에서는 중국 부상의 억제 및 현상변경 복원력(resilience)에 대한 재평가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트럼프 정부 등장 이후 예상보다 빠르고 강력한 중국 견제 또는 억제 정책들을 보여주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는 정치와 경제 양 측면에서 동시에

102) Alexander Cooley, *Great Games, Local Rules: The New Great Power Contest in Central Asi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p. 3.

103) *Ibid.*, pp. 5~8.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방위적으로 중국의 현상변경 시도를 막으려 하고 있다.

신북방지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이 중첩되는 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역내 국가들의 국내 정치, 경제, 사회 행위자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 반대로 신북방지역 국가들의 반응과 대응은 미국과 중국의 전방위적 경쟁의 중단기적, 장기적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결국 신북방지역에서도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은 더욱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신북방지역 국가들 역시 각자의 생존 및 이익 확보를 위한 복잡한 상황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러시아 역시 신북방지역을 중심으로 대립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이미 2014년 크림반도 사태와 서방의 제재 이후 미국과 다양한 분야에서 충돌해 왔다. 러시아는 미국 주도의 대러시아 제재에 반발하고 있으며, 2010년대 말 사드(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로 대표되는 미국의 글로벌 미사일방어체제 확대를 자국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 역시 크림반도 문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 문제, 러시아 국내정치적 문제 등을 바탕으로 갈등 관계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협력적인 모습을 보여 줄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과거의 경제적 협력관계 중심에서 벗어나 최근 군사·안보적 측면에서도 눈에 띄는 협력수준을 보여주고 있다.<sup>104)</sup> 특히 미국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 두 국가는 최근 양자군사 훈련의 확대, 무기 이전, 안보이니셔티브 체결 등을 바탕으로 국방

---

104) Alexander Korolev, "On the Verge of an Alliance: Contemporary China-Russia Military Cooperation," *Asian Security*, vol. 15, no. 3 (2019), p. 233.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미중 갈등, 미러 대립 등의 관계가 지속될 경우 중국과 러시아 간의 협력관계 역시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신북방정책의 성과를 위해서는 우호적인 한반도 정세가 조성되어야 하지만,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안보적 환경이 개선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한반도 정세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는 가까운 시일 내에 대립국면을 벗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고,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도 경색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남북관계 역시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결국 근미래에는 미중경쟁, 북미관계, 북한 핵무기 등을 둘러싼 남북한 문제 등을 해결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한반도 정세 역시 경색 국면에서 벗어나기는 힘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신북방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감염병 및 질병 등을 포함한 비전통안보 이슈의 부상이 예상된다. 신북방지역 국가들 역시 신남방지역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초국경적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의료 역량에 한계가 있으며, 코로나 19와 같은 전염병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바 있다. 또한 신북방지역은 테러리즘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며, 미세먼지와 같이 역내 환경오염 문제 역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중앙아시아 국가 등이 참여하고 있는 ‘상하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CO)’ 등을 중심으로 역내 테러리즘 등에 대한 대응을 추진 중에 있지만 향후 세계화와 지역 통합 등이 가속화되고 인적·물적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비전통안보 문제 역시 골칫거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 나.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을 위한 근미래 전략

### (1) 신남방정책을 위한 근미래 전략

#### (가) 경제통상

근미래 신남방정책 경제통상 전략에는 신남방지역 국가들의 산업화 및 경제성장 달성 지원, 소그룹 자유무역주의 대응 및 새로운 가치사슬(value chain) 구축, 그리고 디지털 전환 및 기후변화 공동 대응 전략을 포함한다.

첫 번째로 한국은 신남방지역 국가들이 산업화 및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지원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최근 미중 간 무역분쟁이 지속되고 있으며, 중국에 대한 과도한 경제의존도를 낮추고 경제파트너십 다변화를 추진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사안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세안과 인도 등 신남방지역 국가들과의 경제 파트너십 구축은 중요하다. 다만, 현재 아세안의 대부분 국가들은 산업화와 경제성장 측면에서 세계적 기준에 뒤쳐져 있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한국과 신남방지역 국가들 간의 경제협력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경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 국가들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이 선행되어야 하는 바, 한국이 이에 대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신남방지역을 대상으로 한 소그룹 자유무역주의 대응과 새로운 가치사슬 구축 전략이 추진되어야 한다. 최근 아세안은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을 통해 지역 경제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나 참여국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과 경제상황의 차이로 여러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RCEP은 향후 전자상거래를 포함

해 디지털경제에 기반을 둔 성장동력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이 RCEP 차원에서 회원국들과 디지털 통상정책을 수립 하는데 있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다양한 세부사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 역량을 신남방지역 국가들에 전수할 수 있는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과 연구센터 설립 등을 추진하고, 전문가 양성 및 파견제도 운영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인도에 대한 투자와 무역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대인도 무역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셋째, 디지털 전환과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해 신남방지역 국가들과 협력하는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최근 신남방지역 국가들 상당수가 디지털 경제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의 디지털 경제역량이 뛰어나다는 점에서 신남방지역 국가들의 수요에도 잘 조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 한국의 경쟁력을 활용하여 신남방 국가들에 대한 ICT 산업 및 기술, 인력 육성, 인프라 개발, 전자정부 기반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신남방지역 국가 내 교육센터를 설립하고 현지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을 신설·운영하는 사업, 디지털 헬스케어, 온라인 교육 등을 위한 플랫폼 개발사업,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협력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대응 전략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아세안과 인도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sup>105)</sup> 한국과 신남방지역 국가 모두 기후변화에 대해 적극적인

---

105) 동남아시아 지역은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가뭄, 산불 등에 가장 취약한 지역 중 한 곳이며, 지금까지 각종 자연재해로 인해 경제, 사회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받아왔다. Amit Prakash, "Boiling Point," *Finance & Development*, vol. 55, no. 3 (2018), p. 22, <<https://www.imf.org/external/pubs/ft/fandd/2018/09/southeast-asia-climate-change-and-greenhouse-gas-emissions-prakash.htm>> (Accessed October 14, 2021).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향후 협력의 지속가능성 역시 높다고 볼 수 있다. 세부적으로 양자 간 환경보호 관련 지식공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인도나 아세안 주요 국가들의 국내 탄소 시장 정착과 관련한 노하우 등을 전수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 등을 포함해 해양오염의 주범이 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공동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규범 마련 및 소비패턴 변화를 위한 연구, 교육,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나) 사회문화

근미래 신남방정책 사회문화 전략은 크게 교육 및 연구 ODA, 문화 ODA, 한류와 디지털 접점의 확대,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ASEAN Socio-Cultural Community: ASCC) 보건·의료 실천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전략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현재 동남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국 문화가 소개되고 있고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이미지가 구축되고 있기 때문에 신남방지역을 대상으로 사회문화전략의 현실성과 지속가능성은 높다고 판단된다. 중국과 일본이 신남방지역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소프트파워의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된 한국의 전략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첫째, 사회문화 분야의 근미래 전략으로서 신남방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연구 ODA 전략 추진을 꼽을 수 있다. 한국의 이미지 제고와 신남방지역 국가들의 인적 역량 강화를 위해 중요한 것은 한국과 신남방지역 국가들 간의 교육·연구 분야 협력이다. 특히 근미래 교육협력 전략은 코로나19 이후의 상황과 각 국가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ICT 기술을 활용한 교육 지원사업, 한국과 신남방 국가 간 상호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 사업, 전문 인력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신남방지역 대상 문화 ODA 전략이다. 아세안 및 인도는 다양한 역사적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관광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지 않거나 유적 보존 능력이 높지 않은 경우가 많다. 최근 이들 국가들은 자국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홍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때문에 한국 역시 신남방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문화 ODA를 추진하는 것은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우위분야를 활용한 맞춤형 문화 ODA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 디지털 역량을 활용한 문화 ODA 사업과 한글 전파 사업 등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한류와 디지털의 접점을 확대하는 전략을 들 수 있다. 한류가 확산된 국가들에서 디지털 플랫폼 등을 활용해 한류를 더욱 확산시킬 전략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인도에서는 최근 MZ세대의 역할이 커지고 있으며, 이들은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하고 있다. 신남방지역 디지털 세대에게도 한류를 보다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도 한류와 디지털 간의 접점을 파악해 보다 효율적인 한류 전파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류의 본산이라고 할 만큼 한국 문화가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태국과 필리핀 등과 같은 나라들, 그리고 최근 한국 드라마 등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인도 등을 거점으로 하여 허브 앤 스포크(hub and spoke)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디지털을 활용해 한류뿐만 아니라 아세안 및 인도 문화의 소개를 통한 양방향 문화교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넷째,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 보건 의료 실천 목표 달성에 대한 기여전략이다. 최근 아세안 지역 국가들은 자국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개발 및 인간 개발을 목표로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 오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등으로 감염병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아세안 차원에서 공동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sup>106)</sup> 한국의 경우 코로나19에 비교적 성공적으로 대응을 해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메르스 등 다양한 감염병에 대응해 온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의 목표 달성에 있어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다) 외교안보

근미래 신남방정책 외교안보 전략은 크게 한국형 인도-태평양 전략의 정립 및 추진, 중견국 외교에 기반한 대신남방지역 접근, 비전통 안보 협력, 인도와의 외교안보협력 강화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최근 동남아시아와 인도는 미중 패권경쟁의 맥락 속에서 경제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전략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sup>107)</sup> 이 지역은 개별국가 및 지역의 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다양한 비전통안보 위협요소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한국 역시 신남방지역에 대한 외교안보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한국형 인도-태평양 전략의 추진이 필요하다. 우선 한국형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전략적, 지리적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 요구된다.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 인도, 호주, 그리고 유럽 국가들까지 각각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 중에 있지만 인도-태평양 전략의

---

106) 백용훈, “아세안(ASEAN)의 보건 위기 대응과 협력: 감염병과 보건안보(Health Security),” pp. 23~30.

107) David Shambaugh, “U.S.-China Rivalry in Southeast Asia: Power Shift or Competitive Coexistence?” *International Security*, vol. 42, no. 4 (2018), pp. 89~93.

전략적 정의와 지리적 개념에 대한 합의가 부족하며, 국가 간 전략개념 역시 혼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들 각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기저에는 중국에 대한 견제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바,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한국형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할 경우 부작용의 우려가 있다. 각국의 전략과 혼선을 빚지 않고, 한국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형 인도-태평양 전략 개념과 정의, 지리적 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아세안 다자전략을 추진하고,<sup>108)</sup> 신남방정책과 한반도 문제를 효과적으로 연계시키는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

둘째, 중견국 외교에 기반을 둔 신남방지역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 미국과 중국 간 전략경쟁의 심화 속에서 한국의 운신의 폭을 넓히고 중소국의 이익 확보를 위해 대아세안 중견국 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치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한국과 신남방지역 국가들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 질서 형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먼저 양자 전략대화를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다자 형태의 전략대화로 확대하여 양자 문제를 넘어 아세안, 서아시아 등 지역 현안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설립할 수 있을 것이다. 최종적으로 신남방지역 국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다자협력 플랫폼 설립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한국과 신남방지역 국가들은 보다 포괄적인 전통적·비전통적 안보 이슈들에 대한 논의를 하고, 미중 강대국 경쟁 속에서 지역 국가들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

108) Amitav Acharya, "The Myth of ASEAN Centrality?" *Contemporary Southeast Asia*, vol. 39, no. 2 (2017), pp. 273~279.



셋째, 비전통-인간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전략이 추진되어야 한다. 신남방지역은 테러리즘이나 해적행위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며, 팬데믹, 환경오염문제, 물 부족문제, 식량문제 등도 지역 국민들의 존엄과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사이버안보에 대한 우려 역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과 신남방지역 모두에게 비전통안보와 인간안보 문제에 대한 대응은 그 무엇보다도 시급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도 우선순위에 올려야 하는 어젠다라는 점에서 협력을 가속화하는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신남방지역을 대상으로 보건, 의료 인프라 협력사업, 사이버안보 대응능력 강화협력, 해양안보협력 등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인도 외교안보협력 전략을 꼽을 수 있다. 인도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요한 국가로 손꼽히고 있다. 더욱이 인도는 중국과도 영토분쟁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주도의 쿼드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일본, 호주 등 이 지역 강국들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신남방지역의 안보질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이다. 한국의 인도와의 안보분야에서의 협력은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따라서 근미래 인도와의 외교안보협력의 확대, 강화는 시급한 과제이다. 인도와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인도와의 정기적 해상훈련 등을 통해 해적행위와 해양 테러리즘에 대한 공조능력을 제고하고 해양재해 등에 대한 공동대처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은 인도가 필요로 하는 경쟁력 있는 방위산업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도의 안보적 우려<sup>109)</sup>를 고려한 방산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109) 권재범, “중국의 인도양 진출과 인도의 대응 분석: 인도-인도양 연안국 간의 안보·전략적 관계를 중심으로,” 『아태연구』, 제28권 1호 (2021), pp. 19~21.

## (2) 신북방정책을 위한 근미래 전략

### (가) 경제통상

경제통상 분야에서의 신북방정책 추진을 위한 근미래 전략은 최근 신북방지역 국가들이 중점적으로 진행 중인 사안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신북방지역 국가들이 추진 중인 디지털 경제 및 혁신산업 육성 정책에 발맞추어 한국 역시 디지털·혁신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주요 국가들은 최근 들어 디지털 경제 및 혁신산업 육성에 관심을 가지고 상당한 자원을 투자해 오고 있다. 한국은 IT 분야에 있어 우수한 인프라와 자원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과 협력할 여지는 충분하다. 동시에 러시아를 포함한 신북방지역 국가들 역시 기술 발전을 위한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준 높은 과학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모두 IT 소프트웨어 분야에서의 우수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한편 한국은 IT 하드웨어와 서비스 분야에서의 강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이들 국가들 간의 IT 분야 협력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이다.<sup>110)</sup>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와는 디지털·혁신 기술 교류를 확대하고 공동연구 등을 활성화하는 접근법을 취한다면, 그 이외의 국가들에 대해서는 디지털·혁신 기술을 전수하고 이를 통해 해당 국가들의 시장 및 연계산업을 선점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한국은 신북방 국가들과의 디지털 및 혁신 협력을 이원화를 목표로 한 근미래 전략 추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110) 김동묘, “2021년 벨라루스 산업 개관,” KOTRA 해외시장뉴스, 2021.9.8.,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4/globalBbsDataView.do?setIdx=403&dataIdx=190506>> (검색일: 2021.10.15.).

둘째, 러시아 극동지역 및 중국 동북지역을 중심으로 거점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최근 러시아와 중국 모두 극동지역 및 동북지역으로 눈길을 돌리고 이들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sup>111)</sup> 러시아의 경우 극동지역 산업화를 추진 중이며, 중국 역시 동북지역의 현대화와 경제발전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한국이 신북방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핵심 지역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 지역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의 관심, 그리고 발전을 위한 노력 등을 고려하면 향후 이 지역의 발전 잠재력은 상당히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지역에 다양한 산업 인프라가 조성된다면 한국으로서는 이 지역에 대한 접근을 보다 확대하고 신북방지역 추진에 있어 중요 지역으로 삼을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 (나) 사회문화

신북방정책 사회문화 근미래 전략은 크게 의료·보건 및 헬스케어 분야 패키지형 협력, 극동중심의 관광기반 공고화 및 협력 활성화, 소프트파워 강화를 통한 상호 신뢰기반 구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의료·보건 및 헬스케어 분야 패키지형 협력 전략 추진을 위해서는 신북방지역 각 국가별 맞춤형 의료보건 시스템을 구축하고, 방역체계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신북방지역 국가들은 보건안보 역량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의료·보건 및 헬스케어 분야에 있어 이 지역의 협력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sup>112)</sup> 많은 신북방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의료인의

111) 나용우 외,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pp. 106~108; ““동북 3성, 중국 북방실크로드 개발의 핵심지역”, 『한국일보』, 2015.11.9.,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511090368208810>> (검색일: 2021.10.14.).

112) “신북방 시장도 화상상담으로... 무협, 수출상담회 개최”, 『한국무역신문』, 2020.5.13., <<https://www.weeklytrade.co.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3&item=&no=64446>> (검색일: 2021.10.14.).

교육과 양성, 훈련 등에서부터 환자 관리와 치료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의 개선을 필요로 한다.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의료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범부처 성격의 보건의로 및 헬스케어 패키지형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각 국가들의 수요 조사를 통해 각국 맞춤형 협력사업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신북방지역 국가들과 협력하여 의료인 양성 및 교육분야 협력 사업,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리 노하우 전수,<sup>113)</sup> 그리고 신북방지역 국가들과 제약 및 의료기기 관련 협력 방안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둘째, 극동중심의 관광기반 공고화 및 협력 활성화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극동지역은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지리적으로 한국과 가까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유럽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독특한 장점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남한-북한-러시아를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우호적 환경이 조성될 경우 3자 간의 관광협력 추진이 용이한 곳으로 평가받는다. 현재 러시아 정부는 극동지역개발정책의 일환으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지속될 경우 앞으로 극동지역의 여행자원 개발과 인프라 확립에도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극동과 한반도를 연계한 관광전략의 모색도 필요하다.<sup>114)</sup>

셋째, 소프트파워 강화를 통한 한국-신북방지역 국가 간 상호신뢰기반 구축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현재 신북방지역의 대표 국가라

113) 2019년 발표된 ‘글로벌 보건안보지수’에 따르면 신북방지역 국가들 중 몽골과 키르기스스탄, 중국 등 50위권 언저리에 위치한 국가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역 국가들의 순위는 하위권으로 쳐져 있다. 특히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신남방지역 국가들보다도 낮은 순위에 자리잡고 있다. GHS Index, “2019 Global Health Security Index.”

114) “러시아 극동 관광·입업·목재 산업 유망,” 『한국무역신문』, 2018.4.6., <<https://www.weeklytrade.co.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5&item=&no=39276>> (검색일: 2021.10.14.).

할 수 있는 러시아에서는 한류를 통해 한국에 대한 호의적 이미지가 구축되고 있다.<sup>115)</sup> 한국 역시 세계적 조류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소프트파워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북방지역 국가들에서도 한국 대중문화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국에 대한 우호적 이미지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은 소프트파워 강화에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정책 추진의 현실성을 높여주고 있기도 하다. 중국과 일본은 이미 중앙아시아에서 소프트파워 확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소프트파워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진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적교류 확대를 위해 신북방지역 유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그 일환으로 가칭 ‘신북방유학생 네트워크’ 구성사업의 모색이 가능할 것이다. 신북방유학생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한국에서 수학하는 유학생들이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인도 함께 참여를 함으로써 한국 생활에 대한 고충을 이해하고 서로 돕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유학생들은 향후 고국으로 돌아가 한국에 대한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핵심 주체가 될 수 있다. 특히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가지게 된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은 고국으로 돌아간 후 가족이나 친구, 동료들에게 한국을 소개하는 데 있어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이 한국에서의 학업을 도울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 (다) 외교안보

근미래 신북방정책 외교안보 전략은 한국 주도의 역내 다자채널 구축, 미래지향적 양자협력 플랫폼 구축, 북방국가와의 협력을 통한

---

115) 나용우 외,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pp. 114~115.

한반도 긴장완화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특히 이들 전략은 현재 한국을 둘러싼 안보환경 및 국제정세와 연계되어 상당히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전략들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은 주도적으로 역내 다자채널 구축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세부적으로는 중간국 대화체 건설, 신안보 공동대치를 위한 다자 플랫폼 결성 주도, 유라시아 국제의장회의 정례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 한국을 포함한 신북방지역은 전통적/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은 신북방지역 국가들을 포함하는 다자채널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협력을 확대하고 공조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중간국 대화체 형성과 감염병, 환경, 난민 문제 등과 같이 신안보 이슈에 공동대처할 수 있는 역내 다자 플랫폼의 결성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북방지역 국가들과 미래지향적인 양자협력 플랫폼을 구축하는 전략이 마련되어야 하며, 신북방지역 주요 국가들과의 정상 회담 및 고위급 회담 정례화, 한러 외교 및 국방장관이 참여하는 2+2 전략대화체 신설, 다자·양자 공공외교 채널 활성화 등의 노력을 제시할 수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국가들과의 경제적·전략적 관계를 확대함으로써 관계 다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신북방지역 내의 국가들은 한국 외교의 다변화를 위해 적절한 국가들이며, 이들과의 미래지향적인 양자협력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은 지극히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북방국가와의 협력을 통한 한반도 긴장완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현재 한반도를 둘러싸고 북핵문제가 한국 등 주변국들에 대한 안보위협, 그리고 지역질서 불안 등을 야기하고 있다. 한국 입장에서는 자국 안보 확립과 더 나아가 한반도에서의 긴장 완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북한 핵문제가 적절히 해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신북방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추진해야 하는 바, 기존 한-중앙아시아 협력포럼의 확대, 다이얼로그 플러스 협의체 산하 비핵화 논의 플랫폼 운영 등을 세부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 Ⅲ. 신남방정책을 위한 근미래 주요사업 추진방안







신남방지역 근미래 환경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인은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의 심화 및 확장이 될 것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한 국가도 확실하게 주도권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sup>116)</sup>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와 아세안 다수의 국가들은 어느 한 국가에 편승(bandwagoning)하기보다는 헤징(hedging)을 통한 위험 분산 또는 전략적 균형(balancing)을 전개할 것으로 관측된다.<sup>117)</sup> 이 같은 맥락에서 아세안 및 인도가 전개하는 헤징전략은 미국이나 중국 어느 한쪽에 편승하기 힘든 한국의 향후 지역전략과 궤를 같이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더욱이 미중 갈등으로 아세안과 인도가 기대할 수 있는 혜택은 일시적일 뿐으로 중국을 대체 또는 보완할 수 있는 경제권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도전 과제가 많다. 신남방정책도 이 같은 지역의 기회와 한계에 대한 균형 잡힌 평가를 바탕으로 업그레이드되어야 할 것이다.

신남방정책은 2017년 발표 이후 대상지역인 아세안 및 인도를 대상으로 하는 외교다변화 전략을 넘어 한국의 새로운 지역전략으로 자리매김했다. 나아가 신남방정책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조응하는 한국의 독자적인 외교정책으로 발전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럽의 주요국과 EU, 호주도 인도-태평양이라는 지역 차원의 대외전략을 발표하고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공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신남방정책도 근미래 지역 환경과 협력 수요의 변화에 부응하여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116)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한반도 미래에 대한 국내 전문가 인식조사,” p. 123, 재인용: 나용우 외,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p. 158.

117) 배공찬, 『ASEAN 연구기행』 (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1), p. 444; ASEAN, “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 June 23, 2019, <<http://www.asean.org/asean-outlook-indo-pacific>>, 재인용: 나용우 외,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p. 167.

신남방지역과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할 때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지역전략과 협력의 범위를 넓혀 보다 미래지향적인 대외전략으로 발전할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남북 간 협력을 재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때를 대비하여 한국과 신남방 국가와의 경제협력이 한반도 평화경제 구현에 귀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sup>118)</sup>

## 1. 경제통상

### 가. 추진 배경 및 필요성

신남방정책 대상 지역의 근미래 환경은 어떻게 변화할까? 경제통상 분야 근미래 환경은 해당 국가/지역 경제의 성장 속도와 구조, 주요 대외 정책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먼저 경제 성장의 속도와 방향성을 분석하여 아세안과 인도가 근미래 파트너로서 갖는 의미와 협력 방향을 검토해 볼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아세안과 인도 경제의 변화에 따라 협력 수요가 증대하는 주요 대외 정책을 조사하여 한국과의 효과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118) 북한이 사회주의 경제체제 또는 정부 주도의 시장경제체제 운영을 구상하며 모델로 삼는 대표적인 국가가 베트남과 싱가포르이다. 북한이 역사적인 두 차례의 북미 정상 회담의 개최지로 베트남과 싱가포르를 지목한 것은 양국 정부와 북한 정권과의 친분 및 체제의 유사성뿐만 아니라 향후 북한 경제의 미래 발전상을 기획하고 재정 운영과 각종 제도, 사업 시범 등 구체적인 실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베트남 개혁 개방(도이머이) 성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이퐁 산업단지의 빈그룹(Vin Group) (자동차, 스마트폰 등) 방문이 그 예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신남방정책 경제통상 근미래 전략의 시장 기반 협력, 산업공업화 달성, 글로벌 통상환경 재편 대응,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시한 신성장 동력 확충 등은 모두 근미래 북한 경제에도 시급하고 긴요한 정책과제이다. 신남방 국가와의 성공적인 경제통상 근미래 전략 실천은 북한의 개혁개방에 매력적인 유인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세계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해왔던 신남방 지역은 미중 무역분쟁에 이어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2020년 극심한 경기 침체를 겪었다. 아세안 10개국은 전 세계 및 여타 지역에 비해 성장세 둔화가 상대적으로 완만하였지만 2021년 코로나19 확산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성장세는 제한적으로 회복되었다. 아세안은 2020년 -3.3%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이후 2021년은 2.6%, 2022년은 5.5%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표 III-1> 참고). 인도는 2020년 -7.3%의 기록적인 경제규모 축소에 따른 기저효과로 2021년에는 전년 대비 9.7% 성장이 예상된다.

<표 III-1> 신남방 국가 경제성장률 전망치 비교

(단위: %)

연도	2020	2021(추정)	2022(전망)
전세계	-3.1	5.9	4.9
아세안	-3.3	2.6	5.5
브루나이	1.1	2	2.6
캄보디아	-3.1	1.9	5.7
인도네시아	-2.1	3.2	5.9
라오스	-0.4	2.1	4.2
말레이시아	-5.6	3.5	6
미얀마	3.2	-17.9	-0.1
필리핀	-9.6	3.2	6.3
싱가포르	-5.4	6	3.2
태국	-6.1	1	4.5
베트남	2.9	3.8	6.6
아세안+동티모르	-4.0	3.0	5.1
인도	-7.3	9.7	7.5

출처: IMF, "Regional Economic Outlook" (October 2021); ADB, "Asian Development Outlook Supplement" (December 2021), 재인용: 최윤정, "아세안·인도 정세와 2022년 전망," 세종연구소, 『정세와 정책』, 2022년 1월호(특집호-제7호) (2021), p. 3.

2022년에도 7.5% 성장하여 전세계 최고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sup>119)</sup> 전체적으로 신남방 지역의 경제는 2021년 기술적 반등 이후 투자와 소비심리가 회복되면서 2022년부터 서서히 본래의 성장 궤도에 재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남방지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거대 시장으로서 아세안과 인도가 보유하고 있는 성장 잠재력에 더하여 글로벌 무역체제의 변화라는 외적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아세안과 인도는 각각 인구 6억 6천만 명, 13억 7천만 명의 인구대국이자 GDP 세계 5위(3조 1천억 달러), 6위(2조 6천억 달러)의 경제대국이다. 뿐만 아니라 세계 평균을 웃도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2030년경 각각 세계 4위, 3위로 순위 부상이 예상되고 있다.<sup>120)</sup> 뿐만 아니라 아세안과 인도는 저임금 생산기지이자 소비시장으로서 북미, 유럽 지역의 뒤를 이어 대표적인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 형성 지역으로 부상하였다.<sup>121)</sup> 여기에 최근 미중 무역분쟁이

---

119) IMF, “Regional Economic Outlook” (October 2021); ADB, “Asian Development Outlook Supplement” (December 2021), 재인용: 최윤정, “아세안·인도 경제와 2022년 전망,” 세종연구소, 『정세와 정책』, 2022년 1월호(특집호-제7호) (2021), p. 3.

120) “The Future of Consumption in ASEAN,” *The ASEAN Post*, November 4, 2020, <<https://theaseanpost.com/article/future-consumption-asean>> (Accessed September 10, 2021); 아세안의 2030년 경제성장 잠재력과 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보고서는 ADB, *ASEAN 2030: Toward a Borderless Economic Community* (Tokyo: Asian Development Bank Institute, 2014)를 볼 것; “India to Become 3rd Largest Economy by 2030: Report,” *The Times of India*, December 27, 2020, <<https://timesofindia.indiatimes.com/business/india-business/india-to-become-3rd-largest-economy-by-2030-report/articleshow/79972584.cms>> (Accessed September 10, 2021).

121) GVC란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원자재·중간재 생산과 완제품 가공·조립 등의 생산단계가 여러 국가에 분산된 국가 간 분업생산 체계를 의미한다. 아시아로의 GVC 이동에 대해서는 WTO, *Global Value Chain Development Report 2019: Technological Innovation, Supply Chain Trade, and Workers in a Globalized World* (World Trade Organization, 2019), <[https://www.wto.org/english/res\\_e/booksp\\_e/gvc\\_dev\\_report\\_2019\\_e.pdf](https://www.wto.org/english/res_e/booksp_e/gvc_dev_report_2019_e.pdf)> (Accessed September 10, 2021)를 볼 것.

심화되면서 미국, 일본의 다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탈중국’이 본격화됨에 따라 중국의 대체 생산기지로서 아세안과 인도가 반사이익을 얻게 된 측면도 있다. 애플도 기존 중국 생산물량 중 약 30%는 아세안, 20%는 인도로 이전을 추진 중이며, 폭스콘도 인도 생산시설 확장을 위해 최대 1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sup>122)</sup> 2020년 7월 기준 1,700개가 넘는 일본 기업이 중국 철수를 신청했고, 건수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sup>123)</sup>

한편 1991년 시장경제로 전환한 이후 약 30년간 연평균 6%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견실한 경제성장을 보이며 중국을 이을 ‘포스트 차이나’로서 기대를 모았던 인도는 2018년 하반기부터 비은행금융권(non-bank financial institution)의 유동성 위기로 산업 전반에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소비 부진과 투자 악화 등 경제둔화 조짐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후 2020년 3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전국 봉쇄조치(2020년 3월 25일~5월 31일, 67일간)가 경제에 결정적 타격을 입히면서 2021년 경제 성장률은 IMF를 비롯한 주요 경제기구의 2020년 말의 예상치보다 3%p 정도 낮아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인도 정부가 단계적 봉쇄 완화조치를 실시하고 유동성 공급 및 신용지원 등을 통해 일부 산업 지표가 상승했으나 실업과 소득감소에 따른 구매력 저하, 인플레이션 우려 등 실물경제 하방압력이 가속화되고 있다.<sup>124)</sup> 더욱이 2021년 상반기부터 2차 확산으로 5월 5일 일일 확진자 수가 41만 명을 넘어

122) 폭스콘 10억 투자 출처는 “폭스콘 생산라인 인도로…‘탈중국’ 가속화,” 『매일경제』, 2020.7.13.,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0/07/717507/>> (검색일: 2021.9.10.).

123) “일본의 중국 엑소더스? 1700여 일본기업, 중국 떠나려 줄었다,” 『중앙일보』, 2020.9.21.,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876685>> (검색일: 2021.9.10.).

124) Centre for Monitoring Indian Economy Pvt. Ltd., “Per capita Consumption Expenditure Regresses by 3 Years,” <<https://www.cmie.com/kommon/bin/sr.php?kall=warticle&dt=20210605142154&msec=730>> (Accessed September 10, 2021).

서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경제적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sup>125)</sup>

하지만 2021년 하반기부터 백신 접종률을 높여 코로나19 통제가 가시화되는 2022년 이후부터 경제 재도약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미중 대립 격화, 코로나19 학습효과로 글로벌 기업들의 공급망 구조 다변화 시도가 인도에 반사이익을 주고 이를 계기로 산업성장, 소비확대 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2021년 5월에 UN에서 발표한 ‘세계 경제 상황 및 전망 보고서’도 2021년 인도의 경제가 여전히 매우 취약한 상태이지만 7.5% 성장을 달성한 이후 2022년에 10.1%로 더욱 빠른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sup>126)</sup>. 성장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에 근거하여 인도 정부는 2025년 인도 경제의 핵심 분야별 강점과 기회 요인을 아래 그림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그림 III-1〉 2025년 인도 경제의 강점과 기회



출처: 인도 상공부 Invest India(<https://www.investindia.gov.in/>) 발표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  
(검색일: 2021.10.12.)

125) 최윤정, “코로나19에 대한 인도 정부의 대응과 대내외 주요 변화 및 시사점,” 『세종 정책브리프』, no. 2021-12 (2021), p. 2.

126) United Nations, *World Economic Situation and Prospects as of mid-2021* (New York: United Nations, 2021), p. 3.

한국의 대외무역은 여전히 중국(24.4%)과 미국(13.0%)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만 최근에는 아세안과의 교역이 증가하여 교역의 14.8%를 차지하면서 성공적인 교역 다변화를 시현하고 있다.<sup>127)</sup> 근미래에도 고성장이 예상되는 신남방 국가들과 지속가능한 경제통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은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 확충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아세안은 최근 수년간 중국을 넘어선 투자 지역이자 중국에 이은 2위 수출 지역으로 위상을 높이고 있다.<sup>128)</sup> 인도 역시 한국의 7위 수출 대상국이고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 등 주요 대기업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세안과 인도는 GDP의 65%를 대외교역에 의존하는 한국에 매우 중요한 파트너임에 분명하다.<sup>129)</sup>

### (1) 산업공업화: 신남방지역의 최우선 경제정책

신남방정책 대상 지역의 성장 잠재력 실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공업화 달성 여부이다. 이들은 대부분 초기에는 풍부한 1차 상품을 수출하고 공산품을 수입하다가 국내 산업을 육성하려는 목적으로 수입대체 산업화를 추구하였으나 이는 오히려 국내 산업기반 및 경쟁력 있는 기업의 육성을 저해하고 외환보유고의 감소로 이어졌다. 1985년 플라자 합의(Plaza Agreement) 이후 통화가치가 절상된 일본 기업의 아세안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후 아세안은 외국인 투자가 주도하는 첫 번째 공업화를 경험하게 된다.

127) K-stat, “한국무역통계,” <<https://stat.kita.net/stat/world/major/KoreaStats.screen>> (검색일: 2021.9.10.).

128) 위클리공감, “전략적 동반자로 한국의 제2위 교역 대상,”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9. 10. 15., <<https://www.korea.kr/special/policyFocusView.do?newsId=148865646&pkgId=49500735>> (검색일: 2021.9.10.).

129) K-stat, “한국무역통계.”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아세안은 경공업 육성과 수출산업화를 달성할 수 있었다. 이제 아세안은 산업경쟁력 확보로 자생력 있는 경제 구조를 실현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를 위해 아세안과 인도 정부 모두 산업공업화를 통해 제조 경쟁력을 키우는 것을 경제정책의 핵심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신남방지역의 주요국들은 고성장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제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정책기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신남방 국가들은 코로나19 이후 재편되고 있는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국의 역할을 일정 부분 담당하면서 새로운 글로벌 제조 허브로 부상하고 있는 이때를 자국 산업화의 기회로 삼으려고 한다. 글로벌 기업들이 제조업 분야 대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베트남, 태국을 위시한 아세안과 인도로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추세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지난 이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 (가) 아세안

아세안 국가들은 일찍이 일본의 자동차 산업을 위시한 투자로 제조업이 발달한 태국과 서비스업을 토대로 선두 선진국 그룹에 속한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대부분 성숙한 산업화 단계에 도달하기도 전에 제조업 생산과 고용 비중이 빠르게 감소하는 미성숙 탈공업화 현상을 겪고 있다.<sup>130)</sup> 자체 제조역량 부족은 수출 경쟁력을 저해시키고 대외의존도를 높여 성장의 가로막는 요인이 된다. 4차 산업혁명 대응을 비롯한 미래 성장전략을 추진하지만 전 단계 산업화 과정을 건너뛰 수 없는 것이다.

---

130) 박변순은 선진국이 아닌 개도국 단계에서 제조업 성장을 이룩하기도 전에 비중이 감소되는 현상을 미성숙탈공업화(Pre-mature deindustrialization)라고 하였다. 박변순, 『아세안의 시간: 동남아시아 경제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서울: 지식의 날개, 2019), p. 382.

이에 아세안 각국은 산업공업화 실현을 위하여 다양한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예를 들어 베트남은 제조업 육성을 위한 ‘2035년 전망, 2025년 베트남 산업발전 전략’<sup>131)</sup> 등을 통해 중국을 잇는 대체 생산 기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베트남의 GVC 연구를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태국은 세계 12위 자동차 생산국가를 넘어 전기·전자를 중심으로 제조 강국으로 발돋움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필리핀은 ‘제조업 부흥 프로그램(Manufacturing Resurgence Program)’을 통해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 업무처리 아웃소싱)와 같은 서비스업과 더불어 전통적인 관광업(21%) 및 소매 유통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킨다는 목표다. 인도네시아는 ‘2015~2035 국가산업발전 마스터플랜(Master Plan of National Industry Development 2015-2035: MPNID 2015-2035)’, ‘Making Indonesia 4.0’ 등의 정책을 발표하고 팜오일(세계 생산량의 55.4%)·고무·카카오·커피 등 농산품 생산 강국에서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그 외 국가별 정책을 보면, 말레이시아는 ‘비전 2020(Vision 2020)’과 ‘동방정책(Look East Policy)’을, 미얀마는 ‘통합국가전략(Myanmar Integrated Country Strategy)(2018-2022)’을, 캄보디아는 ‘신정부 국가발전전략(Rectangular Strategy Phase IV)’을, 그리고 싱가포르의 ‘산업변환정책(Industry Transformation Map: ITM)’을 각각 추진하여 산업공업화 달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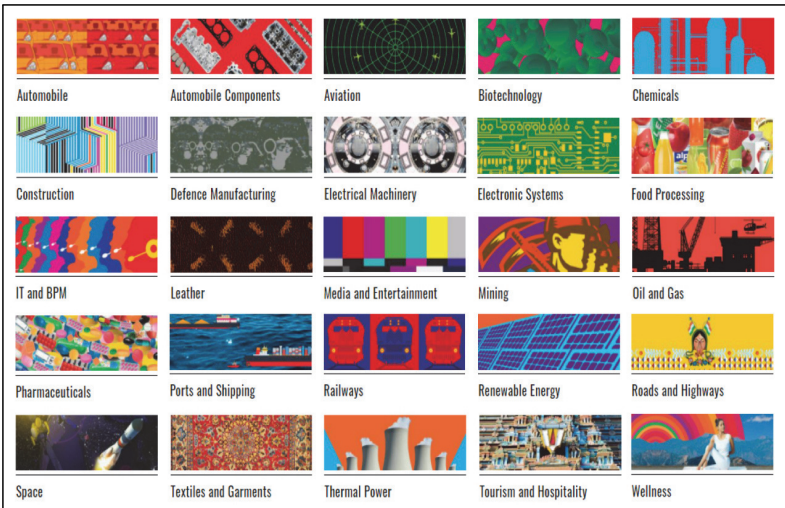
---

131) “Industry Development Strategy of Vietnam through 2025, Vision to 2035,” *Vietnam Investment Review*, July 1, 2015, <<https://vir.com.vn/industrial-development-strategy-through-2025-vision-to-2035-35685.html>> (Accessed September 21, 2021).

## (나) 인도

인도 정부도 글로벌 제조 허브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 추진을 위해 2014년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정책을 발표했다. 동 정책은 2025년까지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을 16%에서 25%로 견인하고, 자동차·화학·IT 등 집중 육성할 25개 분야에 대한 별도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정책의 주요 내용은 선진 제조국과의 협력 확대를 위해 세제 개혁, 노동법 개정, 부정부패 척결, 산업허가 간소화, 사업환경 개선, 외국인 투자유치강화 정책 추진 등이다.

〈그림 III-2〉 인도 Make in India의 25대 중점 육성분야



출처: Make in India <<https://www.makeinindia.com/sectors>>.

2020년 들어 코로나19로 경상수지 적자폭이 확대되고 사상 최악의 경기침체에 빠지자 인도 정부는 2020년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차례에 걸쳐 ‘메이크 인 인디아’를 아우르는 상위 개념의 경제정책인 ‘자립인도(Aatma Nirbhar Bharat, Self-reliant India)’ 경제

부양책을 발표했다.<sup>132)</sup> 동 정책은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 자립을 위하여 분야별 20조 루피 규모를 투입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는 정책이다. 현재 자립인도 정책을 중심으로 인도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은 수입대체 산업화 정책과 거의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91년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수출주도 산업화로 전환했던 인도 정부가 일정 정도 수입대체 산업화를 병행하는 모습이다.

나아가 모디 정부는 1991년 인도가 개혁개방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첫 발표한 신산업정책(New Industrial Policy)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산업정책은 향후 인도 경제의 방향을 결정하고 하부 전략의 토대가 될 핵심 정책이다. 2021년 9월 현재까지 인도 중앙 정부의 발표는 없는 상황이고, 카르나타카(Karnataka)와 자르칸드(Jharkhand)를 비롯한 일부 주정부들은 2019년 혹은 2020년을 기점으로 신산업정책을 수립해 운용하고 있다.

인도 상공부가 준비하고 있는 개정 신산업정책은 제조업의 총 부가가치를 2025년까지 1조 달러로 성장시키는 것이 목표이다.<sup>133)</sup>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해 일자리 창출, 기업환경 개선(Ease of Doing Business), 취약한 공급망 보강 등의 전략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강조하고 있는 것이 글로벌 가치사슬의 구축 및 참여이다. 또한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구역(coastal economic zones: CEZs)을 조성하여 대규모 투자에 대한 세금 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마련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

132) 자립인도(Aatma Nirbhar Bharat)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도 정부 홈페이지 (<https://aatmanirbharbharat.mygov.in>)를 참고.

133) "Initial draft industrial policy targets \$1 trillion gross value addition in manufacturing by 2025," *The Hindu*, November 17, 2019, (<https://www.thehindu.com/business/initial-draft-industrial-policy-targets-1-trillion-gross-value-addition-in-manufacturing-by-2025/article29997895.ece>) (Accessed June 7, 2021).

## (2) 선별적 지역무역협정 체결과 무역질서의 재편

세계적으로 무역이 총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무역 개방도(Trade Openness Index)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Slobalization)을 경험하고 있다.<sup>134)</sup> 그런데 신남방지역이 위치한 아시아의 2021년 수출은 14.4%, 수입은 10.7%로 여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은 회복세를 시현할 전망이다.<sup>135)</sup> 이에 더하여 중국 이탈 생산거점과 자본이 신남방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신남방지역은 여타 지역보다 가치사슬 무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신남방지역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역내외 통상 파트너십 확대는 필수이다. 특히 경제에서 통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아세안에는 안정적인 통상환경의 확보가, 통상의 비중이 미미한 인도로서는 새로운 통상 파트너 물색이 핵심 과제일 것이다. 이에 아세안과 인도의 무역원활화 조치 이행률을 빠르게 높여, 2021년 12월 기준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를 제외하면 전 세계 평균보다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확진자 발생 억제를 위한 이동제한, 각종 개혁조치 지연 등으로 자유무역주의 쇠퇴가 가시화되고 일방주의 또는 보호주의가 확산되는 추세에서 아세안과 인도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무역질서 재편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노력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

134) 세계 무역은 2019년 미중 무역 관계의 불확실성과 세계화 위축으로 둔화된 데 이어 2020년 교역량이 32% 하락하여 1929년 세계대공황 이후 가장 큰 수치의 낙폭을 기록했다. World Trade Organization, "Trade Set to Plunge as COVID-19 Pandemic Opens Global Economy," April 8, 2020, <[https://www.wto.org/english/news\\_e/pres20\\_e/pr855\\_e.htm](https://www.wto.org/english/news_e/pres20_e/pr855_e.htm)> (Accessed September 15, 2021).

135) World Trade Organization, "Global Trade Rebound Beats Expectations but Marked by Regional Divergences," October 4, 2021, <[https://www.wto.org/english/news\\_e/pres21\\_e/pr889\\_e.htm](https://www.wto.org/english/news_e/pres21_e/pr889_e.htm)> (Accessed October 10, 2021).

〈표 Ⅲ-2〉 신남방지역 무역원활화 조치 이행률

국가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인도
이행률(%)	100.0	97.1	100.0	98.3	88.7	93.7	91.6	26.9	32.8	5.5	78.2

주: 전 세계 평균은 70.5%이고, 한국, 일본, 중국 등 동북아 주요국의 이행률은 100.0%이다.  
출처: WTO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Database <<https://www.tfadatabase.org>> (검색일: 2021.12.12.).

### (가) 아세안

아세안은 2007년 아세안 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AEC) 청사진을 채택한 이후 2025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투자 유치, 숙련된 노동력의 자유로운 흐름 촉진, 각 회원국에 조정 기관을 설치하거나 강화하여 효과적인 이행을 도모하고 있고, AFTA(ASEAN Free Trade Area, 아세안자유무역협정), RCEP 등 아세안이 중심이 된 소그룹 무역자유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그 결과 AEC 청사진 2025(AEC Blueprint 2025)에 따른 조치 중 2020년 11월 기준 이행률은 73.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sup>136)</sup> 하지만 아세안의 역내 교역 비중은 2009년의 24%보다도 낮아져서 22%대에 머무는 등 AFTA 출범 이후에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sup>137)</sup>

이 같은 상황에서 아세안은 2013년부터 아세안이 FTA를 체결하고 있는 6개 국가와의 지역자유무역 협정인 RCEP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2020년 11월 타결된 세계 최대의 메가 FTA인 RCEP은 아세안을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 협정이다. RCEP은 아세안이 기존에 5개

136) ASEAN, *Mid-Term Review Report of The AEC Blueprint 2025* (Jakarta: The ASEAN Secretariat, 2021), <<https://asean.org/wp-content/uploads/2021/04/mid-term-review-report.pdf>> (Accessed September 10, 2021).

137) ASEAN Secretariat, "ASEAN Economic Integration Brief," no. 8 (November 2020), p. 8.

대화상대국과 체결한 ‘ASEAN Plus One FTAs’로서 기존 FTA 관세 양허 수준보다 조금 높은 수준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RCEP이 전반적으로 앞선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에 비해 수준이 낮은 것은 15개 회원국 간 경제발전 수준, 우선순위, 이해관계 등의 차이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 후발 4개국에 대한 특별조항(provisions for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을 두는 등 개별 회원국의 다양한 발전 수준과 개발의 수요를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베트남, 싱가포르, 브루나이를 제외하면 CPTPP 미가입국으로 높은 수준의 무역규범 도입에 대한 거부감도 있었다.

RCEP은 상품 관세의 경우 품목 수 기준 약 92%에 대해 20년에 걸쳐 철폐하고, 서비스 분야는 65%에 대해 전면 개방을 목표로 하는 등 무역 자유화 및 원활화, 경제협력을 포함한 전체적인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138)</sup> 그럼에도 RCEP은 추가적인 시장의 개방을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보호하는 조치를 도입하는 등 역내 무역 규범 진전과 기업 환경 개선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무엇보다도 RCEP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단일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의 도입으로, 역내생산비중 40% 또는 HS코드 4단위 변형 수준에서 역내 생산품으로 인정하여 15개 회원국 전체를 하나의 기준으로 통관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따라서 RCEP은 역내 공통의 원산지 기준을 도입하고 원산지 증명 절차를 개선하는 등 역내 기업들이 보다 편리하게 여러 국가에 걸쳐 공급망을 설립하여 생산과 판매를 증대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138) 최윤정, “RCEP 타결과 신남방 경제 지형의 변화,” 『세종정책브리프』, no. 2020-23 (2020), p. 6.

아세안을 비롯한 회원국들은 RCEP을 통해 지역 통합을 심화시키는 한편 향후 보다 높은 수준의 협약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 (나) 인도

인도는 1991년 이후 개혁과 개방정책을 통한 성장 잠재력 시현과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RTA)을 적극적으로 체결하기 시작했다. 인도의 무역협정은 지역무역협정, 경제협력협정(Agreement of Economic Cooperation), 기타 협정으로 구분된다. 다시 지역무역협정은 자유무역협정(FTA),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 특혜무역협정(Preferential Trade Agreement: PTA) 등으로 구분된다.<sup>139)</sup>

인도는 태국과 FTA 협상에서 조기관세철폐제도(Early Harvest Scheme) 도입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후, FTA 대신에 CEPA 또는 CECA(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포괄적 경제협력협정) 등을 활용하여 서비스와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우리나라와도 2010년 CEPA를 체결했으며, 2021년 6월 현재 CEPA 개정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인도는 미중 무역경쟁이 치열해지고 중국의 패권 야심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파트너 발굴을 통한 무역다변화 실현을 위해 영국, EU 등과의 경제협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중국 위험이 부각되면서 다국적 기업들이 공급망을 다각화하는 노력을 전개하자 인도 정부는 새로운 공급망 형성을 주도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

139) 인도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종류 및 체결국에 대한 상세 정보는 인도 상공부 홈페이지(Department of Commerce, Government of India) <<https://commerce.gov.in/international-trade/trade-agreements>>를 볼 것.



〈표 III-3〉 인도의 지역무역협정 구분 및 참여 현황

구분	특혜무역협정(PTA)	자유무역협정(FTA)	기타 지역협력연합
주요 내용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상품에 대한 관세 우대	역내 무역자유화, 역외 독자적 관세주권	정치·경제적 고려에 따른 경제협력
기체결	방글라데시(1980) 네팔(2009) 부탄(1995) 미얀마(1995) 아프가니스탄(2003) MERCOSUR(2009) APTA(1976) 칠레(2007)	스리랑카(2000) 태국(2003/82개 품목 조기실시계획 시행, 발효: 미정) 싱가포르(2005) SAFTA(2006) 한국(2010) 말레이시아(2011) 일본(2013) ASEAN(2015)	방콕협정(1975) SAARC(1985) BIMST-EC(1997) IORARC(1997) BOBCOM(1999) IBSA(2004)
협상중		RCEP, EU, EFTA, SACU	
검토중	이란 남아프리카공화국	미국, 중국, 칠레, 우루과이, 이집트, MERCOSUR, IBSA 등	

출처: 인도 상공부(Department of Commerce, Government of India) <<https://commerce.gov.in/international-trade/trade-agreements>> 내용을 토대로 저자 정리.

이에 2021년 4월 28일 인도는 일본, 호주와 3개국 통상장관과 장관급 회담에서 3개국 공급망 복원구상(Supply Chain Resilience Initiative: SCRI)을 공식 출범시켰다. SCRI는 우선 공급망 복원을 위한 모범 사례 공유, 투자 촉진 행사 및 구매자-판매자 매칭 행사 개최 등을 통해 3개국 기업들이 보다 다양한 공급망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sup>140)</sup> 5월 4일에는 영국과 ‘인도-영국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140) “India-Japan-Australia Decide to Launch Resilient Supply Chain Initiative in the Indo-Pacific Region,” *The Economic Times*, September 2, 2020,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economy/foreign-trade/india-japan-australia-decide-to-launch-resilient-supply-chain-initiative-in-the-indo-pacific-region/articleshow/77870346.cms?utm\\_source=contentofinterest&utm\\_medium=text&utm\\_campaign=cppst](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economy/foreign-trade/india-japan-australia-decide-to-launch-resilient-supply-chain-initiative-in-the-indo-pacific-region/articleshow/77870346.cms?utm_source=contentofinterest&utm_medium=text&utm_campaign=cppst)> (Accessed September 15, 2021).

구축을 위한 2030 로드맵을 발표하고, 자유무역협정의 전 단계에 해당하는 무역파트너십고도화(Enhanced Trade Partnership) 협정을 체결하였다. 2021년 7월 8일 인도-태평양 비즈니스 서밋(Indo-Pacific Business Summit)은 중국이 포함되지 않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급망 구축이라는 인도 통상전략의 방향성을 잘 보여주었다.<sup>141)</sup> 인도 외무부와 인도산업협회(Confederation of Indian Industry: CII)가 개최한 첫 번째 인도-태평양 비즈니스 화상회의에는 무려 21개국의 정부 및 업계 대표가 참석했다. 중국이 포함된 RCEP 대신 인도가 주도하고 있는 새로운 지역 무역협약의 결성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3) 디지털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

경제발전 수준이 다양함에도 디지털 전환은 신남방 국가 공동의 목표로서 이미 사회 전반에서 디지털화가 추진되고 있다. 이 역시 국가별로 발전 수준 및 정책 우선순위는 모두 다르므로 국가별 접근이 필요하다. 디지털 전환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와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나섰다는 것도 지난 5년간 성장전략으로 ‘4차 산업혁명’을 강조해 온 것에서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 (가) 아세안

아세안 경제공동체는 ‘하나의 아시아(One Asia)’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재로 4차 산업혁명을 기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디지털경제는 아세안경제공동체 2025(AEC 2025) 청사진의 중점분

---

141) “Why the Indo-Pacific Business Summit Matters for India,” *The Diplomat*, July 13, 2021, <<https://thediplomat.com/2021/07/why-the-indo-pacific-business-summit-matters-for-india>> (Accessed September 15, 2021).

야로 채택되었다. 2019년 아세안 경제공동체 목표 달성에서 가장 강조한 분야가 바로 4차 산업혁명(Fourth Industrial Revolution: 4IR) 대응과 디지털 전환으로, 13개 경제공동체 목표 중에서 5개를 할애하여 추진하고 있다. 아세안은 디지털 경제를 통해 2025년까지 GDP를 추가로 1조 달러 높일 수 있다는 목표로 아세안 디지털통합 행동계획 2019-2025(ASEAN Digital Integration Framework Action Plan 2019-2025)<sup>142)</sup>와 경제공동체 청사진 B9항 등 다양한 논의의 장에서 디지털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아세안연계성 2025(ASEAN Connectivity 2025) 보고서는 디지털 혁신을 위해 (1) 중소기업기업의 기술적 플랫폼 강화 (2) 디지털 금융 프레임워크 개발 (3) 열린 데이터 네트워크 수립 (4) 아세안 디지털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수립으로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2020년 기준 디지털 경제가 아세안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로 중국 16%, 미국 35%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아세안 기업중 75%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디지털 전환은 새로운 기회라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은 16%에 불과했다.<sup>143)</sup> 이는 아세안의 성장잠재력에 비추어 볼 때 그만큼 디지털 경제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한편 아세안은 기후변화 대응을 추진하는 동시에 전통적인 방식의 전력생산도 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세안은 세계에게 전력

142) ASEAN Coordinating Committee on Electronic Commerce, "ASEAN Digital Integration Framework Action Plan (DIFAP) 2019-2025," ASEAN, July 2018, <<https://asean.org/asean2020/wp-content/uploads/2020/12/ASEAN-Digital-Integration-Framework-Action-Plan-DIFAP-2019-2025.pdf>> (Accessed September 15, 2021).

143) 최윤정, "2019년 아세안 정세 평가와 2020년 전망," 세종연구소, 『정세와 정책』, 2019년 제31호 (2019), p. 4.

수요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지역 중 하나다.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가정마다 에어컨을 비롯한 가전제품 사용이 늘어나면서 아세안의 전력 소모량은 지난 20년간 연평균 6% 이상 증가했다. 전력 소비량이 가장 많은 인도네시아(26%), 베트남(22%)을 비롯하여 필리핀, 미얀마 등은 심각한 전력부족 현상을 겪고 있으므로 전력생산 자체가 중요한 상황이다.<sup>144)</sup> 이런 상황 하에서 현재 아세안은 세계적으로 석탄화력발전이 확대되고 있는 몇 안 되는 지역으로,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과 같은 후발국들은 여전히 화력발전소 건설을 진행 및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아세안 공동체는 경제성장과 재생에너지의 높은 비율의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개발이라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세웠다. 아세안은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23%를 통합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지역간 상호 연결과 무역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신 재생에너지 보급·확충 프로그램(ASEAN REmap)’을 통해 이 같은 트렌드를 역전시키려고 한다. 더욱이 2021년 1월 20일 미국이 파리 기후변화협약에 재가입하면서 기존에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박차를 가하는 등 아세안의 에너지 전략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 (나) 인도

인도는 세계적인 IT 소프트웨어 및 엔지니어링의 강국이다. 인도 경제에서 동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8% 수준에 불과하나<sup>145)</sup>, 4차

144) IEA, “2020 Regional focus: Southeast Asia,” Electricity Market Report (December 2020) <<https://www.iea.org/reports/electricity-market-report-december-2020/2020-regional-focus-southeast-asia>> (Accessed December 30, 2021).

145) 인도 브랜드 자산 재단(India Brand Equity Foundation: IBEF), “IT & BPM Industry in India,” <<https://www.ibef.org/industry/information-technology-india.aspx>> (Accessed September 15, 2021).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모든 산업과 연결하여 폭발적으로 인도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인도 정부도 2015년 ‘디지털 인디아’ 정책을 발표하고 인도 공공 및 민간 부분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도 경제가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하면서 4G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통신망이 전역으로 확대되어 인도 사회의 디지털화가 속도감을 더하고 있다. 2020년 12월 기준 인도 통신규제국(Telecom Regulatory Authority of India: TRAI) 보도자료에 따르면, 인도 내 유무선 인터넷 사용자 수는 11억 7383만 명으로 전년 대비 139만 명이 증가했다.<sup>146)</sup> 주목할 점은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의 유무선 인터넷 가입자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농촌지역까지 인터넷 가입이 늘어나면서 인도 소비자들은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디지털 인프라를 접하고 활용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표 Ⅲ-4〉 2019~2020년 인도 유무선 인터넷 가입자 수

구분	2019년 12월	2020년 12월	증감
도시지역	6억 6245만 명	6억 4791만 명	-1454만 명
농촌지역	5억 999만 명	5억 2592만 명	+1593만 명
총 계	11억 7244만 명	11억 7383만 명	139만 명

주: 유무선 인터넷은 유선인터넷, 2G, 3G, 4G를 통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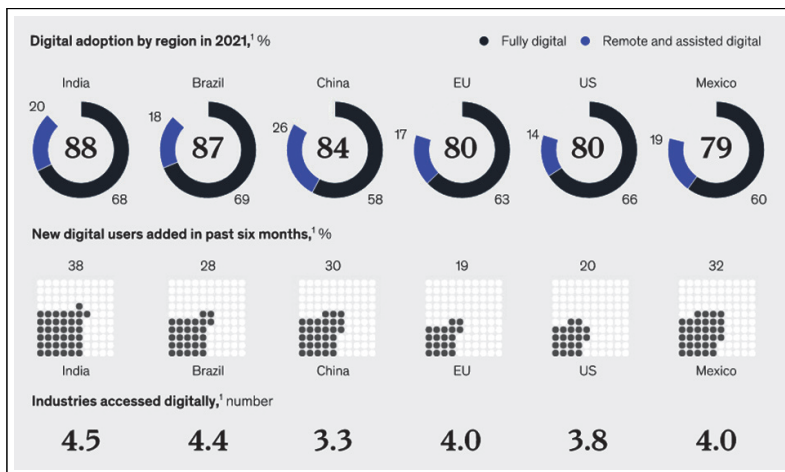
출처: 인도 통신규제국(TRAI), “Telecom Regulatory Authority of India,” April 27, 2021, p. 10, <[https://traigov.in/sites/default/files/PR\\_No.26of2021.pdf](https://traigov.in/sites/default/files/PR_No.26of2021.pdf)> (검색일: 2021.9.10.).

더욱이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인도의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됐다. 맥킨지(McKinsey)의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소비

146) 인도 통신규제국(Telecom Regulatory Authority of India: TRAI), ““Indian Telecom Services Performance Indicator Report” for the Quarter ending October–December, 2020,” April 27, 2021, p. 10, <[https://traigov.in/sites/default/files/PR\\_No.26of2021.pdf](https://traigov.in/sites/default/files/PR_No.26of2021.pdf)> (Accessed September 19, 2021).

자의 디지털 채택률은 모두 증가했다. 선진국에 비해 개발도상국의 비율이 높았는데, 이 중 인도의 증가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인도의 디지털화 비율은 88%로 미국, EU, 중국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한 지난 6개월 내 디지털 신규 사용자 비율은 38%, 산업 디지털화 수치도 4.5점으로 선진국보다 더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sup>147)</sup> 이 같은 ‘따라잡기(Catching-up)’ 현상은 전체 인구의 60%를 차지하는 MZ세대(18~35세) 인구가 디지털화의 주역으로 떠오른 효과일 것이다. 그리고 현재 인도 정부의 정책, 인구 구조 등을 종합해 볼 때 인도가 글로벌 디지털 전환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오를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림 III-3〉 2021년 기준 국가별 디지털 채택률 비교



출처: Neira Hajro et al., “What’s next for digital consumers,” McKinsey & Company, May 23, 2021, <<https://www.mckinsey.com/business-functions/mckinsey-digital/our-insights/whats-next-for-digital-consumers>> (Accessed September 19, 2021).

147) Neira Hajro et al., “What’s next for digital consumers,” McKinsey & Company, May 23, 2021, <<https://www.mckinsey.com/business-functions/mckinsey-digital/our-insights/whats-next-for-digital-consumers>> (Accessed September 19, 2021).

〈표 III-5〉 선택과 집중을 위한 한국의 경쟁력 확보 가능 분야

응답 내용	유효응답 수(개)	비중(%)
디지털 역량 지원	35	38.9
인적자원 교류 확대	19	21.1
자유무역 확대	14	15.6
기술이전 및 교류 확대	9	10.0
문화교류 증대	4	4.4
기타(제조업, 식품안전, 금융, 인프라 등)	9	10.0

주: 유효응답 90개(복수 응답).

출처: 정영식 외, 『신남방정책 2.0 수립 연구』(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0), p. 339.

이와 더불어 최근의 중심 환경으로 부상하고 있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체제로의 변환과 코로나 대유행에 따른 의료/보건산업의 부상을 들 수 있다. 제조업 발전과 더불어 동전의 양면처럼 따라오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인도 정부 해결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전략 수립의 필요성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0년)에서 수행한 설문 결과와도 부합한다.<sup>148)</sup> 아세안 및 인도 전문가를 대상으로 2020년 실시한 상기 설문 조사에서 신남방 국가와의 경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앞선 경쟁력을 활용한 디지털 역량 지원, 인적자원 교류 확대, 자유무역 확대, 기술이전 및 교류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또한 포스트 차이나(Post-China) 시대 신흥 제조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인도와 아세안 국가들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외국인 투자가 이뤄지고 산업단지가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이 속도는 다소 느리지만 공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대기·수질·토양 오염이 심화되고 있고, 공업화의 부산물인 재화와 서비스의 활용과정에서 창출되는 플라스틱 등 폐기물의 처리와 재활용 등이 적절

148) 정영식 외, 『신남방정책 2.0 수립 연구』(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0), p. 339.

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이 Global Plastic Action Partnership(GPAP)의 파트너 국가로 참여해 해양플라스틱 오염대책을 세워가고 있을 정도로 산업화로 인한 환경오염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인도나 동남아 주요 도시(자카르타, 하노이, 방콕 등)들의 미세먼지 수준은 한국보다도 열악한 상황이며, 단기간에 개선할 방법도 없어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 나. 추진 목표 및 고려사항

신남방 국가들이 보유한 성장 잠재력은 코로나19 이후 본 연구의 분석 기간인 근미래에도 다른 지역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산업공업화 달성에 더해 최악의 경기 침체 극복이라는 시급한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신남방 각 국의 정부는 성장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파트너 국가에 대한 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다만 기존과는 달리 자유 시장경제의 원칙 보다는 소그룹 차원의 자유무역주의를 추구하며 글로벌 무역체계 개편에 대응하는 동시에 자국의 산업화 달성에 지렛대로 삼는 전략이 전면에 부상할 전망이다. 한편 코로나19로 사회 전반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이를 산업공업화 및 경제성장의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 외에도 기후변화와 같이 새롭게 부상한 어젠다에 대해서도 유사 입장국들과 협력을 공고히 할 전망이다.

### (1) 신남방지역의 산업화 및 인프라 건설 지원

#### (가) 산업화 지원과 가치사슬 구축

근미래 신남방지역이 경제성장의 사다리를 올라가기 위해 필수적



인 것이 산업공업화 달성이다. 아세안 주요국에서는 경제에서 차지하는 제조업 부문의 생산과 고용의 비중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고, 인도 역시 제조업 육성정책인 ‘메이크 인 인디아’가 공표한 바와 다르게 제조업이 더욱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관광, IT서비스 등 서비스 부문의 발전만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탱하기 어렵다. 선진국이 아닌 개도국 단계에서 이와 같은 제조업 부문의 비중이 감소하는 ‘미성숙 탈산업화(pre-mature deindustrialization)’라는 조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선진 공업국가와의 파트너십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신남방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신남방정책의 첫 번째 목표는 산업화 파트너십 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미 각 국은 정부 주도로 산업화 정책을 발표하였다. 인도 정부는 2014년 대표적인 산업공업화 프로젝트인 ‘메이크 인 인디아’를 발표한 이후 한국을 모델이자 협력국가라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25대 우선협력분야 중에서 전자시스템 설계·제조(Electronics System Design and Manufacturing: ESDM) 등 한국과의 협력이 유망한 분야를 특정하고 구체적인 공동과제 추진을 희망하고 있다. 코로나19 시기 인도 정부는 ‘자립인도’와 같은 자국 산업육성 정책을 발표했고, 개혁개방 30년 만에 신산업정책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같이 아세안과 인도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정책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수요에 부합하는 산업 협력 파트너십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산업 협력 파트너십에서 유념해야 할 또 다른 사항은 가치사슬 구축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이후 주요 강대국들이 국경 봉쇄, 이동 통제 등으로 국가 간의 고립과 탈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sup>149)</sup> 지난 30년간 세계무역성장을 주도했던 글로벌 가치사슬

---

149) 나용우 외,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p. 238.

(GVC)은 코로나19로 강화된 보호무역주의에 의해 한계가 나타나고 있고 급격한 재편 과정을 겪고 있다. GVC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정부차원에서는 리쇼어링(reshoring)에 대한 지원, 한국 기업들은 지역가치사슬(Regional Value Chain: RVC)을 구축해야 하는 시점이다. 가장 유망한 협력 대상으로 최근 중국을 대체할 생산기지로 주목받고 있는 아세안과 인도가 부상한 바, 이러한 맥락에서 신남방정책의 경제통상 협력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 (나) 산업회랑·스마트시티 등 대형 인프라 건설

아세안은 경제공동체 건설에서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도시화와 연계성(connectivity) 증대이다.<sup>150)</sup> 아세안이 연계성 마스터플랜(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 2025)을 도입한 2017년 기준 아세안 인구의 48.2%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또한 아세안 무역의존도는 92.4%로, 연계성 증대를 통한 무역확대는 산업 고도화와 함께 경제성장의 핵심 정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sup>151)</sup>

국가 별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를 보면, 말레이시아는 전력발전소, 석유화학발전소, 공공인프라 분야에 주력하고 있고, 인도네시아는 국가 중기개발계획(RPJMN)하에서 교통·건설·IT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로 지연되고 있는 신행정수도(East Kalimantan) 프로젝트 재개가

150) ASEAN, *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 2025* (Jakarta: The ASEAN Secretariat, 2017), <<https://asean.org/wp-content/uploads/2018/01/47.-December-2017-MPAC2025-2nd-Reprint-.pdf>> (Accessed September 20, 2021).

151) KOTRA, “2019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2019 세계시장 진출전략 III: 동남아대양주·서남아·중동·CIS』 (서울: KOTRA, 2018), pp. 1~84,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8/globalBbsDataView.do?setIdx=252&dataIdx=172355>> (Accessed September 20, 2021).

최우선 관심사이다. 필리핀은 마라위(Marawi) 지역 재건 및 교통·수자원 부문 인프라 정책으로서 ‘Build Build Build’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외 CLMV(Cambodia, Laos, Myanmar, and Vietnam) 국가들은 해외원조 및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민관협력사업) 방식의 민간자금 투입을 통해 부족한 인프라 건설에 주력하고 있으며 아세안 차원에서는 상술한 바와 같이 스마트시티 이니셔티브(ASCN)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베트남은 2025년까지 4개 도시(하노이, 다낭, 호치민, 껀터)에 대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완료할 계획을 세워놓았다.

열악한 인프라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인도에서도 인프라 건설은 정부의 최우선 과제이다. 도로(산업회랑), 철도, 신재생 분야를 중심으로 예산을 매년 두 자릿수 증액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다. 특히 모디 총리는 한국의 경부고속도로 건설 이후 산업화가 급물살을 탄 것으로 여러 차례 호평한 바 있으므로,<sup>152)</sup> 인프라 건설과 산업화에 있어서 파트너로서의 한국에 대한 인지도 및 호감도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최근 대부분의 인프라 프로젝트는 PPP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 단독 진출은 불가능하고 금융기관의 지원을 받아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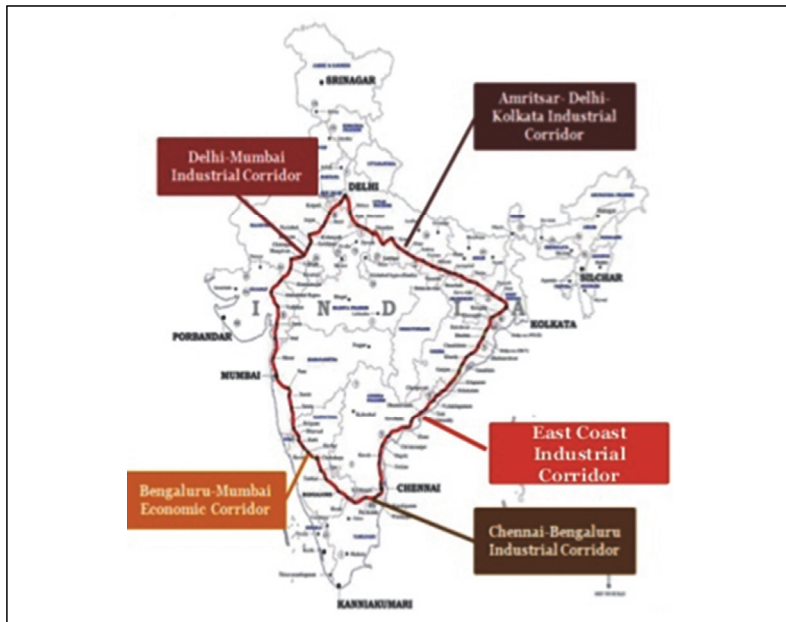
특히 산업회랑을 중심으로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도 정부는 100개의 스마트시티 건설을 목표로, 도로·관개·수처리 등 인프라 프로젝트 외국인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다.<sup>153)</sup> 2025년까지 인도 내 인구 1백만 명 이상인 도시

---

152) “Infrastructure Projects Worth Rs 4 lakh-crore Rolled out, says PM Narendra Modi,” *BusinessToday, In*, November 5, 2015, <<https://www.businesstoday.in/industry/infra/story/infrastructure-development-top-priority-rs-4-lakh-crore-stuck-projects-rolled-says-pm-narendra-modi-56277-2015-11-05>> (Accessed September 19, 2021).

69개가 민관협력사업 방식으로 개발될 전망이다. 이 같은 인도 정부의 스마트 시티 사업에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은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적극 참여 중이다.<sup>154)</sup>

〈그림 III-4〉 인도 5대 산업회랑 MAP



출처: Abhipedia, “Industrial Corridors,” <<https://abhipedia.abhimanu.com/Article/IAS/MzkxMQE EQQVVEEQVV/-Industrial-Corridors—Economic-Affairs-IAS>> (Accessed September 19, 2021).

153)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인도 스마트시티 현황 및 내용,” 2017.9.14., <[https://www.kiep.go.kr/board.es?mid=a10509041300&bid=0034&act=view&list\\_no=6487&tag=&nPage=9](https://www.kiep.go.kr/board.es?mid=a10509041300&bid=0034&act=view&list_no=6487&tag=&nPage=9)> (Accessed September 19, 2021).

154) IBEF, “Ushering in the Smart Revolution,” May 5, 2015, <<https://www.ibef.org/blogs/ushering-in-the-smart-revolution>> (Accessed September 21, 2021); Rumi Aijaz, “India’s Smart Cities Mission, 2015–2021: A Stocktaking,” *ORF Special Report*, no. 155 (August 2021), <<https://www.orfonline.org/research/indias-smart-cities-mission-2015-2021-a-stocktaking/>> (Accessed September 21, 2021).

## (2) 선별적 지역무역협정에 전략적 참여

아세안은 역내 10개국을 하나로 묶는 아세안 경제공동체를 지향한다. 단일 경제권으로 치면 인구 6억 6천만 명으로 이는 중국, 인도에 이어 3번째 규모이다. 2015년에 발표한 아세안공동체 선언에서 가장 실체가 분명하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아세안 경제공동체 달성일 것이다. 이를 위해 아세안은 대화상대국 중에서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및 뉴질랜드와 5개의 FTA를 체결했고, 이를 RCEP으로 확대시키는 데 성공했다. 2020년에 타결된 RCEP에 인도가 불참하고 자유화 수준이 낮은 등 미흡한 점이 있지만 아세안 주도의 FTA가 그렇듯 RCEP도 2년마다 업그레이드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회원국 및 협정의 내용 측면에서 모두 추가적인 발전 여지가 있다.

아세안은 RCEP에서 새로운 시도를 했다. 특히 한국에는 상품 시장을 추가로 개방했을 뿐만 아니라 게임, 영화와 같은 서비스 시장의 개방 수준도 높였다. 서비스 시장의 개방은 교역의 양을 확대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는 한국과 아세안 간의 교류와 협력을 사회와 문화 전 영역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다.<sup>155)</sup>

RCEP은 기존에 체결한 여타 FTA와는 다르다. 경제 규모가 큰 중국을 포함하여 다수의 국가가 참여하는 메가 FTA이기 때문에 회원국 간의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거나 기존의 FTA와 중첩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또한 RCEP과 CPTPP 외에도 일본이 주도하는 SCRI(Supply Chain Resilience Initiative, 공급망복원구상), 미국이 2022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도-태평양 경제협력 협의체(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 등

155) 최윤정, “RCEP 타결과 신남방 경제 지형의 변화,” p. 10.

메가 FTA가 역내에서 증척되면서 경쟁구도가 펼쳐지게 되면 개도국 정부 및 기업은 더욱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다.

더욱이 RCEP과 같은 무역협정은 국제무역의 구조를 재구성하고 제도와 정책을 만들 뿐만 아니라, 개별 회원국의 국내 산업생산 구조의 재편을 야기하는 등 영향력의 범위와 폭이 매우 크다.<sup>156)</sup> RCEP은 협정 발효 후 회원국 간 교역에서 전기전자 기기, 일반기계, 운송용 차량 등 기술집약적 제품의 비중이 2/3에 달할 정도로 높아지면서 개별국의 해당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메가 FTA는 양자 FTA보다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다양한 분야에 걸쳐 복잡다기하게 나타날 것이므로, 향후 주요 사안 별로 파급 효과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2022년으로 예상되는 RCEP의 발효, 그리고 실제 이행하는 과정에서 참여국 간의 긴밀한 협력이 특히 중요하다.<sup>157)</sup>

한편 인도는 결국 RCEP의 첫 번째 타결에서 빠졌고 당분간은 협상 테이블 복귀 가능성도 높지 않다. 하지만 RCEP 협정문(20장) 및 RCEP 정상회의에서 언급된 대로 참여의 문은 열려 있으므로, 인도가 RCEP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 외 2022년 미국이 주도하는 IPEF 논의가 진행되면 인도와 한국이 모두 여기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다자협력의 경우까지 고려하여 GVC 관점에서 인도와의 교역과 투자 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야 할 것이다.<sup>15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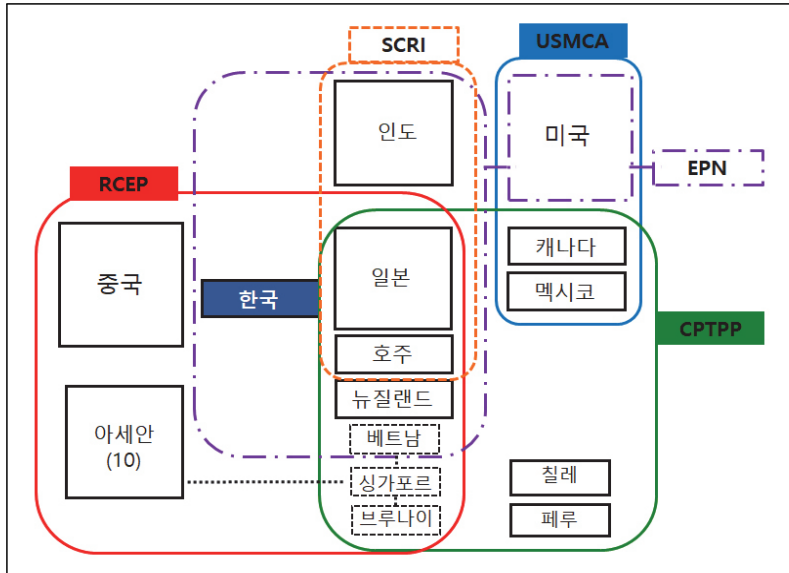
---

156) RCEP은 무역비용을 낮추고 원산지 규정 등 중요한 규칙을 간소화함으로써 아시아의 무역 폐쇄와 공급망을 재구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Cathleen D. Cimino-Isaacs and Michael D. Sutherland,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Status and Recent Developments(IN11200),"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November 19, 2020, <<https://crsreports.congress.gov/product/pdf/IN/IN11200>> (Accessed September 21, 2021).

157) 위의 글, p. 13.

158) 최윤정, "RCEP 타결과 신남방 경제 지형의 변화," p. 10.

〈그림 III-5〉 신남방지역의 다자 FTA 체결 구도



주: EPN(Economic Prosperity Network, 경제번영네트워크)은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과 일본, 호주, 인도, 뉴질랜드, 베트남 등에 참여를 촉구하고 있는 경제블록이고, SCRI(Supply Chain Resilience Initiative, 공급망회복구상)는 일본이 인도를 지역 공급망에 참여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경제블록으로 모두 타결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점선으로 처리하였음.

출처: 최윤정, “RCEP 타결과 신남방 경제 지형의 변화,” 『세종정책브리프』, No. 2020-23 (2020), p. 13.

### (3) 디지털 전환과 기후변화 공동 대응

아세안과 인도는 디지털 전환을 통해 산업성장의 동력을 추가하고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을 구현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특히 양 지역 모두 팬데믹 이후 전자상거래가 폭발적 성장을 거듭하면서 향후 최대 시장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가)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디지털경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

한국과 신남방 국가는 모두 디지털 전환을 비롯하여 새롭게 형성되는 통상질서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의 강력

한 행위자인 미국과 중국의 패권적 경쟁은 디지털 경제로까지 번지고 있는 양상으로 첨예한 대립을 헤쳐나갈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sup>159)</sup> 문제는 국가별로 디지털 발전 수준의 격차가 매우 크고, 따라서 정책의 내용과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 디지털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과 프로젝트에 대한 면밀한 고찰이 필요하다.

먼저 아세안은 2020년 11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디지털 전환을 아세안이 추진해야 할 5대 핵심 이행과제로 발표했고, 한국이 이 분야 유망 협력국가라는 점을 여러 경로를 통해 밝힌 바 있다. 2021년 발표한 아세안 경제공동체 청사진 2025 중간보고서는 디지털화와 지속가능성 등 아세안이 새로운 발전을 포용하고 적응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sup>160)</sup>

아세안 국가별로도 디지털 전환을 통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와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 아세안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은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제조업의 체질 개선과 신산업 창출을 통해 중소득국 함정(middle-income trap)<sup>161)</sup>을 탈피하는 한편 고부가가치 산업 구조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갖는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인 ‘Making Indonesia 4.0’을 발표한 이후 ‘국가산업위원회(Ministry of Trade Republic of Indonesia: KINAS)’를 신설하여 동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

---

159) 최윤정, “RCEP 타결과 신남방 경제 지형의 변화,” p. 18.

160) ASEAN, *Mid-Term Review: ASEAN Economic Community Blueprint 2025* (Jakarta: The ASEAN Secretariat, 2021), <<https://asean.org/wp-content/uploads/2021/04/mid-term-review-report.pdf>> (Accessed September 21, 2021).

161) 1인당 소득 1,026~12,376 달러 구간에 있는 중소득국이 저소득 국가 상태를 빠르게 탈피한 이후 장기간 성장 정체 또는 둔화를 겪으며 고소득 국가 진입에 성공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하며, 아세안에서는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이 이에 해당된다. 노동 및 자본 등 생산 요소의 저비용 이점으로 성장을 따라잡는 데 한계에 달했음을 의미한다.



적으로 식음료, 섬유 및 의류, 자동차, 전자, 화학 산업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도입하고 투자와 정책적 인센티브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제11차 말레이시아 플랜(2016~2020)의 제7장에서 제조업 발전을 위한 스마트 제조(smart manufacturing)를 명시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적층 가공, 로봇틱스 등 비즈니스 모델의 발전을 제시하였다. 태국은 태국 4.0을 통해 ICT를 적용해 스마트 산업, 스마트 시티, 스마트 피플을 달성하고 2020년까지 5~6%의 경제성장률, 2032년에는 국민소득 1만 5,000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스마트 산업 분야에서는 ‘10대 집중육성산업’을 지정하였다. 싱가포르의 스마트네이션 프로젝트 출범, 총리 산하의 스마트네이션디지털정부청(Smart Nation and Digital Government Office: SNDGO)가 총괄하여 4차 산업 대비 다양한 시범산업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고려해야 할 대표적인 기회 요인은 젊은 인구, 특히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의 부상이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전 전자상거래에 저항감을 보였던 노년층 소비자들까지도 온라인을 통해 최초로 식품을 구매하는 등 디지털 경제에 편입되기 시작하였다.

아세안 전자상거래 시장의 규모는 2019년 380억 달러에서 2025년 1500억 달러로 고속성장할 전망이다.<sup>162)</sup> Facebook과 Bain & Company는 아세안 온라인 소비자 수가 2026년 3억 8천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sup>163)</sup> 이처럼 온라인 구매가 급속하게 증가

---

162) Facebook and Bain & Company, *Riding the Digital Wave: Capturing Southeast Asia's Digital Consumer in the Discovery Generation*, Bain & Company, January 14, 2020, <<https://www.bain.com/insights/riding-the-digital-wave/>> (Accessed September 21, 2021).

163) "Southeast Asia Has Added 70 million Online Shoppers since the Beginning of the Pandemic, Report Finds," *CNBC*, September 15, 2021, <<https://www.cnn.com/>>

하면서 아세안은 Lazada, Tokopedia, Shopee, Qoo10, Zalora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인도 역시 1억 8천만 중산층을 중심으로 소비재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인도는 현재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소매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인도 상공부는 인도의 소매 시장이 2020년 7천 930억 달러에서 10년 동안 약 7천억 달러 추가되어 2030년까지 1.5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세계 두 번째로 인구가 많고 소비를 이끄는 중산층 가구의 증가와 도시화 가속화 등이 뒷받침한 결과다. 인도의 온라인 쇼핑객은 2020년 1억 5천만 명에서 2030년 5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인도 전자상거래 시장은 2030년까지 3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나아가 디지털 경제 규모도 2030년까지 8000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현재 매일 120만 건의 전자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2020년도 인도의 디지털 거래 총액은 5억 37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향후 인도 전자상거래 시장은 기존의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모바일 전자상거래까지 마케팅 전략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sup>164)</sup>

맥킨지(McKinsey) 조사에 따르면 인도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코로나19를 계기로 기존 예측보다 급속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sup>165)</sup> 인도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과거 4~5년 전부터도 장밋빛 성장 전망이 우세했지만 코로나19는 그 속도를 더욱 빠르게 해준 것이다. 인도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인디아’는 이제 본격적인 5G 시대를 준비하는 단계이다. 인도는 그동안 5G 사업자 입찰에 중국 화웨이를

---

2021/09/16/southeast-asia-added-70-million-online-shoppers-since-covid-report.html) (Accessed September 21, 2021).

164) 인도 상공부 Invest India 홈페이지 내용을 저자 정리 <<https://www.investindia.gov.in/sector/retail-e-commerce>> (Accessed October 30, 2021).

165) Neira Hajro et al., “What’s next for digital consumers.”

포함시켰으나 5월에 발표한 후보 기업에서는 제외하였는데 인도 기술 안보에 대한 이 같은 조치는 명확한 정치적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는 인도의 대표적인 통신기업인 릴라이언스와 협력사의 형태로 통신사업 참여가 유력한 상황이다.

#### (나) 환경,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별 입장과 현안 및 공동대응 방안 모색

한국과 아세안은 아직까지 환경, 기후변화, 에너지 분야에서 체계적인 고위급 대화 채널을 구축하지 않았다. 다만 환경부 차원에서 역내 환경 관련 이슈를 논의하고 이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진행되어 왔다.<sup>166)</sup> 양자 차원에서는 주로 생물다양성, 상하수도 및 폐기물 관리, 환경정책 및 자문, 인력 교류 등을 운영해 왔고, 개발협력 중점협력국으로 지정한 아세안 6개국의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에서도 물 관리, 에너지, 환경보호, 재해예방 등이 중점협력분야로 포함되어 있다. 신남방정책 차원에서는 해양폐기물, 산림보호, 한-메콩 생물다양성 센터 구축, 산불재난관리 등이 복원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논의되고 있다.

한국이 아세안 및 인도와 환경, 기후, 에너지 분야에서 근미래 추진해야 할 전략은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 그리고 한국의 그린 뉴딜 전략과 삼박자를 맞추어 수립해야 할 것이다. 최근의 기후변화 논의는 개별 국가의 환경, 에너지 등 지속가능 성장의 목표를 넘어 국가 간 통상 및 안보 이슈로 확대되고 있다. EU가 탄소국경조정세(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를 도입하고 미국은 탄소배출 국가 제품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할 예정

---

166) 환경부 차원에서 이루어진 논의의 예로는 2000년에 시작된 한·베트남 환경장관회의, 2020년에 시작된 아세안+3 환경장관회의 등이 있다. 문진영 외, “아세안 사회문화 공동체와 한국의 분야별 협력방안,” 『KIEP 정책연구 브리핑』 (2020), p. 13, <[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2010000&bid=0002&act=view&list\\_no=2721](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2010000&bid=0002&act=view&list_no=2721)> (검색일: 2021.10.5.).

이다. 2021년 9월 UN 총회 및 쿼드(QUAD) 정상회의에서도 환경과 기후변화 대응은 핵심 의제로 논의되었다. 기후변화 공동의 대응을 위한 통합적인 협력 전략 수립이 필요한 것이다.

한편 기후변화 및 환경 분야에서 아세안은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표명했다. 아세안 해양폐기물 대응 행동 계획(ASEAN Regional Action Plan for Combating Marine Debris in the ASEAN Member States, 이하 RAP) 2021~2025는 △아세안 해양 폐기물 액션 프레임워크(2017.11., 푸켓), △EAS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대응 정상성명(2018.11., 싱가포르), △방콕 해양 폐기물 대응 정상선언(2019.6., 방콕) 등 아세안의 주요 문서와 여타 국제협약 내용을 기반으로 마련된 지역 차원의 행동계획, 역내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 및 관리강화를 통한 순환경제(circular economy)에 중점 아세안 해양폐기물 대응 행동계획(RAP)은 플라스틱 가치사슬(plastic value chain)에 기반한 문제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플라스틱 폐기물이 해양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점에 감안하여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SDG 12번)에 부합하는 비즈니스 활동을 장려하고, 새로운 규범 마련 및 소비패턴 마련 및 주류화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아세안 자체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대화상대국의 협력과 지원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sup>167)</sup>

## 다. 추진 과정 및 방법

### (1) 신남방 산업구조 고도화를 지원하는 GVC 구축

아세안과 인도가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 고도

---

167) 주 아세안 대한민국 대표부, 『WEEKLY ASEAN』, 2021-21호 (2021.6.4.), <<https://overseas.mofa.go.kr/viewer/skin/doc.html?fn=20210607125959081.pdf&rs=/viewer/result/202111>> (검색일: 2021.9.20.).

화 달성이 필수요건이다. 특히 아세안의 경우 대외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는데 무역의 상당 부분이 원자재에 기반하거나 반도체(베트남), 자동차(태국) 등 일부 품목에 집중되어 있다. 그런데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등 기술 집약적 제조업 제품 수출의 경우 아세안은 아직까지 수입 부품과 소재를 현지에서 조립 및 생산 후 제3국에 수출하는 방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아세안이 자체적으로 생산한 부품과 중간재를 사용한 전방연계 GVC 참여도는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는 아세안 내에서 이들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지원산업(supporting industry)이 충분히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같이 후방연계에 의존한 수출구조로는 부가가치를 높이기 어려운 상황이다.<sup>168)</sup>

지원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술을 보유한 현지 인력과 중소기업군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신남방지역에서는 다국적기업들이 조립 단계까지 담당하고 있어 현지 기업들이 성장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현실이다. 현지 기업들이 혁신 능력의 제고를 통해서 다국적기업 중심의 GVC나 RVC에 핵심 참여자가 되는 것이 지원산업의 발전, 나아가 산업구조 고도화 달성을 위해 중요하다. 이에 베트남을 비롯한 신남방 국가들은 의무적인 현지 생산 비율의 상한선을 높이고 있고, 인도는 이에 더하여 생산연계인센티브(Production Linked Incentive)<sup>169)</sup> 제도를 도입하여 국내 생산기반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단순 수입 제품의 조립·생산이 아니라 자

168) ASEAN-Japan Centre, *Global Value Chains in ASEAN - Automobiles* (Tokyo: ASEAN-Japan Centre, 2020), p. 8, p. 14.

169) 생산연계 인센티브(Production Linked Incentive)는 인도 정부가 자국 제조업 투자유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선정된 기업에 인도에서 제조되는 제품의 매출 증가분의 4~6%를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Invest India, "Production Linked Incentive (PLI) Schemes in India," <<https://www.investindia.gov.in/production-linked-incentives-schemes-india>> (Accessed September 21, 2021).

국에서 생산의 전 과정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신남방 국가 정부는 참여 여부에 따른 인센티브와 불이익을 함께 제도화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신남방지역에 대한 투자는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가치사슬의 전후방을 고려하는 종합적인 투자의 형태로 진화해야 한다. 일시적으로 무너진 현지 공급망 복구에 적극 협력함으로써 전략적 협력파트너로서의 이미지 제고가 필요하다. 이와 병행하여 산업분야별로 강점을 가진 나라를 선정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아세안 내에 글로벌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파트너십을 추진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조업의 가치사슬 구축과 인프라 건설은 한국 기업의 투자진출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아세안 주요국과 인도에서 투자 및 발전경험 전수 등 다양한 수요가 증대하는 유망 협력 분야임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신남방지역 중에서 한국과 교역규모가 크고 외교적 중요성이 높은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정책 우선순위가 집중되는 점을 지양하기 위해 여타 신남방 국가까지 포용하는 정책을 통해 포용적이고 균형 잡힌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각 국가의 산업정책과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협력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전략산업을 선정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신남방 국가들이 자력으로 발전전략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경제협력이 가능한 나라와 전략산업을 공동으로 선정하여 단기간에 고도성장을 이뤄내는 긴밀한 성장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태국의 자동차산업, 베트남의 전자산업, 말레이시아의 반도체 산업 등 특정 분야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산업성장 사례는 이미 적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많은 경우 국가차원의 발전전략과 맞물려 진행되었다기

보다는 주로 민간분야의 이해관계와 국내의 경제여건에 따라 자연스럽게 진행이 된 것들이라 전략적인 경제협력의 성과라고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전략적 협력이 가능한 산업분야'를 함께 연구·도출하고 양국의 산업 가치사슬을 분석한 후에 체계적인 역할분담과 이를 위한 교역·투자 활성화 체계를 구축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이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산업분야에 대해서 디자인과 설계, R&D, 해외마케팅 및 핵심부품 생산을 맡고, 협력대상국이 기본 부품의 생산과 조립 등을 맡아 '글로벌 가치사슬'을 형성해 가는 협력전략이 양국 경제협력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특히 한국이 기술 수준에서 글로벌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내수시장이 협소하고 임금을 비롯한 각종 비용요소가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신남방 국가와 산업 가치사슬 구축에 나서는 전략 추진이 필요하다. 최소한 아세안 지역에서는 현재 한국 정부가 국제기구로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sup>170)</sup>

새로운 가치사슬을 만들기 위해서는 △해당 산업과 제품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는 한편 △현지 정부의 정책 및 각 단계별로 활약하고 있는 기업의 분포를 파악한 후 △현지와의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시장 진출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소극적인 역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새로운 시장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개척자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찾을 필요가 있다.

170) 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는 상호 호혜적인 기술혁신의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산업 기술협력을 총괄하는 국제기구로 설립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공동 연구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산업기술 관련한 공적개발원조(ODA) 및 교류 활성화로 예상하고 있다. “신남방특위, 미국 인도태평양 비전 연계 착수,” 『전자신문』, 2021.9.30., (<https://m.etnews.com/20210930000155>) (검색일: 2021.10.12.).

## (2) 전략적인 RCEP 및 CEPA 업그레이드 이행

신남방지역에서 근미래 소그룹 자유무역주의 전개는 인도가 중국과 비록 상하이협력기구, BRICS 등 다양한 형태의 소다자 협력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중국이 포함된 자유무역협정에 참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다. 심지어 중국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아세안조차도 인도가 주도하는 FTA 또는 유사한 성격의 협의체에 초청받지 못할 수도 있다. 즉 글로벌 차원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의 신생 소다자 협의체도 중국과 비중국으로 나뉘는 현상을 목격할 가능성이 있다.

RCEP은 인도는 빠졌지만 최소한 아세안과 중국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대표적인 메가 FTA이다. 아세안 10개국 중 6개국과 대화파트너 5개국 중 3개국이 비준하면 출범을 확정하게 된다. 2021년 12월 기준 비준 기준을 충족, 2022년 출범을 앞두고 있다.<sup>171)</sup> 비준과 출범에 따르는 국내 과제도 만만치 않다. 아세안 각국 정부는 국내 이해관계자 설득과 관련 법, 제도 정비, 실제 이행 체계 수립 등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아세안이 이와 같이 복잡하고 다양한 FTA의 국내외 과제를 해결함에 있어 세계 최대 FTA 체결국이 자 아세안과 긴밀한 통상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한국의 역할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FTA 경험을 공유하고, 현지 정부의 경제 정책과 규범, 표준 등을 우리가 선도하는 것은 의미 있는 기여가 될 수 있다. 한국은 이미 한-인도네시아 CEPA, 한-아세안 FTA를 체결하였고, 일본을 제외한 RCEP 회원국 모두와 FTA하에서 협력해 왔다. 비록 신남방 국가들이 FTA 체결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FTA를 통해 교역 및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어떻게 FTA를 홍보하고, 시스템적으로

171) 최윤정, “RCEP 타결과 신남방 경제 지형의 변화,” p. 8.



활용을 장려해 갈지에 대해서는 한국의 모델에서 배울 것들이 많다.

나아가 한국은 기체결한 국가들과 원활한 협의를 이끌어 RCEP이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을 개선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RCEP은 향후 신남방지역에서 가장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전자상거래를 포함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다루지 못했다. 디지털 무역 규범은 FTA 내에서 논의될 뿐만 아니라 주요국을 중심으로 개별 혹은 소다자 형태로도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21년 1월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3국은 디지털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해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DEPA)을 발효시켰다. 한국도 DEPA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RCEP 차원에서도 디지털 통상 규범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sup>172)</sup>

RCEP에 포함되지 않은 인도와의 통상협력은 한국이 넥스트 차이나 통상전략 수립의 차원에서 보다 큰 틀에서 미래 지향적이고 창의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2018년 이후 담보 상대인 한-인도 CEPA(2010년 발효)의 개선 협상에서도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임하여 인도와 기존의 교류 차원을 뛰어넘을 필요가 있다. 인도측은 CEPA 개선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양국 간 무역 불균형 개선이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인도는 2014년 모디 총리 집권 이후 신규 FTA 체결 및 FTA 개선협상 개선 건수가 전무하며 한국과만 개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이 인도와의 무역에서 100억 달러 가까운 대규모 흑자를 이어가는 것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당장 FTA 재검토 시 CEPA 일부 품목의 관세가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 2021년 2월 예산안 발표 시 인도 의회는 심각한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한국, 일본, 아세안과의 FTA를 전면 재검토할 예정임을 발표했다. 국내 생산과 일자리는 수출뿐만 아니라 수입을 통해서도 창출된다는

---

172) 최윤정, “RCEP 타결과 신남방 경제 지형의 변화,” p. 18.

점을 염두에 두고, 인도 제품 수입과 대인도 투자를 확대하는 등<sup>173)</sup> 적극적으로 인도와 무역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CEPA를 비롯한 인도와의 통상협력은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인도가 무역적자와 중국에 대한 반감 등 여러 장애요인이 있었음에도 2013년 이후 RCEP 협상에 참여해 온 가장 큰 이유는 GVC 편입을 통한 산업공업화 달성과 해외 투자 유치라고 할 수 있다. 인도 정부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 신산업정책의 기조도 이와 유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대인도 통상협력의 목표를 인도에 추가적인 관세 양허를 관철시킴으로써 수출을 확대하는 데 두기보다는 인도와 GVC를 구축하는데 있어 유망한 품목을 중심으로 교역, 투자, ODA 등 다양한 협력의 기제를 활용하여 종합적인 통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sup>174)</sup>

아울러 대부분의 신남방 국가들이 제조업 육성 과정에서 각종 정책과 규범, 표준을 수립해가는 단계에 있으므로, 이 분야의 협력을 통해 우리 산업과 협력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유도해 가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 될 것이다. 이미 정해진 룰 안에서 경쟁하는 것보다 경쟁의 틀 자체를 함께 규율하는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전략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지식공유사업)를 보다 확대하여 규범을 비롯한 정책 수립 지원, 표준협력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전략이다.

---

173) 일본 정부는 2020년 4월 중국에서 동남아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9월에는 인도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중국에 있는 생산라인을 아세안 국가들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이전 비용의 최대 3분 2까지, 대기업의 경우 50%까지 보조금의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日 생산체인 ‘탈중국’ 속도대자”…동남아 공들이는 스가, 『아주경제』, 2020.10.15., <<https://www.ajunews.com/view/20201015134411716>> (검색일: 2021.9.23.).

174) 최윤정, “RCEP 타결과 신남방 경제 지형의 변화,” p. 19.

### (3) 디지털 전환과 기후변화 공동 대응

#### (가) 디지털포용혁신기금 설치

한국은 디지털경제 영역에서 세계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고 특히 ICT 제조업과 인프라 경쟁력이 매우 높다. 따라서 신남방 국가들과 ICT 산업 및 기술, 인력 육성, 인프라 개발, 전자정부 등의 기반 조성에서부터 전자상거래, 디지털 콘텐츠, 금융(핀테크), 디지털 헬스케어, 디지털 교육 등 플랫폼 기반의 디지털 경제 영역 전반에서 협력 파트너로서 유망하다.

이 같은 협력 추진을 위해 신남방정책은 그간 진행해 온 신남방지역 국가들과의 ICT 기술 및 연구개발, 인적자원 교류, 스타트업 협력 심화와 함께 디지털 인프라(5G, 스마트시티 등) 수요 확대에 대응한 협력 확대도 검토해 볼 만하다.

〈표 Ⅲ-6〉 신남방 국가의 ICT 발전지수

국가명	Global Rank 2017	IDI 2017	Global Rank 2016	IDI 2016
싱가포르	18	8.05	16	8.08
브루나이	53	6.75	54	6.56
말레이시아	63	6.75	62	6.22
태국	78	5.67	79	5.31
필리핀	101	4.68	100	4.52
베트남	108	4.43	108	4.18
인도네시아	111	4.33	114	3.85
캄보디아	128	3.28	128	3.04
인도	134	3.03	138	2.65
미얀마	135	3.00	140	2.59
라오스	139	2.91	144	2.43
한국	2	8.85	1	8.80

출처: ITU, *Measuring the Information Society Report Volume 1* (Geneva: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2017), p. 77; ITU, "ICT Development Index 2017," <<https://www.itu.int/net4/ITU-D/idi/2017/index.html>> (Accessed October 5, 2020), 재인용: 나용우 외,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p. 272.

〈표 Ⅲ-7〉 신남방 국가의 글로벌 혁신지수

국가명	Global Rank 2021	Input Sub-Index	Output Sub-Index
싱가포르	8	1	13
브루나이	82	51	115
말레이시아	36	36	34
태국	43	47	46
필리핀	51	72	40
베트남	44	60	38
인도네시아	87	87	84
캄보디아	109	106	104
인도	46	57	45
미얀마	127	128	120
라오스	117	123	112
한국	5	9	5

출처: WIPO, *Global Innovation Index 2021: Tracking Innovation through the COVID-19 Crisis* (Geneva: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2021), pp. 181~182.

한국은 또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2021 글로벌 혁신지수(Global Innovation Index) 평가에서 세계 5위를 차지했다. 2012년 21위에서 2020년 10위를 기록했다가 단번에 10위권 내로 진입했다. 한국은 투입 부문 중 GDP 대비 특허 출원 등의 성과가 높아 인적 자본·연구 분야에서 3년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했다. 그 외 정부 온라인 서비스 및 참여와 하이테크 수출 비중도 최상위권을 기록했다. 이는 ICT 발전지수 2위에 더해 한국이 신남방 국가와의 매력적인 파트너 국가가 되는 요인이 될 것이다.

한국은 인터넷 및 디지털 경제의 규모와 GDP에서의 비중, 전자상거래 규모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확진자 추적 등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감염병에 대응하는 사례는 국제적인 모범 사례로 공유 및 확산되고 있다.<sup>175)</sup> 한국이 디지털 혁신 능력과 기술을 세계가 당면한 문제 해결

175) 장영신 외,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화와 한국의 협력방안』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0), pp. 1~12.

에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포용의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가칭 ‘디지털포용혁신기금(Digital Inclusive Innovation Fund: DIIF)’을 수립하여 신남방지역이 당면한 사안에 대한 디지털 기반 대응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DIIF는 신남방지역의 수요를 충족할 뿐만 아니라 이 지역 진출을 추진하는 한국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동 기금을 운영하는 사무국을 현지에 두고 동 사무국은 현지와 한국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아세안에서의 기금 운용은 인도네시아에서 개소 예정인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가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는 현지 진출 한국 기업의 파이낸싱을 지원하는 역할 이외 기존의 무역금융을 지원하는 수출입 은행이나 무역보험공사 등과 뚜렷하게 차별화되는 업무가 없다.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가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 외에 현지 기업의 디지털화, 디지털 플랫폼 이용 등을 지원한다면 신남방정책의 취지에 부합하는 상생의 플랫폼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DIIF의 인도 사무국으로서 한-인도 금융협력센터를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볼 만하다.

DIIF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신남방 국가 국민들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보편적 통신서비스 의무(Universal Service Obligation: USO)’ 제공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한국은 이미 KT SAT(케이티셋)이 인도네시아의 위성인터넷 사업자와 협력해 인도네시아 정부의 보편적 통신서비스(USO) 사업을 수주하기도 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서는 신남방 현지 수준에 맞는 보다 저렴하고 경쟁력 있는 기술의 전파와 보급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처럼 5G를 넘어 6G를 향하는 최첨단 통신기술 협력보다는 이미 한국이 경험하고 기술이 축적된 4G 분야의 기술을 이전해 주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인 대안

이 될 수 있다. 이미 4G 시장에서는 중국의 화웨이가 시장을 장악하고, 자연스럽게 5G 시장까지 공략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실질적인 주력 시장은 아직 4G에 머물러 있다. 마침 미국의 견제로 화웨이의 독주에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화웨이가 장악한 4G 시장을 한국 기술로 잠식해 갈 수 있다면, 5G 시장에서도 한국의 진출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므로 일석이조가 될 수 있다.

그 외에 핀테크(Fintech)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금융 협력도 유망하다. 한국은 특히 우수한 ICT 기반시설에 기초하여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금융 산업과 시장구조에서 큰 변화를 경험하였다. 신남방 국가에서도 디지털 경제 발전의 필수 조건인 핀테크 도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기존의 지점거래 또는 대면거래로 이루어지던 금융거래가 비대면거래로 바뀌게 되는 결정적 계기를 맞이하였다.<sup>176)</sup> 인도의 경우 인구의 39%인 5억 인구가 핀테크를 이용하고 있다.<sup>177)</sup> 2019년 기준 디지털 서비스 산업은 약 2000억 달러로 추정되는데, 디지털 결제서비스를 포함한 핀테크 분야가 660억 달러로 가장 컸다.<sup>178)</sup>

이처럼 한국과 신남방지역의 핀테크 협력 여건이 우수함에도 아직까지 핀테크 분야에서 구체적인 성공사례는 발견되지 않는다. DIIF 사무국이 다양한 사업 환경에 대한 정보 제공과 협지 협력사 연결

---

176) World Economic Forum, "How Fintech Can Help South-East Asia's MSMEs Recover from COVID-19," July 17, 2020, <<https://www.weforum.org/agenda/2020/07/how-fintech-can-help-south-east-asias-msmes-recover-from-covid-19/>> (Accessed September 21, 2021).

177) Internet and Mobile Association of India, *Digital India: Present, 2025 and 2035* (Mumbai: Internet and Mobile Association of India, 2020), p. 9.

178)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India-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2021-10-22)," <<https://www.trade.gov/country-commercial-guides/india-information-and-communication-technology>> (Accessed October 28, 2021).

등 핀테크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유의해야 할 점은 아직까지 신남방 국가들의 금융제도는 은행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비은행 또는 비금융기관에 기반한 핀테크 서비스 제공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제도적 기반에 대한 충분한 사전 정보 제공과 현지 기관, 특히 금융감독기관과의 중재와 협력을 조율하는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DIIF 사무국은 현지 금융감독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금융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역량강화 사업을 수행하여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스타트업을 통한 혁신성장의 모멘텀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 인도는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계 3대 유니콘(Unicorn) 기업을 보유한 국가로 자리매김하였다.<sup>179)</sup> 아세안은 그랩, 고젝, 토코 피디아, OVO, 부깔라팍, 트래블로카, Trax, 레블루션 프리크래프트 등 이미 17개의 유니콘을 보유하고 있고 스타트업 육성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한국은 쿠팡, 블루홀, 옐로모바일 등 9개의 유니콘 보유하고 있으나, 숫자 및 기업가치 면에서 인도와 아세안이 한국을 추월했다. 인도와 아세안이 글로벌 스타트업들의 새로운 탄생지가 된 배경으로는 총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15~34세 젊은 층이고, 이들이 특히 기술창업에 관심이 많다는 점, 그리고 창업 환경이 개선되고 스마트폰 보급률이 100%를 넘어섰으며, 인터넷 및 SNS 보급률도 급속하게 높아지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인도의 경우 모디 정부가 추진한 Start-up India, Digital India, Skill India 등 기존에 추진해 온 정책적 기반 위에 인도의 우수한 인력풀과 기업가 정신이 결합한 결과로 평가된다.

---

179) NASSCOM and ZINNOV, *Indian Tech Start-Up Ecosystem - On the March to a Trillion Dollar Digital Economy* (Noida: NASSCOM, 2020), p. 11.

무엇보다도 신남방 각국 정부의 과감한 규제완화와 적극적인 스타트업 육성, 지원 정책이 뒷받침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정보 공유와 협력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IT, 모바일 기술 기반 응용 산업에 대한 정부의 인센티브, 성장가능성, 우리의 비교우위를 살리는 측면에서 상호 윈윈하는 협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관련 제도 및 인프라 조성이 초기 단계이고 실제 운영 경험 부족, 기업의 기술 수준이 낮은 점 등에 유의하면서 면밀한 조사와 전략의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은 2018년 인도 뉴델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순방 행사의 하나로 ‘한-인도 스타트업 계약체결식’을 개최하고 총 5건의 계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까지 18개 스타트업을 배출했다. 한국의 창업진흥원과 인도 액셀러레이터인 GAIN 사이에 ‘한-인도 스타트업 교류·협력에 관한 MOU’도 체결했다. 당시 인도에 양국 스타트업들이 자유롭게 교류·협력할 수 있는 ‘코리아 스타트업 타운’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이후 추동력을 잃은 상태다.<sup>180)</sup> 한국 스타트업이 인도의 창업가, 금융 환경, 지식 인프라, 전문인력, 정부 지원 등의 생태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타운 건설을 비롯하여 스타트업 진출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지원에 보다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DIIF는 스타트업의 벤처 캐피탈(Venture Capital: VC)로서 리스크를 헤징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 (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분야 협력과 환경산업 신기술 공동 개발

제조업 생태계 구축과 산업발전은 필연적으로 환경오염을 심화시키게 될 뿐만 아니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탄소중립’ 문제와도 충돌이 불가피하다. 또한 경제와 생활수준의 향상은 국민들의 환경

---

180) 중소벤처기업부, “코리아 스타트업, 인도 진출에 성공하다,” (2018.7.9. 보도자료).



오염에 대한 민감도를 높여가기 때문에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후발국들에게는 더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상하게 된다. 따라서 신남방 국가에 있어 최근 몇 십 년간 동일한 과정을 거치며 필요한 환경정책과 환경기술을 갖춘 한국과의 협력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소경제 구축은 후발주자들인 신남방 국가들에게는 에너지와 환경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멤브레인 필터를 활용한 상수도 처리기술,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재활용 정책과 시스템 및 소각로 발전, 해양폐기물 저감 기술, 수소발전 및 수소차 기술 등에서의 협력은 신남방 국가들에게는 전략적인 한 수 가 될 수 있다.

에너지 부문에서도 한국은 이미 신남방 국가에 한전을 비롯한 발전소들과 건설사들이 대거 진출해 화석연료 발전시장을 주도해 온 상황이지만, 향후 전개될 신재생발전 시장에서는 아직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국의 한발 앞선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신남방 국가에 접목 가능한 많은 기술과 기업들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가속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수상태양광, 플라즈마 소각로 발전, 소형모듈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 SMR) 등은 한국이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현지 시장을 주도해 갈 수 있는 중요 신기술들이다.

한국 입장에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제시한 그린 뉴딜의 성공적 달성을 위한 해외 파트너로서 인도·아세안과의 협력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일례로 인도가 시장에 기반한 에너지 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해 ‘perform, achieve and trade mechanism’을 주요 정책 도구로 사용할 것임을 자발적기여방안(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에 밝힌 만큼, 한국의 배출권거래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인도의 국내 탄소시장 정착 관련 지식공유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sup>181)</sup>

## 2. 사회문화

신남방정책은 사회문화 부문으로 까지 협력의 틀을 확대하였고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했다. 신남방지역을 둘러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간의 상호 경쟁이 치열해지는 동시에 사회문화 영역으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근미래 환경 속에서 신남방정책이 대상 국가들의 인정을 받은 만큼 이제는 진일 보한 정책으로 파트너십을 공고히 해야 할 것이다. 신남방정책은 상호 이해 증진을 통한 사람공동체 달성을 목표로 하고 쌍방향적 인적·문화교류 확대를 위해 보다 명확한 전략과 실천과제를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고는 신남방지역에 보다 밀착하여 근미래 사회문화의 변화상을 포착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한국과의 협력 수요를 유연하게 반영하며 나아가 한국과 신남방지역이 상호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수요-역량 결합형 협력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 가.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1) 이해도 제고: 사회문화 측면에서 상호 이해는 여전히 부족

신남방정책 추진 이후 2019년 상호방문객 수 1위를 기록했던 한국

---

181) 최윤정, “인도의 디지털·그린 통상 환경과 양국 기업 협력 방안,” 『인도의 경제·통상 환경 변화와 한-인도 기업간 협력 방안』 (KOTRA 주최 2021 한-인도 통상투자협력 포럼 발표자료, 2021.9.28.).

과 아세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여행객 및 체류자 수가 모두 크게 감소했다. 다문화에 대한 한국 국민의 수용성도 뒷걸음질치고 있고, 신남방지역 출신 외국인에 대한 인식 수준도 그다지 개선되지 않았다. 2018년 기준으로 한국 국민의 다문화수용성은 52.81점으로 2015년(53.95점)에 비해 오히려 낮아졌고, 직접적인 교류를 비롯한 사회 통합 차원에서의 수용성은 오히려 저하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82)</sup> 2018년 기준 한국에 3개월 이상 체류한 등록 외국인 중 아세안이 349,871명(32.1%), 인도가 9,748명(0.9%)로 신남방 국가 출신은 약 36만 명(33.0%)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sup>183)</sup> 그러나 이들 신남방지역 출신의 외국인에 대한 인식은 북미, 유럽, 동북아 지역 출신에 비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이는 범죄율 증가, 국가개정 부담 등 외국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더하여 신남방 국가에 대한 국민 인식 수준이 아직 낮은데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인식 수준의 개선 속도가 더딘 이유는 아직까지 신남방지역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하지 못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신남방지역과의 교류협력이 활발해졌음에도 상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국내외 교육 및 연구 여건이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현재 한국의 교과과정에서 아세안 및 인도는 교과서 내에 압축적으로 소개되고 있고, 대학의 아시아 지역에 관련된 교육과정에서도 중국,

182) 안상수 외,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연구』(서울: 여성가족부, 2015), p. 56; 김이선 외, 『2018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서울: 여성가족부, 2019), p. 61.

183)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2021년 9월말 현재),” 2021.10.19., <<https://immigration.go.kr/immigration/1569/subview.do?enc=Zm5jdDF8QE88JTJGYmJzJTJGaW1taWdyYXRpb24lMkYyMjclMkY1NTI5NzglMkZhenRjbFZpZXcuZG8lM0ZwYXNzd29yZCUzRCUyNnJnc0JnbmRlU3RyJTNEJTI2YmJzQ2xTZXElM0QlMjZyZ3NFbmrRkZVN0ciUzRCUyNmlld01pbmUlMORmYWxzZSUyNnBhZ2U1M0QxJTI2YmJzT3BlbldyZFNlcSUzRCUyNnNyY2hDb2x1bW4lM0QlMjZzcmNoV3JkJTNEJTI2>> (검색일: 2021.10.28.).

일본 등 동북아에 치중되고 신남방지역의 비중은 5%에도 미치지 못 했다.<sup>184)</sup> 동남아 관련 학위 과정을 제공하는 대학의 수도 전국 430개 대학 중 7개 대학에 불과한 실정이다.<sup>185)</sup>

신남방지역에서 한국학 교육과정은 일부 국가에 집중되고 기초 한국어를 비롯한 교양과목이 대부분이다. 교양수업과 학위과정을 모두 합하면 아세안에 135개, 인도에 22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에서 운영되는 한국학 교육과정 중에서 각각 9.7%와 1.6% 수준이다.<sup>186)</sup> 한국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을 모두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인도에 각각 1개씩 총 4개 대학에 불과하다.

2019년 한국의 대아세안 ODA는 유상과 무상을 합하여 약 4억 7276만 달러이며, 이 중 교육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국 별로는 베트남에 대한 ODA가 1억 853만 달러로 아세안 회원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서 미얀마, 캄보디아, 필리핀 순이었다.<sup>187)</sup> 특히 아세안은 관광업 비중이 높고 국민들의 역사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수요가 높다. 한국 정부가 신 남방정책을 추진하면서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ODA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다만, 아세안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 하는 사업과 병행하여 개별 국가의 사회와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진일보한 신남방 문화 ODA 사업에 대해 고민 할 시기가 되었다.

---

184) 박사명, “대학의 동남아 관련 학과 증설을 위한 청원,” (미간행, 2019).

185) 동남아 과정을 운영하는 7개 대학은 부산외국어대학교,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영산대학교, 청운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이다(2018년 기준).

186) 한국국제교류재단(KF) 통계센터, “해외대학 한국학현황 통합검색,” <<https://www.kf.or.kr/koreanstudies/koreaStudiesList.do>> (검색일: 2021.9.10.).

187) 한-아세안센터, 『2020 ASEAN & KOREA in Figures(한-아세안 통계집)』 (서울: 한-아세안센터 정보자료국, 2021), p. 15, pp. 42~43.

## (2) 변화상 파악: 신남방지역 사회문화 이해의 키워드, MZ세대

근미래 신남방지역의 사회문화는 큰 변화를 경험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화의 중심에 있는 소위 MZ세대로 불리는 청년 인구에 주목해야 한다. MZ세대를 이해하는 것이 신남방지역의 근미래 변화상을 이해하는 키워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젊고 역동적인 아세안은 세계 3번째 인구 대국이고, 특히 아세안 인구의 41%가 13~37세로 매우 젊다. 아세안과 인도를 포함한 신남방지역의 평균연령은 30세이다.

MZ세대는 18~35세를 일컫는 용어로 인도의 경우 전체 인구의 60%를 차지한다. 이들은 정치활동, 종교, 대중문화 등 최신 트렌드를 접하는 속도가 빠르고 과거 기성세대와 달리 전통에 속박하지 않는 비교적 자유로운 감성의 세대로 일컬어진다. 2019년 Bloomberg 조사에 따르면 인도 내 Z세대 인구는 약 4억 72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고<sup>188)</sup>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전 세계 Z세대 10명 중 9명은 신흥국가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20%가 인도에서 사는 것으로 분석했다.<sup>189)</sup> 밀레니얼 세대까지 이 조사에 포함한다면 인구수로는 가히 인도가 전 세계 MZ세대를 대표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은 최초의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고 할 수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속도는 더디나 거의 태어날 때부터 컴퓨터, 스마트폰 등 디지털 인프라 활용에 익숙하고 대부분의 커뮤니케이션을 디지털 환경에서 수행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부터 구축된 3G, 4G 통신 서비

---

188) "Gen Z Is Set to Outnumber Millennials Within a Year," *Bloomberg*, August 20, 2018,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8-08-20/gen-z-to-outnumber-millennials-within-a-year-demographic-trends>> (Accessed September 10, 2021).

189) Bank of America, "Gen Z to the World: Watch Out, Here We Come," <<https://business.bofa.com/en-us/content/gen-z-defining-characteristics-undersanding-impact.html>> (Accessed September 10, 2021).

스를 이용한 최초의 세대였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링크드인 등 SNS를 활용해 수많은 연결고리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이 연결고리를 통해 인간관계를 구축하고 취업 기회를 찾는 등 기존 세대와 달리 자국의 국경을 넘어 세계와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있다.

즉, 인도와 아세안의 MZ세대의 공통된 특징은 이들이 해당 국가 인구의 절반 또는 그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중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SNS와 같은 디지털 수단을 통하여 전 세계와 소통하며 사회문화(정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근미래 신남방지역과의 사회문화 협력 전략은 청년층의 방식과 언어에 보다 많은 관심과 비중을 할애해야 할 것이다.

〈표 III-8〉 국가별 세대 인구비율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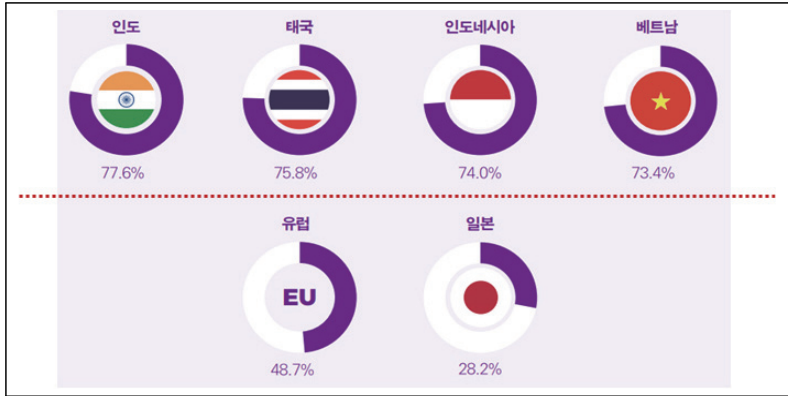
구분	인도	인도네시아	미국	중국	유럽	일본
39세 이상	32	35	48	48	55	62
25~39세(M세대)	24	23	21	23	19	16
10~24세(Z세대)	27	25	20	18	16	14
10세 이하	17	18	12	12	10	8

출처: EY, *Are You Reframing Your Future or Is the Future Reframing You? Megatrends 2020 and Beyond*, EYQ 3rd edition, (London, UK: Ernst & Young Global Limited, 2020), p. 17.

MZ세대가 사회문화 전반에 등장하면서 한류도 함께 성장하고 있다. 한국 문화콘텐츠를 경험한 이후에도 한국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응답은 58.8%로 나타나 2019년과 비교해 큰 변화는 없었다. 하지만 인도(77.6%)와 태국(75.8%), 인도네시아(74.0%), 베트남(73.4%) 등 아세안 국가에서는 긍정적으로 변화된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sup>190)</sup>

190) 이 같은 변화는 유럽(48.7%)과 일본(28.2%)에 비교할 때 매우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글로벌 한류 트렌드 2021』(서울: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21), p. 9.

### 〈그림 III-6〉 한류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출처: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글로벌 한류 트렌드 2021』 (서울: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21), p. 9.

### (3) [공동체 기여] 사회문화공동체 실현에 기여

2015년 제27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정치·안보 공동체(ASEAN Political-Security Community: APSC), 아세안 경제 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AEC), 아세안 사회·문화 공동체(ASEAN Socio-Cultural Community: ASCC) 등 3개의 축으로 구성된 아세안 공동체가 공식 출범하였다. 근미래 내에 아세안 공동체 출범 10주년이 포함되는 만큼, 아세안의 공동체 강화, 아세안 정체성 강화, 규범과 가치 기반의 강화를 지지하고 이상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10개 회원국 시민 간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아세안 시민 의식(ASEAN Citizenship) 구축은 근미래 아세안 사회문화 분야의 핵심 의제가 될 것이다. 최근 여러 의제에서 아세안 내 의견 및 세력 분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미중 간 경쟁과 갈등이 고조되면서 아세안 내 의견 불일치의 가능성은 앞으로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 아세안은 미중 갈등과 정세 간 이질성으로 인한 역내 분열이 심화되는 양상을 극복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투입하고 있다.

아세안 공동체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ASCC)를 만드는 것이다. 아세안은 사람 중심의 공동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적자원 개발, 사회안전망 구축, 정의와 인권, 지속가능한 환경 등의 분야에서 세부 실천 목표를 수립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는 역량강화, 연구 및 출판 등 추진하는 사업의 24.8%를 완료한 것으로 발표했다. 이러한 노력은 아세안 회원국 국민들간에 아세안 시민(ASEAN Citizen) 의식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sup>191)</sup> 최근 아세안은 자체적인 노력에 더하여 사회문화 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파트너 국가와의 협력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 나. 추진 목표 및 고려사항

### (1) 상호 이해와 교감에 기반한 사람 공동체로 발전

현재 신남방 국가에서는 한류의 인기에 힘입어 한글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다. 특히 한국과 교역 규모가 큰 편인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실시하고 있고, 대학 내에 한국어·한국학을 가르치는 강좌·학과가 생겼거나 중등 교육과정에서 제2외국어로 채택하고 있다. 한글은 한국 사회와 문화를 전파하기에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다.

교육부는 2021년 장학사업 등 교류 확대를 통해 친한 인재를 양성하고, 신남방지역 원격교육 체제 구축을 지원하는 등 한국형 교육

---

191) Statista, "Tourist Arrivals in the ASEAN Region from Other ASEAN Countries from 2010 to 2019,"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645761/tourist-arrivals-in-asean-region-from-other-asean-countries/>) (Accessed September 10, 2021); 최윤정, "아세안 외교전략 재조명: 네트워크 이론의 적용과 실제," 『세종정책연구』, 2020-08 (2021), pp. 41~42.



경험 및 모델을 공유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신남방지역 출신 정부 초청 장학생을 480명 선발하고, 한국의 원격교육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신남방지역 교원과 정책가 140명을 대상으로 이리닝 역량 강화 연수도 계획하였다. 또한 교육 한류 확산을 위해 캄보디아, 라오스 등 신남방지역 8개국 319개 정규 초·중등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sup>192)</sup>

한국에서 신남방지역에 대한 연구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아세안 및 인도 관련 교육은 그 자체가 매우 희소할 뿐만 아니라 그마저도 문학 및 무역 부문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이다.<sup>193)</sup> 정부의 신남방정책 추진으로 이들 지역에 대한 교육을 확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였음에도 교육 측면에서의 진전은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신남방지역 관련 전공과 과목 개설도 희소할 뿐만 아니라 그나마도 일부 지역의 대학에 국한되어 있다. 신남방 국가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수행하는 데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실천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신남방정책은 정치적 구호에 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2020년 국내 신남방지역 문화 전문가 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 대부분은 신남방정책이 역점을 두고 추진한 ‘경제교류 협력’의 성과는 높이 평가하는 반면, 사회문화 및 인적 교류 분야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관점에서 보다 다양한 교류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답하였다.<sup>194)</sup> 특히 문화의 경우 신남방이라는 하나의 지역 단위에서 접근하는 데는 분명한

192) “대통령 직속 신남방특위, 신남방국가에 친한 인재 양성, 과학기술·ICT 기반 산업발전 공유,” 『전자신문』, 2021.3.4., <<https://www.etnews.com/20210304000164>> (검색일: 2021.9.23.).

193) 전제성·박사명·김현경, “한국 대학의 동남아시아 관련 교육과정: 현황과 대안,” 『동아연구』, 제40권 1호 (2021), pp. 7~12.

194) 류정아, 『신남방 지역(아세안 10개국, 인도) 문화교류 활성화 방안』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0), pp. 130~131.

한계가 노정되어 있다. 각 국가와 지역마다 서로 다른 역사, 전통과 관습, 종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동남아 10개국은 아세안이라는 공동체 목표를 지향하고 있지만 실상 이들 내부 이견과 다양성은 좁혀지지 않고 있고, 동남아와 인도 역시 신남방지역이라는 틀로 묶기 어려운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태국 문화의 기조는 인도·미얀마·크메르 문화가 융합된 것이다. 국민의 95%가 불교 신자인 태국은 불교가 사회문화 저변을 형성하고 있고, 이에 따라 불교가 유입된 인도와 스리랑카로부터 받은 문화적 영향이 크다. 동남아 한류의 거점으로 한국 TV 드라마, 영화, 음반, 게임뿐만 아니라 식품, 패션, 웹툰을 비롯한 콘텐츠 등 거의 전 분야에 걸쳐 한류 열풍이 확산되고 있다. 필리핀의 경우 현 인도네시아인 수마트라의 스리비자야 왕국과 자바 섬의 마자파힛 왕국과의 교역 역사가 문화적 원천을 이루고 있다. 스페인 식민지배의 영향으로 국민의 83%가 가톨릭 신자로 타갈로그어와 함께 영어가 공용어이다. 필리핀도 2000년대 초반부터 한류가 확산된 대표적인 국가이나 한류 콘텐츠에 담긴 문화적 우월주의나 차별주의 등에 대해 최근 부정적인 인식도 같이 확산되고 있다.<sup>195)</sup> 신남방 국가들에 대한 이해와 교감이 부족한 협력의 구호는 일방적이고 시장 추구형(market-seeking) 도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2) 디지털 네이티브인 MZ세대 특성을 활용

신남방지역에서 한류가 빠르게 확산되고 소비되는 현상의 이면에는 문화를 주도하는 MZ세대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 K-Pop, K-Drama

195) 한국콘텐츠진흥원 인도네시아 비즈니스센터, 『필리핀 콘텐츠 산업동향』, 2020년 6호 (2020.12.3.), <<https://www.kocca.kr/cop/bbs/view/B0158950/1843457.do#>> (검색일: 2021.9.23.).

등 한류는 관광자원의 개발·관리·홍보, 음식·문화, 스포츠 활동 등으로 접목할 수 있는 분야가 다양하다. 코로나19는 한류가 본격적으로 디지털 세대를 파고들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컴퓨터·모바일 게임, 지상파, OTT(Over The Top) 분야에서 한국 콘텐츠의 인기가 상승하고, 해외에서의 한국 콘텐츠 의존도가 상승하였다.

2021년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실시한 조사 결과 해외에서는 한국 문화콘텐츠를 대부분 ‘온라인/모바일 플랫폼’과 ‘TV’, ‘한국 영상물’을 통해 접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드라마, 예능, 영화 등은 ‘온라인/모바일 플랫폼’과 ‘TV’, 출판물은 ‘자국/글로벌 사이트/앱’, 패션, 뷰티, 음식은 ‘SNS상의 영상/사진’과 ‘한국 영상물’을 통해 접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96)</sup> 넷플릭스가 제공하는 한국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전 세계 83개국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양질의 콘텐츠와 온라인 플랫폼의 시너지가 빚어낸 결과이다. 마지막까지 1위에 오르지 못했던 인도에서도 드디어 10월 1일 첫 1위를 달성했다.

인도 OTT 플랫폼은 디지털 붐과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2021년 40개 이상 사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sup>197)</sup> 대부분은 다양한 콘텐츠를 보유한 글로벌 OTT 플랫폼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디즈니플러스 등이 전체 시장의 57%를 점유하고 있다.<sup>198)</sup> 한류 콘텐츠는 인도 콘텐츠 시장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넷플릭스를 이용해 소비자들에게 점차 알려졌다.

---

196)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글로벌 한류 트렌드 2021』, p. 13.

197) “All OTT Platforms Price List in India 2021,” *OTT List*, October 10, 2021, <<https://otplist.in/all-ott-platforms-price-list-in-india/>> (Accessed October 28, 2021).

198) “Market share of OTT platforms in India 2021: Top OTT Players,” *OTT List*, October 1, 2021, <<https://otplist.in/market-share-of-ott-platforms-in-india/>> (Accessed October 28, 2021).

2000년대 초 시작된 인도 내 한류는 현재 27만 명 이상이 즐기는 하나의 문화 흐름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한류를 이끄는 주요 콘텐츠는 K-Drama이다. 넷플릭스 인디아가 발표한 2020년 상위 TV 스트리밍 리스트에는 최신 한국 드라마가 포함돼 있으며, 자체 파악으로는 전년 대비 370% 이상 시청률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sup>199)</sup>

인도 유력 언론매체인 *Livemint*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한류 콘텐츠가 인도 전역에서 주목받는 이유를 분석하였다. 인도 MZ세대가 양국 문화의 유사성을 찾아냄과 동시에 한류 콘텐츠의 현대성에 매료됐다는 점이 꼽혔다. 그런데다가 MZ세대가 디지털 이용률이 높고 글로벌 OTT 서비스를 쉽게 접할 수 있어 한류 열풍이 가능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sup>200)</sup>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한국 방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에 더하여 콘텐츠 접근성이 용이해진 점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동남아에서 태국과 함께 대표적인 한류의 본산라고 할 수 있는 필리핀은 1억이 넘는 인구를 보유한 동시에 밀레니얼 세대의 영어 사용이 원활하다. 이처럼 필리핀 내 한류는 영어를 통해 주변 국가 및 영어권 국가와 쉽게 연결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필리핀 내 한류는 필리핀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해외로 증폭될 수 있으므로, 필리핀은 한류 전파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sup>201)</sup> 2021년 2월 영국의 미디어 분석업체 위아소셜(We Are Social)이 발간한 보고서 ‘2021

---

199) "Riding the Hallyu Wave: How Korean Packaged Food is Making its Way into Indian Homes," *The Economic Times*, September 9, 2021,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prime/consumer/riding-the-hallyu-wave-how-korean-packaged-food-is-making-its-way-into-indian-homes/primearticleshow/86045707.cms>> (Accessed September 27, 2021).

200) "How 'Hallyu' Became Key to Korea's Business Boom in India," *Livemint*, September 1, 2021, <<https://lifestyle.livemint.com/news/big-story/riding-the-next-kwave-111610104978990.html>> (Accessed September 27, 2021).

201) 한국콘텐츠진흥원 인도네시아 비즈니스센터, 『필리핀 콘텐츠 산업동향』, p. 1.

디지털: 인도네시아(Digital 2021: Indonesia)'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민 60.2%(1억 950만 명)는 스마트폰을 통해 게임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sup>202)</sup> 따라서 아세안에서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그리고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국 드라마 붐이 일고 있는 인도를 한류 전파의 거점 국가로 정하고 허브 앤 스포크(hub and spoke) 전략으로 신남방지역을 공략하는 전략을 고려해 볼 만하다.

## 다. 추진 과정 및 방법

### (1) 수요 기반 교육 ODA 확대

인식 수준 제고와 인적 역량 강화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것이 교육 및 연구 협력일 것이다. 신남방 국가들이 중진국 함정을 탈피하는 데 있어 산업 기반 구축 못지않게 시급한 과제가 인적자원 육성이다. 더욱이 코로나19 이후 교육 시스템의 취약성이 불거지면서 외부 협력으로 보완해야 할 분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근미래 교육협력은 따라서 신남방 국가들의 인력육성의 수요에 기반하여 수립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기존의 학교 중심의 교육에서 교육 단절을 막기 위해 전 세계가 도입한 것이 원격교육이다. 하지만 원격교육과 관련된 시스템과 교육 콘텐츠의 준비 정도는 국가마다 큰 차이를 나타낸다. 베트남은 그동안 일부 사립학교에서만 부분적으로 시행했던 온라인 학습이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교육 전반의 학습 환경이 됨에 따라 공교육의 온라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코로나19 피해 정도가 심각했던 인도네시아는 전국의 53만 여 개의 학교가 문을 닫고 원격교육을 전적으로 시행했지만, ICT 인프라 및

---

202) 한국콘텐츠진흥원, 『WEEKLY GLOBAL(위클리글로벌)』, 제216호 (2021), p. 11.

기기 부족 등 디지털 교육 접근성이 떨어지고 데이터 보안, 개인 정보 보호 등 디지털 제도화 미비 등 여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sup>203)</sup> 캄보디아의 경우 각종 TV 채널과 SNS나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원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제 학습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교육 ODA는 교육기회가 아예 단절된 저소득 국가에 대해서는 보다 기초적인 교육의 비중을 높이고 교육이 제공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낙후 지역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온라인 학습에 필요한 기기 및 도구 지원, 통신시설 확충 등의 수요가 매우 큰 상황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온라인 기기에 대한 접근성 및 ICT 역량의 격차에 따라 교육 불평등 심화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전문가·봉사단 파견, 초청·현지연수 등 다양한 인적교류 프로그램이 취소되고 있고, 국가 간 이동 제약이 커짐에 따라 이동성(mobility) 보장이 중요한 고등교육, 현장 교육과 실습이 중요한 기술·직업교육 등에서 기회 상실이 나타나고 있다.

이때 단순히 저개발국에 대한 원조의 개념에서 벗어나 한국과 신남방 지역의 국민들 공동의 교육 콘텐츠 개발, 온라인 학습 모듈 공유, 한국 내 신남방지역 연구 지원 및 신남방지역 내 한국학 연구 지원 등을 통해 ASCC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한편 한국과 ASCC와의 공동체성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ODA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국을 비롯해 상대적으로 선진국 반열에 든 대화상대국의 일방향적인 수용보다는 한-아세안, 한-인도 양방향 교류, 특히

---

203) Noah Yarrow and Riaz Bhardwaj, "Indonesia's Education Technology during COVID-19 and beyond," World Bank Blogs, May 19, 2020, <<https://blogs.worldbank.org/eastasiapacific/indonesias-education-technology-during-covid-19-and-beyond>> (Accessed October 28, 2021).

과학기술과 디지털 분야 고등 재원의 교류가 필요하다. 그간 아세안에서 한국과의 체계적인 장학 프로그램과 교환학생 프로그램 실행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제기되어온 점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지난 2018년 아세안대학네트워크와 아세안+3 교육 포럼의 성명문에서도 디지털 시대 고등교육의 중요성과 디지털 분야 접근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아세안+3 차원에서 기술과 교육 분야 교류가 강조되었다.<sup>204)</sup>

실제 신남방지역에서 사회문화 부문의 정책적 협력에 대한 설문에서 교육 및 문화 콘텐츠의 지원에 대한 수요가 22.6% 가장 높게 나타났다.<sup>205)</sup> 이는 한국과 신남방지역 상호인식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최다 응답률을 기록한 ‘상호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 및 활용’과도 맞닿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교육 ODA 부문에서 협력 성과가 눈에 띄는 국가는 독일이다. 독일이 수행하는 아세안에 대한 교육 ODA는 연평균 1억 1289억 달러이며 주로 고등교육(64.7%)과 직업교육(22.9%)에 재원을 집중하고 있다.<sup>206)</sup> 교육이 인간의 기본권리임을 강조하면서 아세안의 기술직업교육훈련(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TVET)에 특화된 협력을 수행하고 있다. EU 차원에서도 규모는 크지 않으나 아세안에 대한 교육 ODA를 수행하고 있는데 EU의 특성을 살려 상이한 고등교육체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EU-아세안 SHARE

---

204) ASEAN University Network, “The Relevance of Higher Education in the Digital Era,” (Joint Statement on 18th AUN and 7th ASEAN+3 Educational Forum, May 4, 2018), <<https://asean.org/wp-content/uploads/2021/08/Joint-Statement-on-the-18th-AUN-and-7th-ASEAN3-Educational-Forum-The-Relevance-of-Higher-Education-in-the-Digital-Era.pdf>> (Accessed October 1, 2021).

205) 최진우 외, 『아세안 지역 한류콘텐츠 활성화 방안』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1), p. 24.

206) 문진영 외,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와 한국의 분야별 협력방안』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9), p. 100.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아세안 국적 학생들의 역내 교류, 아세안-EU 간의 교류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도 독일과 유사하게 아세안 대학 이터닝 지원사업, CAMPUS Asia-AIMS 등 고등교육과 기술직업교육훈련에 ODA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여해 왔다. 신남방 국가에 풍부한 젊은 노동인력들이 기술 부족으로 일자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사회불안 요소가 될 뿐 아니라 오히려 경제성장의 장애물이 될 수 있기에 최근 기술직업교육훈련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택된 전략산업과 연계한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양질의 기술인력들을 배출해 내고, 이를 기반으로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함께 도모해 가야 한다.

그런 면에서 한국의 기술정책과 경험을 공유하고, 특히 한국의 폴리텍 대학 프로그램을 현지 기술대학들과 연계해 체계적인 기술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정착시켜 가야 한다. 단순 노동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야는 신남방 국가에서 빈곤국들로 이전이 불가피해질 것이므로, 산업고도화와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인력고용이 가장 많은 섬유·봉제·가전산업과 같은 분야가 글로벌 시장에서 계속 경쟁력을 유지해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 산업의 고도화를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현지에서의 인력양성뿐만 아니라 한국에 고용허가제로 신남방 국가에서 유지하는 인력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선발해 이러한 전략산업 협력과 산업고도화 지원 전략에 맞춰 선발하는 체제를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많은 신남방 국가들이 단순 기술인력 육성뿐만 아니라, ‘무역인력’ 양성과 같은 과제를 안고 있다. 제조업 생태계가 구축되더라도 제품을 역내 혹은 글로벌 시장에 수출할 인재와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역강국으로서 한국의 무역인력 양성시스템을 접목시켜 줄 필요가 있는데, 특히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어까지 학습한 인재들을 무역인력으로 양성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이들이 한국 기업의 신남방 진출에 ‘교량’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육성된 무역인력들이 다시 자국의 상품을 글로벌 마켓으로 수출하는 인력으로 자연스럽게 성장해 가게 된다면, 우리는 훌륭한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신남방 국가에 제공한 것이 될 것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무역인 육성 프로그램을 국내 이주노동자뿐만 아니라 협력국 현지 무역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 (2) 신남방 연구 인프라 확대

신남방지역에 대한 이해도와 협력 용이성을 제고하는 데 있어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 전문 인력 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다. 이를 위해 초기에는 기존에 합의한 다양한 협력센터의 조기 안착 및 성과 시현을 목표로 하고, 중기에는 이를 통합한 상위 레벨에서의 정부 차원 협력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구축한 협력 기반으로 한-아세안 싱크탱크 전략대화,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 한-아세안 과기협력센터, 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 한-인도 연구혁신협력센터, 한-인도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 및 기술교류 센터 등이 있다. 기존에 설립한 플랫폼은 그 자체로서 작동하여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를 내도록 독려하는 한편 이들을 통합하는 정부 차원의 마스터플랜과 상위 기구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일본의 경우 양자 차원에서 유망 신흥국과의 공동 이니셔티브(Joint Initiative)를 운영하고 있다. 공동 이니셔티브에는 경제 및 통상정

책을 담당하는 일본 경제산업성(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METI)을 비롯한 중앙 부처와 대사관, 일본국제협력단(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 일본무역진흥기구(Japan External Trade Organization: JETRO) 등 현지 진출 유관기관, 현재 주재 민간 상공회의소와 경제인단체연합 등과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고 있다. 신남방지역의 경우 베트남에 2003년에 첫 설치 후 미얀마에도 2012년 공동 이니셔티브를 설치하였다.

또한 신남방지역에 한국과 현지 연구자가 공동으로 지역의 미래 비전과 당면 이슈를 연구하는 국제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 이 또한 앞선 일본의 사례를 통해 보면, 일본 정부는 2007년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 촉진을 목표로 아세안의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를 지향하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연구기관으로서 아세안·동아시아경제연구소(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ASEAN and East Asia: ERIA)를 설립했다.<sup>207)</sup> ERIA는 아세안과 동아시아 지역의 정책과제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고 동아시아정상회의(East Asia Summit: EAS)에 비전과 정책을 제언하는 국제 연구기관으로 16개 국가(아세안과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동 연구기관은 에너지 및 환경문제, 물류·인프라 및 관련 산업의 취약점 개선, 전문인력 보강 등 아시아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에 대한 역내 공동 대응을 위해 ASEAN을 중심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ERIA는 실질적으로는 일본 정부가 아시아 차원의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일본의 아시아 시장 선점 및 진출 기회 확대에 기여하고 있음을 볼 때,<sup>208)</sup> 신남방지역에 국제 연구기

---

207)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ASEAN and East Asia(ERIA) <<https://www.eria.org>>.

구 설립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

국내적으로 신남방지역 연구 인프라가 취약한 부분도 개선이 시급하다. 지역적인 파급 효과가 큰 국립대학부터 신남방 국가에 대한 다양한 학문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언어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역사, 경제, 과학기술 등 양적 팽창과 동시에 교육의 질적 혁신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전제성 외는 신흥 지역에 대한 신규 학과 개설은 입학정원의 확대와 연동되어 있으므로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서 학부 연계전공과 대학원 협동과정 신설을 대안으로 제시했다.<sup>209)</sup>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온라인 수업이 보편화되는 점에 기인한다면 신남방지역의 교수 등 전문 연구자를 초청하여 수업의 품질과 현장감을 높이는 방법도 가능하다. 나아가 사이버 강의 과정 또는 학위 과정을 창설하여 과정 수료 시 직업 선택권을 넓힐 수 있는 자격증 부여 등 디지털 환경을 이용한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 (3) 디지털로 문화 교류 ODA 업그레이드

문화적 가치는 아세안 사회문화 공동체(ASCC)의 가장 중요한 분야 중 하나이며 ICT, 정보와 미디어 분야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예: ASEAN ICT Master Plan, the Strategic Plan for Information and Media). 현재 한·중·일 3국뿐만 아니라 프랑스, 독일과 같은 유럽 국가들도 아세안에서 문화적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문화 부문 ODA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추세이다.

---

208) ERIA, *The Comprehensive Asian Development Plan 2.0 (CADP 2.0): Infrastructure for Connectivity and Innovation*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ASEAN and East Asia, 2015), <<https://www.eria.org/publications/the-comprehensive-asian-development-plan-20-cadp-20-infrastructure-for-connectivity-and-innovation/>> (Accessed October 1, 2021).

209) 전제성·박사명·김현경, “한국 대학의 동남아시아 관련 교육과정: 현황과 대안.”

그러나 현재까지 한국-아세안 문화 부문 협력은 아세안 개별 국가 수준에 머물렀으며 아세안의 ASCC 비전에 대한 고려가 미비했다는 단점이 있었다. 따라서 한국은 주요 대화 협력국으로서 아세안의 문화적 유산 보존과 복원을 위해 문화 ODA를 제공하고 K-Pop과 같은 대중문화의 강점을 살려 아세안과의 문화 프로젝트 협력을 다각화할 수 있다.

사회문화 분야에서의 협력임에도 그간 현지의 여건이나 수요가 충분하게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근미래 ODA를 활용하는 사회문화 협력 전략은 기존의 사회문화 ODA 사업과 차별화하여 신남방지역에 특화된 ODA 모델을 새로 정립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신남방정책의 사회문화 부문에서 개선이 필요한 세부 분야로 꼽히는 교육, 문화, 보건과 결합하여 신남방 ODA 트랙(track)을 별도 수립 및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교육 협력으로 한국어 교육, 전문인력 양성, 인적교류 확대, 문화 협력으로 문화 홍보 인프라 확충, 문화교류 행사 추진 등. 보건/위생 협력으로 기초 보건서비스 향상 지원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 콘텐츠 개발 및 여행 프로그램 구성과 홍보, 여행 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 개선 등이 가능할 것이다. 이는 신남방지역의 값진 문화 유산에 대한 이해도 제고에 기초하는 작업으로 문화와 관광을 연결하여 교류 활성화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아세안의 문화유산 ODA 사업은 정부가 신남방정책을 추진하면서 온·오프라인 양 방향으로 모두 확대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박물관 보존 및 건립 사업과 디지털 문화유산 구축을 위한 ODA 사업이다.

문화재청은 기존 동남아시아에 국한되었던 문화유산 ODA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를 관광과 연결하는 개발협력 사업의 확장성도

검토할 만하다. 신남방지역 문화유산 관련 문화관광 콘텐츠 DB 구축 및 다채로운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관광 교류사업에서 신남방지역의 문화관광 콘텐츠 구축 및 문화유산 관광인프라 개선을 위한 구체성·다양성·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sup>210)</sup>

문화예술 분야는 세계은행이나 ADB(Asian Development Bank, 아시아개발은행)가 UNESCO(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와 같은 국제기구와 함께 문화와 관광을 연계하여 개발협력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 UNESCO는 국제사회 문화유산 보호 및 이해 증진, 문화 다양성 및 창의성 축진의 일환으로 아세안 국가들을 대상으로 국제문화 다양성 기금 등을 통한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지역 또는 국별 단위에서 문화예술 협력을 가장 활발하게 수행해 온 것은 유럽이다. EU의 경우 회원국 간 문화 통합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한 각 국의 문화기관 간의 네트워크인 EU 국가문화원(EU National Institute for Culture: EUNIC)을 통해 아세안을 대상으로 문화협력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프랑스문화원을 중심으로 프랑스어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교류사업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문화 전문가 교류 및 인력 파견 등 ODA를 통한 문화 외교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독일도 독일문화원을 중심으로 프랑스와 유사한 사업을 벌이는 한편 문화유산 복원 및 보존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ODA를 지원하고 있다.

아세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문화 ODA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이다. 일본은 외무성 산하 문화교류 전담기관인 국제교류기금(Japan Foundation)을 통해 언어 및 문화 관련 교류 사업을 적극적

---

210) 류정아, 『신남방 지역(아세안 10개국, 인도) 문화교류 활성화 방안』, p. 215.

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국제협력단(JICA)의 일반 문화무상자금 협력(Cultural Grant Assistance) 등을 통해 아세안 국가에서 일본어 교육 지원 ODA를 실시하고 있다.<sup>211)</sup> 중국도 아세안 각국에 중국문화센터, 공자학원, 중국·아세안 센터 설립 등을 통해 중국어 교육, 화인·화교 네트워크 관리, 문화 및 인적 교류 등의 전진기지로 활용하고 있다<sup>212)</sup>.

아세안에서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 문화관광산업 육성과 관련된 인프라, 제도 개발 등에 대한 협력 수요는 꾸준히 확대될 전망이다. 하지만 상술한 바와 같이 아세안에 대한 문화 ODA는 이미 다자기구 및 주요국이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을 수행하고 있어서 한국의 우위 분야를 찾아서 차별화하기 쉽지 않은 영역이다. 따라서 한국만의 강점을 활용한 맞춤형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 분야에서 한국의 강점은 디지털 역량일 것이다. 아세안 사무국의 사회문화공동체(ASCC)는 문화 부문에서 디지털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ASCC는 일본과 협력한 아세안 문화유산 디지털 아카이브(ACHDA), 한국과 협력한 아세안 유네스코 유산 가상현실 구현(부산 소재 아시아문화원) 등의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이러한 성과는 문화유산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지역 단위의 협력인 동시에 아세안이 글로벌 공동체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문화적 역할 촉진이라는 목표와 연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sup>213)</sup> 2019년 개최된 아세안-한국 특별 문화부 장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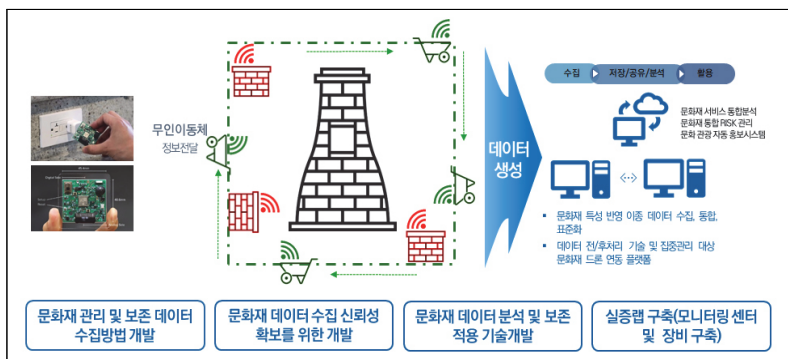
211) 일본 외교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Cultural Grant Assistance," April 13, 2018, <<https://www.mofa.go.jp/policy/oda/category/cultural/index.html>> (Accessed October 3, 2021).

212) 하지만 중국이 아세안에 설립한 공자학원은 최근 그 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공자학원을 통해 중국 유학에 응모하는 장학생 수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13) ASEAN, "Culture & Arts," <<https://asean.org/our-communities/asean-socio-cultural-community/culture-and-information/>> (Accessed October 3, 2021).

회의(AMCA+RoK)에서 아세안 장관들은 창의적 문화 활동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인정했으며 향후 아세안의 창의적인 문화 활동을 위한 한국과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천명하였다. 특히 문화유산 보존의 중요성은 양측이 협력할 수 있는 주요 쟁점으로 언급되었으며 아세안 측 장관들은 한국의 ICT 기술을 사용한 문화 유산 보존과 홍보의 가능성을 논한 바 있다.<sup>214)</sup>

〈그림 III-7〉 디지털 연계 문화유산 관리 모델 개념도



출처: 최윤정, “인도의 디지털·그린 통상 환경과 양국 기업 협력 방안,” 『인도의 경제·통상 환경 변화와 한-인도 기업간 협력 방안』 (KOTRA 주최 2021 한-인도 통상투자협력포럼 발표 자료, 2021.9.28).

디지털 역량을 활용한 문화 ODA의 예를 들어보겠다. 인도 타지마할의 경우 백색 대리석 변형 등 손상 위험이 제기되어 진동 센서, 열 센서, 온도 센서 등 표준센서를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 센서를 설치하여 관광 및 문화재에 첨단기술을 도입,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문화재 관련 데이터 수집 및

214) “(Joint Media Statement) The 2019 Special Meeting of The ASEAN-Republic of Korea Ministers Responsible for Culture and Arts,” (2019 Special AMCA Plus ROK-Meeting, October 24, 2019), <<https://asean.org/wp-content/uploads/2021/01/Joint-Media-Statement-of-the-2019-Special-Meeting-of-the-ASEAN-Republic-of-Korea-Ministers-Responsible-for-Culture-and-Arts-2019-Special-AMCA-Plus-ROK-Meeting.pdf>> (Accessed October 3, 2021).

가공 다양한 문화재의 특성을 포함한 내부, 외부의 데이터를 수집, 문화재 재난안전 데이터 수집 등을 한국과 신남방지역 국가들이 공동 기술협력 방식으로 수행한다면 다른 국가와 확실한 차별성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표 Ⅲ-9〉 한국의 주요 유관기관 해외 네트워크의 지역별 분포

(단위: 개)

기관명	동남아	동북아	인도·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러시아·유라시아	유럽	북미	중남미	중동·아프리카
대사관	11	2	5	4	9	26	5	18	37
문화원	4	5	1	1	2	8	5	2	4
세종학당	33	46	6	3	27	20	13	13	13
한국국제교류재단	1	2	-	-	1	1	3	-	-
한국콘텐츠진흥원	1	3	-	-	-	1	1	1	1
KOTRA	13	25	9	3	10	23	11	9	23
KOICA	8	-	4	1	4	-	1	10	22
한국관광공사	2	11	-	-	2	2	2	-	-
한국무역협회	2	4	1	-	-	1	2	-	1
한국수출입은행	7	4	3	-	2	2	3	1	5
한국무역보험공사	3	4	1	-	1	1	3	2	3

출처: 문진영 외, 『해외 주요 지역별 우리나라의 소프트파워 활용현황과 인식도 분석』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0), p. 14.

단, 사회문화 교류를 위해 신남방지역에 추가적인 거점을 구축하는 요구는 세계 다른 지역 및 국가와의 형평성에 비추어 설득력을 갖기 어려울 수 있다. 신남방정책 발표 이후 문화원 및 세종학당 등을 중심으로 신남방지역에 대한 현지 지사를 설립하여 해외거점 네트워크는 이미 다수 확보가 된 상황이다. 또한 ODA 지원 규모도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후속 조치로 아세안에 대한 ODA를 2020년까지 5억 달러로 증액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문화 ODA의 경우 추가적으로 물리적인



거점을 설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실천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신남방지역에 한글 보급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창의적인 지원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디지털 네이티브인 MZ세대를 대상으로 디지털 학습 환경에서 한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및 디바이스 개발 및 배포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4) 한류와 디지털 접점의 확대

근미래에도 MZ세대가 전면부 부상하는 추세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와 같은 급속한 한류 콘텐츠의 확산은 상당 부분 유튜브가 선도하는 모바일 영상 소비 확대의 혜택을 입었다. 전통적인 공급 채널이 특정 공급자가 제작한 작품의 배포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새로운 공급 채널은 콘텐츠 생산자들이 채널을 염두에 두고 기획부터 생산과 배포에 이르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아세안의 대표적인 한류 예능 프로그램인 ‘런닝맨’은 유튜브를 통해 재가공한 별도의 콘텐츠를 유통하여 인기를 더욱 높였다. ‘BTS’ 역시 레코드사를 통한 기존의 유통 방식을 벗어나 처음부터 유튜브를 주력 채널로 선택하여 글로벌 팬덤을 형성하는 데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었다. 유튜브는 이처럼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유연성과 개방성을 갖는 동시에 콘텐츠 이용자 정보를 활용한 마케팅까지 가능한 강력한 플랫폼이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 시청률 1위에 오른 한국의 ‘오징어게임’도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이 갖는 이점을 누린 것이 사실이다.

다만 유튜브,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플랫폼에만 의존하는 경우 콘텐츠 생산 이후 발생하는 유통 수익의 상당 부분을 포기해야 할 뿐만 아니라 넷플릭스의 경우 콘텐츠 생산자와 계약을 통해 직접 제작에 참여하면서 OEM 형태의 환경이 될 우려도 제기된다. 한류 콘텐츠

수요가 높은 아세안 및 인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현지 OTT (Over The Top)와 한국 OTT 간의 협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sup>215)</sup> 아세안에서는 아이플릭스(Iflix), 비키(Viki), 뷰(Viu) 등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고 인도에서는 핫스타(Hotstar), 지파이브(Zee5) 등의 현지 업체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전술하였듯이 아세안과 인도 MZ세대만 해도 전 세계 MZ세대의 1/3 규모이다.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향후에도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다. 한국의 OTT와 신남방 국가의 현지 OTT 간의 협업을 통해 신남방 양방향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고 수익 구조를 개선하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양방향 문화교류를 추구한다는 차원에서 한류와 디지털의 결합으로 확장되는 사회문화 만남의 장에서는 한류(K-wave)뿐만 아니라, 아세안-wave 및 인도-wave를 목표로 영화나 앨범 공동제작 등 양방향 문화교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지난 3월 12일 개최된 제6차 아세안+3 정보기술 관련 부서 장관회의 (AMRI+3)는 “아세안 시민 전체의 디지털 접근성(ASEAN: A Digital Community with Accessibility for All)”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서 아세안 회원국들은 중국, 일본, 한국과 다큐멘터리 공동 제작, 미디어 인재 육성, 방송 기술 개발, 상대국 인식 개선 등 많은 분야에서 이룩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한 바 있다.<sup>216)</sup>

디지털 매체를 통한 한류 확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한국어

215) 최진우 외, 『아세안 지역 한류콘텐츠 활성화 방안』.

216) 태국 국정홍보처(Thai Government Public Relations Department), “Conference of ASEAN Plus Three Ministers Responsible for Information,” March 12, 2021, <[https://thailand.prd.go.th/mobile\\_detail.php?cid=5&nid=10902](https://thailand.prd.go.th/mobile_detail.php?cid=5&nid=10902)> (Accessed October 3, 2021).

전달력을 높이는 문제이다. 한국의 문화콘텐츠는 배우의 매력적인 외모, 짜임새 있고 탄탄한 스토리, 한국 생활/문화에 대한 간접 경험, 영상미 등으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반면, 어렵고 생소한 한국어, 번역 자막/더빙 시청 불편함 등이 전 장르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1, 2위의 호감 저해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sup>217)</sup>

나아가 한류 자체의 확대만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한류의 호감도를 한국의 이미지 제고에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021년 2월 싱가포르 동남아연구소(Th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ISEAS)에서 아세안 오피니언 리더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The State of Southeast Asia: 2021 Survey Report’ 결과 아세안에서 한류가 빠르게 확산되는 데 비해 한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호감도 또는 신뢰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sup>218)</sup> 한국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OTT를 활용한 디지털 공공외교는 파급력과 효과성 측면에서 매우 유망할 것으로 판단된다. 디지털 공공외교를 신남방정책 사회문화 분야 근미래 전략에 포함하고, 수행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아세안과는 한-아세안 행동계획(Plan of Action)하에 ‘한·아세안 사회문화 정책대화(가칭)’를 명문화하고, 인도와는 매년 인도대사관과 주한 인도문화원이 주최하는 ‘사랑’ 축제를 계기로 외교+문화 2+2 ‘한-인도 사회문화 정책대화(가칭)’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217)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글로벌 한류 트렌드 2021』, pp. 14~15.

218) ISEAS, *The State of Southeast Asia: 2021 Survey Report - ISEAS* (Singapore: ISEAS-Yusof Ishak Institute, 2021) <<https://www.iseas.edu.sg/articles-commentaries/state-of-southeast-asia-survey/the-state-of-southeast-asia-2021-survey-report/>> (Accessed October 10, 2021).

〈표 III-10〉 한국과 아세안의 영향력 조사

설문 항목	국가별 응답 비중
경제적 측면에서 ASEAN에 가장 영향력을 미칠 것 같은 국가	중국(76.3%) > 미국(7.4%) > 일본(4.4%) > EU(1.3%) > 한국(0.6%) > 인도(0.1%)
국제자유무역 어젠다와 관련 가장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되는 파트너	미국(22.5%) > EU(22.2%) > 일본(15.4%) > 중국(11.4%) > 뉴질랜드(2.8%) > 호주(2.1%) > 영국(1.3%) > 한국(0.9%) > 인도(0.8%)
정치적 측면에서 ASEAN에 가장 영향력을 미칠 것 같은 국가	중국(49.1%) > 미국(20.4%) > 일본(3.2%) > EU(1.7%) > 한국(0.3%) > 인도(0.2%)
규정에 의거 리더십을 발휘하고 국제법을 지킬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은 국가	EU(32.4%) > 미국(28.6%) > 일본(10.5%) > 중국(3.6%) > 뉴질랜드(2.7%) > 호주(2.3%) > 영국(2.1%) > 인도(0.6%) > 한국(0.4%)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관계 속에서 ASEAN이 의지할 수 있는 파트너	EU(40.8%) > 일본(39.3%) > 영국(7.5%) > 인도(6.5%) > 한국(3.2%)
미국에 대한 ASEAN의 의존도가 줄어들 때 가장 의존할 수 있는 파트너	일본(36.9%) > EU(19.3%) > 중국(18.9%) > 호주(9.8%) > 인도(7.8%) > 한국(3.7%)

출처: 최진우 외, 『아세안 지역 한류콘텐츠 활성화 방안』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1), p. 298.

### (5) 디지털 보건·의료 파트너십 구축

아세안 사회문화 공동체(ASCC)는 아세안 시민의 삶의 질 개선 실현을 위한 아세안 공동체의 공약이며, 지속가능한 개발 및 인간 개발을 목표로 한다.<sup>219)</sup> ASCC는 문화예술, 교육, 보건, 사회복지 및 개발 환경, 재난 관리 등 다양한 주제를 아우르고 있으며, 이들 중 다수는 AEC 주도로 추진하는 ‘경제공동체 청사진 2025’에 제시된 연계성 강화 및 부문별 협력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25, ASCC의 청사진 및 정상회담 선언문, 산하 분야별 장관회의 및 고위급 회의 의제와 추진 계획 등을 종합할 때 보건

219) ASEAN <<https://asean.org/>>.

및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 인프라, 문화예술, 지속가능한 환경이 핵심 협력 의제로 좁혀진다.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의 실천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코로나19 이후 보건·의료, 환경, 기술 및 교육 일반의 격차 해소 및 품질 향상 문제 해결에서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상기 ODA 협력에서 다룬 기술 및 교육과 1장의 경제통상 전략에서 다룬 환경·기후변화를 제외하고 포스트 코로나(Post COVID-19) 시대 신남방 협력의 화두가 되고 있는 보건·의료 협력 전략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감염 사례는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로 신남방지역에서 코로나19 대응 능력의 강화는 가장 시급한 국가 과제이다. 한국은 2020년 11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신남방정책 플러스(New Southern Policy Plus: NSPP) 구현을 위해 보건, 교육, 인프라, 미래산업, 비전통안보 등 7대 핵심 분야에서 아세안과의 협력이 진행 중이다. 아세안과의 협력에서 재난관리가 핵심 분야로 논의되고 있으며 코로나19 극복과 이후 경제와 사회의 회복에 있어 협력 수요가 증대될 전망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신남방지역의 국별 보건 역량 격차 해소와 전반적인 역량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가 제기되었다. 전 세계 국가들의 예방, 탐지, 규범, 리스크 등을 세부 지표로 보건안보 역량을 평가하는 글로벌보건안보지수(Global Health Security Index: GHS Index)에 따르면, 신남방 국가들은 태국(6위), 말레이시아(18위)와 같은 상위권 국가, 베트남(50위), 필리핀(53위), 인도(57위)와 같은 중위권 국가, 캄보디아(89위)나 브루나이(128위)와 같은 하위권 국가 등으로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sup>220)</sup> IMF

---

220) GHS Index, "GHS Index Map," <<https://www.ghsindex.org>> (Accessed September 10, 2021).

는 2021년 7월에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백신에 대한 접근성이 2021년과 2022년 전 세계 국가별 경기 회복 여부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sup>221)</sup>

아세안은 2020년 2월 14일 아세안 의장의 성명 발표로 코로나19 위기를 선포하고 상호 인식을 공유했다. 그리고 WHO를 비롯한 국제기구 및 아세안 대내외 국가들과의 협력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코로나19 위기가 닥치기 전에는 아세안은 지역 차원의 보건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아세안 포스트 2015 보건 개발 의제(2016~2020)는 7개 목표 및 20개 우선 과제, 그리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세부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있다. 하지만 막상 코로나19에 대응함에 있어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기구 및 전략이 부족하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sup>222)</sup>

이에 아세안은 코로나19로 역내 보건 협력 강화를 위해 아세안 보건발전 고위관료(APT SOMHD) 회의, 코로나19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 아세안 선임국가 및 아세안 보건부장관회의(ASEAN Health Ministers and ASEAN Plus Three Health Ministers in Enhancing Cooperation on COVID-19) 등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2020년 4월 아세안 보건장관회의(ASEAN Health Ministers Meeting)를 필두로 특별정상회의(Special ASEAN Summit)에서 코로나19 공동 대응과 협력 방안이 채택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코로나19 아세안 대응펀드(COVID-19 ASEAN Response Fund)

---

221) IMF, "Fault Lines Widen in the Global Recovery,"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July 2021), p. 4,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Issues/2021/07/27/world-economic-outlook-update-july-2021>> (Accessed August 3, 2021).

222) Riyanti Djalante et al., "Review and Analysis of Current Responses to COVID-19 in Indonesia: Period of January to March 2020," *Progress in Disaster Science*, vol. 6 (2020), pp. 1~8,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2590061720300284>> (Accessed September 10, 2021).

설립이 논의되었다. 뒤이어 개최된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도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해 물자, 제도, 자금 등 다방면의 지원을 골자로 하는 선언문이 발표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지속으로 감염병 관련 보건 협력과 함께 만성질환 관리도 신남방지역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협력 이슈가 될 것이다. 코로나19는 2021년 현재도 낮은 백신 접종율과 함께 돌연변이 확산으로 대규모 유행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은 감염병 대응체계 등 국가 차원의 다년간 위기관계체계 운영 경험, 메르스 위기관리 및 극복 경험, 국내 원조전담기구와의 업무협조 경험 등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노하우가 쌓여 있다. 이에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선진화된 감염병 예방 및 치료 경험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대응을 위한 ICT 기술을 통한 체계적 대응 등에서 감염병 관리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신남방 국가들의 대응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이다. 아세안 국가들은 역내외 공동 대응의 기조로서 정보 공유, 의료 협력, 제도 협력을 들었다. 먼저 정보 공유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시의적절한 정보 및 모범 대응 사례를 공유하는 체제를 수립하는 것으로, 아세안은 현재 역내 협력체인 아세안 바이오디아스포라 가상 센터(ASEAN BioDiaspora Virtual Centre)를 중심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의료 협력은 의료 물자 및 인력을 지원하는 것이고, 제도 협력은 보건 위기로 인해 경제·사회적 붕괴를 막기 위해 무역 및 투자의 공급망 유지를 포함한 국제 규범 이행을 위해 협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초 보건의료 시스템이 취약한 신남방 국가들 대부분은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의 발발은 사회 문제로 비약될 만큼 심각한 위기

요인이 된다. 또한 중·저소득 국가의 경우 한정된 국가 재정을 신종 감염병 대응에 투입해야 하므로 적절한 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다. 보건의료 시스템의 재정, 거버넌스, 인력, 의료정보, 의약품, 서비스 전달 능력 강화 등은 앞선 국가의 협력이 필요한 분야다.<sup>223)</sup>

이에 일본과 미국 등 주요국은 코로나19 이전부터 개발협력 자금을 활용하여 아세안에 보건의료 지원을 수행해 왔다. 일본의 경우 전 세계 공여국 중 최대 규모인 연평균 3억 3625만 달러의 보건의료 ODA를 제공해 왔고,<sup>224)</sup> 초기 물과 위생 분야에 집중되었던 지원 분야를 ‘일·아세안 건강 이니셔티브’, ‘아세안·일본 보편적 의료 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UHC) 이니셔티브’등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미국은 HIV/AIDS 등 글로벌 유행성 질환의 퇴치 및 세계 시민 건강 증진 차원에서 보건협력을 추진하며 주로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GHSA) 등을 통해 협력을 추진해 왔다.

아세안은 덴마크를 비롯한 대화상대국과 포스트 팬데믹 회복 프레임워크(ASEAN Post-Pandemic Recovery Framework) 이행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sup>225)</sup> 일본은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관련 일-아세안 차원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고, 아세안 공중보건위기 및 신규감염병 센터 설립 및 코로나19 아세안 대응 기금에 대한 기여 등 대아세안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

223) 윤상철, “신남방지역의 보건의료 협력 현황과 협력 방안,”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남방정책의 발전방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관 세미나 발표 자료, 2020.10.14.).

224) 문진영 외,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와 한국의 분야별 협력방안,” p. 6.

225)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관련 아세안 공중보건위기 및 신규감염병 센터 설립 및 코로나19 아세안 대응 기금에 대한 기여 등 일본의 적극적인 대아세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동 센터 초기 설립 자본으로 일본은 약 5천만 달러를 기여하기로 약속했고, 호주에서도 설립에 기여하기로 약속했다. 주 아세안 대한민국 대표부, 『WEEKLY ASEAN』, 2021-20호 (2021.5.28.), <<https://overseas.mofa.go.kr/viewer/skin/doc.html?fn=20210531015636976.pdf&rs=/viewer/result/202111>> (검색일: 2021.10.3.).



특히 코로나19가 기존의 메르스, 사스 등에 대한 대응과 달랐던 점은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한 점이다. 한국은 감염병 발병 초기에 ICT 기술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정보 공유, 투명성, 정확성 및 시의성을 준수함으로써 적절한 대응 체계를 수립할 수 있었다.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Support System: EISS)을 통해 필요 자료 통합에 소요되는 시간을 평균 2일에서 6시간으로 단축시킴으로써 확진자 동선 추적, 밀접 접촉자 파악 등 역학조사 결과를 신속하게 도출한 것이 주효했다. 이와 함께 스마트 시티 데이터 허브 기술을 활용하여 카드결제, 위치추적, CCTV 등으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통합하여 확진자의 동선과 전파 경로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다. 이처럼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이고 신속한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방역 대책을 세움으로써 실효성을 높일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 같은 K-방역 모델은 비록 개인정보 보호 측면의 논란이 있었지만 한국의 디지털 역량의 강점과 시급한 문제 해결에서의 활용성을 입증해주었다.

인도는 2021년 7월 4일에 개발도상국에 인도의 코로나 관리 디지털 시스템을 공유하는 CoWIN Global Conclave를 출범시키는 등 코로나 백신 공급과 디지털화에서 선두주자가 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CoWIN 시스템의 오류 등 미비한 점이 보고되고 있어 글로벌 플랫폼으로서의 활용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1회 접종자에게 접종 완료 문자를 보내거나 인증상 오류가 발생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sup>226)</sup> 따라서 한국의 정확한 디지털 백신 관리 및 접종 시스템의 노하우를 인도와 공유하는 한편 백신 접종에 어려움을 겪는 농촌이나 고립 지역에 백신 접종을 지원하는 기기 지원, 인프라

226) "Kashmir: CoWIN Sends 'Fully Vaccinated' Texts to Several Who've Taken Just One Shot," *The Wire*, September 26, 2021, <<https://thewire.in/tech/covid-cowin-fully-vaccinated-vaccine>> (Accessed October 3, 2021).

건설, 디지털 문해율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방식의 개발협력 사업의 진행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인도는 뉴델리에 소재한 인도 국립질병관리센터(National Centre for Disease Control: NCDC)와 한국의 질병관리본부(Korea Centre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현 질병관리청) 간에 정보와 모범 사례 교류, 팬데믹 대응을 위한 인력 연수 등의 협력을 희망해 왔다. 특히 NCDC가 운영하고 있는 지능형전염병감독(Epidemiological Intelligence Surveillance: EIS) 프로그램을 위한 경험 공유와 기술적 솔루션 개발 등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sup>227)</sup>

코로나19 대응에서 보듯이 팬데믹의 경우 정보 수집과 분석, 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디지털 역량이 매우 큰 역할을 담당한다. 신남방 국가는 발전 단계 만큼이라 인프라 수준에도 큰 편차를 보임에 따라 지역의 수준과 수요에 부합하는 ICT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 신남방 국가 중 ICT 발전지수(ICT Development Index: IDI)를 보면, 싱가포르를 세계 최고의 수준이고 그 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도 IDI가 중간 이상으로 ICT에 기반한 기술 도입에 필요한 인적, 물적 인프라로 인한 장애 요인이 비교적 적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인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의 IDI는 개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표 III-6〉 참고).

그런데 모바일 기기 보급 정도를 보면 라오스를 제외하면 인구 100명당 80명 이상이 모바일 기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228)</sup> 이를 경제활동 인구에 국한해 본다면 1인당 1개 정도의 모바일 기기를 갖고 있는 것이므로 모바일 기기를 적극 활용하면

---

227) 인도대사관, "Suggestions for Strengthening New Southern Policy by Expanding the India Connection," (미공개 내부자료, 2020).

228) ITU, "ICT Development Index 2017," <<https://www.itu.int/net4/ITU-D/idi/2017/index.html>> (Accessed October 28, 2021).

ICT에 기반한 감염병 대응 기술을 탑재하여 광범위한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대응을 위해 가장 근본적인 보건의료 역량을 구축하는 파트너십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미 WHO는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보고서에서 ICT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진단기술과 진단법을 도입, 활용하면서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 상의 의사결정이 간소화 및 정확해진다고 보고하였다.<sup>229)</sup> 특히 암, 빈혈, 비만, 간염과 같은 만성질환의 경우 ICT 기술로 인한 효율성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상술한 바와 같이 신남방 국가들은 디지털 인프라 측면에서의 순위는 낮을 지라도 모바일을 통한 연결성은 매우 높은 편이다. 따라서 e-Health, m-Health 등으로 불리는 보건분야의 ICT 활용은 보건의료 인력, 개인과 지역사회에 정보 공유 및 치료 순응도를 향상시키고 의료 정보 관리가 용이해져 질환 관리 역량이 증대될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의료 소모품 관리를 통해 보건재정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해진다. 한국의 경우 암등록 사업, 고혈압 및 당뇨 관리사업 등을 통해 이미 질환관리 체제의 효과성이 입증된 바, 질병 관리의 이중적 부담을 겪고 있는 신남방 국가들의 보건관리 개선에 있어 한국의 ICT 기술 기반 관리는 유망한 협력 모델이 될 것이다.

---

229) WHO, *Digital Health for the End TB Strategy: An Agenda for Action* (Geneva: WHO, 2015), pp. 2~4, <[https://www.who.int/tb/areas-of-work/digital-health/Digital\\_health\\_EndTBstrategy.pdf?ua=1](https://www.who.int/tb/areas-of-work/digital-health/Digital_health_EndTBstrategy.pdf?ua=1)> (Accessed September 10, 2021).

### 3. 외교안보

#### 가. 추진 배경 및 필요성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은 아세안 지역과 인도에 대한 종합적인 한국의 대외전략으로는 이전 정부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 지역에 대한 한국의 대외정책이 특정한 명칭을 달고 추진된 적은 지금까지 없었다. 단순한 명칭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 외교정책에 명칭이 붙게 되면 그만큼 이 정책 추진을 위한 정치적 동력과 의지가 모이게 되는 효과가 있다. 두 번째로 신남방정책만큼 한 정부 내에서 꾸준히 추진된 대아세안 혹은 대인도 정책은 없었다. 이전 정부에서 비록 특정한 명칭은 없었지만 대아세안 정책이 추진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잠깐의 관심을 받은 이후 보다 전통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다른 사안에 밀려 잊혀졌다. 그에 반해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은 임기 내 꾸준히 그리고 일정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받으며 추진되어 왔다.

신남방정책의 표방한 3P, 즉 사람(people), 번영(prosperity), 그리고 평화(peace)의 세 축 중에서 특히 경제와 사회문화 협력 부문에서는 적어도 코로나19 이전까지 상당한 협력의 활성화를 이루었다. 세 부문 중에서 경제와 사회문화 협력은 구체적인 성과를 냈다. 한편 2019년 말 제3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점으로 임기 후반부 신남방정책은 한 단계 도약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었고 신남방정책 2.0을 준비하고 있었다.<sup>230)</sup> 2020년 초 갑작스럽게 닥친 코로나19는 업그레이드된 신남방정책 추진에 큰 어려

---

230) 청와대, “아세안 확고한 지지로 2021 신남방정책 2.0 본격 추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9.11.28.,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66965>> (검색일: 2021.5.7.).

움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방역협력, 보건협력 분야에서 나름 성공적으로 신남방정책을 이어갔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0년 말에는 기존 신남방정책을 정리한 신남방정책 플러스를 내놓았다.<sup>231)</sup>

이제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신남방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향후 몇 년간 근미래에 신남방정책 혹은 다른 이름의 대아세안 및 인도에 대한 정책을 고민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신남방정책이 처음 구상되었던 문재인 정부 초기와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인 환경은 많이 달라졌다. 강대국 전략 경쟁도 더 강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국가들의 리더십도 교체된 바가 있다. 무엇보다 2020년부터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전염병은 개개인의 일상생활, 방역 및 보건,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 관계 및 지역 질서를 만들어 가는 국제관계의 근본적인 부분에까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정책에 대한 평가와 변화된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만 제대로 된 근미래 전략이 도출될 수 있다.

### (1) 신남방정책에 대한 전반적 평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다시 5개월여 지난 시점인 2017년 11월 신남방정책이 공식적으로 천명되었다. 그 이전에 이미 정부 출범과 함께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중점 추진 과제에는 아세안과 인도 지역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드러나 있었다. 2017년 여름을 지나면서 동북아플러스공동체의 한 부분으로 신남방정책의 추진이 기정사실로 굳어졌다.

이후 지난 4년간 신남방정책은 전반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

---

231) “신남방정책, 포스트코로나 반영 3년만에 ‘업그레이드,’” 『연합뉴스』, 2020.11.12., <<https://www.yna.co.kr/view/AKR20201112158100001>> (검색일: 2021. 5. 7.).

지난 4년간 신남방정책의 꾸준한 추진을 통해 한국이 특히 아세안 방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책을 펴고 관계 심화를 추진할 의지가 있음을 잘 보였다. 신남방정책이 대외적으로 천명될 당시만 해도 동남아 국가들의 반응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다. 과거 한국 정부에서 아세안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적은 많았지만 이런 관심이 꾸준히 정권 말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세안 국가들에 한국의 대아세안 정책 일관성에 대한 확신도 심어주었다.

무엇보다 한국 정부로부터 꾸준한 대동남아 메시지의 발신과 함께 정상 차원에서 직접 동남아에 관심을 보인 것이 동남아 국가들로부터 한국의 정책 추진 일관성에 대한 의심을 거두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국가 정상 중 처음으로 임기 중 신남방 11개국(아세안 10개국과 인도)을 모두 방문하겠다는 것을 공약해 동남아 국가들에 꾸준한 신남방정책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sup>232)</sup>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5년의 절반인 2년 반 만에 신남방 11개 국가를 모두 순방했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가 간 정상회의가 순연되거나 화상으로 대부분 진행된 점을 보면 2019년까지 신남방 국가 순방을 조기에 마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

232) 신남방정책에 대한 동남아의 평가에 대해서는 Seksan Anantasirikiat, "South Korea's New Southern Policy in Making and the Way Forward," *The Geopolitics*, July 12, 2018, <<https://thegeopolitics.com/south-koreas-new-southern-policy-in-making-and-the-way-forward/>> (Accessed May 7, 2021); Nurliana Kamaruddin and Aaron Denison Deivasagayam, "Great power rivalries push South Korea and ASEAN closer," *East Asia Forum*, October 26, 2019, <<https://www.eastasiaforum.org/2019/10/26/great-power-rivalries-push-south-korea-and-asean-closer/>> (Accessed May 7, 2021); "Korea's New Southern Policy 2.0," *Khmer Times*, November 26, 2019, <<https://www.khmertimeskh.com/50664000/koreas-new-southern-policy-2-0/>> (Accessed May 7, 2021); Lucio Blanco Pitlo III, "South Korea as a Middle Power For ASEAN," *Eurasia Review*, December 8, 2019, <<https://www.eurasiareview.com/08122019-south-korea-as-a-middle-power-for-asean-analysis/>> (Accessed May 7, 2021) 등을 볼 것.

〈표 III-11〉 2017년 이후 신남방 국가 상호 정상 방문 일지

국가	문재인 대통령 방문		신남방 국가 정상 방한	
	일자	비고	일자	비고
인도네시아	2017.11.	국민방문	2018.9.	국민방문
필리핀	2017.11.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2019.11.	특별정상회의
베트남	2017.11.	APEC 정상회의	2018.6.	공식방문
인도	2018.3.	국민방문	2019.11.	특별정상회의
싱가포르	2018.7.	국민방문	2019.11.	특별정상회의
브루나이	2018.7.	국민방문	2019.2.	국민방문
말레이시아	2018.11.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2019.11.	특별정상회의
캄보디아	2019.3.	국민방문	2019.11.	특별정상회의
태국	2019.3.	국민방문	2019.11.	특별정상회의
미얀마	2019.3.	국민방문	2019.11.	특별정상회의
라오스	2019.9.	공식방문	2020.2.	비공식방문

출처: 청와대 <<http://www.president.go.kr>> 및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http://nsp.go.kr>>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한편 국내적으로도 신남방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그에 따른 성과가 있었다. 신남방정책은 정부 각 부처를 아우르고 동남아 10개국과 인도를 포괄해야 하는 만큼 정책의 조율이 중요했다. 정부는 복잡한 신남방정책 추진을 조율하기 위해 대통령정책기획위원회 소속으로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신남방정책과 병렬적으로 추진된 신북방정책의 경우 신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더 일찍 출범했고 정책 추진의 틀을 갖추어 신남방정책이 뒤늦은 것 아닌가라는 평가가 있었으나 추진 4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신남방정책이 신북방정책보다 한발 앞섰다고 평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신남방정책 추진의 일선에 있는 외교부의 제도적 변화도 컸다. 외교부에서 과거 동남아 문제는 아태국 안에 동남아과와 아세안협력과라는 두 개 단위에 의해서 조정이 되었는데, 신남방정책 출범 이후 아세안 문제만을 별도로 전담하는 아세안국이 출범

했다. 아세안국은 해양부동남아를 담당하는 동남아1과, 대륙부동남아를 담당하는 동남아2과, 그리고 다자협력을 담당하는 아세안협력과의 세 단위 체제를 갖추어 신남방정책의 추진을 전면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신남방정책 추진의 전초기지라 할 수 있는 한국의 대아세안 대표부도 강화되었다. 아세안 대표부 대사의 지위가 크게 격상되었으며, 대표부의 인적 구성도 강화되어 신남방정책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제도적 변화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향후에도 지속되기 때문에 장기적 정책 추진의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

## (2) 외교안보 협력의 한계






지난 4년간 신남방정책의 꾸준한 추진을 통해 한국이 특히 아세안 방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책을 펴고 관계 심화를 추진할 의지가 있음을 잘 보였다. 이를 통해 한국의 대아세안 정책 일관성에 대한 확신도 심어주었으며, 국내적으로도 아세안의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어 정책 추진의 탄력도 받는 성과를 냈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존재하는 반면, 반면 외교안보 분야의 협력은 다른 분야의 협력에 비해서 여전히 미흡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상대적으로 잘 추진되고 성과도 냈던 경제, 사회문화 협력에 비해 외교안보 협력은 신남방정책 이전에도 그리고 이후에도 한-아세안 협력에서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지난 정부들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신남방정책에서도 외교안보 협력 추진의 기반이 취약했고, 그로 인해 어떤 종류의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상상력이 부족했던 문제도 있었다. 이를 입증하는 것 중 하나는 신남방정책에서 평화협력(정치안보) 분야의 어젠다 세팅이다.



신남방정책의 외교안보 협력은 모두 5개항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에서 3개 항은 외교안보 협력이라 부르기 어려운 항목들로 채워져 있다. 정상 및 고위급 교류 활성화는 외교안보 협력이라기보다는 신남방정책 전체를 위한 기반의 역할을 한다. 또한 지역 위기 대응력 강화라는 협력 분야 역시 아세안에서는 사회문화 협력으로 분류하는 분야다. 협력 어젠다의 절대 숫자에서 다른 항목에 비해 뒤처지고 있다. 나아가 신남방정책 플러스에서는 비전통안보협력 하나의 항목으로 축소된 문제도 있다.<sup>233)</sup>

<그림 III-8> 신남방정책의 평화부문 협력 어젠다

				
<b>국가 수반, 고위급 교류 증진</b>	<b>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협력 확대</b>	<b>국방, 군수산업 분야 협력 확대</b>	<b>테러, 사이버, 해양 안보 협력</b>	<b>지역 위기 대응력 강화</b>
특별정상회의, 한메공정상회의(19)	아세안 주관 회의, 개별 국가 네트워크 통한 북한 개방 촉진	고위급 교류, 공공개발을 통한 국방, 군수 협력 강화	아세안사이버안보센터 건설 참여 항행 안전을 위한 능력 배양	기후 관련 기술 공동 개발, 기술 공유 홍수 예방 체계 협력,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출처: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정책소개집,” ([http://www.nsp.go.kr/kor/post/pdsview.do?post\\_id=176&board\\_id=12&page=2](http://www.nsp.go.kr/kor/post/pdsview.do?post_id=176&board_id=12&page=2)) (검색일: 2021.9.3.)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특히 아세안 방면에 대한 외교안보협력이 지지부진한 데는 앞서 언급한 기반의 부재라는 문제 외에도 보다 구조적이고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 먼저 협력의 성격, 협력에 따른 성과 차원에서 경제협력이나 사회문화 협력에 비해서 협력의 성과가 추상적이라는 점이 외교안보 협력 추진의 한계로 작용한다. 사회문화나 경제 분야는 비정부 행위자들이 실제로 이익에 따라 협력을 추진하는 세력으로 정부

233) 신남방정책은 3P(people, prosperity, peace) 아래 부문당 5~6개 정도의 협력 어젠다를 가지고 있었고, 이 중 외교안보 부분은 평화 항목 아래 5개가 있었다. 반면 신남방정책 플러스는 7대 협력 분야를 제시하는데 사회문화 부문 3개, 경제 부문 3개, 그리고 외교안보 부문에서는 1개 항목이 포함된다.

의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다. 정부 간 논의를 통해 교류와 협력의 문을 열고 통로를 마련하면 민간부문이 이를 활용해 실제로 교류와 협력의 내용을 채운다. 기업들은 아세안 시장에서 거둘 수 있는 이익을 보고 무역을 하고 투자한다. 사회단체들은 아세안 지역과 사회문화, 인적 교류를 위해 정부가 만들어 놓은 채널을 이용한다.

반면 정치안보 협력에서는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할 비정부 행위자들이 부족하다. 정치안보 협력의 경우 협력의 처음부터 끝까지 정부의 일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문을 열어 놓는다 하더라도 다른 일로 인해 바쁜 경우 협력을 등한시하거나 뒤로 밀어 놓기 쉽다.

더 근본적인 문제도 있다. 정치안보 협력의 특성상 한국이나 협력의 파트너인 아세안, 인도 모두 정치안보 협력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이 정치안보협력 추진을 어렵게 한다. 특히 이는 한국이나 파트너 국가들이 모두 어쩔 수 없이 더 중시해야 하는 강대국 관계로 인해 더욱 그 문제가 가중된다. 한국이나 아세안 모두 정치안보 협력에서 1차적 상대(first tier) 국가들은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강대국이다. 그리고 이 강대국 방면에 정치안보협력의 많은 자원이 투자되기 마련이다. 한국 입장에서 아세안, 아세안 입장에서 한국은 2차적 상대(second tier) 국가들로 보다 중요한 정치안보협력 상대에 투입하고 남은 제한적인 자원을 2차적 상대에 투입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sup>234)</sup>

뿐만 아니라 특히 안보협력의 경우 협력의 파트너인 두 국가가 동일한 안보 문제, 동일한 위협을 공유하고 있을 때 안보협력의 필요성이 가장 강하며 협력이 진척되기 쉽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세안과 한국은 동일한 안보 위협을 공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시

---

234) 이재현, “문재인 정부의 미래지향적 아세안 외교 정책 제안,”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2017-17 (2017), pp. 7~8.

말해 공동으로 상대해야 하는 안보 차원의 공통의 적이 부재한 셈이다. 따라서 특정하고 명확한 대상을 놓고 한국과 아세안이 안보 협력을 하는 식의 협력이 일어나기 어려우며 이런 공통의 적이 부재한 상황이 협력에 일정한 구조적 한계로 작용한다.

물론 이런 한계는 대아세안 정치안보 협력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한국 대외정책의 지나친 한반도 및 주변 4강 중시로 인해 아세안은 물론, 인도, 호주 등 지역 내 중견국들과의 협력도 한국 입장에서 2차적 상대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한국 대외정책 및 지역 정책이 보여주는 대표적인 한계는 중견국인 한국이 지역 내 다른 중요한 안보 이슈, 인도-태평양 등 지역 내 변화하는 전략적 환경을 업데이트하고 그에 맞는 역할을 모색하는 데에 있어서 뒤처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다. 그 결과로 경제력, 외교력, 군사력뿐만 아니라 상당한 소프트파워를 자랑하는 한국이 지나치게 좁은 대외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sup>235)</sup>

### (3) 신남방정책의 전략적 환경 변화

신남방정책의 근미래 전략을 설정할 때 지금까지 신남방정책의 외교안보 분야에서 성과와 한계를 검토하는 것 못지않게 향후 한국의 신남방정책이 펼쳐질 전략적 환경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좋은 싫든 향후 한국의 신남방정책은 이 전략적 환경 속에서 펼쳐져야만 하고 한국의 협력 대상인 아세안 국가나 인도 역시 이런 전략적 환경에 주의하면서 한국과의 협력관계를 설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근미래 전략 환경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기서는 미중 전략 경쟁을 뜻하는 강대국 경쟁의 심화와 비전통안보 문제의 중요성을

235) Andrew Yeo, "South Korea and the 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 CSIS, July 20, 2020, <<https://www.csis.org/analysis/south-korea-and-free-and-open-indo-pacific-strategy>> (Accessed July 28, 2021).

꿈을 수 있다.

미중 사이 전략 경쟁은 최근의 일만은 아니다. 실질적으로 미중 전략 경쟁은 적어도 2000년대 말부터 시작되었다.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약화된 미국이라는 평가가 있는 후부터 중국은 지역에서 자기주장을 강화해 왔다.<sup>236)</sup> 대표적으로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활동이 활발해진 것이 그 예이다. 이에 대해 미국은 피벗(pivot) 정책 혹은 재균형 전략으로 중국의 자기주장 강화에 맞서 왔다. 이렇게 보면 미중 간 전략 경쟁은 이제 10여 년이 넘어가는 시점이다. 오바마 뒤를 이은 트럼프 행정부는 미중 사이 경쟁을 대결로 변모시켰다.

현재도 강대국 경쟁, 미중 전략경쟁은 다방면에서 신남방정책에 포함된 지역 국가들 간 실질 협력에 제약을 가한다. 미중 전략 경쟁이 가져오는 전략적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으로 인해 지역 국가들은 개별적으로, 집합적으로 큰 전략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국가들 간 양자협력, 그리고 무엇보다 경쟁하는 강대국을 포함한 아세안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 아세안+3,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 다자협력이 무력화되거나 강대국 경쟁의 도구로 전략하고 있다.<sup>237)</sup>

미중 간 전략경쟁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시진핑의 대외전략이나 대미전략에서도 전략 경쟁 약화의 단서는 찾기 어렵다.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근미래의 기간 범위는 바이든 행정부의 임기와 거의 일치한다. 따라서 신남방정책의 근

---

236) Brantly Womack, "International Crises and China's Rise: Comparing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and the 2017 Global Political Crisis," *The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vol. 10, no. 4 (2017), p. 384.

237) 이재현, "미-중 전략 경쟁 속 아세안 잠재력 극대화: 내적 단결과 지역 중소국가 연대,"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2020-15 (2020.5.6.), pp. 11~15.

미래 전략은 더욱 심화되는 강대국 전략 경쟁을 최우선적인 고려 사항, 환경 요인으로 포함해야 한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주의, 인권 문제 등 가치의 문제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과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는 대만 등 지역의 지정학적 충돌 지점에서도 점차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 등 일부 연성협력(soft cooperation) 분야를 제외한 경제, 정치 등 분야에서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성협력에서 보다 협력적인 양 강대국의 태도가 기술, 경제, 군사, 전략 부분에서 미중 사이 갈등을 완화시킬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그 반대가 훨씬 가능성이 높다. 향후 3~4년간 상황을 내다보면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지속, 심화될 것이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 쿼드(Quad), 그리고 GVC 재편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는 동시에 중국과 탈동조화(decoupling)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대외 정책을 펼 것으로 보인다.

이런 환경 속에 지역 중소국가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대부분의 지역 중소국가들이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미국,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국가들로 명확한 입장 선택이 매우 곤란한 상황에 있다. 더욱이 강대국 전략 경쟁으로 인해 지역에서 강대국의 일방적인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장인 다자협력의 틀 역시 강대국 전략 경쟁의 수단으로 변해 아세안+3, EAS 등 다자협력이 지역 국가들 간 실질 협력이 아닌 미국과 중국이 서로를 전략적으로 압박하는 장이자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sup>238)</sup> 이런 환경에서 논리적인 귀결은 지역 중소국가들이

---

238) 이재현, “기로에 놓인 동아시아 지역협력: 아세안+3와 EAS를 중심으로,”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제52호 (2013), pp. 10~11.

자신들의 전략적 이익과 자율성 확보를 위해 지역 국가들 간의 연대를 통해 강대국으로부터 오는 압력을 이겨내는 방식의 협력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 국가들이 구체적으로 강대국 전략 경쟁 속에 구체적으로 행동에 나서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 전개에 따라 지역 국가들의 전략적 고민을 더욱 가중될 것이다. 지역 국가들의 전략적 딜레마가 깊어진다는 것은 향후 한국의 신남방정책에서 정치안보협력이 가진 딜레마도 더욱 깊어진다는 점을 의미한다. 특히 신남방정책은 기존 아세안, 인도와 양자관계를 더 심화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한국이 바라보는 강대국 전략 경쟁, 한국의 지역에 대한 보다 폭넓은 관점, 그리고 이런 지역에 대한 관점 내에서 신남방정책의 역할 등에 대해서 고민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글로벌 차원이나 지역 차원에서 그 어느 때보다 비전통안보와 인간안보에 대한 관심이 향후 몇 년 동안 높을 것이다. 아세안 국가들 중 일부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1990년대 말 이후 아세안에서도 점차 인간안보, 비전통안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왔다.<sup>239)</sup> 한-아세안 협력에서도 인간안보와 비전통안보가 빠지지 않는 항목이 된 지도 오래되었다. 한-아세안 협력을 넘어 동아시아 지역 다자안보에서도 전통안보 협력의 우회를 위해서 혹은 인간안보와 비전통안보 문제 자체의 해결을 위해서도 이 분야의 협력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모아왔다.

근미래 기간 동안 비전통안보, 인간안보 문제가 신남방정책의 중요한 추진 환경이 될 것이라는 예상은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상황

---

239) Lim Jock Hoi, "The COVID New (Ab)Normal: Pandemic Response Driving ASEAN's Human Security Agenda," Asia Society Policy Institute, September 14, 2020, <<https://asiasociety.org/policy-institute/covid-new-abnormal-pandemic-response-driving-aseans-human-security-agenda>> (Accessed May 15, 2021).

으로부터 나온다. 코로나19는 적어도 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적인 평화를 유지해 오던 동아시아 혹은 동남아 지역에 가장 큰 위기로 기록될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보건 위기, 경제위기, 그리고 이 팬데믹이 몰고 온 심각한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충격은 향후 인간 삶의 많은 부분을 바꿀 것으로 보인다.

〈표 III-12〉 아세안 지역의 코로나19 상황

(2021년 9월 9일 기준, 단위: 명)

국가	총 확진	신규 확진	사망자	백신 접종자 수	백신 접종률(%)	백만 명당 확진자 수	인구 (백만)
말레이시아	1,900,467	19,733	19,163	16,299,881	52.2	60,912	31.2
태국	1,322,519	14,176	13,511	10,475,325	15.1	19,056	69.4
필리핀	2,134,005	12,697	34,672	15,121,776	14.4	20,343	104.9
베트남	563,676	12,680	14,135	3,444,406	3.6	5,900	95.5
인도네시아	4,147,365	6,731	137,782	39,165,980	14.6	15,475	268.0
미얀마	423,104	2,702	16,173	1,796,830	3.4	7,928	53.3
캄보디아	96,935	596	1,987	9,001,123	56.2	6,055	16.0
싱가포르	69,582	349	56	4,511,788	80.4	12,399	5.6
라오스	16,576	211	16	1,842,398	25.0	2,251	7.3
브루나이	3,683	116	16	118,483	27.6	8,593	0.4

출처: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CSIS), "Southeast Asia Covid-19 Tracker," (<https://www.csis.org/programs/southeast-asia-program/projects/southeast-asia-covid-19-tracker>) (Accessed September 9, 2021) 자료를 저자 재구성.

팬데믹 이후 아세안도 본격적으로 인간안보 개념을 채용하는 등 비전통안보 문제, 인간안보 문제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더욱 증가시켜왔다. 특히 팬데믹 문제의 경우 코로나19를 어느 정도 극복하더라도 기존 동아시아 지역을 국지적으로 괴롭히던 SARS, AI 등의 보건-팬데믹 문제는 되풀이될 것이다. 나아가 많은 예측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같은 지구적 팬데믹은 꾸준히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며 혹은 코로나19 자체를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되는 변이로 인한 피해

는 꾸준히 이어질 거라는 예상도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중 전략 경쟁과 함께 사이버 안보, 해양안보 문제 등 비전통안보 문제가 중첩되고 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회색 지대(grey zone) 전략이 비전통안보에 집중되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 전략 경쟁도 해양, 사이버, 디지털 분야 등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sup>240)</sup> 비전통안보 협력도 더 이상 미중 경쟁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과거에는 비전통안보가 진영을 넘어선 실질협력의 분야였다면, 이제 비전통안보의 영역도 미중 강대국 전략 경쟁의 일부로 포함되는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체적으로 향후 전통 안보적 의미에 충실한 미국과 중국의 충돌보다는 다양한 비전통안보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의 충돌, 경쟁이 전면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팬데믹의 지속적인 영향과 함께 인간안보 문제 역시 정치안보 분야에서 전면에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전략적 환경이 신남방정책 추진에 예고하는 방향은 비전통-인간안보 협력의 강화, 특히 보건 등의 분야, 장기적으로 지역의 회복력(resilience)을 강화할 수 있는 협력, 실질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향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 나. 추진 목표 및 고려사항

신남방정책의 근미래 전략은 신남방정책의 확장과 역할의 확대를 꾀한다. 앞서 검토한 신남방정책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신남방정책은 물론 더 큰 한국의 대외전략, 지역전략의 환경을 고려할 때 신남방정책의 확대는 불가피해 보인다. 근미래 신남방정책의 발전적

---

240) "Bringing the Grey Zone into Focus," *The Interpreter*, July 22, 2021, <<https://www.lowyinstitute.org/the-interpreter/bringing-grey-zone-focus>> (Accessed August 2, 2021).



확대는 명확하게 인태 지역의 부상이라는 지역적 흐름을 염두에 두고 지역 다자협력에서 적극적 역할을 하는 한국의 위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대 발전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신남방정책의 발전적 확대를 통해 지역전략만이 아니라 이런 지역전략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전개 방향을 상정하고 있다.

이런 큰 취지에서 향후 근미래 한국의 신남방정책은 기존 아세안에 대한 강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특히 외교안보 분야에서 아래 네 가지 방향 설정을 고민해야 한다. 첫 번째로 점차 지역 국가들의 동의를 얻어 확대되고 있는 인도-태평양이라는 새로운 지역 범위 인식에 대한 한국의 대응이 필요하다. 아세안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는 만큼 이 과제는 신남방정책과 연계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인태 지역으로 넓어진 한국의 외교안보적 관점뿐만 아니라 신남방정책에 핵심에 놓고 있는 아세안 지역을 고려할 때 지역 중견국으로서 한국의 역할에 대한 위상 재정립이 요구된다. 세 번째 코로나19 상황뿐만 아니라 이미 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비전통, 인간안보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협력의 방향이 필요하다. 특히 신남방정책의 핵심 대상이 아세안 지역이 비전통, 인간안보 문제에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분야의 확대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신남방정책에 포함되었으나 협력이 지지부진했던 인도 방면에 대해서도 근미래에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 (1) 한국의 지역전략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

문제인 정부와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사이 있었던 2021년 5월 한미정상회담의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과 미국은 이미 인태 지역에 대한 전략, 한미동맹의 지역동맹 역할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sup>241)</sup> 인태 전략 혹은 인태 지역이라는 개념은 이미 지역적으로

상당한 동의를 얻은 듯하고 많은 국가들이 이 개념을 채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들을 고려할 때 한국의 대외전략, 특히 지역 전략이 더 이상 좁은 범위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를 포괄하는 범위로 확대되는 것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아세안과 인도 방면 주로 양자 협력에 중점을 두었던 신남방정책을 중심으로 한 지역 전략을 재편해 인도-태평양 관점으로 진화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기존 대아세안 및 인도 전략을 재편하여 아세안에 대한 신남방정책을 인태 전략의 핵심과 기반으로 위치시키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아세안 방면에 대해서는 아세안 중심성 강화, 연계성 강화, 아세안 인태 전략인 ‘아세안의 인도-태평양에 대한 관점(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 AOIP)’과 협력 및 포스트 코로나(Post Covid-19) 시대 경제회복에서 협력을 핵심 골자로 하는 정책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보다 중요한 과제는 단순히 신남방정책의 확대가 아니라 이전 양자적 관점에서 벗어나 한국의 지역전략을 어떻게 구조화하는가의 문제이다. 여기서 핵심은 한국의 인도-태평양에 대한 관점(Kor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 KOIP)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로 귀결된다. 기존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 동북아평화플랫폼으로 분절적 추진된 지역 정책을 하나의 틀 안에서 묶어 내야 한다. 동시에 지역에 확산되고 있는 인도-태평양에 대한 인식을 통합하고 한국의 지역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포괄하는 프레임이 필요하다.

국내적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이나 관점에 대해서 미국의 대외정책과 한국이 같이 간다는 인상을 줄 수 있고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

---

241) 김현욱, “한미정상회담분석,”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021-09 (2021.6.4.), pp. 4~5, <<https://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csrfPreventionSalt=null&pblctDtaSn=13805&menuCl=P01&clCode=P01&koreanEngSe=KOR&pclCode=&chcodeId=&searchCondition=searchAll&searchKeyword=&pageIndex=1>> (검색일: 2021.7.13.).

또 이를 넘어서 중국을 통한 북한 문제의 관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인태 전략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있다.<sup>242)</sup> 그러나 이는 철저하게 한국적 관점이며 인태 전략이나 관점은 미국의 독점적 외교정책도 아니다. 인도-태평양이라는 지역적 단위는 현재 중국, 북한 등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 지역적으로 보편적으로 쓰는 개념이며 일정한 조건만 갖추면 한국도 인태 지역 개념을 배제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이를 통해 한국의 지역적 위상을 높일 수도 있다.

## (2) 한국의 중견국 외교 강화

한국은 이명박 정부 이래 스스로 중견국임을 자임해 왔다.<sup>243)</sup> 특히 문재인 정부 이후에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 빠른 경제적 회복, 혁신적인 ICT 기술의 활용 등을 앞세워 이미 선진국권에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sup>244)</sup> 그러나 한국이 스스로 생각하는 한국에 대한 상과 한국의 빠른 경제성장, 민주화 그리고 혁신성을 통한 선도적 역할을 보면서 한국에 대해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높아진 위상에 비해 한국의 실질적 역할, 기여는 이런 인식을 따라가지 못하는 듯하다. 한국에 대해서 높아진 기대에 비해 한국은 지역의 다양한 이슈에 대한 한국의 입장과 목소리를 정리하지 못하고 지역 국가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근미래 신남방정책의 추진에서 반드시 한국에 대한 기대와 실질적 역할이 서로 불일치하는

242) 진병서, “한국, 지정학적 동맹보다 지경학적 동맹이 중요하다,” 『나라경제』, 6월호 (2021), p. 74.

243) “한-호주, 중견국 역할 수행해야,” 『중앙일보』, 2010.2.12., <<https://www.joongang.co.kr/article/4011305#home>> (검색일: 2021.7.13.); 이수훈 외, 『이명박 정부 안보 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10), pp. 74~75.

244) “韓, 코로나로 알려진 계기...美 소프트파워 1위 밀려날 수도,” 『중앙일보』, 2020.7.6.,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818215#home>> (검색일: 2021.7.13.); “조지프 나이 “한국, 코로나19 모범적 대응으로 소프트파워 발휘,” 『매일경제』, 2020.8.13.,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0/08/832801/>> (검색일: 2021.7.13.).

부분이 해소되는 방안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근미래에 미중 전략 경쟁은 지속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강대국 전략 경쟁 속에서 지역 중소국가들의 전략적 딜레마도 깊어질 것이다. 현재 지역 중소국가들은 개별적으로 각자도생의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힘에서 열세인 개별 중소국가 입장에서 이런 전략이 근본적 불안을 해결하기는 어렵다. 개별 국가들이 각자도생으로 강대국 경쟁이 가져오는 전략적 파고를 넘기보다는 중소국가의 연합을 통해 강대국 갈등 구도를 극복하고 중소국가의 이익과 자율성, 협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한국의 신남방정책은 확대된 관점과 지역 전략의 관점을 가지고 지역 중소국가들을 견인해야 한다. 확대된 신남방정책 평화협력의 주요 의제로 강대국 전략 경쟁 속 지역 중소국가의 협력을 포함해야 한다. 한국은 먼저 다자협력과 양자협력의 채널을 통해 지역 중소국가의 전략적 이익을 확인하고 공동 대응을 위한 합의를 도출하는 방향으로 적극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지역 중견국으로 그동안 약해졌던 위상을 강화하면서 강대국과 지역 중소국가 사이를 넘나드는 혹은 연결하는 중추 국가(pivotal state)의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안보협력 및 전략적 협력 부문에서 미중 지정학 경쟁에 대응하고 지역 중소국가를 견인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 지역 질서 형성 과정에 중소국가 이익을 반영하기 위한 중소국가의 노력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안보, 전략 부문에서 규칙기반질서(rule-based order)와 다자주의 관점을 견지, 한국과 유사한 전략적 딜레마를 가진 중소국가(군)를 견인하여 강대국을 규칙과 다자틀 속에서 제어하고 지역 전략적 안정성에 기여해야 한다. 나아가 중소국가들과 협력적으로 강대국이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지역질서가

아닌 중소국가의 이익을 반영한 바람직한 지역질서에 관한 구상을 도출해 강대국 경쟁에 대한 대처는 물론 한국의 지역적 리더십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경제적으로 미중 경쟁으로 훼손된 지역가치사슬(RVC) 복원 및 지역 경제질서를 재정립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신남방정책은 노력해야 한다. 미중 지경학적 경쟁으로 파편화된 RVC의 복원을 통한 지역 경제 환경 안정화 및 번영 기반 재구축하는 것은 지역 전체의 경제적 번영에 기여하는 길이다. 미중 무역 전쟁은 근본적으로 21세기 아시아 지역의 경제질서와 전략질서의 재편을 놓고 벌어진 것인바, 경제 부문에서도 지역 중소국가들과 연대를 통해 강대국 주도가 아닌 중소국가 주도의 21세기 경제질서 수립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한류 등으로 얻어진 문화적 소프트파워를 바탕으로 지역 문화, 인적 교류의 주도 및 인간안보, 민주주의, 인권 문제에서 한국의 위상 정립해야 한다. 한국의 문화적 소프트파워의 지속 강화 및 이를 통한 여타 부문으로 소프트파워 확산 및 강화하는 동시에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어떻게 지역적 리더십으로 전환할 것인가 모색해야 한다. 특히 비전통 인간안보 협력인 보건(인간안보)과 디지털(지속가능 발전)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 및 기여가 요구된다. 또한 2021년 2월 미얀마 사태에서 드러난 한국의 지역 민주주의,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신남방정책이나 지역 정책은 지역의 정치적 문제, 특히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에 대해서 다소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나아가 여기서 더 확장된 인간안보 문제 관련 협력 전반에서 한국의 리더십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한국의 소프트파워와 리더십 행사는 지금까지 지역국가들이 익숙했던 강대국의 소프트파워, 리더십과는 차별성을 가져야 한다.

한국의 소프트파워는 타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강대국 방식이 아니라 이해와 교류를 촉진하는(facilitating soft power) 방식이 되어야 한다.

### (3) 비전통안보 및 인간안보 협력 확대

비전통 인간안보에 관한 협력은 정치적으로 덜 민감하면서도 아세안 국가들이 실질적 피해를 입고 있는 분야로 많은 협력 요청이 있었다. 그런 만큼 신남방정책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졌고, 신남방정책 플러스에서도 정치안보협력 분야의 유일한 중점 협력 사업으로 포함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비전통 인간안보 분야 협력의 추이를 보면 재원의 부족, 이슈의 다양성 문제로 상당히 분절적으로 추진되었다. 작은 단위의 분절적 사업이 지속되면서 한국이 아세안 방면에 신남방정책하에서 이렇다 할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만들어 내지 못한 분야가 비전통안보 및 인간안보의 협력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향후 근미래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향후 3~4년간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서 한국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부문에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세안의 비전통 인간안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아세안 지역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이익이 돌아가는 협력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이를 통해서 한국의 안보 이익에까지 확장된 형태로 이익이 되고 한국이 추진하는 지역적 안보협력의 비전에까지 활용되는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해 한국의 지역 비전통 인간안보 문제에 대한 기여와 공헌을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다.

비전통 인간안보 이슈는 상당히 많은 부분의 다양한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중에서 한국의 전문성과 이를 위해 한국의 전문

성과 이슈의 긴급성을 감안해 중점 분야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다른 비전통 안보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디지털-사이버, 보건, 해양 문제를 한국의 비전통, 인간안보 3대 분야로 설정,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3대 부문 중에서 디지털과 사이버는 지역의 디지털 연계성(digital connectivity), 사이버 안보 문제가 중요하다. 디지털 연계성과 사이버 안보 문제는 동남아 국가들의 코로나 이후 경제성장에서 중점적인 분야인 동시에 한국이 큰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다. 더 나아가 한국의 사이버 안보에 대한 기여도 가능하며 한국의 장비 수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 이후 높아진 한국의 방역, 보건 역량에 관한 평가에 기반해, 보건 분야에서는 개도국의 보건 역량 강화 및 팬데믹 방역 역량 강화 분야의 협력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해양 분야에서는 정치적 민감성이 큰 해양 안보보다는 IUU(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문제와 해양 환경 보전에 초점을 두고 한국의 비전통, 인간안보 문제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4) 인도와의 외교안보 협력 모색

신남방정책 추진 과정 동안 인도 문제는 신남방정책의 가장 큰 리스크로 꼽혔다.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지만, 아세안과 인도는 하나의 협력 대상으로 묶이기 어려운 한계를 가진다. 인도와 아세안은 서로 국가들의 크기나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크게 다르다. 대외관계에 대해서 아세안과 인도가 가지고 있는 인식에서도 차이가 난다. 인도는 스스로 대국으로 생각하는 반면, 아세안은 아세안이 하나의 단위로 중견국 세력 정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아세안과 인도가 동아시아정상회의 등 몇 개의 다자협력으로 묶여 있기는 하지만 한국 입장

에서 아세안과 인도를 하나의 단위로 묶을 수 있을 만큼 인도와 아세안 사이 양자 협력, 관계가 긴밀한 것도 아니다. 더욱이 한국과 양자 관계를 고려하면 아세안과 한국 사이 경제, 사회문화 교류를 포함해 전반적 협력의 수위가 한국-인도 협력에 비해서 훨씬 크기 때문에 같은 신남방 국가라 해도 협력의 출발점이 크게 다른 문제가 있다.<sup>245)</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남방지역으로 묶인 이상 인도를 마냥 방치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근미래에 인도와 적절한 협력의 분야를 찾아 협력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인도와 협력의 출발점은 인도와 한국이 서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협력의 중점 분야에 대해서 먼저 의견 일치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은 인도와의 협력에서 사회문화와 경제협력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제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협력과 교류를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그에 기반해 정치안보 협력으로 이행하는 것이다.

반면 인도는 한국에 대해서 경제적 협력보다는 정치안보적 협력을 우선시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즉, 국방협력이나 우주산업 협력 등에서 우선적인 교류를 원하는 입장이 강하다. 현재 중국과 미국의 경쟁이 가장 치열한 곳은 인도-태평양이라 불리는 서태평양-동북아시아-동남아시아-남아시아의 해양 지역과 그와 인접한 대륙 지역이다. 이 지역 안의 새로운 복합안보레짐인 쿼드의 구성원의 하나인 인도는 2020년대 들어서 기존의 소극적인 전략적 태도에서 벗어나 상당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하위 군사안보 협력체라고 할 수 있는 쿼드의 성격을 감안할 때 인도의 대 중국 견제 및 경쟁 전략이 상당히 확고해진 것을 의미하며 이와 연계된 해양 안보 협력, 방위산업

---

245) 신남방정책에서 인도와 협력이 지지부진한 현상은 최인아 외,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협력 방향』 참고.



협력, 전략산업 협력, 그리고 이 모든 외교군사안보적 협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 및 기술 협력을 쿼드 국가들 및 이와 연대-연계하고 있는 국가들에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도는 한국이 크게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연대에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쿼드에 적극적으로 합류할 것을 원하고 있다.

물론 이런 인도의 대외전략에서 시작되는 한국과 협력 분야에 대한 설정을 한국이 그대로 따를 이유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와 협력의 강화가 신남방정책의 중요 부문에 하나라면 일정한 수준에서 경제, 사회문화 협력과 함께 정치안보 협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더욱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의 신남방정책이 확대되어 한국의 인도-태평양 관점으로 나간다면 인도와 정치안보협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다.

## 다. 추진 과정 및 방법

### (1) 한국의 인도-태평양에 대한 관점 도입

한국의 인도-태평양에 대한 관점(KOIP), 즉 한국형 인태 전략 혹은 인태 관점을 도입하는 데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먼저 한국의 인태 전략 및 관점은 포괄성(inclusiveness)을 강조해야 한다. 이는 아세안 국가들이 만든 아세안의 인태 지역에 대한 관점(AOIP)과 궤를 같이한다.<sup>246)</sup> 포괄성은 지역의 어떤 국가도 인태 관점에서 배제하지 않으며 인도-태평양

246) 아세안의 인도-태평양 관점에 대해서는 ASEAN, "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 June 23, 2019, <<https://asean.org/speechandstatement/asean-outlook-on-the-indo-pacific/>> (Accessed October 1, 2021)와 이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Bhubhindar Singh and Henrick Zhizhao Tsjeng, "ASEAN Outlook on Indo-Pacific: Seizing the Narrative?" *RSIS Commentary*, no. 016 (2020) 참고.

지역은 특정 국가가 주도하거나 특정 국가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중국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으로부터 올 수 있는 영향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 입장에서도 포괄성을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번째 전제조건은 전략(strategy)이 아닌 지리적 지역(geographic region) 개념으로 인도-태평양을 정의하는 것이다. 실제로 4자 안보대화(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를 구성하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인태 전략이나 관점을 가장 강조하는 국가들인데, 이 국가들 사이에도 인태가 전략인지 지역적 개념인지에 대해서는 합의가 없다. 미국의 경우 최근 다소 완화된 표현인 비전(vision)을 사용하지만, 애초 미국의 인도-태평양은 전략(strategy)으로 시작했다. 반면 호주의 경우 철저하게 미국의 입장인 전략은 배제하고 그 대신 단순한 인도-태평양 또는 인태 지역(region)으로 이를 칭하고 있다.<sup>247)</sup>

한국 역시 한국의 인도-태평양 관점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천명할 때 한국의 지역 전략이 미국과 동조화된다는 인상을 피하기 위해서는 인도-태평양을 철저하게 지역적 관점과 개념으로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인도-태평양은 과거 아시아-태평양, 그리고 1997년 아시아경제위기 이후 동아시아 지역협력으로부터 확산된 동아시아(East Asia)라는 지역 개념을 잇는 새로운 지역 개념으로 제시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sup>248)</sup> 철저하게 미국의 아세아 전략을 의미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배제하고 한국은 인태 지역에 대한 관점과 비전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한국의 인태 관점이 가질 수

---

247) 백우열 외, 『쿼드 국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대응』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2019), pp. 84~87.

248) 이재현, “인도-퍼시픽, 새로운 전략 공간의 등장,”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2015-15 (2015), pp. 8~9.

있는 정치적 부담을 피하는 길이다.

KOIP는 지리적으로는 물론 기능적으로 확대된 한국의 지역전략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KOIP의 기능적 협력 부분을 모두 포괄해서 다루기는 어렵지만, 기능협력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야만 한다. 또한, 지리적으로 KOIP는 신남방과 신북방은 물론 확대된 지역에 대한 양자, 다자협력으로 구성된다. 신남방정책은 아세안과 인도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지역 전체를 포괄하기도 어렵고 다른 주요 국가의 지역 정책, 즉 미국, 호주 등의 인도-태평양과 협력을 모색함에 있어서도 충위가 맞지 않는 어색함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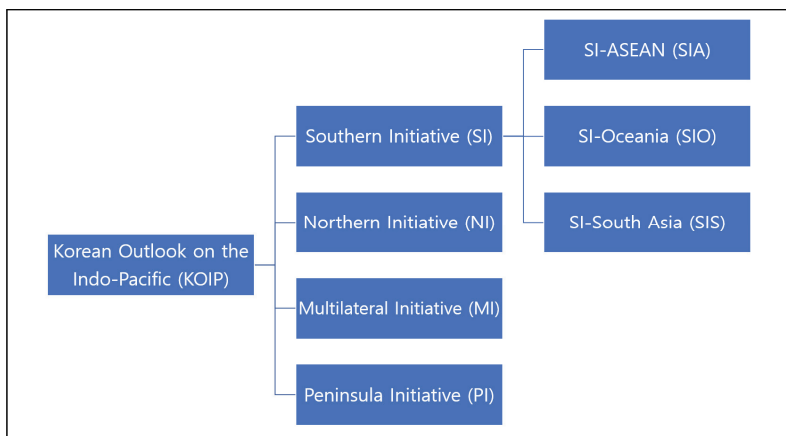
그런 점에서 KOIP는 문재인 정부의 포괄적인 지역 전략인 동북아 플러스 공동체 전략의 수준에서 이를 더욱 확대하는 지역적 범주를 추구한다. KOIP의 주요 구성요소는 남방전략(Southern Initiative), 북방전략(Northern Initiative), 다자전략(Multilateral Initiative), 한반도 전략(Peninsula Initiative) 등이다. 북방이나 한반도 전략은 차지고 남방전략을 예를 들면, 남방전략은 다시 그 하위로 아세안을 대상으로 하는 Southern Initiative-ASEAN, 대양주를 대상으로 하는 Southern Initiative-Oceania, 그리고 남아시아를 대상으로 하는 Southern Initiative-South Asia로 구분된다. 즉, 신남방정책에서 포괄하지 못해 늘 논의의 대상이 되었던 대양주 국가들과 인도 외 남아시아 국가들이 KOIP에 포함되는 것이다.

남방정책에서 각 하위지역 구분은 각 지역의 독자성뿐만 아니라 기존 주로 아세안을 대상으로 했던 신남방정책의 연속성을 위한 것이나 하위지역 구분이 부적절할 경우 남방정책으로 통칭해서 추진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북방정책의 경우도 하위지역으로 구분이 가능할 것이다.

한편 다자전략(multilateral initiative)의 경우 아세안을 중심으로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이 관철된 지역 다자협력에 대한 한국의 정책을 의미한다. 다자전략은 신남방정책에서 등한시되었던 지역 다자협력에 대한 한국의 관여 의지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아세안 중심성 강화에도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sup>249)</sup> 이 전략은 인태지역 아세안 중심의 다자협력 재활성화를 통해 강대국 통제, 다자협력 활성화 및 실질 협력 강화를 위한 전략이다. 다자정책은 신남방·신북방정책에서 효과적이지 못했던 남방정책과 북방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틀인 동시에 KOIP와 미국, 호주 등 국가의 인태 전략과는 이 차원에서 협력을 추진한다.

〈그림 III-9〉 KOIP의 구성 개념



출처: 저자 작성.

마지막으로 한반도 문제 역시 신남방정책을 포함하는 이 큰 틀과 효과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 문제의 지역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이는 한반도 문제로 인한 지역 전략 추진의 한계를 극복하고 오히려 지역화를 통해 한반도 문제에 대한 관여

249) 이재현, “동아시아 다자협력 활성화를 위한 문재인 정의 정책 제안,”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2017-22 (2017), pp. 8~9.

자, 이해당사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전략이다. 오랫동안 한국의 지역 외교, 글로벌 외교는 한반도 문제에 투입되는 막대한 자원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적은 자원을 배분받았고, 이로 인해 일관되고 진취적인 추진이 어려웠다. 물론 한반도 문제에 당사자인 한국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전략을 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한반도 문제를 지역 이슈로 만들어 지지 세력, 이해당사자를 확대, 보다 넓은 틀 안에서 안정적으로 다루는 것도 중요하다.

한반도 문제를 지역화하여 지역의 모든 국가들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지역 전체 안보를 위협하는 문제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한반도의 안보 문제는 남중국해 문제, 대만 문제 등과 같이 지역 전체의 안보를 위협하는 문제이고 한반도 평화가 잘 확보 되었을 때 이는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는 공공재의 성격을 가진다는 인식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지역에 대한 한국의 외교는 곧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정책이 되고, 지역 국가들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국의 관심 촉구 때문이 아니라 자국 이익의 기반이 되는 지역 평화를 위해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는 한국 입장에서 제한된 자원을 재분배해 지역 전략에 투입하는 동시에 한반도 문제는 지역화하여 투입된 자원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윈윈(win-win)의 상황을 가져온다.

## (2) 중소국가를 견인하는 중추 국가(pivotal state) 전략

중견국으로 한국이 지역에서 중소국가를 견인하는 동시에 강대국 경쟁의 맥락에서 중소국가들과의 전략적 합의를 만들어 내는 중추 국가의 역할을 하는 데는 몇 가지 중점이 있다. 우선 명확하게 협력은 강대국 경쟁의 맥락 속에서 중소국의 이익 확보, 중소국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 질서 형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두 번째로

이런 전략적 협력의 추진은 우선은 앞서 언급한 한국형 인태 전략의 소지역별로, 양자적으로 시작해 소다자적으로, 그리고 성공적인 경우 지역 중소국가를 묶는 다자형태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세 번째로 여기서 한국은 한국의 어젠다를 지역 국가에 투영하지 않으면서 지역국가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밝히고 그 안에서 전략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 과정을 주도하고 국가들을 한자리로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별 소다자 협력은 단순히 전략적 협력뿐만 아니라 각 하위지역에 특화된 비전통 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장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먼저 중추 국가 전략에서 한국은 앞서 말한 하위지역 즉, 아세안, 서남아, 오세아니아 별로 전략대화를 설치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 전략대화 설치 작업의 완성이 제1단계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 각 지역별로 트랙 2, 1.5, 1 단위의 전략대화를 설치하되, 지역이나 국가에 따라서 곧바로 트랙 1 전략대화 설치가 어려운 경우 트랙 2부터 설치하고 꾸준한 대화를 통해 신뢰를 높여야 한다. 높아진 신뢰를 바탕으로 트랙 1.5, 그리고 트랙 1 차원으로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무조건 트랙 1로부터 시작하려는 시도보다 시간은 좀 더 걸리더라도 바람직할 수 있다.

트랙 2와 1.5를 트랙 1과 병행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국가 간 전략적 협력의 구체 내용과 어젠다는 트랙 1에서 논의되고 합의되어야 국가 정책으로 실행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가 정부가 바뀌고 이전 정부의 전략대화에 대한 제도적 메모리가 상실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트랙 2 혹은 1.5 차원에서 정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논의의 어젠다, 그리고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기억을 가지고 대화를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서 전략대화 제도의 연속성을 보장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다면

많은 국가에서 정부의 교체에 따라 이전 정부에서 논의했던 내용, 쌓았던 신뢰가 모두 사라지고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는 자원의 낭비가 불가피하다.

이런 전략대화는 특히 강대국 경쟁과 관련된 개별 국가의 전략적 대응과 이익이라는 어젠다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개별 국가들과의 전략대화에서 상대방 국가들이 보고 있는 현재의 전략적 상황인식, 그리고 개별 국가들의 대응 전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더 나아가 꾸준한 전략대화를 통해 상호간 신뢰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는 경우 전략의 공통분모를 확인하고 지역 중소국가의 이익 확보를 위해 어떤 식의 공동 전략적 대응이 가능한지, 강대국에 의해서 쓰인 지역 질서에 중소국가 이익을 위해 어떤 내용들이 반영이 되는지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전략대화의 2단계는 양자를 넘어선 지역별 소다자 형태의 전략대화 로 확장하는 단계다. 아세안 지역에는 다양한 이익을 가진 여러 국가들이 존재하므로 개별적인 전략대화를 1단계에서 완성하면 여기서 확인된 개별 국가들의 이익에 따라 소그룹화를 해서 유사한 이익을 공유하는 국가들의 소다자 형태 전략대화를 구상할 필요가 있다. 그 외 지역에서는 지역을 넘어서 다른 지역 예를 들면 오세아니아 국가와 서남아 국가를 연결하거나 오세아니아 국가와 동남아 일부 국가군을 연결하는 형태의 지역을 넘나드는 소다자 대화 형태를 구상해야 한다.

특히 2단계 소다자 형태의 전략대화에서는 지역 전략적 정세에 관한 의견과 개별 국가의 대응 외에 비전통, 인간안보 관련된 대화 및 협력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한국-호주-뉴질랜드 전략 대화와 동남아 국가들의 전략대화를 연결하여 보건, 사이버 안보 등의 분야에서 한국을 매개로 오세아니아와 동남아 국가들 사

이 협력 혹은 한국과 호주가 동남아의 비전통 인간안보 분야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협력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전략대화가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런 노력들이 꾸준히 전개된다면 3단계에서는 일단 비전통 인간안보 분야 협력에서는 전략대화를 바탕으로 일정한 실질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3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미중 강대국 전략 경쟁 속에서 지역 중소국가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전략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 지역 중소국가들의 이익은 어디에 있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지역 질서는 어떠해야 한다는 지역 국가들의 입장을 공통의 의견에 바탕으로 해서 성명, 선언의 형태로 공식화하는 협력이 제3단계 전략적 협력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전략대화의 형성과 내실화 과정에서 한국은 지역 국가들을 한데 모으고 그들 사이 대화를 촉진하는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한국이 중견국으로 가진 자원을 동원해 독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지역 국가들의 의견을 모으고 이를 이끌어 가는 형태의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또한 개별 국가, 지역 별로 전략대화는 1.5 트랙이나 트랙 2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트랙 2 전략대화라고 해도 일정한 정부의 관여 혹은 승인이 있을 때 비로소 이 전략대화가 탄력을 받을 수 있고 지속적으로 대화를 유지해갈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 (3) 비전통안보 및 인간안보 협력

근미래 신남방정책 혹은 더 확대된 형태의 KOIP는 비전통 인간안보 부문에서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백화점식의 비전통안보 협력보다는 한국이 전문성을 가지고 동남아 국



가나 지역 국가들과 협력해서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문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비전통 인간안보 협력을 통해 지역 국가들이 가진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이 협력이 한국에도 구체적인 이익이 되는 형태의 협력을 구상해야 한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세 가지 부문 즉, 팬데믹 대응을 포함한 보건협력, 디지털 및 사이버 안보 협력, 그리고 해양협력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이후 지역에서 보건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고, 한국 역시 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많은 보건 협력을 구상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은 이미 공적개발원조 사업 등을 통해 다양한 방면에서 동남아 국가들에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형태의 보건협력을 해 오고 있다. 이런 보건 협력의 형태는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기초적인 공공보건 향상, 의료보건 인프라 및 역량 강화, 팬데믹 대응 역량 강화 및 의료보험 체계 등 공공보건 체계 향상에 관한 협력들이다.

〈표 Ⅲ-13〉 공적개발원조를 통한 대동남아 보건협력 사업

국가	사업명	사업예산 (억 원)	사업기간
라오스 (9개)	공안부 현대식병원 건립사업	733	2019~2024
	국립의과대학병원 건립사업	1158	2019~2024
	북동부지역 모자보건중심 보건의료체계강화사업	148	2016~2021
	국립의과대학병원 운영관리 컨설팅사업	20	2019~2022
	의료기기 관리운영체계 강화사업	50	2018~2022
	감염병 진단 및 검역체계구축사업	33	2019~2023
	경찰병원 역량강화사업	56	2014~2023
	생생식 모자보건 접근성 개선을 위한 서비스 수준 강화, 지역기반 프로그램 개발사업	82	2019~2024
	의료인력 심폐소생술 역량강화	6	2019~2021
인도네시아 (1개)	보건, 사회 보장체계 역량강화	1	2020
미얀마 (3개)	구제역 관리 및 진단 역량강화	3	2018~2020
	기관간협력지원(미얀마, 미얀마열성감염질환 관리기술자립화지원사업)	1	2019~2021
	양곤주 북부지역 1차보건 의료체계강화사업	113	2020~2025

국가	사업명	사업예산 (억 원)	사업기간
베트남 (16개)	다낭병원 핵의학, 방사선센터 의료기자재 공급사업	115	2011~2020
	국립이비인후과병원 의료기자재 공급사업	217	2017~2020
	안지양성 탄자우 종합병원 의료기자재 공급사업	35	2018~2020
	엔바이 종합병원 건립사업	498	2011~2020
	하이퐁 종합병원 건립사업	1072	2019~2023
	하이퐁 산부인과병원 의료기자재 공급사업	33	2019~2020
	짜빈성 튜건 종합병원 의료기자재 공급사업	33	2019~2020
	호아빈성 락뚜이 종합병원 의료기자재 공급사업	33	2019~2021
	하띤성 독토 종합병원 의료기자재 공급사업	33	2019~2021
	꾸년시 메디컬센터 의료기자재 공급사업	33	2019~2021
	벤째성 종합병원 건립사업	707	2019~2022
	보건인프라 선진화 계획 수립	5	2019~2020
	글로벌문제해결거점(베트남, SDG 6 해결을 위한 물 및 위생 적정기술 센터)	20	2018~2021
	의료시설 운영관리 및 의료기기건설팅사업	24	2019~2021
	중부지역병원 사후관리 기술협력 사업	41	2015~2020
	하노이 약학대학 건립사업	508	2016~2023
캄보디아 (6개)	국립의과대학 부속병원 건립사업	751	2020~2024
	아시아(캄보디아) 광주진료소 지원	3	2018~2020
	건강형평성 및 질 향상 프로그램	80	2017~2021
	양두영병원 이비인후과(ENT) 역량강화사업	90	2018~2022
	동북부 모자보건 프로그램	77	2019~2022
	감염병 예방, 대응체계 강화 사업	93	2020~2025
필리핀 (6개)	보편적 의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4.2	2019~2020
	메트로 마닐라 도시빈곤지역건강증진 사업	10	2019~2021
	필리핀 동부사말 기안 펠리페 아브리고 지역 거점 공공병원 재건사업	60	2015~2020
	UNICEF 생애초기 1000일간 영양개선사업	67	2018~2021
	지역사회 기반 보건 서비스 전달 체계 강화 사업(WHO)	71	2020~2023
	의료보험 제도개선	5	2018~2020

출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ODA Korea, 2020.1., <[http://www.odakorea.go.kr/bbs/selectPlanAndResult?bbsId=kor\\_001&menuNo=1105](http://www.odakorea.go.kr/bbs/selectPlanAndResult?bbsId=kor_001&menuNo=1105)> (검색일: 2021.10.3.)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보건 협력의 향후 추진 방향은 기존 한국의 보건 협력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팬데믹 대응에 관한 부분을 강화하는 협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코로나19가 지속되거나 코로나19를 해결한다고 해도 또 다른 형태의 지역적, 글로벌 차원의 팬데믹이 계속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동남아 저개발 국가들의 팬데믹에 대한 일차적 대응 역량, 검사 및 진단 역량 강화 등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가장 저개발국에서는 갑작스러운 팬데믹으로 인한 많은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한 협력이 중요하다면 동남아 국가 중에서 이런 긴급한 필요를 해소한 국가들에는 병원 인프라, 보건 인프라 강화 및 역량 강화 사업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예가 베트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미 한국이 공적개발원조를 통해 베트남 공공병원의 인프라 강화 사업을 하고 있는 방향을 유지해야 한다. 이런 국가들보다 경제적으로 보다 나은 국가들에서는 국민의료보험 등 의료 및 보건 체계 전반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협력의 방향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보건 협력, 팬데믹 협력 관련해서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은 아세안 차원에서 이미 마련된 제도들과 한국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동남아에서는 팬데믹에 관한 대응이 일차적으로 보건의 문제이지만, 이와 함께 재난대응의 문제이기도하다는 점이다. 지역적 팬데믹에 대해서는 아세안의 재난대응 체계가 함께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아세안 인도적 지원 센터(ASEAN Humanitarian Assistance Centre: AHA Centre)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아세안은 자체적으로 아세안 국가의 보건 역량 강화를 위해 아세안 포스트-2015 건강개발아젠다(ASEAN Post-2015 Health Development Agenda: APHDA)에도 한국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sup>250)</sup> 많은 국가와 기관들이 APHDA의 협력국가와 기간으로 포

---

250) AHA와 APHDA 관련 한국의 협력 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최인아 외,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협력 방향』, pp. 295~300을 볼 것.

함되어 있는데, 한국은 이 리스트에 올라 있지 않다.

디지털 분야에서 협력은 특히 동남아 국가들이 한국에 많은 지원을 기대하는 부문이다. 기존에도 많은 협력을 해 오고 있지만 특히 한국의 디지털 분야 발전은 동남아에서는 하나의 모범이 되고 있으며, 이에 관한 다양한 방면의 노하우를 전수받기를 원한다. 동남아 국가들에서 기대하는 디지털 관련 협력은 단순 기술의 전수를 넘어서 투자, 디지털 기술을 통한 문화 산업 육성, 디지털 관련 국민인식의 개선 등 다양한 차원을 포괄한다. 신남방 근미래 전략과 관련하여 한국이 특히 중점을 두어야 하는 디지털 관련 협력은 두 가지, 즉 동남아의 디지털 통합과 사이버 안보 및 정보 안전과 관련된 사안이다. 또한 이 사안들은 경제적 함의, 동남아 국가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가 안보에 대한 함의, 그리고 신남방정책과 미국, 호주 등의 인태 전략과의 협력에 대한 함의도 가지고 있어 이 두 가지 부분이 특히 중요성을 더한다.

아세안 국가들은 코로나19 이전부터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혁신을 국가 경제성장의 기본 축으로 삼아왔다.<sup>251)</sup>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폭발적으로 증가한 전자상거래, 비대면 거래, 핀테크 산업 등은 이런 기조를 더욱 강화시킨다. 아세안 국가들은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아세안포괄적회복프레임워크(ASEAN Comprehensive Recovery Framework: ACRF)를 통해 이미 디지털 분야를 포스트 코로나 동남아 경제성장의 핵심 축으로 천명한 바 있다.<sup>252)</sup> 디지털 자체 협력도 중요하지만 비전통 인간안보 분야의 협력을 통해서 경제적인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이 디지털 통합 협력이다.

---

251) World Bank, *The Digital Economy in Southeast Asia: Strengthening the Foundations for Future Growth* (Washington D.C.: World Bank, 2019), p. 25.

252) ASEAN, *ASEAN Comprehensive Recovery Framework* (Jakarta: The ASEAN Secretariat, 2020), pp. 33~37.

동남아 국가들뿐만 아니라 한국과 동남아의 효과적인 디지털 협력은 현재 중국이 독식하고 있는 동남아 5G나 디지털 장비 시장에 한국의 지분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

나아가 디지털 통합에 관한 포괄적인 협력은 구체적인 안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동남아의 많은 국가들이 중국의 장비와 기술에 어쩔 수 없이 의존하고 있지만 동시에 사이버 안보, 정보의 안전(data safety)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경제적 성장에 따라서 디지털 역량을 어느 정도 확보한 국가에서 특히 이런 우려는 크다. 이 부분에서 한국은 아세안 국가들의 안보 우려를 덜어 줄 수 있는 방향, 즉 동남아 국가의 사이버 안보 능력과 데이터 안전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술적 지원을 해야 한다. 나아가 아직 동남아 국가 중에서 이런 정도 수준에 올라 있지 못한 국가들에서는 사이버 안보보다는 일반 국민 차원에서 디지털 문해력(digital literacy)을 높이는 협력이 필요하다. 일단 디지털 문해력이 높아져야만 사이버 안보나 데이터 안전에 관한 인식이 생길 수 있고, 나아가 디지털 통합을 통한 경제 성장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동남아 국가의 사이버 안보, 데이터 안전 문제는 복잡한 네트워크로 동남아 국가와 연결된 한국의 사이버 안보를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나아가 이런 전략은 한국과 미국, 한국과 호주 등 아세안을 대상으로 협력을 추구하는 국가들과 공동으로 보조를 맞출 수 있는 분야를 제공한다. 미국이나 호주 역시 중국의 기술과 장비에 의존한 동남아 국가의 사이버 안보, 데이터 안전에 관한 우려가 크다. 이런 국가들과 협력적으로 동남아의 사이버 안보와 데이터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다자협력을 진행하는 것은 동남아의 비전통 안보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한-미, 한-호 사이 신남방정책과 인태 전략 협력의 좋은 아이템이 될 수 있다.<sup>253)</sup>

구체적인 사업의 진행을 위해 한국은 먼저 신남방정책의 디지털 협력 분야에서 동남아 국가들을 분류할 필요가 있다. 기초적인 디지털 문해력과 기초 인프라에 집중할 국가와 그 이상 사이버 안보, 데이터 안전 문제에 관해 협력할 국가, 그리고 한국과 대등한 수준에서 다른 동남아 국가를 지원할 역량을 가진 국가를 구분해 서로 다른 협력의 채널을 구축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작업이다. 첫 번째 집단 안에는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와 같은 국가가, 세 번째 집단에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와 같은 국가가 포함될 수 있다. 나머지 국가들은 대부분 두 번째 집단에 포함되는 국가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한-미, 한-호 사이 아세안의 디지털 통합과 사이버 안보를 위해 어떤 협력을 할 수 있을지에 관한 정부 간 구체적 어젠다 작성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양자 간 협의를 바탕으로 한-미-호 3자, 그리고 한-미-호 3자와 동남아의 앞선 국가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과 다른 동남아 국가를 지원하고 아세안의 사이버 안보와 디지털 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

해양 분야 협력 역시 한국이 근미래 신남방정책 추진에 있어 관심을 가질만한 분야다. 한국은 신남방정책의 핵심대상이 되는 동남아 국가와 몇 가지 해양 문제를 공통으로 안고 있다. 또한 한국은 2019년 메콩 지역 국가와 협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한-메콩 정상회의를 출범시킨 이후 지금은 해양부 동남아 국가, 즉 말레이시아, 인도네

---

253) 이미 2021년 초 한-미, 한-호 당국 사이 신남방정책과 이 두 국가의 인태 전략 사이 협력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한 바 있다. 이 논의에서 한국과 호주는 사이버 안보 및 스마트 시티 관련 아세안 방면에서 협력을, 한-미 사이에는 아세안 디지털 전환을 위한 4차 산업 부문 협력과 아세안 사이버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에 합의한 바 있다. 외교부, “신남방정책과 호주의 인도-태평양 전략간 접점을 모색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호주 아세안 정책대화 개최,” (2021.2.25. 보도자료)와 외교부, “한-미 아세안 정책대화 개최,” (2021.5.13. 보도자료) 참고.

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싱가포르 등과 별도의 협력을 모색하는 단계에 있다.<sup>254)</sup> 해양부 동남아 국가와 한국이 많은 부분에서 협력할 사안이 있기는 하지만 해양 문제에 관한 관심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양 협력은 특히 유망하다.

동남아의 해양 문제에 한국이 관심을 가질 때 주목할 만한 부분은 몇 가지로 나뉜다. 먼저 남중국해 해양 영토 분쟁이 핵심이 되는 전통안보 중심의 동남아 해양 문제가 있다. 남중국해 영토 분쟁에 대해서 한국만의 입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미국, 중국, 동남아 여러 국가가 관련되어 있는 매우 민감한 이슈이므로 한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여하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해 왔다. 뿐만 아니라 남중국해 분쟁을 포함한 해양에서 전통안보 문제에 관한 협력은 비 전통 인간안보 문제 사안에서 다루어야 하는 주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남중국해나 해양에서 전통안보 문제는 주로 지역 다자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양 문제에 관한 보다 연성적 협력 중에서 한국은 최근 몇 년 동안 해양 환경, 특히 해양 쓰레기 문제에 집중해 왔다. 몇 년간의 노력 끝에 한국과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중심이 된 민간단체 중심의 신남방 바다공동체라는 단체가 출범했다.<sup>255)</sup>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 이 단체는 신남방정책 아래 한국의 해양수산부와 동아시아해양관리기구가 재정적 지원과 운영을 지원한다. 양자적으로는 한국의 해양환경공단이 인도네시아의 해양 쓰레기 관리 개선 사업이라는 제목 아래 인도네시아의 해양 쓰레기

---

254) 세종연구소, 『해양 동남아 국가와의 협력 강화 전략 연구』(미간행 정책연구보고서, 2020).

255) 홍선욱, “깨끗한 지구바다를 향한 향해... 신남방 바다공동체 출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6.11., <<https://www.korea.kr/news/contributePolicyView.do?newsId=148888630>> (검색일: 2021.9.23.).

관리 역량 강화사업을 하는 등의 협력을 해 왔다.<sup>256)</sup>

이런 노력에 덧붙여 전형적인 비전통안보, 인간안보 문제의 영역의 문제이기도 하면서 일정 부분 전통안보 협력의 함의도 가지고 있는 불법어업의 문제로 신남방정책의 해양 협력을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서해에서 중국의 불법어업 문제를 가지고 있다. 동남아 국가들이 위치한 남중국해에서도 중국을 비롯한 지역 국가들이 서로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넘어선 불법 어업이 성행하고 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런 불법 어업으로 인해 어선 간, 어선과 해양관리 당국 간 충돌이 생기고, 결국에는 관련 국가의 해군까지 출동해 군사적 대치로 이르는 상황이 많이 생기고 있어, 불법 어업 문제가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해양의 영토를 놓고 갈등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투나 섬(Natuna Island) 인근 중국의 불법 어업으로 인해 중국과 잦은 충돌을 벌이고 있다.<sup>257)</sup> 따라서 불법 어업에 관한 한국과 신남방 국가의 협력은 매우 연성적인 협력을 넘어서 보다 전통적 의미의 안보 문제까지 함의를 가질 수 있는 해양 협력 분야다.

우선 한국은 신남방정책으로 동남아의 불법 어업의 문제를 파악하고, 이런 동남아 국가들의 문제와 한국이 가진 불법 어업의 문제를 서로 비교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지역에 만들어진 다양한 해양 포럼, 해양 다자협력 기구에 보다

---

256) 해양수산부, “신남방 최대 해양국가인 인도네시아 해양 발전 돕는다.” (2021.6.2. 보도자료), <<https://www.mof.go.kr/article/view.do?menuKey=971&boardKey=10&articleKey=39017>> (검색일: 2021.9.23.).

257) Derek Grossman, “Why Is China Pressing Indonesia Again Over Its Maritime Claims?” *World Politics Review*, January 16, 2020, <<https://www.worldpoliticsreview.com/articles/28476/why-is-china-pressing-indonesia-again-over-the-natuna-islands>> (Accessed September 24, 2021).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특히 불법 어업에 관한 연구반 등에서 한국이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동남아 국가들이 불법 어업에 관해 감시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과 장비, 제도를 갖추는 데 한국이 지원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제법적으로, 그리고 국내적 제도 차원에서 불법 어업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와 역량을 증진시키는 협력도 가능할 것이다.

결국 이런 협력은 동남아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불법 어업 문제를 해결하고 완화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동남아 국가와 불법 어업 문제에 관한 공동 보조, 입장 채택을 통해 한국이 가지고 있는 서해에서 중국에 의한 불법 어업 문제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한국이 정치적 민감성으로 인해 다소 거리를 두고 있는 전통 안보 차원의 해양 협력으로 가는 중간 단계를 만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 (4) 대인도 외교안보협력

인도가 우선적으로 상정하는 한국과의 협력 중 하나는 해양안보 협력의 강화이다. 인도는 인도양의 제해권을 중국이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간주하고 있으며 역내의 협력국들의 군사적 위상이 미미한 상황에서 지역 외의 국가들, 특히 쿼드 참여국 및 협력국들과의 해군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쿼드국가들 및 지역국가들의 합동훈련과 비전통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통해서 현실화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인도는 동남아시아 아세안 국가들과의 해양안보 협력을 강화하면서 2018년 아세안-인도 대화에서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을 포함한 국제법 원칙에 부합하는 평화, 안정, 해양 안전과 안보, 항해와 비행의 자유를 증진시키고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모색할 것”을 공동 발표

했고 특히 중국과 외교군사적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베트남과의 협력을 강화해 왔다.<sup>258)</sup>

한국과는 꾸준히 해군 함정의 상호방문 형태로 군사협력 확대를 타진해 왔지만 한국의 미온적인 태도 등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협력으로 발전하지는 못했다. 이는 한국이 유지하는 전략적 방향성, 특히 가장 협력이 가능하고 인도가 원하는 지역인 남중국해 중국과 타국들과의 분쟁에 대한 불개입과 같은 상황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인도는 꾸준히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중국 견제 입장 등을 희망해 왔고 이는 일본과의 협력에 한국이 참여하는 형태, 궁극적으로는 쿼드와 같은 형태의 대중국견제 안보레짐에 참여하는 형태의 실현을 의미한다.

남중국해를 넘어서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기존의 비전통안보 위협들의 강화에 따른 해상교통로 안전 확보는 인도양으로 확대되었다.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동아프리카 연안과 인도양 지역에서의 크고 작은 해적 활동,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중동지역과 연계된 에너지 보급로의 안전성 확보는 인도양에서 남중국해역으로 연결되는 전략적 해양 지역들에 대해 한국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연결된다. 인도와의 해양협력은 이와 같은 해적행위, 해양테러리즘, 환경오염, 자연재해 등과 같은 해양 지역에서의 초국가적 위협들에 공동대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해군함정들의 상호방문, 그리고 더 나아가 다양한 수준에서의 해군(공군)합동 군사훈련의 확대를 고려할 수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관련된 정보공유 및 학술정책교류, 인도양 및 남중국해에서의 자연재해

---

258) Press Information Bureau, Government of India, “Delhi Declaration of the ASEAN-India Commemorative Summit to Mark the 25th Anniversary of ASEAN-India Dialogue Relations,” January 25, 2018, <<https://pib.gov.in/newsite/PrintRelease.aspx?relid=175908>> (Accessed September 24, 2021).

및 대테러 감시체제 구축 협력,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범지구 위성항법시스템) 체계 및 인공위성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양국 해군 및 해양경비대 합정이 참여한 소규모 수준의 대테러 및 해적대응 훈련, 양국을 포함한 다자 수준에서 선박 보호 체계 등의 공동 개발을 생각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인도가 가장 한국에 원하는 분야는 방위산업과 전략산업의 협력 강화이다. 이는 지난 10년간 양자 간에 가장 많은 논의와 성과를 냈지만 인도의 입장에서는 매우 미흡한 발전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 인도는 기존의 적국인 파키스탄과 새로운 그리고 매우 강한 적국인 중국에 군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세계 총무기 수입의 15%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군사력 강화에 몰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무기 수입에 만족하지 않으며 관련 방위산업 및 전략산업 기술의 자국화를 끊임없이 추진하고 있다. 현 인도국민당(BJP) 정부는 위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결합한 형태의 새로운 국방 전략들을 구상하고 국방 부문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방위산업의 자립은 인도의 국방안보 전략의 핵심 목표이며 이를 위해 미국의 첨단무기 수입과 기술 이전을 시작했다. 일본과의 협력도 강화되고 있으며 기존 무기수출국인 러시아와 프랑스 등과의 협력도 경쟁을 기반으로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인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할 당시 “인도와 한국은 연구 개발 및 군사 장비 제조에서 합작 투자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sup>259)</sup> 인도의 국방연구개발기구(Defence Research and Development Organisation: DRDO)와 한국의 방위사업청(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

259)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Republic of Korea, “Republic of Korea-India Joint Statement: Towards A Strategic Partnership,” January 25, 2010, <[https://usa.mofa.go.kr/eng/brd/m\\_5659/view.do?seq=308076](https://usa.mofa.go.kr/eng/brd/m_5659/view.do?seq=308076)> (Accessed September 23, 2021).

DAPA)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고 이는 인도-한국 방위협약에 의거 실효성을 갖는다. 가장 중요한 조항은 인도의 국방연구개발기구를 통해 인도의 주요 방위산업기업들과 한국 기업들의 주요 무기 개발 및 생산 협력을 명시한 점이다.<sup>260)</sup> 그러나 이러한 방위산업 협력의 발전 정도는 매우 느리며 이는 인도에 매우 불만족스러운 상황이다. 육상무기체계, 해상무기체계, 항공우주분야 등 군사무기체계 전반에 걸쳐서 협력 강화를 고려해야 한다.

---

260) “India and South Korea Sign two Landmark MoUs to Boost Defense Cooperation,” *The Economic Times*, September 3, 2010,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politics-and-nation/india-south-korea-ink-two-mous-to-boost-defence-cooperation/articleshow/6486097.cms?from=mdr>> (Accessed September 4, 2021).



# IV. 신북방정책을 위한 근미래 주요사업 추진방안





# 1. 경제통상

## 가.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1) 신북방지역 국가들의 디지털 경제 및 혁신산업 육성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의 신북방지역의 주요 국가들은 대체로 천연자원이 풍부하여 이를 중심으로 한 경제성장을 추진해 왔다. 원유, 천연가스 등의 자원은 경제성장의 북방지역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자 발전의 근간이 되어 왔다. 하지만 글로벌 에너지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점차 화석연료에 대한 수요가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부각되는 가운데 신북방 국가들은 탈자원 중심의 산업구조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많은 국가들은 디지털 경제를 추진함과 동시에 자국 내 혁신산업 부문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의 혁신역량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131개국을 대상으로 한 혁신역량 평가에서 50위 안으로 평가되는 국가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뿐이다. 그 외의 다른 국가들은 조사대상 국가들 중 중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데, 우즈베키스탄(93위), 키르기스스탄(94위), 타지키스탄(109위) 등은 혁신산업의 육성역량이 미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표 IV-1> 참고).



〈표 IV-1〉 신북방 국가들의 4차 산업혁명 대비 혁신역량 평가(2020년)

순위	국가 명	지표
45	우크라이나	36.32
46	러시아	35.95
58	몽골	33.41
59	몰도바	32.98
61	아르메니아	32.64
63	조지아	31.78
64	벨라루스	31.27
77	카자흐스탄	28.56
82	아제르바이잔	27.23
93	우즈베키스탄	24.54
94	키르기스스탄	24.51
109	타지키스탄	22.23

주: 1) 조사대상 국가는 총 131개국이며 신북방 국가 중 투르크메니스탄은 대상에서 제외.

2) 지표는 100점 만점임.

출처: Cornell University, INSEAD, and WIPO, *The Global Innovation Index 2020: Who Will Finance Innovation?* (Ithaca, Fontainebleau, and Geneva, 2020), pp. xxxii~xxxiii.

우크라이나의 경우, ‘지식과 기술성과(knowledge & technology output)’ 와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 측면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인적자원과 연구(human capital & research)’ 측면에서의 평가는 낮았고, 러시아는 후자에서의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sup>261)</sup>

신북방협력의 주요 대상국인 러시아는 자국의 혁신산업 경쟁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러시아 정부의 혁신산업 육성 정책의 실현기반이 되는 주요 기제 가운데 하나는 ‘국가기술 이니셔티브(National Technological Initiative: NTI) 2035’이다. 이 프로젝트는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261) Cornell University, INSEAD, and WIPO, *The Global Innovation Index 2020: Who Will Finance Innovation?* (Ithaca, Fontainebleau, and Geneva, 2020), p. 16.

이슈가 부각되면서 2015년부터 러시아 정부가 추진해 온 신산업 부문 발전전략의 일환이다. 러시아 정부는 새로운 기술시대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산업에서 탈피한 신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에너지 수출의존 경제에서 탈피하여 향후 15~20년 내 신기술·신시장 분야 세계 리더십 확보를 목표로 전략 시장 분야를 선정하였다.<sup>262)</sup>

〈표 IV-2〉 러시아 NTI 9대 전략분야(시장)

영역	9개 분야	중점분야
안전 및 자원	EnergyNet	개인전력생산과 스마트그리드의 전력분배
	FoodNet	개인 맞춤형 식품 생산, 공급시스템
	SafeNet	개인맞춤형 안전시스템
수송 체계	AutoNet	무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어시스템
	AeroNet	무인 항공기의 제어시스템
	MariNet	무인 자율 해상운송시스템
삶의 질	HealthNet	개인맞춤형 및 디지털의료
	NeuroNet	인공의식 및 지능 분야
	TechNet	디지털 스마트팩토리 등

출처: NTI 2035 <<https://www.nti2035.ru/markets>>.

러시아 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혁신시장은 크게 9개로 구분되어 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향후 시장성장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분야이다. 각각의 분야의 성장전망이 밝아, 시장선점을 통해 러시아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우크라이나 역시 혁신산업 분야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있는데, 특히 우크라이나가 강점을 가진 IT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산업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수년간 IT산업

262) 박지원, “러시아 혁신성장정책의 평가와 협력시사점,” 『KOTRA Global Market Report』, 19-084 (2019), p. 17, <<https://lib.kotra.or.kr/pyxis-api/1/digital-files/c16960f0-056b-018a-e053-b46464899664>> (검색일: 2021.5.24.).

부문에서 빠른 성장세를 보여 왔다. 2020년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IT산업 부문의 수출은 전년 대비 8억 5500만 달러가 증가하여 처음으로 50억 달러를 상회하였는데 이러한 수치는 우크라이나 전체 수출의 약 8.5%를 차지하는 것으로 철강 등의 기존 산업 비중에 근접하는 것이다.<sup>263)</sup> 우크라이나에서 매년 약 2만 명의 IT 관련 전문 인력이 배출되고 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전자상거래 발달 및 기업의 디지털화로 인해 IT 분야 활황과 함께 인력 수요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021년 승인한 국가전략인 ‘국가경제 전략 2030(National Economic Strategy 2030)’에 따르면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향후 경제성장과 발전을 위한 주요 방향으로 디지털화, ICT 산업, 창조산업(creative industry) 등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sup>264)</sup> 우크라이나의 디지털 경제구축 계획은 기본적으로 EU와의 사회적 통합을 전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EU는 자체적인 ‘디지털 단일시장(Digital Single Market)’ 구축을 목표로 하고 이에 준하는 공통의 시장표준을 정비하고자 하는데, EU 시장과의 단일화 목표에 따라 디지털경제 구축을 위한 노력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카자흐스탄의 ‘디지털 카자흐스탄(Digital Kazakhstan)’ 계획은 디지털 기반 구축을 통해 카자흐스탄의 경제성장을 가속화하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동 프로그램을 통해 △산업전반의 디지털화를 통한 경제 디지털화, △스마트시티 조성과 행정체계의 디지털화를 통한 정부의 디지털화, △통신네트워크와

263) Peter Dickinson, “Ukraine’s Booming IT Sector Defies the Coronavirus Crisis,” Atlantic Council, February 22, 2021, <<https://www.atlanticcouncil.org/blogs/ukrainealert/ukraines-booming-it-sector-defies-the-coronavirus-crisis/>> (Accessed May 11, 2021).

264) “Ukraine Approves National Economic Strategy until 2030,” *Ukraine Open for Business*, March 4, 2021, <<https://open4business.com.ua/ukraine-approves-national-economic-strategy-until-2030/>> (Accessed May 11, 2021).

ICT 인프라 발전을 통한 디지털 실�크로드 구현, △디지털 교육 확대를 통한 인적자원개발, △벤처기업 및 기술지원을 통한 혁신생태계 구성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sup>265)</sup>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정보통신 분야의 육성이 시급한 과제인데, 카자흐스탄 정부는 ‘기술개발 공사(Национальное агентство по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му развитию)’라는 국영기업을 통해 정보통신 분야의 기업육성과 기술축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 공사의 설립 목적은 카자흐스탄 내에서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기업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혁신기업을 육성하고 발전하도록 돕는 데 있다. 또한, 신기술을 갖고 있으나 이를 구체화 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한 기업, 사업 초기단계의 기업들이 재정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이러한 자금 지원은 각 기업이 자금지원을 통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상품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sup>266)</sup> 카자흐스탄 정부는 이 공사를 통해 정보통신 분야 기업들에 재정적인 지원을 지속하고 있으며 산업발전의 토대를 만들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디지털경제화도 정부 주도하에 매우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2020년 3월,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과학, 교육, 디지털경제 발전의 해(year of development of science, education, and digital economy)’ 발전방향 시행령의 개정안을 발표하였다.<sup>267)</sup> 여기에서 정부는 △국토 전역에 80만 개의 브로드밴드 인터넷포트와 12,000km에 달하는 광통신케이블 설치, △도로 인프라, 금융서비스, 수자원개발, 농업 등의 산업에서 디지털기술

265) Digital Kazakhstan <<https://digitalkz.kz/>> (Accessed May 12, 2021).

266) 박지원, “유라시아경제연합과 디지털경제: 경제연합의 촉매요인 분석,” 『중소연구』, 제43권 3호 (2019), p. 247.

267) CIS Legislation, “Presidential Decree of the Republic of the Uzbekistan of March, 2, 2020 No. UP-5953,” <<https://cis-legislation.com/document.fwx?rgn=122864/>> (Accessed May 13, 2021).

활용을 위한 방안 마련, △공공분야에서 데이터 생성과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표준마련, △주요 대학에서 원격수업이 가능하도록 시설구축 등의 디지털 경제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어 2020년 4월에 추가로 발표된 대통령령을 통해서는 △생산시스템의 디지털화, 디지털 금융제도 도입, 생산자동화 등을 통해 2023년까지 GDP에서 디지털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의 2배로 확대, △2023년까지 정부 부문의 전자서비스 비중을 60%까지 확대, △교육의 모든 분야에서 디지털 학습제도 도입 등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암호화폐 채굴, 스마트 계약서 작성, 디지털 정보 교환, 스토리지, 정보 분배 시스템, 크라우드 펀딩, 블록체인 기술 등 기업의 활동과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혁신산업 부문의 발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러한 혁신산업의 관리를 위해 대통령 직속의 ‘국가 프로젝트 관리청(National Project Management Agency)’을 설립하고 디지털 기술 도입과 운영, 신산업 발전에 대한 전권을 갖고 시행해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이 신북방지역의 주요 국가들은 현재 디지털경제 구현과 혁신산업 발전에 있어서는 선진국에 비해 뒤쳐져있으나 4차 산업혁명의 부각과 이어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촉발된 디지털사회의 실현 및 신산업발전의 필요성을 피부로 인식하면서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 (2) 러시아 극동지역 및 중국 동북지역 개발

### (가)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정책

러시아의 본격적인 극동개발은 2000년대 이후로 본격화 되었는데, 당시의 정책은 지방에 대한 균형추진과 불균형 용인이라는 혼란기에 있었다. 2010년 이후 다양한 제도들이 도입되면서 정책적 목표

는 동북아 지역경제권에 대한 편입으로 수렴되고 있다. 다만, 정부의 성장전략이 천연자원 개발 중심으로 유지되었으므로 극동지역 내에서도 자원이 풍부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의 격차는 여전하며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지역과의 경제적 격차도 지속되고 있다.<sup>268)</sup>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러시아 정부는 기업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제조업기업의 극동지역 유입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극동지역의 ‘비약적 성장(Quantum jump)’을 목표로 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동아시아 경제권으로의 편입을 통해 극동지역의 빠른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으며 주요 투자 인센티브 정책 역시 이와 같은 결과 도출을 목표로 수행되고 있다.

동아시아 경제권에 대한 극동지역의 편입은 러시아가 지난 수십년간 극동지역에서 추진해 온 제조업 육성정책과 같은 맥락에서 지속되고 있다. 지역투자에 대한 인센티브와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외국기업들의 제조업투자가 이어진다면 단기간 내에 극동지역의 경제적 수준이 향상되고 자연스럽게 동아시아 경제권으로의 편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현재 극동지역은 단순히 완제품을 수입하는 역할에 그칠 뿐, 전자·기계 등의 동아시아 산업 밸류체인에서 소외되어 있다. 한국, 일본, 중국의 동아시아 국가들은 제품생산 가치사슬에 따라, 주로 한국과 일본의 부품수출과 중국의 완제품 생산이라는 분업체계가 이루어져 있으나 극동지역의 역할은 미미하다. 제조업 가운데 극동지역이 경쟁력을 갖는 산업은 어류 및 목재가공, 식품생산 등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완제품도 수출보다는 대체로 자국 내 소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sup>269)</sup>

따라서 러시아 정부는 극동지역에 대해 중앙연방관구와는 분리된

268) 한홍열 외, 『남북러 지역개발 정책과 산업 정책 연계 방안』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9), p. 83.

269) 박지원,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현황과 한국의 협력방안』 (서울: KOTRA, 2017), p. 14.

성장의 시각에서 다양한 제도를 내놓고 있으며, 극동지역에 대한 투자를 유입시키기 위해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이하 선도개발구역)’을 도입하였다. 2015년 3월 이에 대한 연방법이 발효된 이후 2021년 8월 기준 러시아 극동지역에는 20개의 동 구역이 존재한다.

〈표 IV-3〉 러시아 극동지역 선도개발구역 지정 현황

지역	구역명칭	지정시기	특화분야	투자액(예정액 포함) (단위: 10억 루블)	
				민간	정부
연해주	나제진스카야	2015.6.	경공업, 식품, 물류	56.7	3.9
	미하일롭스키	2015.8.	농축산업, 곡물생산	74.8	44.4
	볼쇼이카멘	2016.1.	조선	177.6	3.2
	네프테히미체스키	2017.3.	석유화학	658.9	0
하바롭스크주	하바롭스크	2015.6.	산업, 물류	54.8	2.5
	콤포스몰스크	2015.6.	산업 (항공기제작)	95.5	1.2
	니콜라옙스크	2017.4.	수산	5.6	3.1
아무르주	프리아무르스카야	2015.8.	산업, 물류	136.6	0
	벨로그르스크	2015.8.	농업	5.2	0.046
	스바보드니	2017.6.	가스화학	948.4	12.5
사할린주	고르니 보즈두흐	2016.3.	관광	16.4	10
	유즈나야	2016.3.	농업	18.6	1.8
	쿠릴	2017.8.	수산	12.6	0
캄차트카주	캄차트카	2015.8.	산업, 관광	29.8	8.5
추코트카주	베링콤포스키	2015.8.	광업	22.5	-
유대인자치주	아무로-힌간스카야	2016.8.	농축산업	16.7	-
자바이칼	자바이칼	2019.6.	광업	-	-
부랴티야 공화국	부랴티야	2019.6.	-	-	-
사하공화국	캉갈라시	2015.8.	산업	7.5	0.34
	유즈나야 야쿠티야	2015.12.	광업	34.0	0

출처: 극동개발공사(JSC Far Eastern Development Corporation) 홈페이지 (<https://erdc.ru/en>)  
(검색일: 2021.11.10.)에서 여러 자료를 찾아 저자 정리.

선도개발구역 지정과 별개로 러시아 정부는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두 가지 제도는 극동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정부의 대표적인 유인책 가운데 하나로 연방세, 토지세, 재산세 등 다양한 세금에 대해 감면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입주기업에 다양한 행정편의를 제공하여 친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업유치 관점에서 물류인프라 개선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프로젝트는 ‘프리모리예 1~2(Primoriye 1~2)’ 운송로 건설사업으로 러시아의 연해주 지방과 중국의 동북 3성 지역을 연결하게 된다. 이 사업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해양출구가 없는 동북 3성의 물류여건을 개선하고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정체되었던 극동지역의 물류 인프라의 확장으로 동북 3성을 포함한 지역물류 허브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극동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개발계획은 단순히 지역개발 차원의 수준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극동지역이 러시아에 갖는 의미는 경제적인 것에 더해 주변국과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도 얽혀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의 경제적 성장이다. 따라서 지난 수십 년간 낙후되었던 지역경제를 단기간 내에 발전시키는 데는 특별한 노력과 수단이 필요했다.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동아시아 경제와의 연계를 통해 활성화시키는 것이 그것이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해 러시아 정부는 극동지역 발전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나) 중국 동북의 전략적 가치

중국 동북은 랴오닝성·지린성·헤이룽장성을 포괄하며 한반도(북한)·러시아 극동·몽골과 국경을 공유하는 접경 지역이다. 과거



사회주의 시절 ‘공화국의 장자(長子)’로 불리며 중국의 중화학 공업 발전을 선도한 지역으로, 지금도 주장삼각주, 창장삼각주, 환발해 지역과 함께 중국의 4대 경제권을 구성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과 ‘차항출해(借港出海, 항구를 빌려 바다로 진출)’ 정책의 핵심지역이다. 다만 개혁개방 이후에는 동남부 연해지역에 밀려서 상대적인 위상을 많이 잃어버린 상황이다. 한국-중국 동북의 경제 교류 또한 이에 영향을 받아 지금은 별로 활발한 편이 아니다. 한반도와 가장 가깝다는 지리적 장점, 200만에 가까운 중국 동포가 있다는 언어·문화적 장점에 무역·투자 교류가 활발했던 1990년대에 비해서 아쉬운 점이 많다. 그러나 풍부한 자연 자원, 발달된 제조업과 교통 인프라, 인구 1억에 육박하는 거대시장, 적극적 외자유입 정책, 대북한 교류중심지로서의 동북은 여전히 협력 대상으로서 매력을 갖고 있다.<sup>270)</sup> 이에 한국 정부도 신북방정책의 대상지역으로 중국 동북을 포함시켰다. 신북방정책의 대상지역으로서 국가 단위가 아닌 지역 단위가 포함된 것은 동북이 유일하다. 동북은 한반도 북방에 위치해 있어 연안 벨트를 중심으로 북한을 개발하고 한반도 경제권을 형성하고자 하는 한반도신경제구상과도 연결된다.

이현태·김준영에 따르면 동북은 아래와 같은 다양한 협력 기회를 제공한다.<sup>271)</sup> 첫째, 동북은 모든 동북아 국가들의 국가급 국가전략들이 상호 교차하는 지역이다. 동북은 한반도, 극동 러시아, 몽골과 모두 접하고 있는 동북아 중심지이다. 몽골-러시아-중앙아시아-유럽을 잇는 북방통로의 시작이자 동해-한국-일본-태평양·북극항

270) 이현태 외, 『13·5 계획 시기 한국의 중국 동북지역 경제협력 과제와 전략』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7), p. 17.

271) 이현태·김준영, “한국과 중국 동북지역의 경제 협력: 현황, 정책, 시사점,” 『만주연구』, 제29호 (2020), pp. 103~108.

로를 통해 유럽과 미주(美洲)로 연결되는 해양통로의 출발점이다. 이에 동북아 각국은 이 지역과 연결된 국가급 전략을 제시해 왔다. 동북이 한국의 신북방정책, 한반도신경제지도 구상,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이 공영 발전할 수 있는 국제협력가능지역으로 기능할 수 있는 이유다.

둘째, 최근 동북 지방정부들이 한국을 주요 협력대상국으로 선정하고 적극적으로 협력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sup>272)</sup> 동북3성은 개혁개방 이후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고 경기가 침체되면서 주변국과의 협력을 통한 발전이 더욱 절실해졌다. 이에 랴오닝 성은 2017년 4월 선양, 대련, 잉코우 자유무역시범구를 출범시키고 ‘동북아 국가와 전방위 협력 추진’, ‘국가 간 양방향 투자촉진 협력의 신메커니즘 구축’, ‘유라시아 연결의 육해공 대통로 건설’, ‘현대물류시스템과 국제해운센터 건설’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례적으로 한국과의 협력을 자유무역시범구 계획안에 명시하였다. 지린성은 창지투(창춘-지린-투먼)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한국 기업을 위한 맞춤형 협력 플랫폼인 ‘한중국제합작시범구’를 구축하고 있다. 시범구에서는 통관, 검역, 인증, 유통, R&D, 인력 교류, 생산가공 등에서 각종 우대 조치를 고안하여 궁극적으로 한중 간 산업 가치사슬(value chain)을 형성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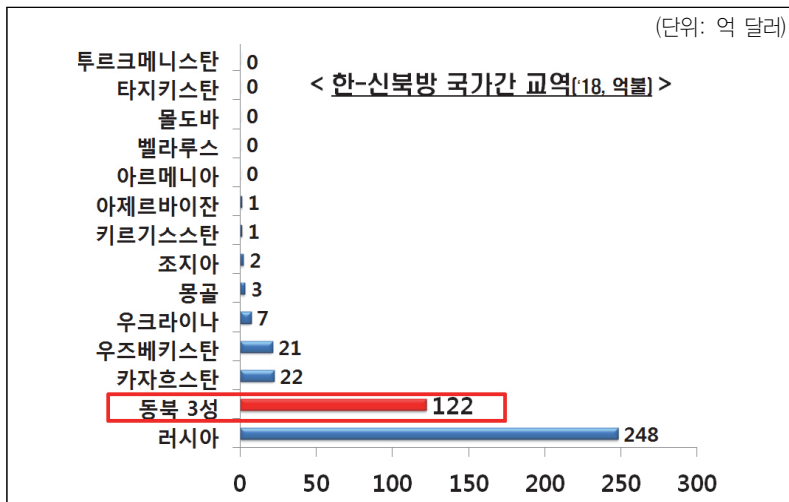
셋째, 동북은 그 자체로 거대한 소비시장을 형성하고 있어 한국 기업에 매력적인 곳이다. 1억 명에 가까운 인구, 석탄, 철강 등 풍부한 천연자원, 적극적 외자유입 정책, 한국 기업에 대한 우호 정서,

---

272) 북방경제협력위원회에 따르면 동북3성의 대한국 협력희망분야는 ① (랴오닝성 자유무역시험구) 바이오의약, 자동차부품, IT, 정밀기계, 의료 등 ② (지린성 중·한국제협력시험구) 바이오의약, 자동차부품, IT, 의료·미용, 문화콘텐츠 등 ③ (헤이룽성 자유무역시험구) 차세대 정보기술, 신소재, 장비, 바이오·의약 등이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중국 동북지역에서의 한중 경제교류협력 강화방안,”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제6차 회의 개최, 2019.11.13.), p. 5.

한국과의 문화 유사성, 언어가 통하는 동포 사회 등이 있어 무역과 투자 목적지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 실제로 동북은 2018년 신북방 정책 14개 대상 지역 중에서 무역 2위와 투자 3위를 차지함으로써 높은 위상을 보여주었다. 한국-동북 간 무역 규모는 러시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의 무역액을 합친 것보다 2배가 많을 정도로 비중이 높다(<그림 IV-1>, <그림 IV-2> 참고). 또한 동북은 석유화학(다칭 유전), 자동차(이치 자동차), 철강(안산 철강) 등 중화학 산업의 현대화 과정에서의 협력 및 광활한 곡창지대(옥수수·콩 등)를 통한 농업에서의 협력도 확대될 수 있다. 한-중 서비스·투자 FTA 후속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바이오·의약·헬스, 제약·미용, 문화콘텐츠 및 관광 등에도 한국 기업이 투자할 만하다.<sup>27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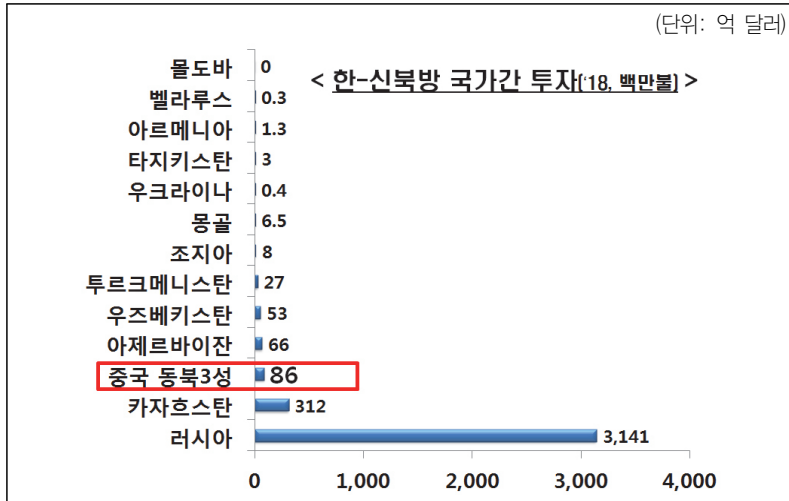
<그림 IV-1> 신북방정책 협력대상국과의 교역



출처: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중국 동북지역에서의 한중 경제교류협력 강화방안,” (북방경제협력 위원회 제6차 회의 개최, 2019.11.13.), p. 1.

273) 이현태·김준영, “한국과 중국 동북지역의 경제 협력: 현황, 정책, 시사점,” pp. 103~108.

〈그림 IV-2〉 신북방정책 협력대상국과의 투자



출처: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중국 동북지역에서의 한중 경제교류협력 강화방안” p. 1

넷째, 동북은 중국 내수 시장과 궁극적으로 유라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test-bed)이기도 하다. 중국은 가공수출 중심의 세계 제조업 공장에서 거대한 국내시장을 보유한 내수 중심의 국가로 변모하고 있다. 이에 동북은 중국 및 유라시아 대륙 진출을 꾀하는 한국 기업들의 전초 기지로 활용될 수 있다. 우선 한국과의 협력에 적극적인 동북 3성이 조성하고 있는 한중 협력 플랫폼에 진입하여 안정성을 확보한 후 본격적인 중국 시장 공략에 나설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동북의 한중 경제협력 플랫폼에 우리의 요구사항을 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 한국 기업이 들어가서 활동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심양-북경 고속철 연결(2019), 하얼빈-창춘공항 확장(2018), 중·몽·러 경제 회랑 건설 등이 이루어지면서 동북과 유라시아를 잇는 교통·물류여건이 지속 개선되고 있다. 동북에 교두보를 마련하면 중국 국내뿐만 아니라 유럽,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 유라시아 시장이 더욱 가까워

질 수 있는 이유다.

다섯째, 한국이 신북방정책의 주요사업으로 내세우고 있는 9-Bridge (철도, 항만, 가스, 전력, 북극항로,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 사업의 일부를 동북3성에서도 협력 추진할 수 있다. 철도, 풍력발전, 농업, 수산업 등에서의 공동 협력이 가능하다. 철도의 경우 한국은 동북을 시작으로 하는 여러 철도 노선들, 즉 중국횡단철도(Trans Chinese Railway: TCR)를 통한 중국 내륙 및 중앙아시아·유럽, 만주횡단 철도(Trans Manchurian Railway: TMR)를 통한 북한(나선)-극동 러시아(포시에트, 자루비노)-훈춘-창춘-내몽고 등의 노선을 활용하여 한반도로부터 중국, 러시아, 중앙아시아, 유럽으로 연결되는 많은 교통사업들을 구상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창한 동북아 철도공동체 구상도 이런 아이디어에 기반을 두고 있다.<sup>274)</sup> 또한 동북3성은 중국 최대의 곡창지대로 2억 명 이상이 먹을 수 있는 농업 지대로 농업 협력의 가능성도 높다. 농산물 가공산업, 종자개량산업, 화학비료 생산, 농작물 배양기술 등 농업 관련 산업에 한국과의 협력 기회가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동북3성 북쪽은 지역적 특성상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 분야에서 협력의 가능성이 있다.

여섯째, 동북은 북한 개방 시 중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이다. 한국은 동북에서 우선 한중 협력 플랫폼을 시험하고 향후 북한의 참여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동북에서 한중 협력 플랫폼을 성공시키고 향후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여 동북에서의 남북 혹은 남·북·중 협력으로 발전시키는 구상이다. 이에 동북3성에서 사업협력을 추진할 때에는 항상 북한의 참여 공간을 열어두고 북한에 협력의 이점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 동북에서 이런 대북

---

274)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은 한반도, 중국 동북, 러시아 극동을 모두 포괄하는데, 구상이 실현될 경우 고속철도를 통한 역내 인구 2억 명의 1일 광역 생활권 형성이 가능해진다.

한 협력플랫폼은 향후 북한 개방 시 북한에서의 협력플랫폼으로 연결될 수 있다. 동북에서의 한중 협력의 성공 모델은 향후 한반도 긴장이 완화될 때, 남북, 남·북·중, 남·북·러, 남·북·중·러 등 다양한 양자 및 다자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모델이 되면서 북한을 국제협력과 개방으로 이끄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sup>275)</sup> 예를 들어, 동북과의 철도 관련 협력을 강화한 후 북한을 참여시킨다면 동북아 철도공동체가 실현되면서 유럽·중앙아 등으로의 물류비용 절감 및 한반도-동북 1일 생활권 확보가 가능해진다. 요컨대, 동북은 북한을 염두에 둔 전략적 협력 지역이기에 한국이 북방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여기에 세워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sup>276)</sup>

## 나. 추진 목표 및 고려사항

### (1) 신북방 국가 디지털·혁신 협력의 이원화

신북방지역은 역사적인 배경과 경제발전의 양상 등의 다양한 요인에 따라 과학기술 발전의 격차가 존재한다. 구소련시절부터 우수한 과학기술을 보유하고 활용해 온 러시아나 이러한 기술기반을 보유하고 있었던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와 같은 국가들은 과학기술발전이 상대적으로 발전한 반면, 코카서스와 중앙아시아의 다수의 신북방 국가들은 기술발전이 더딘 편이다. 따라서 전자의 국가들과의 협력전략의 요체는 이들 국가가 가진 디지털 및 과학기술의 기반을 한국이 활용하거나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의 기술개발 및 상호화로 연계되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것이 될 수 있다.

275) 한반도 북방에서의 다자 협력 중 남·북·중 협력에 대한 연구는 이현태 외, 『남·북·중 경제협력 방안 연구』(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9); 정은이 외, 『한반도 평화변영과 남북중 협력방안』(서울: 통일연구원, 2018) 참고.

276) 이현태·김준영, “한국과 중국 동북지역의 경제 협력: 현황, 정책, 시사점,” pp. 103~108.

신북방지역의 주요 국가인 러시아의 경우, 특정 분야에서의 우수한 과학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소비에트 해체 이후 다수의 우리 기업들의 ‘기술문제(bottle neck 문제 등)’ 해결과 제품개발에 기여한 바가 크다. 다음의 표는 러시아의 기술을 한국의 기업이 제품개발에 활용한 주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표 IV-4〉 러시아 기술의 한국기업 활용사례

기술명 (적용기업)	사례
인조 다이아몬드 제조 (일진 다이아몬드)	• 인공적으로 다이아몬드를 제조하기 위한 고온, 고압에서 견딜 수 있는 가압 설계기술 및 촉매기술
전자레인지용 마그네트론 개발 (LG, 대우전자)	• 전자레인지에서 초음파를 발생시키는 마그네트론 설계기술
VTR 헤드 다이아몬드 코팅기술 (대우전자)	• VTR 헤드 표면의 내마모성을 증가시켜 수명을 거의 무한대로 향상시키는 Diamond-Like Carbon 코팅기술
다목적 열전소자 (써모텍, 청호)	• 열전소자 제조기술 및 냉각 유닛 설계기술을 김치냉장고, 냉온정수기에 응용 일정 온도 유지 기술
플라즈마 표면개질기술 (LG전자)	• 에어컨디셔너 금속 부품 표면개질에 적용 러시아 기술로 국내기업의 애로기술 해소를 통해 세계 시장 점유율 최고의 히트 상품을 개발한 대표적 사례
초음파 진단기 (메디슨)	• 초음파 진단기기의 핵심기구인 트랜스듀서 설계기술
레이저치료기 개발기술 (레이저 옵텍)	• 러시아와 협력을 통해 독자적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의료기기 분야에 접목 • 세계 최고의 암치료기관인 텍사스 대학 MD앤더슨 암센터에 자사제품 수출
복강내시경, 뇌 형광 내시경 개발 (인더스마트)	• 러시아 공동연구 결과물을 연구원 창업으로 스피노프하여 서울대학병원 자회사 편입 및 임상 진행
한국형 패트리엇 (천궁) 휴대용 미사일 (신궁) (LIG 넥스원)	• 유도조종센서 등 핵심기술을 도입하여, 국산화 성공

출처: 박지원·최진형, “한·러 경제협력과 산업협력 신모델 구축: 화학·제약산업을 중심으로,” 『KOTRA Global Marketing Report』, 19-021 (2020), pp. 45~46, <<https://news.kotra.or.kr/user/reports/kotranews/20/usrReportsView.do?reportsIdx=11825>> (검색일: 2021.10.11).

이처럼 러시아의 기초과학기술이 발전되어있고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 우리 기업들의 러시아에 대한 기술협력수요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러시아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역시 IT와 항공, 우주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으며 벨라루스의 IT기술도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sup>277)</sup> 따라서 이들 국가와의 협력전략은 IT 기반의 디지털경제 발전과 다양한 혁신산업 분야의 육성을 위한 기술협력의 기반을 강화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3국 모두 IT 소프트웨어 분야의 국제경쟁력이 강하다. 한국의 IT 분야 경쟁력은 소프트웨어 분야 보다는 하드웨어와 서비스 분야에 있다. 따라서 IT 분야에서는 이들 3국의 소프트웨어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 ‘IMD 글로벌경쟁력센터(IMD Global Competitiveness Center)’가 평가한 ‘IMD 글로벌 디지털경쟁력지수 2020(IMD World Digital Competitiveness 2020)’에 따르면 한국의 디지털경쟁력 순위는 세계 63개국 가운데 8위에 달해 비교적 높은 순위를 나타냈으나 ‘고급외국인력(foreign highly-skilled personnel)’ 보유와 ‘국제경험(international experience)’은 각각 43위와 39위에 그쳐<sup>278)</sup> 향후 국가 차원의 디지털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이들 국가 전문인력과의 기술협력을 위한 인적교류와 네트워크 구축이 한국의 약점을 보완하는 측면에

---

277) 삼성전자는 지난 2009년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에 R&D 연구소(Samsung R&D Institute Ukraine)를 설립하고 인공지능, AR/VR 등의 기술을 연구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Luxsoft, GlobalLogic, Softwerve 등 세계적인 IT 기업들이 우크라이나에 진출해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같은 경쟁력은 우수한 IT 분야 인재를 꾸준히 배출하는 교육시스템에 있다. 또한, 항공 및 우주분야에서도 소비에트 시절의 항공우주 설비 생산기반을 바탕으로 현재도 Antonov, Kharkiv State Aviation Enterprise 등의 대형 항공기 제작업체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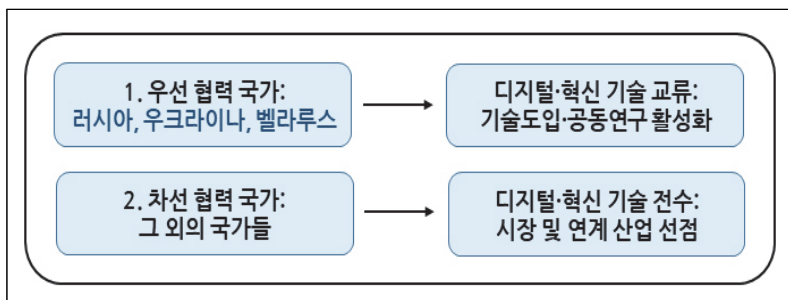
278) IMD World Competitiveness Center, *IMD World Digital Competitiveness Ranking 2020* (IMD World Competitiveness Center, 2020), p. 107.



서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으며 기술교류를 통한 우수기술의 도입을 통해 디지털 및 혁신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다.

반면, 이들 국가를 제외한 북방국가들의 경우, 사실상 디지털·혁신 기술협력의 차원에서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기술적인 이익은 크지 않다. 따라서 이들 국가와의 협력 방향은 앞선 3개 국가와 같이 기술적인 교류를 통한 한국의 경쟁력 강화와는 다른 방식이 되어야 한다. 이들 국가들의 일부는 이미 디지털경제·혁신산업 육성의 목표를 갖고 있으며 구체화된 계획을 실현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문제는 기술적인 기반이 부족하여 현실적으로 산업육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이 국가들에 대한 한국의 협력은 기술적으로 보완적인 협력 추진과 해당 시장의 진입 및 선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림 IV-3〉 신북방 국가에 대한 디지털·혁신산업 협력 이원화 전략



출처: 저자 작성.

이들 국가들은 한국과의 협력을 통한 기술도입에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례로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지난 2019년 우리 정부의 중앙아시아 순방 당시, 우즈베키스탄의 디지털 의료산업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으며 2020년 11월에 있었던 제10차 한-우즈베크 무역경제공동위원회에서는 양국이 향후 디지털산업분야 협력 양

해각서를 체결하고 디지털의료 및 에너지산업 디지털화 등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sup>279)</sup> 이러한 협력은 상호 간 동등한 수준에서의 기술교류보다는 사실상 우리 기술의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전수를 의미한다. 디지털·혁신 기술이 부족한 신북방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기술적 수준이 높은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 역량을 확보하고 4차 산업혁명에 필수적인 기술을 획득해 글로벌 추세에 순응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국가들의 협력의도와 수요에 따라 전략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술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작다는 인식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기술제공을 통해 우리기업은 아직 시장의 표준이 완전하지 않은 해당 산업 내에서 기술표준을 선도하고 시장의 규범을 만들어 낼 주도권을 갖게 된다. 일단 형성된 기술표준은 산업의 성장을 결정할 생태계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게 되므로 시장 선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우리 정부가 오래전부터 대외협력 사업의 하나로 수행해 온 ‘지식공유사업(KSP)’은 이미 수년 전부터 프로그램의 수행개념이 단순한 지식 공유에서 벗어나 지식 공여를 통한 수혜국의 산업분야 시장표준 설계와 선점이 주요 추진 목표의 하나로 내재화되었다. 시장형성 초기에 해당 산업의 표준을 형성한다면 타국과의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기술력이 높지 않은 신북방 국가들과의 협력도 이런 관점에서 추진한다면 향후 우리 기업의 시장진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

279)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 우즈베크 부총리와 정상순방 성과 창출 방안 논의,” (2020.12.6. 보도자료).

## (2) 러시아 극동 및 중국 동북의 거점화

### (가) 러시아 극동: 유라시아 경제 편입의 거점

극동지역은 러시아 정부의 산업화 노력이 집중되고 있는 곳이다. 그리고 이 지역은 한국과의 지리적 거리가 가까워 그동안 많은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 진출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었던 곳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동안 한국기업들은 이곳에 제조업과 관련한 적극적인 투자나 진출보다는 물류나 유통 등에 더 관심을 나타내왔다. 소비시장으로서 극동지역의 규모가 작고, 인건비 등 제조업 기반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비용도 낮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팬데믹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의 지형이 변화하는 추세에서 이 지역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투자가 지속되고 일부 결과가 가시화되면서 한국이 극동지역 중심의 유라시아 산업 가치사슬을 구성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팬데믹으로 인해 글로벌 가치사슬은 기업은 기존과 같이 단순히 생산비가 저렴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투자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생산비 못지않게 공급망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의 여부도 중요한 투자기준이 되고 있다. 팬데믹 과정에서 일부 의료용품 등이 자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은 많은 국가들은 중요 제조업의 경우 자국 또는 자국이 일정 부분 통제 가능한 지역에 두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즉, 팬데믹으로 인해 제조업 측면에서 기존의 무차별적인 세계화의 확장보다는 지역별로 분화된 가치사슬의 조성 필요성이 조명을 받게 된 것이다.

극동지역에 대한 한국의 제조업 투자와 기업진출은 그동안 중국과 동남아시아에 지나치게 치중되었던 한국기업의 가치사슬을 일부 조정하여 유라시아 지역의 산업재편에 대응한다는 의미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투자는 기존의 가치사슬의 방향을 전환하거나 대체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새롭게 형성되는 가치사슬에 한국도 소외되지 않고 편입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기반으로 한다. 러시아가 유라시아 지역에 대한 경제공동체인 ‘유라시아 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EAEU)’의 내부적인 구심력을 강화할수록, 지역에 기반을 둔 산업협력은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극동지역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제조업 투자는 향후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되면 남·북·러 3각 협력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지역으로 의미가 있다. 북한에 대한 제재가 본격화하기 이전에 많은 북한의 노동자들은 극동지역의 건설현장이나 벌목현장에서 외화벌이를 하곤 했다. 부족한 극동지역의 노동력을 보완할 수 있는 북한의 노동력은 지역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되어 왔다. 한국과 러시아가 극동지역에 대한 합작투자를 통해 제조업 기반을 마련하고 이후 북한이 제재에서 자유로워져 노동력 투입이 가능하다면 3국 간 경제협력의 구조가 형성될 수도 있는 중요한 협력의 의미가 될 수 있다.

#### (나) 중국 동북: 유라시아 진출의 거점

중국 동북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하에서 한국 정부도 신북방정책 대상지역에 중국 동북을 포함하고 있다. 2018년 2월 한중 경제장관은 한국의 신북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의 실질적인 연계를 동북3성에서 실현하고 이를 한국의 북방경제협력위원회와 중국의 발전개혁위원회 동북진흥사가 이를 주관하기로 합의했다.<sup>280)</sup> 특히 중국은 지린성 성도인 창춘에 한국과의 경제협력 교류를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한중국제합작시범구를 조성하고 있다. 이 시범구는 2020년 4월 중국 국무원이 국가발전개혁위원회회의의 ‘한중국제합작시범구 총체방안’을 승인함으로써 중앙정부급 시범구로 확정되었다. 이 시

280) 이현태·김준영, “한국과 중국 동북지역의 경제 협력: 현황, 정책, 시사점,” p. 99.

범구는 한국 산업과 기업의 중국과 유라시아 진출을 위한 거점지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시범구는 지린성 창춘시 동북부에 위치한 총면적이 210km<sup>2</sup>에 이르는 지역으로, 창춘 현대화 도시권건설과 고도화 발전전략 실현을 목적으로 조성한 창춘시 4대 발전구역 중 하나이다. 시범구는 서부국제 육로항구, 동부 국제공항, 남부 종합보세구 등 개방 플랫폼을 기반으로 중국-유럽 정기열차, 창춘-훈춘-자루비노-한국, 창춘-다롄-한국 등 다양한 국제 육해복합운송통로를 통해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융합하고자 한다. 시범구는 한중 경제협력을 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고도로 개방된 동북아지역 국제화 신도시로 도약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미 초기 부지면적 36km<sup>2</sup>에 도로, 급수, 배수, 급열, 전력, 가스, 통신 등 공공 부대시설 등 각종 도시 인프라를 마련하여 산업발전과 국제협력의 조건과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sup>281)</sup>

‘한중국제협력시범구 총체방안’은 2025년까지 시범구에 세계 일류 수준의 비즈니스 환경 및 인프라를 조성하여 외국인투자를 확대하고 2035년까지는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한다는 2단계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1단계인 2025년까지는 한국과의 경제협력에 주력한다. 국제 비즈니스 인프라를 구축하여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 비교우위가 있는 특색 산업을 육성하면서 질적으로 우수한 국제협력 플랫폼을 조성한다. 2단계인 2035년까지는 시범구의 첨단산업 기능을 확대하고 대외 경제협력 성과를 이루고 산업발전, 전면개방, 녹색발전, 도농 협동발전 수준을 향상시켜 역내에서 강한 경쟁력을 갖춘 국가협력시범구로 발전한다.<sup>282)</sup>

---

281) 한중도시관 관리위원회, 『한중도시관 자료집』 (창춘: 한중도시관, 2021), p. 7.

282) 동훈, “중국, 창춘시에 한중 국제협력시범구 조성,” KOTRA 해외시장뉴스, 2020.10.29.,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6/globalBbsDataView.do?setIdx=322&dataIdx=185305>> (검색일: 2021.9.1.).

〈그림 IV-4〉 동북3성과 한중국제합작시범구 위치



출처: 중한산업원(中韓產業園), “한중국제합작시범구 - 시범구 소개,” <[http://www.ccksp.com/pcsite/index/nav?navPath=gov\\_intro](http://www.ccksp.com/pcsite/index/nav?navPath=gov_intro)> (검색일: 2021.8.1.).

중국 정부는 이 시범구를 일핵(一核), 양익(兩翼), 다원(多元) 구조로 조성할 계획이다. 일핵은 R&·영화·애니메이션·게임·의료·미용 중심의 첨단 서비스업 발전 핵심 지역으로, 양익은 서부내륙항의 첨단제조업 클러스터와 동부공항의 산업 클러스터로, 다원은 신재생에너지자동차, 장비제조, 의약·의료, 영화·애니메이션, 항공물류 등의 특별 산업단지 건설, 국제비즈니스 기능 지역 건설, 창춘 싱롱 종합 보세구를 바탕으로 국경 간 전자상거래 단지 건설 등을 지원한다. 4대 주도 산업으로 첨단장비 및 스마트제조, 의약 의료산업, 건강식품산업, 정보기술산업을, 4대 국제서비스 플랫폼으로 현대물류플랫폼, 금융 및 무역 플랫폼, 글로벌 과학연구혁신 플랫폼, 과학교류협력 플랫폼을, 2대 국제교류센터로 국제인재교류센터, 국제서비스센터를 설정하고 지원을 집중하기로 한 것도 중요한 특징이다(〈표 IV-5〉 참고).

〈표 IV-5〉 한중국제협력시범구 발전 구도

4대 주도 산업	4대 국제 서비스 플랫폼	2대 국제교류센터
첨단장비 및 스마트 제조: 스마트 장비, 에너지 절약 친환경 장비, 신에너지 및 스마트 커넥티드카	현대 물류 플랫폼 • 생산물류/스마트공급 • 물류집산/종합보세	국제인재교류센터 • 산업, 과학, 문화, 예술, 관광 등에서 인재 교류 확대
의약의료산업: 의료용 바이오 소재, 개인 맞춤형 의료, 의료 미용	금융 및 무역 플랫폼 • 핀테크 / 크로스보더 금융/ 국제무역 및 금융 / 산업투자	
건강식품산업: 녹색 및 기능성 식품, 중양식 주방용 식품	글로벌 과학연구혁신 플랫폼 • 산학연 연동 / 공동개발혁신 인큐베이팅	국제 서비스 센터 • 국제 인재 대상 의료, 교육 등의 서비스 제공으로 양호한 거주 환경 조성
정보기술 산업: 광전자 소프트웨어와 정보기술	과학교류협력 플랫폼 • 대학 연맹 / 인재양성 • 개인창업 인큐베이터	

출처: 한중도시관 관리위원회, 『한중도시관 자료집』 (창춘: 한중도시관, 2021), p. 8.

창춘 한중 국제협력시범구는 아직 청사진만 나온 단계이지만 상무부가 아닌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주도하는 최초의 국제합작시범구로서 국무원 승인까지 획득했기에 중앙 및 지방 정부 차원의 다양한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표 IV-6〉 참고). 장동밍(张东明) 라오닝대학 국제관계학원 교수도 “한중 국제합작시범구의 출범은 보건의료, 문화, 관광 등 서비스업과 인공지능, 로봇 등 생산성 향상을 견인할 수 있는 첨단기술 분야의 한중 경제협력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했다.”라고 평가하고 “시범구는 중·장기적으로 동북아 국제물류 거점과 동북아경제협력의 거점으로 발전을 도모하고 있어 한국기업들은 현지기업과 비즈니스 협력, 신사업 발굴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찾길 바란다.”라고 조언한 이유다.<sup>283)</sup> 북방경제협력위원회에서도 신북방정책의 중요한 중국 측 거점지역으로 창춘 국제합작시범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283) 위의 글.

〈표 IV-6〉 한중국제협력시범구의 주요 지원정책

지원정책	내용
지원시스템	• 행정 간소화, 관리 운영 효율화, 지적권 보호 등의 기업지원 시스템 구축
외상투자유치	• 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를 지속 축소 • 외상투자 기업에 대한 지분 제한 등을 점진적으로 축소
무역편리화	• 무역 창구 단일화, 검역 등의 제도 상호인증, 항공권 배분 확대 등 무역 편리화 추진
출입국간소화	• 우수 산업 인재의 거류 요건 완화 및 144시간 경유 무비자 정책 시행 추진
재정지원	• 투자기업에 대한 재정 및 조세 지원 및 한중 세관 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증을 추진해 국제 전자상거래를 적극 유도
금융협력	• 외국인 투자금융기구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글로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출처: 동훈, “중국, 창춘시에 한중 국제협력시범구 조성,” KOTRA 해외시장뉴스, 2020.10.29.,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6/globalBbsDataView.do?setltx=322&dataIdx=185305>> (검색일: 2021.9.1.).

## 다. 추진 과정 및 방법

### (1) 공동 디지털 생태계 형성을 통한 혁신산업 협력 기저 구축

신북방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경제협력과 신산업 육성에 대해 한국이 같은 공동의 협력생태계를 구성하고 상호 보완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기제가 필요하다. 한국은 이미 신북방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혁신산업 분야의 협력 기반을 마련해 왔다. 협력 핵심국가인 러시아와의 혁신산업 부문 협력을 위한 ‘한러혁신센터(Korea-Russia Innovation Center: KRIC)’ 설립이 그것이다. 동 센터는 한국과 러시아와의 혁신기술의 상호 협력을 통해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적 문제해결과 해외시장진출을 돕는 역할을 하도록 2019년 1월 개원하였다. 설립 목적은 러시아의 기술 진단 및 평가를 통해 기술협력을 기획하고 러시아의 유망기술을



발굴하여 한국의 수요와 매칭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sup>284)</sup> 개원 이후 국내외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으로 대리 기술협력사절단 방문, 기술협력사업 및 기술공유회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한러혁신센터는 신북방 국가들과의 전면적인 혁신산업 협력을 위한 기제로 활용하기는 조직의 구조와 목적 측면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 먼저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동 센터의 협력대상은 러시아에 국한되어 있다. 향후 협력대상을 신북방 타 국가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는 계획을 갖고 있으나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동 센터가 한국과 신북방 국가들의 디지털·혁신 분야의 협력 플랫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대러시아 중심의 협력구도를 과감히 개편하여 전면적인 대 북방 협력체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북방지역에서 과학기술이 가장 발전한 국가는 의문의 여지없이 러시아이지만,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의 과학기술도 러시아 못지않게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가 다수이다. 따라서 한러혁신센터의 명칭, 조직, 체계를 신북방 협력의 틀에 적합한 방식으로 개편하고 기술도입과 공동연구가 가능한 우선적 협력국가를 대상으로 한 협력과 기술이식 및 시장진출을 추진해야 하는 국가들의 상황에 적합한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과 같이 사실상 한국 기업의 기술협력수요를 조사하고 이에 적합한 러시아 기업을 찾는 방식의 단순한 일대일 매칭 방법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식은 우리 기업의 수요에 맞는 적합한 기술을 찾는 방식으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혁신산업 협력의 확장성 측면에서는 높은 평가를 내리기 어

---

284) 한러혁신센터, “한-러 혁신플랫폼: 역할 및 기능,” <<https://kric.kitech.re.kr/html/?pmode=mission>> (검색일: 2021.5.18.).

럽다. 양국의 협력과정에서 가능한 한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혁신 분야에서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혁신센터가 각 국가의 파트너와 주도적으로 협력분야를 발굴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 러시아와 가장 우선적으로 협력해야 할 분야 가운데 하나는 ‘인공지능(AI)’ 관련 산업이다. ‘모스크바 카네기센터(Carnegie Moscow Center)’에 따르면, 인공지능 분야에서 러시아의 기술은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이기는 하지만, 개발 우선 순위에서 AI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AI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생성, 데이터 액세스 및 품질 향상, AI 프로젝트를 위한 하드웨어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sup>285)</sup> 산업 부문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한국의 제조업역량과 연계시킬 수 있는 분야가 매우 많다.

〈표 IV-7〉 러시아 인공지능 분야 발전을 위한 과제

구분	주요 과제
1	인공지능 분야의 발전을 위한 과학연구 지원
2	인공지능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설계 및 개발
3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의 가용성과 품질 향상
4	인공지능에 활용되는 하드웨어의 성능 향상
5	러시아 시장 내 인공지능 기술 시장 확보와 기술의 잠재적 사용에 대한 대중의 인식도 향상
6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 및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회관계관리 체계 구축

출처: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10 октября 2019 г. № 490 “О развитии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ГАРАНТ.РУ, 14 октября 2019, <<http://www.garant.ru/products/ipo/prime/doc/72738946/#ixzz6emZs58NF>> (Accessed May 21, 2021).

285) Nikolai Markotkin and Elena Chernenko, “Developing Artificial Intelligence in Russia: Objectives and Reality,” Carnegie Moscow Center, 2020.8.5., <<https://carnegie.ru/commentary/82422>> (검색일: 2021.5.22.).

동 센터는 이처럼 디지털 및 혁신 분야에서 러시아의 기술수요를 파악하고 한국과 공동협력 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러시아의 수요를 한국의 기업뿐만 아니라, 각종 연구 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러시아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의 혁신산업 역량과 수요를 파악하고 국내에 연계시키는 작업도 꾸준히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은 지금의 한국 일방적인 센터운영이 아닌 각 국가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담보된 방식의 운영전략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동 센터를 중심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와는 각 국가의 혁신전략과 비전, 세부협력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각각의 협력체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디지털산업, 인공지능, 5G, AR/VR, 메타버스 등 각종 혁신생태계의 기반이 되는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상용화할 수 있다. 그 외의 국가들과도 마찬가지로 혁신센터 중심의 국가 간 협의체 구성은 각 산업에서 해당 국가의 구체적인 협력 분야를 특정하도록 하여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과 우리 기업의 진출이 가능하도록 할 것으로 기대된다.

## (2) 러시아 극동 및 중국 동북의 거점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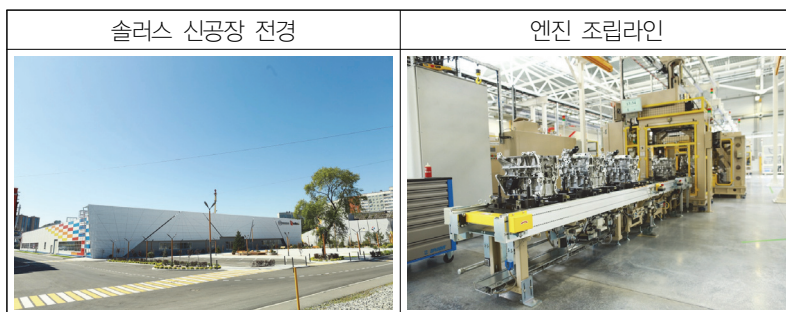
### (가) 선도개발구역 진출을 통한 극동지역 거점화

현재 극동지역에는 선도개발구역과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도 정부 차원에서 ‘나제진스카야 선도개발구역(ТОР Надеждинская)’에 한국기업 전용 단지 조성을 추진하여 한국기업이 극동지역에서 거점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동 개발구역은 블라디보스톡시와 인접한 관계로 물류입지가 탁월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공항과 9km 떨어진 곳에 위치

하고 있으며 약 2km 떨어진 곳에는 여객과 화물 운송이 가능한 나제진스카야 철도역이 있다. 또한 블라디보스톡항과는 약 32km, 주요 도로인 M-60 도로와는 12km 거리에 있는 등 교통·물류 중심지로 적합한 지리적 요건을 갖추었다.<sup>286)</sup> 2015년 6월에 선도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약 50여 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다.

이미 나제진스카야 선도개발구역 내에는 일본 자동차 기업인 ‘마즈다(Mazda)’의 신공장이 입주해 있는데, 지난 2018년 입주한 이래 엔진 등 주요 부품을 현지에서 조립하면서 완성차를 생산하고 있다. 극동지역의 자동차 거점으로서 동 선도개발구역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IV-5〉 마즈다-솔러스 엔진조립 신공장



출처: 솔러스(Sollers), “New Mazda engine plant’s door opens in Vladivostok,” September 10, 2018, <<http://www.sollers-auto.com/en/pressroom/news/index.php?id35=879>> (검색일: 2021.10.10.).

이 밖에도 동 선도개발구역 내에는 건축자재, 수산물가공, 전자제품 조립, 플라스틱 및 화학제품 생산 등을 하는 다양한 기업들이 입주해 있다. 현재 추진 중인 한국기업 전용단지의 인프라 구축이 끝난 이후에는 기업모집을 통해 입주기업이 선별되고 투자가 이루어

286) 주 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 『2018 선도개발구역 및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제도』 (주 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 2018), p. 11.

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용공단은 현재 특정한 산업부문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투자를 원하는 기업이면 어떤 기업이든 투자가 가능하다. 따라서 러시아를 포함한 신북방지역에 대한 제조업 투자를 통해 극동지역에 거점을 구축하려는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물론, 나제진스카야 선도개발구역의 한국기업 전용단지 이외에도 극동지역의 다양한 선도개발구역과 자유항지역에 대한 제조업 투자가 가능하다. 극동지역의 이러한 제도의 특징은 기업이 영위하는 산업의 종류에 따라 특정 선도개발구역 입주를 통해 클러스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하일롭스키 선도개발구역(TOP Михайловский)’은 농축산업과 관련된 기업의 입주가 많은 곳으로 대부분의 입주기업이 농축산물 생산 및 가공산업과 연계되어 있다. ‘볼쇼이카멘 선도개발구역(TOP Большой Камень)’은 조선업에 특화된 선도개발구역으로 러시아 최대의 국영조선소인 ‘즈베즈다(Звезда) 조선소’ 인근에 조성되어 있어 조선부품기업들의 입주가 많다. 특정 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은 해당 선도개발구역에 입주하여 클러스터화를 추진할 수 있고 러시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시장 진출이 좀 더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 (나) 국제협력시범구에 대한 적극적 정책 협력

창춘 한중 국제협력시범구는 2020년 6월 29일 합작 프로젝트 조인식을 올렸다. 이날 행사에는 창춘시 서기 왕카이(王凱)를 비롯한 지린성, 지린시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투자 조인식에서 한중 국제협력시범구는 대상그룹, 삼성그룹 등 한중 기업들과 총 620억 위안 규모의 투자 의향서를 체결했다. 한중 국제협력시범구는 앞으로 총 37개의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 중 산업 분야

프로젝트가 22개, 금융 분야 프로젝트가 4개, 학교 및 연구기관 프로젝트가 3개다.<sup>287)</sup>

시범구는 앞으로도 양국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협력을 통해 중국 타 지역 대비 유리한 정책이 부여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선 중국 측이 시범구에 유치하고 싶어 하는 희망 산업 분야의 한국 기업들은 기업 차원의 진출 가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중국 측과의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한국 진출 기업에 유리한 조항을 시범구 정책 안에 넣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관련 기업들에 시범구에 대해서 정보를 정확하고 자세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물론 최종적 여부는 기업이 장기적 가능성을 보고 결정한다.

특히 시범구의 중·장기적 잠재력은 존재하나 정치, 정책적 리스크도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다소 보수적인 접근도 필요하다. 우선, 진출 기업에 대한 정책적 혜택이 중국의 다른 자유무역 시범구에 비해서 얼마나 나은지 아직 명확하지 않다. 기업지원시스템, 외상투자유치, 무역 편리화, 출입국간소화, 재정지원, 금융협력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지만 시범구만의 차별적인 최혜 지원정책은 아니라는 점에서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다.<sup>288)</sup> 다만, 기업별로 시범구 측에서 제안하는 우대혜택이 상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일부 유치 희망 기업에 파격적인 우대혜택도 제시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에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시범구 진출 시 물류방안에 대한 사전적 설계가 필요하다. 시범구의 지리적 위치로 인한 중국 다른 지역보다 물류비가 높을 것이고 이는 진출 장벽으로 작용한다. 동북3성의 경제 성장을 통한 자체 수요가

---

287) 동훈, “중국, 창춘시에 한중 국제협력시범구 조성.”

288) 김동수, “한중국제협력시범구의 출범과 의미,” 『중국산업경제브리프』, 통권 제74호 (2020), pp. 8~9.

확대되거나, 물류 인프라가 개선되기 전까지는 시범구 진출의 부정적 요소이다. 따라서 진출 기업에 대한 물류비 지원, 국제 화물열차 활용 방안 등 물류 환경 개선 방안을 중국 측에 요구하거나 한국 정부에서 검토해야 한다.<sup>289)</sup>

## 2. 사회문화

### 가.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1) 코로나19를 계기로 증가한 보건·의료 분야 협력 수요

2020년부터 지속된 코로나19의 유행은 신북방지역에서도 많은 감염자와 희생자를 낳았다. 러시아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021년 12월 6일 기준 983만 3,749명으로 1000만 명에 육박했으며 신북방지역에서 두 번째로 확진자가 많은 우크라이나의 경우는 350만 1,955명에 달했다.<sup>290)</sup> 이 밖에도 같은 기간 기준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의 감염자 수도 누적기준 각각 100만 명과 18만 명을 상회하는 코로나19는 지역 내 보건·의료체제의 부실함과 낙후성을 드러내도록 했으며 의료산업 전반에 대한 개편과 현대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

신북방 국가들은 의료시스템과 체계에 있어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사회주의적인 방식을 일부 답습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공공부분의 역할이 비대하고 여전히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다. 각 국가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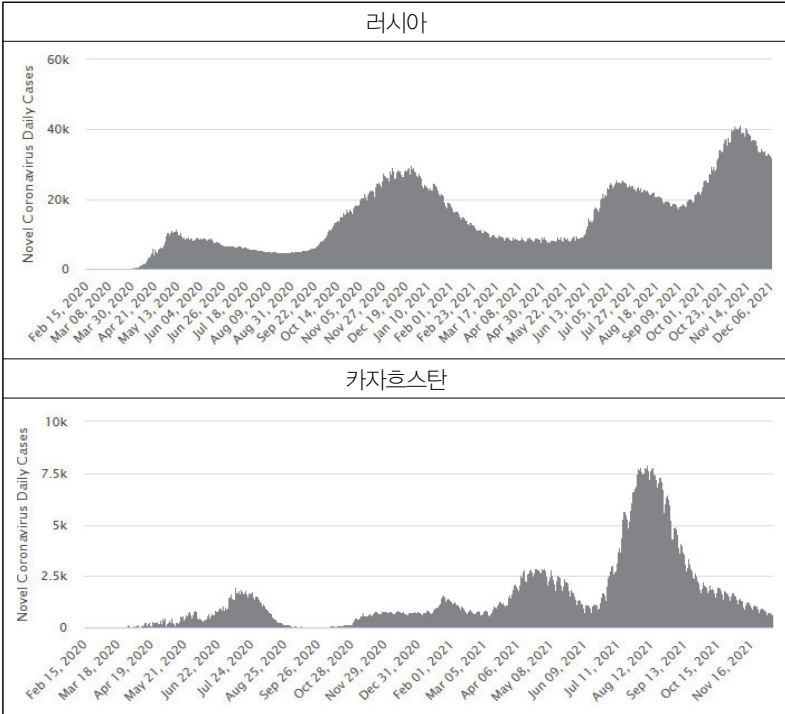
---

289) 오종혁, “한·중 국제협력시범구 소개 및 진출 방안,”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중국 진출 활성화 포럼 발표자료집, 2021.7.28.), p. 75.

290) WHO, “WHO Coronavirus (COVID-19) Dashboard,” December 6, 2021, <<https://covid19.who.int>> (검색일: 2021.12.7.).

비효율적인 의료산업을 개편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오래전부터 산업 개편화 작업을 시도해 왔으나 그 성과는 미미하였다.

〈그림 IV-6〉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코로나19 일일 감염자수 변화



주: 2021년 12월 6일 기준.

출처: Worldometers, “COVID-19 CORONAVIRUS PANDEMIC: Daily New Cases in Russia,” <https://www.worldometers.info/coronavirus/country/russia/> (Accessed December 7, 2021); Worldometers, “COVID-19 CORONAVIRUS PANDEMIC: Daily New Cases in Kazakhstan,” <https://www.worldometers.info/coronavirus/country/kazakhstan/> (Accessed December 7, 2021).

전 세계 93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시스템 평가에서 신북방 국가들의 순위는 대체로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가장 순위가 높게 나타난 카자흐스탄이 58위, 러시아도 60위에 그쳤다. 이 밖에도 조지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아제르바이잔은 하위권으로 기록



되었다.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의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상기의 국가들에 비해 의료시스템이 더 낙후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IV-8〉 신북방 국가의 의료시스템 평가(2021년)

순위	국가 명	지표
58	카자흐스탄	60.09
60	러시아	58.44
76	조지아	53.83
79	우크라이나	53.43
90	벨라루스	44.44
91	아제르바이잔	44.02

주: 전체 93개 국가 대상 순위임.

출처: Numbeo, "Health Care Index by Country," <[https://www.numbeo.com/health-care/rankings\\_by\\_country.jsp](https://www.numbeo.com/health-care/rankings_by_country.jsp)> (Accessed May 24, 2021).

각 국가들은 의료시스템 개선과 현대화를 위해 정부 주도의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시장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러시아는 2017년 ‘보건·의료 발전(Развити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프로그램을 승인하고,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약 4조 루블 이상의 금액을 의료 및 보건체계 개편과 의료분야 발전에 투입하기로 결정하였다.<sup>291)</sup>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러시아는 주요 질병에 대한 발병율 감소, 의료 인프라 개선, 의료정보 시스템 마련 등 전반적인 의료시장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2016년 벨라루스 정부에 대해 의료시스템 개선을 위한 목적의 차관 1억 2,500만 달러의 공여를 승인했다. 정부는 공여된 차관을 통해 △ ICT 기술을 활용한 e-health 시스템 및 임상시험 지원체계 마련,

291)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Развити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26 декабря 2017 г. № 1640.

△전염성 질병 관리역량 강화, △신생아 관리 시스템 개선 등의<sup>292)</sup> ‘의료시스템 선진화 프로젝트(Health System Modernization Project)’를 수행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상황은 유사하다. 카자흐스탄은 특히 국가 차원의 의료시스템 개선을 국민의료보험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실현하고자 노력해 왔다. 2015년 이를 위해 법적인 기반을 구축하고 2020년 1월부터는 전국적인 국민의료보험시스템을 실시해 오고 있다. 사실 카자흐스탄의 국민의료보험시스템 도입에는 한국이 큰 역할을 해 왔다. 한국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지식 공유사업(KSP)’의 수행을 통해 카자흐스탄의 시스템 도입과 관련한 자문을 수행한 바 있다.

지난 2020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중앙아 협력포럼’에서 한국과 중앙아시아 양측은 코로나19에 대한 공동대응을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로 삼고, 방역물품 제공 및 대응경험 공유 등 협력을 통해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 (2) 극동지역 중심의 관광 활성화

극동지역의 관광업 활성화는 러시아 정부의 극동개발정책에서 중요한 한 가지 축이다. 영토가 넓으나 거주 인구가 적고 산재한 지역 특성상 집약적인 산업의 발전이 어려운 단점의 보완을 위해서는 제조업과 별개로 보완적인 산업의 발전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관광업은 지역 내에 다양한 경제 활력요인들을 개발하고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sup>293)</sup> 특히, 극동지역은 북한과 맞닿아 있

---

292) The Republican Scientific and Practical Center of Medical Technologies, Informatization, Management and Economics of Public Health, “Project ‘Modernization of the Healthcare System of the Republic of Belarus’,” <[http://belcmt.by/en/WB\\_Project/WB\\_Project](http://belcmt.by/en/WB_Project/WB_Project)> (Accessed June 11, 2021).

는 지리적인 특성으로 인해 남·북·러 3자 간의 관광협력 추진이 용이한 이점을 갖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까지 극동지역에 대한 한국의 관광은 매우 활성화된 모습을 보였는데, 향후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남북러 3국의 관광협력 가능성을 엿보게 했다.

러시아의 극동지역은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개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다. 러시아 정부는 개발 잠재력이 높은 극동지역의 관광자원을 육성하여 장기적으로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극동지역에서도 일부 자연 및 생태환경이 뛰어난 곳은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지면 국내의 관광수요를 흡수할만한 경쟁력을 갖춘 곳이 존재한다. 이런 곳들은 현재는 숙박시설 등의 관광 인프라가 부족하지만, 향후 인프라가 구축되면 한·중·일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관광산업은 지역경제개발을 촉진하는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sup>294)</sup>

러시아 정부는 정부 주도의 관광산업 육성 정책을 통해 극동지역에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025년까지 극동·바이칼지역 사회·경제 발전전략(Стратегия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Байкальского региона на Период до 2025 года)’은 극동지역 전반에 대한 개발방향 제시하고 있는 가장 상위의 계획으로 러시아 정부가 밝히고 있는 극동지역 관광산업의 방향은 △극동지역의 환경과 특색에 적합한 다양한 관광자원개발, △한국,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와의 적극적인 협력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sup>295)</sup> 정부 주도의 지역개발 프로그램을 통한

293) 박지원,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산업 협력방안』 (서울: KOTRA, 2018), p. 10.

294) 위의 책, p. 10.

295)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тратегия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Байкальского региона на Период до 2025

극동지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지역별로 잠재적인 가능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주변국의 투자 등을 통해 단시일 내에 다양한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 러시아 정부의 의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연해주 지역은 주정부 차원의 하위 프로그램을 통해 2020년까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세부적인 계획안을 마련하고 시행해 왔다. ‘2013~2020년 연해주 관광발전 국가프로그램(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Программа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Развития Туризма в Приморском Крае” на 2013~2020 годы)’을 통해 지역 내 관광산업 개발방향 확정하였다. 구체적인 시행 내역으로는 ① 관광·레크리에이션 종합단지 조성, ② 관광서비스의 질 개선, ③ 국내·외에 관광지로서의 프리모르스키 주 홍보 강화, ④ 연해주의 해외연계 활동 등을 포함하였다.<sup>296)</sup>

다양한 정부의 노력에 따라, 극동지역의 관광산업은 최근 급격히 성장해 왔다. 여기에는 특히, 한국으로부터의 관광객 유입이 큰 역할을 했다. 연해주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인 관광객의 증가로 인해 관광특수를 누렸다. 2019년 연해주의 해외관광객 유입량은 2018년 대비 17% 증가한 76만 2,819명 이었다. 이 중 한국인 관광객은 전년대비 35% 증가한 29만 9,696명 이었다. 중국인 관광객은 약 37만 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그 수는 정체되어있는 반면 한국인 관광객은 빠르게 증가하여 2019년 약 30만

---

года.” РАСПОРЯЖЕНИЕ от 28 декабря 2009 г. N 2094-р.

296) 관광·레크리에이션 종합단지 조성에는 주요 지역에 △문화, △생태, △휴양, △레크리에이션 등 각각의 목적에 부합하는 종합단지 구성 및 호텔 등의 숙박시설 확충이 포함되었으며, 관광서비스의 질 개선에는 숙박시설 및 관광업 종사자들의 인적자원 역량강화, 관광산업에서의 안전성 확보 시스템 구축, 주요 관광산업에 대한 정부 모니터링 등이 추진되었다. 연해주 홍보강화를 위해서는 관광정보 제공 및 홍보강화를 위한 센터 설립, 대중매체를 활용한 관광자원 홍보 체계 등이 마련되었고, 연해주의 해외연계 활동에는 연해주 차원에서 해외파트너 및 투자자 초청 행사 적극 개최, 주 정부자격으로 해외 박람회 등에 참여, 해외기관 및 사절단 방문 시 주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 등의 방안을 마련하였다.

명에 육박해 왔다.<sup>297)</sup>

〈표 IV-9〉 연해주 방문 외국인 관광객 추이(2017~2019년)

(단위: 명)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한국	95,412	222,049	299,696
중국	365,855	365,489	370,730
일본	17,865	20,438	34,917
기타	38,727	43,783	57,476
Total	517,859	651,759	762,819

출처: 연해주 정부, 재인용: 우상민, “코로나로 직격탄 맞은 연해주 관광산업의 현재와 전망,” KOTRA 해외시장뉴스, 2020.5.18.,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globalBbsDataView.do?setIdx=245&dataIdx=181919>> (검색일: 2021.9.23.).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관광산업이 급격히 위축됨에 따라, 연해주 지역도 그 영향을 피해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까지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나 향후 각 국가의 백신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해외여행이 가능한 정도에 이르는 등 코로나19 사태가 점차 안정화될 경우, 관광업의 특성상 연해주를 중심으로 하는 극동지역 관광에 대한 수요는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팬데믹 문제가 극동지역이 갖고 있는 관광자원의 매력도를 훼손시킨 것이라기 보다는 세계적인 관광수요를 침체시킨 것이므로 사태가 진정되면 극동지역에 대한 관광수요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 (3) 한국 대중문화 콘텐츠 및 한류의 지속적 확산

한국의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음악(K-Pop) 등 대중문화 콘텐츠에 대한 해외 소비자들의 인지도와 소비, 인기는 다른 지역에서

297) 우상민, “코로나로 직격탄 맞은 연해주 관광산업의 현재와 전망,” KOTRA 해외시장 뉴스, 2020.5.18.,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globalBbsDataView.do?setIdx=245&dataIdx=181919>> (검색일: 2021.9.23.).

와 마찬가지로 북방지역에서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한국 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한류의 영향력이 높은 전 세계 18개 국가를 대상으로 2021년 펴낸 연구결과에 따르면, 러시아에서의 한류는 계속 확산 중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도별 한류현황지수에 따르면 한류확산단계로 파악되었다. 2018년의 한류현황지수는 2.63이었으나 2019년에는 2.70, 2020년에는 2.82를 기록하여 여전히 한류 확산단계로 평가되었다.<sup>298)</sup>

〈표 IV-10〉 러시아의 한류현황지수(2018~2020년)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지수	2.63	2.70	2.82

출처: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엮음, 『2020 한류 파급효과 연구』 (서울: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21), p. 24.

이와 같은 한류확산의 지속은 러시아에서 한국의 이미지에 대한 상승과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긍정적으로 이어나가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표 IV-11〉 러시아 내 한국이미지와 인식변화(2019~2020년)

구분	한국이미지		한국에 대한 전반적 인식	
	2019년	2020년	2019년	2020년
지수	3.7	3.7	4.1	4.2

주: 지수가 3 이상일 경우 긍정을 의미.

출처: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엮음, 『2020 한류 파급효과 연구』, p. 23.

러시아 내의 한국 이미지는 2019년과 마찬가지로 2020년에도 3.7을 기록하여 긍정적인 이미지를 기록하였으며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2019년 4.1에서 2020년에는 4.2로 소폭 상승하였다. 2020년

298)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엮음, 『2020 한류 파급효과 연구』 (서울: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21), p. 24.

의 지수는 조사대상 18개국 가운데 인도네시아(4.4), 터키(4.3)에 이어 3번째로 높은 것으로 한류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에서는 특히, 음식(73.9%), 게임(69.5%), 드라마(69.0%)에 대한 국민들의 호감도가 높았는데<sup>299)</sup> 러시아에서는 한국식당을 방문하거나 동영상을 보면서 한국음식을 요리하거나, 젊은 층의 경우 한국의 게임을 즐기고 드라마를 보는 일이 매우 흔한 일상이 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19년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한국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모스크바에서 개최한 ‘2019 러시아 K-콘텐츠 엑스포(K-Content EXPO 2019 Russia)’에서는 한국의 음식, 문화, 게임, 애니메이션, 뷰티 등의 다양한 한국문화를 체험하고 K-Pop 콘서트를 즐기는 등 러시아에서의 한류열기를 확인할 수 있는 행사가 개최되기도 했다<sup>300)</sup> 또한 2020년에는 코로나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K-페스트 2020(K-FEST 2020)’ 페스티벌이 개최되어 많은 러시아인들이 한류콘텐츠를 즐기고 한국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내었다.

러시아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북방지역에서도 한류현상은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한국대중문화에 대한 소비자들의 호응은 높다. 카자흐스탄에서는 2000년대부터 다양한 한국 드라마들이 현지 매체를 통해 방영되면서 한국문화에 대한 호응도가 높아졌는데, 1998년 ‘첫사랑’을 시작으로 2000년대에는 ‘가을동화’,

299)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21 해외한류 실태조사: 분석편』 (서울: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21), p. 596.

300) 한국콘텐츠진흥원, “모스크바에서 열린 러시아 K-콘텐츠 엑스포, 첫 개최에 1만 관람객 열광,” 2019.9.6., <[https://www.kocca.kr/cop/bbs/view/B0000138/1840586.do?searchCnd=&searchWrd=&cateTp1=&cateTp2=&useAt=&menuNo=200831&categorys=0&subcate=0&cateCode=&type=&instNo=0&questionTp=&uf\\_Setting=&recoverly=&option1=&option2=&year=&categoryCOM062=&categoryCOM063=&categoryCOM208=&categoryInst=&morePage=&delCode=0&qtp=&pageIndex=1](https://www.kocca.kr/cop/bbs/view/B0000138/1840586.do?searchCnd=&searchWrd=&cateTp1=&cateTp2=&useAt=&menuNo=200831&categorys=0&subcate=0&cateCode=&type=&instNo=0&questionTp=&uf_Setting=&recoverly=&option1=&option2=&year=&categoryCOM062=&categoryCOM063=&categoryCOM208=&categoryInst=&morePage=&delCode=0&qtp=&pageIndex=1)> (검색일: 2021.6.2.).

‘대장금’, ‘올인’ 등의 드라마가 방영되어<sup>301)</sup> 카자흐스탄 국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계속된 한국드라마의 인기에 힘입어 2015년 9월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개최된 ‘한국방송콘텐츠 쇼케이스(미래창조과학부 주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관)’에서는 KBS, EBS, 매직영상, 그래피직스 등 8개 기관이 참가해 드라마,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등 37개 콘텐츠를 선보이는 행사를 갖기도 했다.<sup>302)</sup>

최근에는 드라마에 이어 K-Pop이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 카자흐스탄 한국문화원을 중심으로 K-Pop과 관련한 댄스 및 음악경연대회를 개최하여 매년 많은 참가자들이 행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현지에는 다수의 K-Pop 동호회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카자흐스탄과 마찬가지로 2000년대 초의 한류는 한국드라마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음악 및 다양한 문화로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확산되었다. 사실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고려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국가로, 고려인들의 문화에 친숙한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은 한류에 대한 특별한 거부감 없이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특히 여기에 기여한 것은 1990년대부터 대우자동차를 중심으로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현지에서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제품들이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었다. 이후 현지의 한국문화교육원, 한국어학당, 대학의 한국어 전공자들을 중심으로 한류에 대한 수요가 발생했고 이후 빠른

---

301) 주 알마티 대한민국 총영사관, “카자흐스탄 ‘한류’ 동향 및 한국소개 현황,” 2008. 12. 31., <[https://overseas.mofa.go.kr/kz-almaty-ko/brd/m\\_8337/view.do?seq=749396&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bitm\\_seq\\_1=0&bitm\\_seq\\_2=0&bitm\\_seq\\_3=0&bitm\\_seq\\_4=0&bitm\\_seq\\_5=0&bitm\\_seq\\_6=0&bitm\\_seq\\_7=0&bitm\\_seq\\_8=0&bitm\\_seq\\_9=0&bitm\\_seq\\_10=0&bitm\\_seq\\_11=0&bitm\\_seq\\_12=0&bitm\\_seq\\_13=0&bitm\\_seq\\_14=0&bitm\\_seq\\_15=0&bitm\\_seq\\_16=0&bitm\\_seq\\_17=0&bitm\\_seq\\_18=0&bitm\\_seq\\_19=0&bitm\\_seq\\_20=0&bitm\\_seq\\_21=0&bitm\\_seq\\_22=0&bitm\\_seq\\_23=0&bitm\\_seq\\_24=0&bitm\\_seq\\_25=0&bitm\\_seq\\_26=0&bitm\\_seq\\_27=0&bitm\\_seq\\_28=0&bitm\\_seq\\_29=0&bitm\\_seq\\_30=0&bitm\\_seq\\_31=0&bitm\\_seq\\_32=0&bitm\\_seq\\_33=0&bitm\\_seq\\_34=0&bitm\\_seq\\_35=0&bitm\\_seq\\_36=0&bitm\\_seq\\_37=0&bitm\\_seq\\_38=0&bitm\\_seq\\_39=0&bitm\\_seq\\_40=0&bitm\\_seq\\_41=0&bitm\\_seq\\_42=0&bitm\\_seq\\_43=0&bitm\\_seq\\_44=0&bitm\\_seq\\_45=0&bitm\\_seq\\_46=0&bitm\\_seq\\_47=0&bitm\\_seq\\_48=0&bitm\\_seq\\_49=0&bitm\\_seq\\_50=0&bitm\\_seq\\_51=0&bitm\\_seq\\_52=0&bitm\\_seq\\_53=0&bitm\\_seq\\_54=0&bitm\\_seq\\_55=0&bitm\\_seq\\_56=0&bitm\\_seq\\_57=0&bitm\\_seq\\_58=0&bitm\\_seq\\_59=0&bitm\\_seq\\_60=0&bitm\\_seq\\_61=0&bitm\\_seq\\_62=0&bitm\\_seq\\_63=0&bitm\\_seq\\_64=0&bitm\\_seq\\_65=0&bitm\\_seq\\_66=0&bitm\\_seq\\_67=0&bitm\\_seq\\_68=0&bitm\\_seq\\_69=0&bitm\\_seq\\_70=0&bitm\\_seq\\_71=0&bitm\\_seq\\_72=0&bitm\\_seq\\_73=0&bitm\\_seq\\_74=0&bitm\\_seq\\_75=0&bitm\\_seq\\_76=0&bitm\\_seq\\_77=0&bitm\\_seq\\_78=0&bitm\\_seq\\_79=0&bitm\\_seq\\_80=0&bitm\\_seq\\_81=0&bitm\\_seq\\_82=0&bitm\\_seq\\_83=0&bitm\\_seq\\_84=0&bitm\\_seq\\_85=0&bitm\\_seq\\_86=0&bitm\\_seq\\_87=0&bitm\\_seq\\_88=0&bitm\\_seq\\_89=0&bitm\\_seq\\_90=0&bitm\\_seq\\_91=0&bitm\\_seq\\_92=0&bitm\\_seq\\_93=0&bitm\\_seq\\_94=0&bitm\\_seq\\_95=0&bitm\\_seq\\_96=0&bitm\\_seq\\_97=0&bitm\\_seq\\_98=0&bitm\\_seq\\_99=0&bitm\\_seq\\_100=0](https://overseas.mofa.go.kr/kz-almaty-ko/brd/m_8337/view.do?seq=749396&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bitm_seq_1=0&bitm_seq_2=0&bitm_seq_3=0&bitm_seq_4=0&bitm_seq_5=0&bitm_seq_6=0&bitm_seq_7=0&bitm_seq_8=0&bitm_seq_9=0&bitm_seq_10=0&bitm_seq_11=0&bitm_seq_12=0&bitm_seq_13=0&bitm_seq_14=0&bitm_seq_15=0&bitm_seq_16=0&bitm_seq_17=0&bitm_seq_18=0&bitm_seq_19=0&bitm_seq_20=0&bitm_seq_21=0&bitm_seq_22=0&bitm_seq_23=0&bitm_seq_24=0&bitm_seq_25=0&bitm_seq_26=0&bitm_seq_27=0&bitm_seq_28=0&bitm_seq_29=0&bitm_seq_30=0&bitm_seq_31=0&bitm_seq_32=0&bitm_seq_33=0&bitm_seq_34=0&bitm_seq_35=0&bitm_seq_36=0&bitm_seq_37=0&bitm_seq_38=0&bitm_seq_39=0&bitm_seq_40=0&bitm_seq_41=0&bitm_seq_42=0&bitm_seq_43=0&bitm_seq_44=0&bitm_seq_45=0&bitm_seq_46=0&bitm_seq_47=0&bitm_seq_48=0&bitm_seq_49=0&bitm_seq_50=0&bitm_seq_51=0&bitm_seq_52=0&bitm_seq_53=0&bitm_seq_54=0&bitm_seq_55=0&bitm_seq_56=0&bitm_seq_57=0&bitm_seq_58=0&bitm_seq_59=0&bitm_seq_60=0&bitm_seq_61=0&bitm_seq_62=0&bitm_seq_63=0&bitm_seq_64=0&bitm_seq_65=0&bitm_seq_66=0&bitm_seq_67=0&bitm_seq_68=0&bitm_seq_69=0&bitm_seq_70=0&bitm_seq_71=0&bitm_seq_72=0&bitm_seq_73=0&bitm_seq_74=0&bitm_seq_75=0&bitm_seq_76=0&bitm_seq_77=0&bitm_seq_78=0&bitm_seq_79=0&bitm_seq_80=0&bitm_seq_81=0&bitm_seq_82=0&bitm_seq_83=0&bitm_seq_84=0&bitm_seq_85=0&bitm_seq_86=0&bitm_seq_87=0&bitm_seq_88=0&bitm_seq_89=0&bitm_seq_90=0&bitm_seq_91=0&bitm_seq_92=0&bitm_seq_93=0&bitm_seq_94=0&bitm_seq_95=0&bitm_seq_96=0&bitm_seq_97=0&bitm_seq_98=0&bitm_seq_99=0&bitm_seq_100=0)> (검색일: 2021. 6. 2.).

302)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2015 대한민국 한류백서』 (서울: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2016), p. 66.



속도로 확산되었다.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은 다시 역으로 한국어 교육에 대한 우즈베키스탄 젊은 층의 교육수요를 확대시키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에는 정규교육과정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는 학생 수만 약 12,000명에 이르고 있다. 타슈켄트 한국어교육원 등 현지 교육기관을 통해 교육 받는 인원까지 포함하면 20,000여 명 이상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들은 한국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2019년 타슈켄트에서 개최된 ‘2019 케이팝 월드 페스티벌 인 우즈베키스탄(2019 K-Pop World Festival in Uzbekistan)’에는 1,500여 명의 관람객이 입장해 대성황리에 진행되었으며 총 12개 팀이 참가해 공연을 펼쳤다.<sup>303)</sup> 이처럼 우즈베키스탄에서 한류는 잠시 인기를 얻는 외국문화의 일부가 아니라 점차 주류의 문화현상으로 자리 잡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나. 추진 목표 및 고려사항

### (1) 의료·보건 및 헬스케어 분야 패키지형 협력

동 분야에서 신북방 국가들의 협력수요는 이미 일부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의지를 통해 실현되고 있는데, 2020년 외교부를 중심으로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하는 신흥국에 대한 ‘코로나19 대응 포괄적 긴급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한 바 있다.<sup>304)</sup>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

303) 한국콘텐츠진흥원, “2019 케이팝 월드 페스티벌 인 우즈베키스탄, ‘케이팝의 또 하나의 비상’,” 2019. 6. 28., <[https://home.kocca.kr/mportal/bbs/view/B0000204/1937607.do;KCSSESSIONID=QMMmJpp0chplsgYRW8L4XpcRcQc3vThyTdfQYQJ1f2Zmj5Qt6wyDz!688854828!-724115486?searchCnd=&searchWrD=&cateTp1=&cateTp2=&useAt=&menuNo=201225&categorys=4&subcate=67&cateCode=0&type=&instNo=0&questionTp=&uf\\_Setting=&recovery=&option1=&option2=&year=&categoryCOM062=&categoryCOM063=&categoryCOM208=&categoryInst=&morePage=&delCode=0&qtp=&searchGenre=&pageIndex=19](https://home.kocca.kr/mportal/bbs/view/B0000204/1937607.do;KCSSESSIONID=QMMmJpp0chplsgYRW8L4XpcRcQc3vThyTdfQYQJ1f2Zmj5Qt6wyDz!688854828!-724115486?searchCnd=&searchWrD=&cateTp1=&cateTp2=&useAt=&menuNo=201225&categorys=4&subcate=67&cateCode=0&type=&instNo=0&questionTp=&uf_Setting=&recovery=&option1=&option2=&year=&categoryCOM062=&categoryCOM063=&categoryCOM208=&categoryInst=&morePage=&delCode=0&qtp=&searchGenre=&pageIndex=19)> (검색일: 2021. 6. 2.),

카자흐스탄에 대해서는 기재부의 KSP 사업을 통해 국민의료보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을 지원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신북방지역 각각의 지역에 대해 한국의 여러 의료기관들이 개별적인 차원의 의료 협력 및 봉사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다.

〈표 IV-12〉 외교부의 코로나19 대응 포괄적 긴급지원 프로그램

구분	지원 내용(안)
코로나19 대응 임시병원/ 시설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압격리시설, 중환자실/일반실 병상 확충</li> <li>• 선별진료소, 선별검사 텐트, 워크스루 등 설치 및 운영 지원</li> <li>• 진단기기 및 소모품 지원(인도적 지원을 통해 지원된 진단키트 연계 지원)</li> <li>• 방역 의료소모품, 산소호흡기, 의료용 모니터 등 긴급 의료물자 지원</li> </ul>
전문인력 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 전문가팀 파견을 통한 정책컨설팅 및 의료진 현지연수 실시</li> <li>• 우리 지원물품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전문인력대상 비대면 교육 실시 (웨비나, 화상회의 등)</li> </ul>
민간·시민사회· 국제기구 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기업과 협업을 통해 자가관리 앱 개발</li> <li>• NGO, 국제기구 네트워크를 활용한 현지 취약계층 긴급 생필품 제공 및 인식교육</li> </ul>
기존 사업연계 및 거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 ODA로 구축된 병원에 대한 연계 지원</li> <li>• 코로나19 대응 거점병원 대상 시설/인력 역량강화 집중</li> </ul>

출처: 외교부, “정부, 다 함께 안전한 세상을 위한 개발협력 구상 추진,” (2020.6.29. 보도자료).

하지만 이와 같은 한국의 대(對)신북방 의료보건 협력은 각 국가 별로 산발적이고 파편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각각의 사안에 따른 일시적인 대응의 관점에서 시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장기적이고 긴 안목에서 수행가능하며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의 구조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신북방지역 의료협력을 위한 범부처 성격의 보건의료·헬스케어 패키지형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단편적인 협력이 아닌 해당 국가가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협력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의료체제와 시스템의 미진은 어느 특정 분야만의 문제라고

304) 외교부, “정부, 다 함께 안전한 세상을 위한 개발협력 구상 추진,” (2020.6.29. 보도자료).

판단하기 어렵다. 의료인의 교육과 양성, 훈련에서부터 병원에서의 환자진단과 관리, 치료 등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한 영역이 많으며 폭넓게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생산과 활용 등에 대한 부분까지 연계되어 있다. 여기에 더해 급작스러운 감염병에 대한 대처수요까지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신북방지역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러한 전 영역에서의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개선을 원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의 전략은 단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신북방 국가 대상의 보건의료 협력을 시스템화한 패키지 형태로 조직하여 체계적인 협력구조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신북방 국가들은 대체로 의료보건분야 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지만 국가별로 처한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러시아의 경우, 사실상 의료체제 개편에 있어서 한국이 직접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영역은 적다고 볼 수 있다. 국가 차원의 의료시스템 개편작업이 이미 시행 중이며 시스템 개편에서 한국과의 직접적인 협력 가능성도 실제로 그다지 높지 않다. 러시아와는 시스템 개편보다는 개선되고 재조직되는 러시아의 의료·보건시스템에 어떤 방식으로 편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sup>305)</sup>

한국의 패키지형 전략 수행이 적합한 지역은 중앙아시아와 코카서스 일부 국가들이다. 이들 국가들은 고령화로 인해 의료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자국 내 시스템기반이 약해 전 분야에서의 협력이 가능하다. 또한, 카자흐스탄에서 KSP 사업을 통해

---

305) 러시아의 경우, 보건의료 시스템의 재편 과정에서 외국계 의료서비스 기관들은 의료특구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였다. 스콜코보 경제특구안에 위치한 '모스크바 국제 의료클러스터(Moscow International Medical Cluster)'에는 이스라엘의 '하다사 메디컬 센터(Hadassah Medical Center)'가 이미 진출해 있으며, 한국의 '분당 서울대병원'도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의료서비스뿐만 아니라, 의료시설을 기반으로 한 의약품과 의료기기 기술개발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료보험시스템의 구축을 도왔던 것처럼 협력에 대한 순응도도 높다. 이들에 대한 패키지형 협력을 위해서는 협력의 필요분야를 식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우선적으로 포함시켜야 하는 분야는 의료인 양성과 교육분야이다. 이 지역은 아직 의료기술 수준이 높지 않으므로 한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의 협력수요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다수의 병원들이 중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의료봉사를 수행하고 있는 것도 현지 의료기술과 체계가 미진한 부분을 한국의 그것으로 보완할 수 있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분야로는 전염병과 관련한 방역, 진단, 환자격리, 치료 등의 일괄 시스템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중앙아시아 각국은 전염병 대응태세에 대한 취약성이 크게 부각되었으며 향후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전염병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를 원하고 있다. 이번 사태에서 한국이 보여준 감염병 관리체계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시스템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다음으로 포함시켜야 할 점은 의료행정과 서비스의 효율성 개선이다. 오랜 기간의 사회주의 시스템의 지속과 전반적인 의료기관 수의 부족은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의 서비스의 질을 낙후시키고, 행정절차 또한 비효율적인 수준이 유지되도록 했다. 하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의 질의 개선은 서비스의 개선을 제외하고 체감되기는 어렵다고 볼 때, 서비스와 행정측면의 협력도 중요한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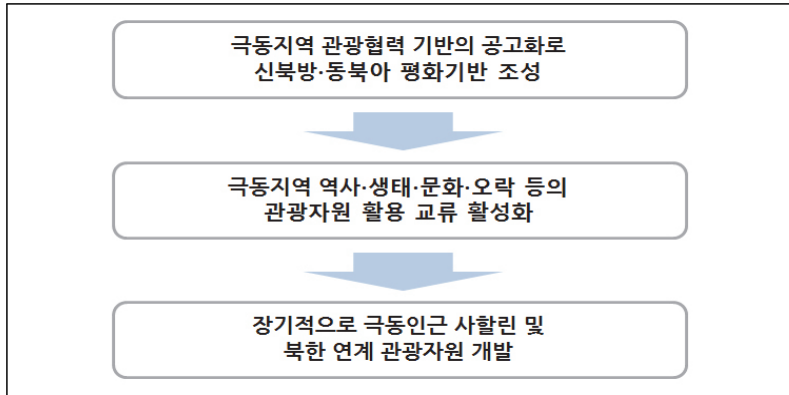
보건의료분야 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은 제약 및 의료기기 관련 협력이다. 인구고령화와 함께 해당 분야에 대한 정부의 투자는 확대될 것으로 보여 신약 공동개발이나 의료기기 현지생산 등의 분야 등으로 협력이 확장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 (2) 극동 중심의 관광기반 공고화를 통한 신북방·동북아평화 조성 기여

극동지역의 관광산업 교류 활성화가 중요한 이유는 동 지역이 한국에 갖는 의미가 남다르기 때문이다. 과거 조선시대부터 극동지역은 한반도에서 많은 이주민들이 정착해 왔던 지역이다. 일제 강점기에 일본을 피해 블라디보스톡 인근에 정착한 많은 한인들은 이 지역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구성했고, 스탈린 시대에 강제이송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의 중앙아시아 지역에 뿌리내리게 되었다. 따라서 이 지역에는 우리의 역사적·문화적 자취가 많이 남아 있으며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도 크다. 여기에 더해 인근의 사할린 지역까지 이러한 관광자원을 확대할 수 있는 확장성도 풍부하다. 또한, 한국 등 동아시아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특성으로 인해 소비에트 해체 이후에는 많은 한국기업들의 북방지역 진출을 위한 전초기지의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아시아산 제품의 점유율과 수용도도 다른 러시아 지역에 비해 높은 특징이 있다.

동 지역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개발 노력이 장기간에 걸쳐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미 블라디보스톡과 루스끼 섬 중심으로 개발하고 있는 다양한 생태관광지와 2022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 카지노 복합단지 등의 주요 관광시설 등이 현실화되면, 블라디보스톡은 현재의 관광기반과 함께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생태, 오락, 문화, 역사를 아우르는 관광중심 도시로의 탈바꿈이 가능하다. 이는 기존에 극동지역이 블라디보스톡을 중심으로 하는 유라시아대륙으로의 물류 관문역할을 했던 것에서 벗어나 동북아시아 지역과 신북방지역의 연계지역으로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할 수 있는 ‘인간중심도시’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그림 IV-7〉 극동지역 중심의 관광협력 활성화 전략



출처: 저자 작성.

따라서 극동지역에 대한 한국의 시각도 기존의 비즈니스·물류에 치우친 시각에서 벗어나 북방지역 인적교류와 관광협력 활성화를 위한 핵심지역으로 가치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한국은 이 지역과 연관된 다양한 역사적 연계성을 갖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한 관광자원개발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극동지역이 갖는 생태, 문화, 오락거리 등의 다양한 관광협력기반을 활용한 협력은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신북방지역과의 새로운 협력영역을 창출해 낼 것이다. 이를 통해 환경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상호인식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극동지역과의 관광활성화는 장기적으로 동북아 지역에 대한 지역적 확장성을 염두에 두고 시행되어야 한다. 북한과 러시아의 관광협력은 최근에는 북한과 육로로 면한 연해주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2015년 러시아와 북한, 중국은 두만강 인접 국경지역에 3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비자면제 관광지역을 설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sup>306)</sup> 이 지역은 생태관광을 중심으로 개발되며 관광객들은 비자 없이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2018년

5월 17일부터 21일까지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된 ‘제12회 태평양 관광포럼 및 전시회(XXII Тихоокеанская туристская выставка <<PITE>>)’ 에는 이례적으로 북한이 참가하였으며<sup>307)</sup> 2019년 1월 코쨬마코(Олег Кожемяко) 연해주 주지사와 북한의 조석철 블라디보스톡 총영사는 경제제재하에서 극동지역에서의 관광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sup>308)</sup> 현재 연해주 지역에는 4개의 여행사가 북한 여행을 실시하고 있는데 투어 프로그램에는 북한의 수도인 평양 투어, 박물관 방문, 김일성·김정일의 업적을 전시하는 다양한 루트 관광, 자연 공원 여행, 창작 단체의 공연 시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2019년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을 계기로 양국은 관광분야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관광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sup>309)</sup> 북한에 대한 제재가 완화되면 극동중심의 관광협력에 북한을 포함한 3자 간 관광자원 개발을 추진할 수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동북아 지역에서의 긴장 완화와 평화무드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 (3) 소프트파워 강화를 통한 상호신뢰기반 구축

문화적인 관점에서 한국의 북방지역에 대한 전략은 한국이 이

306) “Россия, Китай и КНДР планируют создать безвизовую туристическую зону,” *REGNUM*, 15 февраля 2015, <<https://regnum.ru/news/society/1895688.html>> (Accessed July 4, 2021).

307) “О реализац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рограммы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Развитие туризма в Приморском крае» на 2013–2021 годы» за 2018 год,” pp. 17~19.

308) PRIM TRAVEL, “Приморский край и КНДР обсудили развитие туризма,” 15 Января 2019, <<https://prim-travel.ru/2019/01/primorskij-kraj-i-kndr-obsudili-razvitiye-turizma/>> (Accessed July 4, 2021).

309) “Приморье и КНДР подпишут соглашение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в туризме,” *РИА НОВОСТИ*, 5 сентября 2019, <<https://ria.ru/20190905/1558326099.html>> (Accessed July 4, 2021).

지역에 대해 가진 소프트파워를 공고히 하고 확산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미국, 중국과 같은 강대국들이 자국의 소프트파워 확산을 통해 얼마나 많은 자원을 투입해 왔는지를 보면 소프트파워의 중요성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소프트파워는 한 나라가 가진 사회·문화적 가치의 발산을 통해 구현된다. 지금 한국의 소프트파워는 한류라는 구체적인 방식을 통해 북방지역에서 실현되고 있다. 많은 국가의 국민들이 한국의 노래와 음악을 듣고, 드라마와 영화를 감상하며 한국의 음식을 즐긴다. 이를 통해 그들은 한국인의 생활 방식을 그들 생활방식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된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한국의 소프트파워는 매년 강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문화적 호감도, 교육기관의 질, 디지털사회 구현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소프트파워를 측정하는 ‘소프트파워 30개 국가(The Soft Power 30)’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의 소프트파워 순위는 19위를 차지하여 2017년의 21위, 2018년의 20위에 이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sup>310)</sup>

〈표 IV-13〉 한국의 소프트파워 순위변화(2017~2019년)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지표	58.40	62.75	63.00
순위	21위	20위	19위

출처: The Soft Power 30, “South Korea(2017~2019),” <[https://www.softpower30.com/country/south-korea/?country\\_years=2017,2018,2019](https://www.softpower30.com/country/south-korea/?country_years=2017,2018,2019)> (Accessed July 4, 2021).

전반적으로 한국의 소프트파워는 강화되고 있지만, 이러한 소프트파워를 북방지역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투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310) The Soft Power 30, “South Korea(2017~2019),” <[https://www.softpower30.com/country/south-korea/?country\\_years=2017,2018,2019](https://www.softpower30.com/country/south-korea/?country_years=2017,2018,2019)> (Accessed July 4,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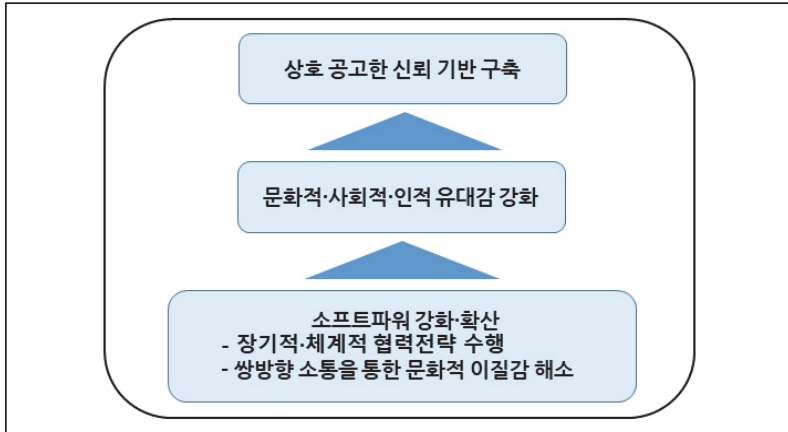
인해 국가별 이동제한이 있어 과거처럼 오프라인을 통한 문화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고, 북방지역에서의 한류가 인기를 얻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는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중국이나 일본과 같은 주변국들은 북방지역에 대해 소프트파워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하고 있어 우리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중국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공자학원 등을 통해 중국어 교육 및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이처럼 변화하는 환경 가운데 한국은 현재 우리가 가진 한류라는 긍정적인 소프트파워를 더욱 확산하고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북방 일부 지역에 지난 수년간 축적해 온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지역 전체로 확산시키고 그 영향력을 심화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소프트파워의 최종 결과물은 단순히 소프트파워를 통한 국가 이미지의 제고와 이를 기반으로 한 한국산 제품의 판매 증대와 같은 일차적인 결과에 있지 않다. 북방지역에 오래전부터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대부분 높은 품질과 차별화된 전략으로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해 왔으며 이는 소프트파워의 영향과는 대부분 무관하다. 오히려 북방지역에서의 소프트파워의 비전과 목표는 신북방 국가와의 문화적·사회적·인적 유대감 강화를 통한 상호 공고한 신뢰기반의 구축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의 실행에 의해 담보되어야 한다. 신북방지역에 대한 한국의 지난 문화적 협력은 지극히 근시안적이고 파편적인 정책에 머물렀다. 흔히 문화적인 협력을 정치·경제적인 협력의 부수적이고 보완적인 것쯤으로 간주하거나 일회성 행사의 관점에서 시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소프트파워의 효과적인 발현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전략의 수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협력전략의 유기적이고 장기적인 이행만이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소프트웨어의 강화를 가능하게 한다.

〈그림 IV-8〉 신북방지역에서 한국의 문화전략 전개 개념



출처: 저자 작성.

특히 유의할 점은 전략의 전개에 있어서 한국의 일방향적인 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일방향적인 문화전파는 수용적인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그 사회의 거부감을 불러일으키기 쉽다. 비록 한류라는 사회적 현상이 한국문화의 대외 발산이라는 양태로 부각되고 있기는 하지만 문화적 협력은 어디까지나 양방향의 교류가 있어야만 한다. 우리가 가진 한류라는 자산을 협력에 적절히 활용하되 북방국가들의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 가운데, 한국과 신북방 국가들 간의 문화적·사회적·인적 토대는 강화될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신북방 국가와의 신뢰관계가 공고히 구축될 수 있다.

다만, 한국의 소프트웨어 강화전략은 각 신북방 국가들의 한국 문화에 대한 인식과 수용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단계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신북방 국가 가운데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은 비교적 한류문화가 폭넓게 퍼져있으며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편이지만,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조지아 등은 상대적으로 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 다. 추진 과정 및 방법

### (1) 중앙아시아 각 국가별 의료보건 시스템의 구축과 방역체계 협력

코로나19 발생에 대한 한국의 성공적인 대응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성공적이라고 평가받는 한국의 방역체계에 대한 자국 이식을 요청해 왔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응하고자 2020년 ‘K-방역모델’을 발표하고 이를 중심으로 방역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표 IV-14〉 K-방역 3T(Test-Trace-Treat) 국제표준화 분야(18종)

① 검사·확진(Test): 6종	② 역학·추적(Trace): 4종	③ 격리·치료(Treat): 8종
〈감염병 진단기법: 2종〉 • 유전자 증폭기반 진단기법(RT-PCR) • 진단기법 관련 시약·장비 및 테스트 방법 등  〈선별진료소 운영시스템: 4종〉 • 자동차 이동형(Drive Thru) 선별진료소 운영 절차 • 도보 이동형(Walk Thru) 선별진료소 운영 절차 등	• 모바일 자가진단·격리관리 앱(App) 요구사항 •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기능 및 개인정보 보호 • 자가진단·문진 결과와 전자 의무기록(EMR) 연동 방법 등	• 감염병 생활치료센터 운영 표준모형 • 개인위생 관리 및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 지침 • 취약계층 필수 사회복지 서비스 및 의료지원 • 감염병 교차감염 차단을 위한 지침 등

출처: 보건복지부, “K-방역모델을 세계의 표준으로 만들 길잡이 나왔다.” (2020.6.11. 보도자료).

상기의 3T 국제표준화 분야를 보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3단계 모두에서의 시행역량이 사실상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3단계 18종의 방역 표준화 모델을 각 국가의 시스템에 접목시키는 작업

부터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감염병 검사에 관한 단계에서 진단기법에 의거한 검사시행의 표준화 작업과 전파가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검사를 시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심증상별 환자에 대한 응대 및 이송지침을 마련하는 데까지 이어져야 한다. 또한, 선별진료소 운영에 있어서도 ‘자동차 이동형(Drive Thru)’과 ‘도보 이동형(Walk Thru)’ 각각의 경우에서의 운영시스템도 확실한 운영체계가 필요하다. 사실,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코로나19 진단의 경우에는 자동차 이동형 진단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자동차 이동형 진단에 대한 방법과 체계가 부재한 이유 때문이다.

역학 및 추적단계에서도 한국형 방역체계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감염병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일반인들의 QR 출입명부 작성과 자가문진 및 자가격리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것이 감염자 추적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앙아시아 지역의 통신·인터넷 인프라 구축이 전제조건이 되어야 하겠으나 최근에는 스마트폰 사용자 비중이 크게 확대되었으므로 정부에서 적절한 앱(APP) 활용을 통해 일반 국민들의 감염병 추적과 관련해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격리 및 치료단계에서 한국은 국내 환자의 대응에 있어 병상 대응을 차등적으로 수행했다.<sup>311)</sup> 증상이 가벼운 환자들에 대해서는 공공 및 민간시설을 활용한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중증환자들을 위해서는 중증응급진료센터를 통해 집중치료를 실시했는데 여기에는 권역 응급의료센터와 상급 종합병원을 포함하였다. 의료체계가 미흡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환자의 중증여부에 따라 체계적으로

---

311) 조성일·탁상우·윤규현, 『서울시 코로나19 대응 방역 정책모형: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해외공유 모델 개발’ 연구용역 보고서』(서울: 서울특별시 해외도시협력담당관, 2021), p. 30.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은 환자의 치료체계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러한 체계에 더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부족한 점은 일반인들에 대한 예방 방역분야이다. 한국이 체계적으로 시행해 왔던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별 시행방안과 이에 따르는 각 분야에서의 대응체계 등의 체계화 등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한국의 방역체계 협력은 일회성이 되거나 단순한 지식전달의 차원에 그쳐서는 곤란하다. 의료보건 분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이 지속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염병 대응을 위한 신북방 국가들과의 공동연구 인프라를 마련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보아왔듯이 감염병은 세계 각 지역에서 대응에 어려운 형태로 빠르게 변이를 발생시켜왔다. 이에 적절한 대응과 협력을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신북방 국가들과의 공동의 감염병 연구체계 구축은 그중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한국이 코로나19 이전인 2016년 발표한 ‘제2차 국가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추진전략(2017~2021)’에 따르면, 정부는 감염병에 대한 국가 방역체계를 확립하고 연구·기술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다른 국가들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검체, 병원균확보, 임상연구 등을 추진하고 상시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을 시행해 오고 있다.<sup>312)</sup> 그러므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현지의 감염병에 대한 공동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중앙아시아 각 국가별로 협력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이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감염병과 관련한 데이터를 공동으로 축적하고 분

---

312)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R&D와 국가방역체계 간 연계가 강화된다.” (2016.4.8. 보도자료).

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축적된 빅데이터를 향후의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예측하는 데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중앙아시아 현지의 국가들과의 밀접한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들 국가들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감염병 공동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이와 같은 밀접한 의료협력을 위해서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의료보건시스템의 구축과 현대화가 무엇보다 절실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차원의 협력이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을 것이다. 먼저 정부 간 협력에서는 각 국가별로 의료보건시스템의 발전방향과 지향점을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협력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카자흐스탄이 한국의 의료보험시스템을 기반으로 자국의 시스템을 구축하였듯이, 각 국가마다 시스템 현대화에서 우선시하는 분야들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안들을 면밀히 파악하고 우선적인 협력분야를 발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의료행정 및 서비스 분야의 경험을 이식할 수 있는 협력체 마련이 필요할 수도 있다. 다만, 의료인 교육과 관련해서는 민간부문의 역할이 더 중요할 수 있다. 한국의 민간병원들은 오랫동안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의료봉사활동을 수행해 온 경험이 있다. 이들의 축적된 민간 네트워크를 일대일 방식이 아닌 다자간의 체계적인 방식으로 통합 및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의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다수의 민간 의료기관들을 통합된 체계하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의료수준을 높이는 교육 및 연수과정으로 발전시킨다면 지속적인 성과를 이끌어 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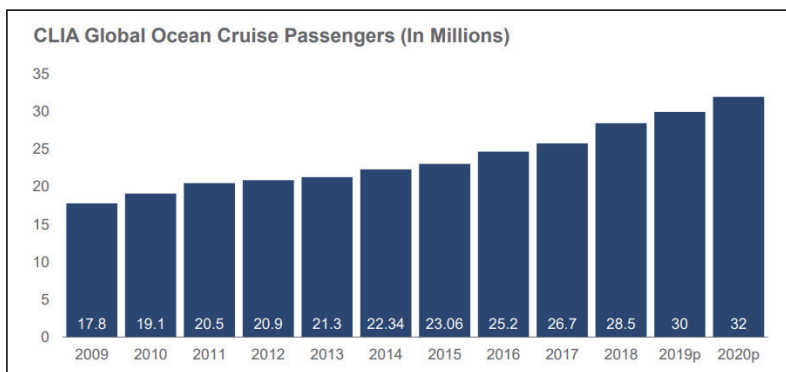
또한, 한국의 의료폐기물 처리기술을 신북방지역에 전파하는 ‘K-의료폐기물 협력프로그램’과 감염병 예방에 필수적인 안전한 먹는 물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상수도 분야와 보건의료분야 및 폐기물 분

야를 패키지로 하여 ‘K-감염병예방 협력 프로그램’의 수행도 고려할 만하다. 전자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도 의료폐기물이 증가함에 따라 그 처리와 관련한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어 그 경험과 기술을 신북방 국가들과 공유하는 사업 추진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돼지열병·AI 가축전염병 및 인수공통감염병 예방과 공동대응을 위한 한국, 중국, 러시아, 몽골 그리고 북한이 참여하는 ‘동북아 야생동물 감염병 공동방역체계’ 구축도 구체적인 사업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 (2) 극동지역 크루즈관광 활성화

크루즈 산업은 글로벌 관광산업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분야이다. 크루즈 여행객 수는 2009년 1780만 명에서 2015년에는 약 2300만 명으로 늘어났고, 그리고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가 없었다면 약 3200만 명으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그림 IV-9〉 참고).

〈그림 IV-9〉 전 세계 크루즈 여행객 수(2009~2020년)



출처: Cruise Lines International Association, "2020 Cruise Industry Outlook," *State of The Cruise Industry Outlook 2020* (Washington D.C.: Cruise Lines International Association, 2019), p. 12.

특히, 크루즈 여행객들의 지역별 비중을 보면 아시아 지역의 여행객 수가 2018년 기준 424만 명으로 북미(1424만 명)와 서유럽(673만 명)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수요가 많은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sup>313)</sup> 즉, 지역 내에서 적절한 크루즈 관광 루트가 개발될 경우, 이를 이용할 수요는 아시아 지역 내에서도 충분히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아시아 지역에서도 가장 많은 크루즈 여행 수요를 가진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크루즈 여행객 점유율을 갖고 있으며 특히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크루즈 여행이 많다.

반면, 한국의 경우 크루즈 여행이 관광산업의 부문에서 활발히 발전되지 못했다. 과거 여러 차례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적 크루즈 사업이 성공하지 못했던 것은 크루즈 관광에 대한 국내의 인식 부족과 시장의 미성숙이 가장 큰 요인이었겠으나, 크루즈 사업에 장애가 되는 법과 제도의 미비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크루즈 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 정부는 지난 2015년에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2016년에는 범정부적인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이후 여러 정치-경제적 악재들이 맞물리며 아직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는 못하고 있다.<sup>314)</sup>

반면, 연해주를 중심으로 하는 크루즈 산업은 향후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동안 러시아의 크루즈 산업은 주로 서부 지역의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해 왔다. 그러나 최근 동북아 시장의 관광산업 성장과 함께 극동지역의 관광

---

313) Cruise Lines International Association, “2020 Cruise Industry Outlook,” *State of The Cruise Industry Outlook 2020* (Washington D.C.: Cruise Lines International Association, 2019), p. 16.

314) 유다중, “한·러 간 크루즈산업 협력 현황과 발전 전망,” 『KMI 북방물류 동향리포트』 제83호 (2019), p. 6.



자원이 주목을 받으면서 크루즈 산업 역시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IV-15〉 블라디보스톡 입항 크루즈 관광객 수(2016~2019년)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f)
선박수(척)	6	14	7	16
관광객(명)	5,979	12,445	13,467	30,000
성장률(%)	-	108.1	8.4	122.4

주: f는 forecast를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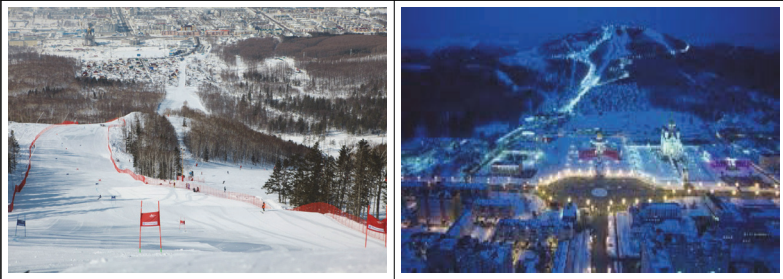
출처: 연해주 관광국 통계(2018)와 Kvint Kristina의 발표자료(2019)를 토대로 저자 재작성, 재인용: 유다중, "한·러 간 크루즈산업 협력 현황과 발전 전망," 『KM 북방물류 동향리포트』 제83호(2019), p. 8.

2016년 블라디보스톡 입항 선박 수는 6척, 관광객 수는 약 6,000명에 불과했으나 이듬해 각각 14척, 12,445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2019년에는 약 16척, 3만여 명으로 확대될 정도로 크루즈 관광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연방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크루즈관광 분야를 연해주 관광산업발전전략 중 하나로 추진해 왔다. 낮은 수심으로 인해 대형 크루즈선의 입항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블라디보스톡항 국제해양터미널은 2018년에 제1 부두와 제2 부두의 준설작업을 완료하고, 2019년부터는 MSC Splendida 호와 Quantum of the Seas 호 등 17만 톤 이상 초대형급 크루즈선의 입항 예약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관광객 수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조용하여 동해안과 접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환동해권 크루즈' 사업 추진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최근의 주요사업으로 포항시는 2019년 12월 14일부터 18일까지 포항시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연결하는 환동해 크루즈 시범사업을 추진했다.<sup>315)</sup> 이번 시범사업은 대북사업에 강점을 갖고 있는 현대

아산과 공동으로 진행하였으며 포항시는 이번 크루즈 사업을 통해 향후 포항과 러시아 및 일본 등을 잇는 환동해 크루즈 3각 벨트 추진을 위한 경험을 축적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림 IV-10〉 스키 리조트 ‘고르니 보즈두흐’ 전경



출처: 고르니 보즈두흐 홈페이지 <<https://ski-gv.ru/>>, 재인용: 박지원,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산업 협력방안』 (서울: KOTRA, 2018), p. 13.

이런 관점에서 금강산과 연계한 러시아의 관광자원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곳은 사할린 섬이다. 사할린 섬은 러시아 극동지역의 동쪽 끝에 위치하고 있으며 넓은 영토에 인구수는 약 60만 명에 지나지 않으나 자연환경이 매우 훌륭하다. 러시아 정부는 사할린 섬의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섬의 주요 도시인 유즈노-사할린스크(Южно-Сахалинск)시 고르니-보즈두흐(Горный воздух) 지역을 주요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르니 보즈두흐는 사할린 섬에 위치하고 있는 복합 리조트 단지로 러시아 정부는 2016년 3월 이 지역을 선도개발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 곳은 1960년에 개장한 러시아의 전통있는 스키 리조트로 인근의 레저·휴양·

315) 포항시, “포항시, 한·러·일 잇는 환동해 크루즈 첫발 떴다!” 2019.12.18., <<https://www.pohang.go.kr/news/bnews.do?enc=Zm5jdDF8QE8JTJGYmJzJTJGbmV3cyUyRjU4OSUyRjQyNjY1MSUyRmFydGNsVmllZDY5kbyUzRnBhZ2U1M0QxNiUyNnNyY2hDb2x1bW41M0Q1MjZzemNoV3JkJTNEJT12YmJzQ2xTZXElM0Q1MjZpc1ZpZXdnYW5lJTNEZmFsc2U1MjZsaXN0TW9kZSUzRCUyNg%3D%3D>> (검색일: 2021.5.20.).

관광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복합 리조트 단지이다.<sup>316)</sup>

이 곳은 러시아의 선도개발구역 중 캄차카 반도와 함께 유일한 관광 중심 구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현재는 주정부 차원의 계획에 의거해 스키장 시설 현대화, 부대시설 확충 및 주변 인프라 개발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사할린 섬은 타 지역에 비해 훼손되지 않은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있는데 이를 스키 리조트와 결합하여 레저 및 휴양이 가능한 지역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이다. 또한 인근에는 ‘유즈노 사할린스크’시가 인접하고 있어 도심에 대한 접근성이 뛰어난 것도 강점이다.<sup>317)</sup> 현재로서는 리조트를 찾는 관광객의 대부분이 주로 내국인이며 ‘유즈노 사할린스크’시의 인구가 약 60만 명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리조트의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특히 겨울철에는 한국의 스키장 이용객들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국의 관광객이 북한의 금강산 관광 이후에 러시아의 스키리조트에서 스포츠와 휴양을 즐기는 방식의 관광상품 개발이 가능하다.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일부 완화되면, 크루즈를 통해 남·북·러를 연결하는 방식의 관광사업 추진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북한에 대한 제재가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육로를 통한 북한 관광은 단기간 내에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한국과 북한의 금강산 관광지구, 러시아의 극동 및 사할린을 아우르는 크루즈 관광이 실현 가능성이 높다. 이들 지역을 생태 및 휴양관광의 형태로 연계할 수 있다. 러시아의 관점에서는 초기에는 사할린 섬 중심의 생태관광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캄차카 반도까지 노선을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sup>318)</sup>

---

316) 박지원,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산업 협력방안』, p. 13.

317) 위의 책, pp. 14~15.

### (3) 다층적 문화·인적교류 관계 형성

신북방지역과의 문화교류를 위해 중요한 한 가지는 현재의 한류를 다양한 계층, 다양한 국가로 확산시켜나가는 것이다. 한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의 국가에서는 한류에 대한 소비층을 확산시키고, 그 외의 국가에서는 한류를 포함한 다양한 한국문화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접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여러 국가에서 한류의 주요 소비대상층뿐만 아니라, 무관심층도 한국문화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행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문화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북방지역에 있는 한국문화원은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시행하여 현지인들의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있으나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좀 더 다양화하고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주재국 정부와의 협의하에 연간 ‘한국문화주간’ 등을 개최하여 한국의 영화, 드라마, 음악, 웹툰 등을 소개하는 종합문화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이 행사는 단순히 한국의 문화를 보여주는 나열식의 행사가 아니라, 현지의 문화 요인들과 함께 융합할 수 있는 한국의 문화적 강점을 보여주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과 현지의 문화적 요인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행사를 통해 문화적 동질성을 느끼고 다양한 연령층이 한국문화를 접하며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

318) 캄차카 반도는 러시아 극동지역에서도 가장 동쪽에 위치하였으며 사람의 손길이 닿지않아 잘 보존된 자연자원이 특징인 곳이다. 반도의 전체 길이는 남북으로 약 1,250km, 전체 면적은 46만km<sup>2</sup>에 이른다. 전체 인구는 약 35만 명에 그치고 있으며 그중 18만 명이 주도인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스키(Петропавловск Камчатский)에 거주하고 있다. 화산지역으로 온천이 많아 휴양지로의 개발잠재력이 높으며 자연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많아 에코투어, 산악트레킹, 스키 등 다양한 스포츠 액티비티도 가능한 지역이다. 박지원,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산업 협력방안』, pp. 18~19.

또한 한류가 활발한 국가에서는 한류를 K-Pop이나 드라마, 영화와 같은 일부 장르에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 한류의 주요 소비층이 성장해 나갈수록 다양한 한국문화에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그 대상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한국음식, 전통문화, 여행 등이 될 수 있다. 한국의 음식은 현재도 많은 신북방지역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대상이기는 하다. 많은 사람들은 현지의 한국식당에서 한국음식을 접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한국음식의 조리법을 배우며 음식을 만들어 본다. 상점에서 가공된 한국음식을 구매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관심을 더 체계적인 트렌드로 확장시켜야 한다. 한국문화원을 중심으로 한국음식에 대한 요리교실을 정규 과정으로 편성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오프라인 과정은 콘텐츠의 확장성에 제한이 있으므로 이 과정을 현지 유명 유튜버나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으로 확장하도록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신북방 국가에서 한국의 가전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으므로 가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가전제품 홍보와 한국음식 쿠킹 클래스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온라인 과정으로 구성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국음식 이외에도 전통문화나 여행 등으로 문화적 관심을 확장할 수 있다. 신북방 국가들도 각각의 고유한 전통 음악이나 춤 등의 문화적 유산이 있다. 신북방 국가의 전통문화 단체나 기관과 협업을 통해 한국의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행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한류 애호층이 한국의 대중문화에서 전통문화로 관심을 넓혀갈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과거처럼 관광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나 한국이 가진 관광지로서의 매력은 신북방 국가와의 문화적 협력에서 매우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되면

한국에 대한 관광수요는 다시 빠른 속도로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신북방 국가별 맞춤형 관광객 유치 전략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비해 각 국가별 유치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표 IV-16〉 신북방 국가별 관광객 유치 전략: 코로나19 소멸단계

국가	주요 추진방향
러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인지도) 수교계기, 대규모 현지광고 송출(TV, 옥외, 디지털)</li> <li>• (부유층, 가족여행객) 의료관광상품, 고급관광 컨소시엄 공동상품 판촉</li> <li>• (밀레니얼 세대: 25~35세) 한류, 전통문화, 모험 등 복합체험 상품 판촉</li> </ul>
몽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인지도) 울란바토르 시내 옥외광고, 고소득·젊은층 선호 방송채널 광고 송출</li> <li>• (고부가 상품) 신용카드 연계 방한전용 혜택 패키지 판촉, 지방 의료관광 상품 판촉</li> </ul>
중앙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박람회) 의료기관, 여행업계 공동 한국관 운영으로 신규 방한수요 창출</li> <li>• (교육관광) 대학생 대상 한국관광 공모전 개최(우승자 한국어행 기회제공)</li> </ul>
중국 동북 3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생) 한국어학과 교수 및 학생 네트워크 협력, 방한행사 개최·홍보</li> <li>• (특수목적관광) 의료, 웰니스, 스포츠, 문화 관광상품 개발, 홍보</li> </ul>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신북방 문화·인적 교류 확대방안,”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 2020.6.23.), p. 44.

이처럼 코로나19가 소멸되는 시점을 계기로 각국의 한국에 대한 관광수요를 다시 확대시킬 수 있는 홍보정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관광객 증가는 자연스럽게 한국문화를 홍보하고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며 한류나 한국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한국으로의 관광객 유치를 추진하는 것에 더해 신북방 국가들과의 상호 관광교류를 염두에 둔 정책이 필요하다. 신북방 국가들은 자원이외의 분야에서의 경제개발을 위해 자국의 관광자원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경우가 많다.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천혜의 자연환경을 중심으로 한 개발가능한 관광

자원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키르기스스탄 정부도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다만, 체계적인 관광자원관리 시스템이 결여되어 있어 이러한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017년 7월 카자흐스탄의 알마티에 중앙아시아 최초의 해외사무소를 개소하고 중앙아시아 5개국에서 관광객 유치에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sup>319)</sup> 사무소의 주된 기능은 한국문화와 관광지역을 홍보하고 한류콘서트 개최를 하는 등의 한국의 관광자원홍보이지만, 북방지역에 위치한 한국의 관광교류 거점으로서 그들의 관광자원에 대한 협력방안을 찾고 모색하는 일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관광산업 교류 이외에도 중요한 협력분야는 교육·인적교류 분야이다. 신북방 국가의 학생들에게 한국은 주요 유학대상 가운데 하나이다.

〈표 IV-17〉 신북방 국가별 한국유학생 수(2020년 기준)

(단위: 명)

국명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조지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몽골
유학생 수	76	14	20	975	370	6,842
타지키스탄	투르크메스탄	우즈베키스탄	벨라루스	몰도바	러시아	우크라이나
118	61	9,104	64	15	1,115	152

주: 유학생 수에는 재외동포 유학생을 포함.

출처: 교육통계서비스(KESS), “국가별 학교별 외국인 유학생현황(2020년),” <<https://kess.vedi.re.kr/index>> (검색일: 2021.5.20.).

국가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지만,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몽골,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등의 한국유학생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 가운데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은 인구 대비 매우 많은 수의 한국

319) 한국관광공사, “관광공사,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사무소 개소,” (2017.7.12, 보도자료), <<https://kto.visitkorea.or.kr/viewer/view.kto?id=51689&type=bd>> (검색일: 2021.6.7.).

유학생이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한국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들 유학생들이 한국에서의 학업을 마친 후 한국의 인적네트워크와 협력자원이 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한국에서 자생적인 네트워크를 갖고 있으나 이를 좀 더 활성화하여 한국에서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도록 제도적인 마련을 할 수 있다. 가칭 ‘신북방 유학생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모임과 친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모임은 단순한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신북방지역 내에서 다른 국가 유학생간의 협력관계도 증진하는 정기적인 네트워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각 대학마다 외국인 유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으나, 전체 신북방지역 유학생을 아우르는 공식적인 커뮤니티는 유학생들의 한국에 대한 고착심을 배양하고 유학을 마친 후에도 자국 내에서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는 현지 네트워크로 발전할 수 있다.

### 3. 외교안보

#### 가. 추진 배경 및 필요성

외교안보 분야에서 신북방정책 추진을 위한 근미래 환경은 우호적이지 않다. 동북아에서 미중 경쟁이 격화되고 미러 대립이 지속되면서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중러 관계가 더욱 밀착되고 있다. 북한 핵문제로 인한 한반도 정세도 급속히 호전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북미 줄다리기가 쉽게 정리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2022년 3월에는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다. 신정부가 들어서면 이전 정부의



정책들은 흔들리고 재구성되는 과정을 겪는다. 신북방정책도 예외일 수가 없다. 상기 요인들은 모두 신북방정책에 부담을 주는 것들이다. 이렇듯 부정적인 환경 도래가 예상되는 가운데 외교안보 부문에서 신북방정책은 과연 어떤 전략과 과제를 추진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이다. 이에 따라 신북방정책과 관련된 근미래 외교안보 환경변화의 전망과 이에 따른 신북방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 (1) 미중 경쟁 및 미래 대립 격화와 중러 관계 밀착

한반도를 포함하는 동북아는 강대국들이 각축했던 오랜 역사의 전장(戰場)이다. 1980~90년대 소련과 동구권의 해체로 인해 다소 완화되었던 동북아 긴장 상태는 2010년대 중반 이후 미중 분쟁 개시와 미래 대립 격화로 다시 불붙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중러 동시 압박은 중러 밀월 관계로 이어졌고, 한반도의 남북한과 연결되어 냉전 시대의 ‘북·중·러’ 대 ‘한·미·일’ 대립구도가 재연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예측도 등장하고 있다.

우선 미중 분쟁은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부터 본격화되었다. 무역적자 문제로 시작되어 기술, 산업, 인권, 지역(타이완, 홍콩, 신장위구르 등) 등 전방위 이슈로 확대되고 있다. 게다가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는 장기간 미국에 막대한 타격을 입히면서 대중국 적대정책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2019년 6월 미국 국방부는 대중 포위망 건설 전략을 담은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Indo-Pacific Strategy Report)’에서 중국을 역내 시스템의 수정주의 국가이자 사실상(de-facto) 적국으로 규정하였다. 2021년 새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도 큰 틀에서 중국을 압박했던 트럼프 시기와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

된다. 바이든은 당선 직후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도 트럼프가 명령한 중국에 대한 관세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 말했으며, 의회도 초당적으로 계속해서 중국을 겨냥한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있다. 미국은 2021년 6월 G7 회의에서도 중국의 민주, 인권을 기치로 동맹국을 규합하여 대중국 압박을 강화하는 양상을 보였다.<sup>320)</sup>

미국 국민들의 77%가 중국에 대해 반감을 보이고 있는 상황까지 고려한다면,<sup>321)</sup> 내년 상하원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이 미국 내 의회와 여론의 분위기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경쟁과 협력을 병행하되 경쟁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트럼프와 다른 스마트한 중국 때리기를 지향할 것으로 보인다. 협력도 관계 지향적 협력이 아닌 미국 이익 우선의 협력으로 이를 위한 군사적 억제, 공정한 관계, 민주주의의 관계를 중요시할 것이며, 트럼프식 고립주의보다는 동맹국들의 협력을 끌어내어 함께 중국을 압박하고자 할 것이다. 이에 미국은 일대일로 구상 등 중국 중심의 지역 블록(block)을 약화하고 이에 대항할 미국 중심의 동맹 블록을 형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21년 1월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 일본, 호주, 인도로 구성된 지역안보협의체인 ‘쿼드(Quad)’가 인도-태평양 전략 정책의 근본적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힌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sup>322)</sup>

---

320) “Biden will Push Allies to Act on China Forced Labor at G7 -adviser,” *Reuters*, April 24, 2021, <<https://www.reuters.com/world/china/exclusive-biden-will-push-allies-act-china-forced-labor-g7-adviser-2021-04-24>> (Accessed July 3, 2021).

321) Pew Research Center, *Unfavorable Views of China Reach Historic Highs in Many Countries* (Washington, D.C.: Pew Research Center, 2020), <<https://www.pewresearch.org/global/2020/10/06/unfavorable-views-of-china-reach-historic-highs-in-many-countries/>> (Accessed September 1, 2021).

322) “U.S. National Security Adviser Says ‘Quad’ Key in Indo-Pacific,” *The Japan Times*, January 30, 2021, <<https://www.japantimes.co.jp/news/2021/01/30/asia-pacific/politics-diplomacy-asia-pacific/sullivan-quad-china/>> (Accessed August 7, 2021).

미국의 압박에 맞서는 중국의 속내는 복잡하다. 시진핑 시기 중국은 강한 중국, 중국몽(中國夢)을 주창하면서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세계질서(Liberal World Order)에서의 하위 파트너로 안주하지 않고 미국과 대등한 초강대국으로 도약하고자 하였다. 이런 대미 전략은 2012년 시진핑이 오바마 미 대통령에게 제시한 ‘신형대국관계’에서 비롯되는데,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를 중국과 함께 양극체제로 나누어 세계패권을 양분하자는 것이다. 그 뒤로도 시진핑은 대외관계정책을 ‘도광양희(韜光養晦,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실력을 키운다)’에서 ‘분발유위(奮發有爲, 떨쳐 일어나 해야 할 일을 한다)’로 전환하면서 중국의 핵심 이익을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었다. 이에 중국은 일대일로 구상을 통해 유라시아 국가들을 규합하여 중국 중심 세계를 구성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중국의 강경하고 공세적인 외교는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부터 대중 압박을 본격화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2021년 현재 중국은 바이든 행정부의 등장을 기대 반, 걱정 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트럼프가 노골적으로 대중국 제재를 가했다면 바이든은 제재를 줄이고 협력을 중시할 거라는 판단과 국제협력을 강화하면서 스마트한 제재로 중국을 더 압박할 거라는 판단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또한 미중 분쟁 외중에서 중국은 외부적으로는 미국에 대한 강경 메시지를 잇달아 내보내고 있으나 내부적으로 예상보다 강한 미국의 압박에 적잖게 당황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전략과 정책의 당위성과 연속성을 중시하는 중국 공산당으로서 미중 경쟁에서 쉽게 물러날 수는 없을 것이다. 2021년 3월 중국의 가장 중요한 정치행사인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리커창 총리는 직접 미국을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외부 세력에 맞서 대만 등 중국의 핵심이익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으며 미국의 압박이

집중되는 반도체 등 첨단기술 자립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표명하였다. 결국 미중은 현재 내가 양보하면 상대방이 승리하고 상대방이 양보하면 내가 승리하는 ‘구조적 갈등’을 향해 치닫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경색된 미러 관계도 빠르게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는 어렵다. 전통적으로 미국 의회와 동맹국들이 러시아에 대한 강경노선을 원하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의 대러 정책 또한 그러할 것이다. 게다가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대러 제재를 주도한 이가 바로 바이든 당시 부통령이었다. 특히 바이든은 트럼프와 달리 친(親)푸틴 성향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러시아 정책 구상을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에 대한 민주주의와 인권 이슈를 제기하거나 우크라이나 문제를 재조명하면서 대러 압박을 지속될 것이다.

반면 푸틴의 러시아는 오랫동안 냉전 종식 후 미국이 ‘강요하는’ 세계질서에 그대로 순응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또한 반러 감정이 높고 인권을 중시하는 바이든 민주당의 집권은 러시아에 좋은 일은 아니다. 당분간 러시아는 바이든의 대러 정책을 관망하면서 대응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갈등의 장기적 격화 속에서도 러시아는 대미 관계 개선을 원하고 있는데, 미국과의 정치·외교적, 경제적 단절은 1980년대처럼 그랬듯이 러시아 경제에 커다란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미국에 각을 세우면서도 미국과의 ‘제한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러시아에는 글로벌 차원의 전략적 안정과 국제안보를 위해서 미국과의 ‘제한적 협력관계’를 잘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미러 관계는 대립을 계속하면서도 핵 통제 협상, 한반도 문제 등에서 이런 협력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중, 대러 동시 압박은 중러 관계의 전면적 심화를 이끄는 주요 동인이다.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로 서방과 러시아의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2017년 미중 관계가 갈등으로 치달음에 따라 중러의 전략적 협력이 급속도로 진전되었고 2019년에는 양국은 ‘신시대 전면적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에 들어섰다. 중러 밀월은 미국의 양국에 대한 압박이 지속되는 한 유지될 전망이다. 양국 모두에 협력의 전략적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중국에 풍부한 에너지를 초국경 송유가스관을 통해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고, 중국군에 부족한 첨단무기를 제공하고 실전경험을 채워 줄 수 있으며(합동 군사훈련, Su-35S, S-400 등 최신 무기체계 판매 등), 중국이 필요로 하는 첨단 과학기술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고(달 탐사 협력, 위성항법시스템인 러시아의 GLONASS와 중국의 베이더우 간 협력 등), 일대일로 성공에 필요한 역내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상하이협력기구(SCO)와 대테러 합동훈련). 반면 중국은 러시아에 에너지, 원자재, 첨단 무기의 안정적인 구매자이며, 기술력은 갖추었으나 상품화 능력이 부족한 러시아 기업들에 각종 관련 플랫폼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중개자이며, 유라시아 지역에서 역내 안보의 중요 협력자이다.

결국 중러는 정치, 경제, 군사, 외교를 포함하는 복합적 협력을 통해 미국의 압력을 완화하고 서구 중심의 질서에 대항하는 대항 블록을 형성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현재 양국은 거의 유사동맹 수준으로 협력단계를 끌어올렸다.<sup>323)</sup> 다만 러시아는 중국의 중앙아시아 주도권 탈취, 러시아 제조업 시장 잠식, 대중국 경제 종속, 첨단기술 탈취, 극동러시아의 중국화 등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므로 러시아는 중국과 ‘대유라시아 동반자 관계’ 구상을 추진하는 한편, 동북아에서 신동방정책을 통한 극동지역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 일본, 한국 등

323) 현승수 외, 『중·러 협력과 한반도 평화·번영』 (서울: 통일연구원, 2020), p. 62.

역내 국가들과 협력을 도모하면서 중국의 영향력을 줄이려 시도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갈등이 지속되는 한 중국과의 전방위 협력은 몇몇 문제에도 불구하고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2) 한반도 정세의 경색 국면 지속

그간 신북방정책 추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한반도 정세도 빠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라는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어 이들의 역학 관계 변화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미중, 미러 대립 격화와 중러 협력 강화는 냉전기 북·중·러와 한·미·일의 진영 대립을 연상시키면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미중은 각각 세계 전략을 추진하면서 충돌하고 있는데 한반도는 대만 해협, 남중국해에 이어 양국이 충돌할 지정학적 위험이 큰 지점이다(예: 사드 배치). 북한은 미중 갈등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핵능력 개발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기에 당분간 한반도 정세의 경색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러, 남북중 소다자 협력과 같은 신북방 협력 사업들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전제하고 있기에 이런 정세는 신북방정책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

미국의 입장에서 한반도는 중국 견제, 북한 위협 제거라는 두 가지 핵심 목표가 중첩된 곳으로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정책의 최우선에 위치하고 있다. 미국은 목표 달성을 위해 한미동맹 강화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한국의 대외 정책에 대한 미국의 관여가 늘어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미 미국은 한국에 ‘인도·태평양 전략’의 시행 방안인 ‘쿼드’에 적절한 형태로 결합할 것을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요청해 왔다. 한국도 군사 안보 및 첨단산업기술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주의 가치 동맹을 내세우는 미

국의 요청을 거절하긴 어렵다. 한국이 쿼드나 D10 등 대중국 연합 전선에 참여하게 되면 한반도에서 미중 대립 구도가 더욱 첨예해진다. 반면,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는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일단 절차를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처럼 북한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핵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을 것이기에 급격한 긴장 완화를 기대하기 힘들다. 북한도 미중, 미러 대립 격화 속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배후로 미국의 비핵화 압박에 장기적으로 맞서는 전략을 취할 것이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도 지금까지 추진되었던 북미 협상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기에, 미국은 북한의 과도한 도발은 억제하면서 북한과의 협상틀은 유지하는 방식을 추진하되 트럼프식의 탑다운(top-down) 방식이 아닌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 예상된다. 만약 북한이 이에 호응한다면 한반도 정세의 호전도 다소 기대해 볼 수 있다.

중국이 한반도 정책에서 고수하는 기본 원칙은 한반도 안정과 평화,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한반도 비핵화, 남북한 등거리 외교(북한 붕괴 방지), 지정학적 수단을 활용한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유지 확대이다. 특히 시진핑 시기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미국과의 전략적 대결 구도 속에서 짜이고 있는데 주로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통해 전략적 목표를 실현하고자 한다. 현상 유지는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남과 북이 정권을 유지한다는 의미로 한국이 미국에 완전히 종속되지 않고 북한이 붕괴되지 않은 채로 버텨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중 분쟁이 격화되면서 중국은 한국과 관계 개선을 시도하며 중국 쪽으로 견인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중국은 2015년 시작한 사드 제재를 순차적으로 완화하고 일대

일로 구상과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의 협력에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중국이 한국에 바라는 바는 미중 분쟁 격화 속에서 미국에 지나치게 경도되지 않고 중립적 위치를 취하길 바라는 것으로서 이를 위해 강경책, 유화책을 다양하게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아시아를 중국 중심의 질서로 바꾸고자 하는 중국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줄이고 중국의 영향력을 넓히고자 노력할 것이다.

미중이 미중 경쟁 격화 속에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증대에 매진하는 가운데, 한반도(한국과 북한)는 미중 갈등의 최전선에서 이를 강화함으로써 비용을 치를 것인지, 아니면 경계의 자리에서 완충의 역할을 할지 기로에 선 셈이다.<sup>324)</sup> 사실 그 선택이 가능할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없지 않다. 장기 전망은 쉽지 않지만, 다만 근미래에 한국은 미국의 대중국 동참 요구에 적당히 응하면서 위태로운 균형을 찾으려 할 것이고 북한은 미중 대립을 대미 협상의 레버리지로 활용하면서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 정세 완화는 기대하기 어렵고 신북방정책 추진도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 (3) 감염병 방지 등 新안보 이슈의 대두

신안보는 군사·외교적 갈등과 관련된 안전에 중점을 두는 ‘전통적 안보(traditional security)’와 구별되는 용어로 1990년대 초반 탈냉전 시대에 본격 등장한 안보 개념이다. 미소의 대립이 사라진 후 전통적 군사적 안보 문제 이외의 다른 안보 위협 요인들이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이다. 환경오염, 기후변화, 전염병, 사이버안전, 에

---

324) 김준형, “코로나19 이후 국제정세와 한국의 전략,”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코로나19 이후 국제정세』 (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0), p. 13.



너지 부족, 테러 위협 등 신안보 이슈들은 특정 국가 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초국경적(trans-national)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동북아에서도 그간 황사, 미세먼지, 방사능, 사스(SARS), 메르스(MERS) 등 국제협력을 요하는 신안보 이슈가 불거지곤 했으나 최근 관련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각인시킨 것은 코로나19의 확산이었다. 코로나19는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신안보적 리스크가 국제협력이 없다면 얼마나 쉽고 빠르게 전 세계에 거대한 충격을 줄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전 세계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에 협력을 통해 함께 맞서기보다는 일방적 국경 폐쇄, 방역물자 수출 제한, 감염병 정보 은폐 통제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는 코로나19의 글로벌 대유행이라는 참담한 결과로 이어졌다.

최근 한반도가 속한 동북아에는 신안보와 관련된 초국경 위협 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는 물론이고 봄철이면 동북아를 휩쓰는 황사, 겨울에 심해지는 미세먼지, 기후변화로 인한 사막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출, 극단주의 테러리즘 확산 등이 모두 동북아, 나아가서는 유라시아에서 발생하는 초국경 현상들이다. 신안보 문제의 심각성에 반해서 이에 대한 동북아 국제 공조는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환경오염, 미세먼지 등을 다루는 한중일 환경장관 회담이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역내 극단주의 테러리즘에 공동대응하는 SCO의 정례화 등 일부 협력 분야가 있지만, 대부분의 신안보 영역에서 유라시아를 포괄하는 협력시스템은 아직 찾아보기 어렵다. 세계화·정보화·시장화로 인해 유라시아 국가 간 장벽이 허물어지고 각종 교류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신안보 이슈는 앞으로도 계속 발생하며 역내 골칫거리가 될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유라시아 국제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증가한다.

#### (4) 신정부 출범에 따른 신북방정책 불확실성 증가

근미래에 신북방정책 지속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치적인 변화가 있다. 2022년 3월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뒤이은 새 정부의 출범이다. 여당의 재집권 여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으나, 통상적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전 정부의 많은 정책들은 중단되거나 크게 바뀌는 운명에 처한다. 신북방정책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 게다가 미중 및 미러 대립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신정부는 북방협력에 대해 적극적 태도를 취하기 어려울 수 있다. 대외정책과 신북방지역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상존한다는 점에서 제20대 대선의 결과는 신북방정책의 지속성과 연계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확실한 것은 정권 교체 시기에는 신북방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이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대선이 본격화되는 시점부터 신정부의 인수위 활동이 마무리되어 새로운 정책을 확정하기 전까지 신북방정책을 어떻게 유지하면서 미래에 대비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각계의 신북방정책 관련 전문가와 기업인들의 경험과 전문성이 신정부의 미래 신북방정책에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

신북방정책의 성과에 대한 세간의 평가가 긍정적이지 않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대내외에 내세울 만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김창진은 2018년 이후 한반도 정세가 경색되면서 신북방정책의 동력이 크게 떨어지고 청와대의 관심도 급격하게 ‘신남방정책’으로 쏠리는 양상을 보였다고 지적한다.<sup>325)</sup> 성원용도 여러 구호, 또는 의제로 표현된 신북방정책 관련 사업들이 장기지속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대부분은 아직 ‘실질적인’ 사업화의

325) 김창진, “북방정책의 새로운 접근과 공공외교 전략,” 『신북방정책과 지방정부의 공공외교』(크라스키노포럼 제4차 정책포럼/제3회 국제평화토론회 자료집, 2021.5.7.), p. 51.

단계에 진입하지 못했다고 평가하였다.<sup>326)</sup> 협력 대상국 전문가의 평가도 크게 다르지 않다. 러시아의 마리나 쿠쿨라는 신북방정책은 시행 3년이 넘도록 한러 무역과 투자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냉정하게 평가하였다. 쿠쿨라는 러시아가 신북방정책으로 인해 한국의 대러 직접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2019년 12월 기준 극동러시아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의 총투자 규모는 1.23억 달러로 지난 4년간 극동지역 전체 FDI의 4.3%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다.<sup>327)</sup>

물론 이들 전문가들이 신북방정책이 이룬 성과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신북방정책으로 인해 중국 창춘과 러시아 연해주에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 거점이 마련되었고, 한러혁신센터 등 시대에 부응하는 디지털 혁신분야와 금융분야 협력 플랫폼도 조성되었으며, 한러협의회와 한러지방협력포럼 등 소통 채널이 다변화되었다는 것들이 중요 성과로 언급된다.<sup>328)</sup> 다만 2019년 부산 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정상회담 개최로 각광받은 신남방정책에 비해 신북방정책은 정부와 국민의 관심이 적었고 한반도 정세 악화와 코로나19로 인해 추진 동력이 현저히 떨어진 것도 사실이다. 이렇듯 신북방정책에 대한 세간의 평가가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 들어설 신정부에 신북방정책 추진의 당위성과 잠재성을 어떻게 설파하고 정책에 반영시킬 것인가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326) 성원용, “북방정책에서 신북방정책까지: 한국의 의도, 전략, 실적, 한계,” 『신북방정책과 지방정부의 공공외교』 (크라스키노포럼 제4차 정책포럼/제3회 국제평화토론회 자료집, 2021.5.7.), p. 21.

327) 마리나 쿠쿨라, “한국의 북방정책에 대한 러시아의 시각: 극동지방 중심,” 『신북방정책과 지방정부의 공공외교』 (크라스키노포럼 제4차 정책포럼/제3회 국제평화토론회 자료집, 2021.5.7.), p. 44.

328) [특별기고] 신북방정책은 미래다,” 『파이낸셜뉴스』, 2021.5.10., <<https://www.fnnews.com/news/202105101807294138>> (검색일: 2021.7.20.).

## (5) 신북방정책 지속 추진의 필요성

신북방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에서 비롯되었다.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는 동북아시아는 물론 주변 지역 국가들과 지역의 평화(Peace)와 번영(Prosperity)을 위한 공동체(Community)를 형성한다는 개념이다. ‘평화의 축’과 ‘번영의 축’을 세워서 궁극적으로 평화·번영 공동체를 이룩한다(P+P=C). 즉, 북방 유라시아지역에의 ‘평화와 번영의 신북방 경제공동체 형성’을 비전으로 삼은 것이다.<sup>329)</sup> 여기서 평화는 외교안보, 번영은 경제에 해당하되, 평화는 경제 발전으로 번영은 외교안보적 안정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이룩하여 궁극적으로 평화번영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다. 평화와 번영은 상호 배타적이 아니라 보완적이기에 신북방정책은 하나의 복합 전략의 성격을 갖는다. ‘평화’와 ‘번영’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동북아 공동체의 가치 비전으로서, 앞으로도 한국의 유라시아 북방정책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본질적으로 ‘평화’와 ‘번영’이라는 두 가치 중 어느 하나도 외면하긴 어렵다.

특히 대외적으로는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고 북한 핵무기를 둘러싼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국가 간 교류가 중단되고 국경은 폐쇄되었다. 많은 북방 국가들이 경제 봉쇄로 인한 경제성장을 하락과 국민들의 코로나 감염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결국 신북방정책이 표방하는 가치와 비전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어려운 환경 변화에 맞춰서 신북방정책 추진전략을 정교히 하고 세부 과제를 새롭게 고안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근미래에 평화 구축을 위한 신북방정책, 즉 외교안보 측면에서 신북방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기에 대내외적 환경이 좋지 않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대외적 어려움의 가중은 그만큼 신북방정책이 더욱 필요

329) 북방경제협력위원회 <<https://www.bukbang.go.kr/bukbang/>> (검색일: 2021. 7. 29.).

하다는 반증이다. 대내적으로는 2022년 3월 대선으로 인한 새 정부 출범 후에 신북방정책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으나, 신북방정책의 가치와 비전에 동의하는 그룹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 나. 추진 목표 및 고려사항

### (1) 전통 안보와 신안보를 포함하는 포괄적 평화협력 추진

‘북방지역 평화번영체제 구축’이라는 외교안보적 비전하에 근미래에 한국이 추진할 북방 전략 목표는 무엇인가? 1990년대 냉전구도가 해체된 이후 유라시아는 국방과 외교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안보 문제는 다소 완화되었다고 할 수 있었다.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에 북한 핵개발로 인한 긴장은 상존하고 있었으나, 과거 양극화된 냉전시대처럼 처절한 진영대결이 펼쳐지는 구도는 아니었다. 다만 다극화, 세계화된 시대가 도래하면서 외교·군사 안보가 아니라 환경, 기후, 질병, 테러 등을 포괄하는 신안보 문제의 심각성은 고조되었다. 즉, 상당기간 전통 안보 측면의 긴장 완화와 신안보 측면의 위협 고조가 동시에 진행되었다.

그러나 최근 미중 대립의 격화와 북한의 핵무력 증강으로 인해서 한반도 주변의 전통 안보 측면에서의 긴장도 다시 고조되고 있다. 아직 한반도 주변에서 미중이 군사적으로 맞붙거나 북한이 무력 도발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그 위험성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미중은 주로 지난 수년간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대치 수준을 올리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대부분을 포함하는 구단선(九段線)을 선포하고 본국의 영토와 영해임을 주장하고 있으며 공공연히 대만을 무력 통일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미국은 무기판매 등을 통해 대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남중국해에서 ‘항해의 자유

작전'을 통해 중국의 주장을 무력화시키고자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만약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북한이 핵위협을 계속하면서 미국을 시험한다면 대만 해협이나 남중국해에서 고조되고 있는 군사적 긴장이 한반도에서도 재연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결국 근미래에 한국은 전통 안보와 신안보 양쪽 측면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이 북방정책에서 펼쳐야 할 '북방지역 평화구축'을 위한 전략은 양자를 포괄하는 것이어야 한다. 즉 '전통 안보와 신안보를 포함하는 포괄적 평화협력 추진'이 근미래 북방정책이 세워야 할 핵심적인 외교안보 전략 목표이다. 물론 한국의 정책 역량이 제한된 상황에서 양자를 동시에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하나에 집중하기에는 양자의 안보적 상황이 모두 엄중하다. 근미래 신북방정책에는 이런 전략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전체적인 정책 방향과 세부 추진과제들을 마련해야 한다.

## (2) 신북방 국가들과의 협력과 연대로 외교의 다변화 추구

근미래 전략 목표를 염두에 두었을 때 신북방정책이 고려해야 할 정책 방향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한국은 미중 전략 경쟁이 나날이 심화하는 가운데 확고하고 독심 있게 외교의 '다변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한국 외교는 냉전기와 탈냉전기를 거쳐 오면서 불가피하게 미국과 중국에 지나치게 치우쳐왔다. 하지만 현 시기 미중 간 경쟁이 본격화하는 과정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많은 나라들과 적극적으로 '연대(solidarity)'를 모색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는 한국 외교의 총체적 유연성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유연한 운신에도 소중한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역내 진영구도의 완화 또는 종식,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유리한 구조적 환경의 조성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한국 외교의 다변화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당위’의 문제이며 흔들림 없이 지속되어야 할 핵심 과제라고 볼 수 있다.<sup>330)</sup>

이를 위해 한국 북방 외교의 협력과 연대의 대상으로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각국에 대한 전략적 가치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의 경우, 첫째, 국제·지역 차원의 강대국으로 복귀한 러시아의 국가 위상을 재인식·재평가해야 한다. 러시아는 소련 붕괴 이후 체제전환 과정에서 극도의 정치·경제적 혼란을 겪으면서 냉전기 제2세계를 이끌던 위상과 영향력을 크게 상실했었다. 하지만 2000년 푸틴이 ‘강대국 러시아의 복원’을 기치로 집권한 이후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질서와 안정을 상당 부분 회복했고 국제적으로 ‘공세적 방어주의’를 재가동하며, 적극적으로 종축/횡축으로 기동 중이다. 즉, 현상유지 정책이 오히려 자국의 영향력 침식을 초래한데 대한 반성에 기초하여, 지역적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영향력 확대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내에서는 여전히 러시아를 ‘몰락한 제국’, 정치·경제적 후진국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존재한다.<sup>331)</sup>

둘째, 중러 전략적 제휴는 변화가 불가능한 역내 세력관계 함수의 상수이며, 이는 결국 역내 진영 구도의 고착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양국 간 제휴는 반미(反美)/반패권주의연합 구축에 대한 정치적 수요에 따른 결과로서 그런 점에서 충분히 ‘전략적’이라 칭할 만하고, 푸틴과 시진핑이 이끄는 러시아와 중국의 기존 체제가 앞으로 상당 부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양국 간 제휴의 견고성을 보장하는 요인이다. 하지만 양국의 ‘대안 국제질서의 상’에 대한 인식과 전략상의 괴리를 비롯해 전략적 제휴의 지속에 있어 여러 갈등 요인도 동시에 존재한다. 특히 러시아의

---

330) 장세호, “전환기적 국제질서와 대러 외교안보 협력방안,” (통일연구원 신북방정책 전문가 좌담회 발표문, 2021.8.31.), p. 4.

331) 위의 글, p. 7.

중국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의존,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신동방정책’의 전략적 방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에도 이른바 ‘관계의 다변화’는 매우 절실한 과제이며 러시아는 취약한 동부 영토의 안보·경제적 현황을 고려할 때 역내 진영 구도의 완화에 관심이 있다.<sup>332)</sup>

셋째, 러시아가 역내 대(對)미연합전선 구축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는 편견 불식이 필요하다. 러시아는 지난 30여 년간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제한적 역내 입지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역할을 끊임없이 모색해 왔다. 러시아는 미국과 함께 국제 핵레짐을 형성·유지시켜온 핵심 주체로서 전 세계적 범위에서 북한을 포함해 어떤 형태의 핵확산에도 단호히 반대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더욱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고도화 과정에서 동북아 지역 내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군비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 다만 직접적인 대북 군사 압력이나 제재가 아닌 평화적이며 정치·외교적 방법으로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러시아는 ‘다자적 틀’에 입각한 북핵 문제 해결 필요성과 이를 역내 다자안보협력체 형성의 계기로 삼자고 주장하고 있다.<sup>333)</sup>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중견국 다변화 외교를 펼쳐야 할 한국에 중요한 파트너 국가이며 북한 비핵화를 위한 연대의 대상이자 모범이다. 한국-북방국가와의 협력 채널은 아세안이나 상하이협력기구가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 하는 방식을 모델로 장기적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북방국가와의 채널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한반도 평화를 가져오는데 나름의 역

---

332) 위의 글, p. 7.

333) 위의 글, p. 7.



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모든 중앙아시아 북방협력국가들이 남북한 동시 수교국이다. 이들 국가들은 과거 사회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북한과 긴밀한 우호 관계를 맺었던 경험도 있다. 비록 2010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 강화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북한과 경제·외교적 관계를 끊거나 명맥만 유지하고 있지만, 긴 우호 관계의 역사와 중앙아시아 내 고려인의 존재 등 유리한 조건이 있기에 이후 상황 변화에 따라서 개선될 여지가 충분하다.

중앙아시아의 핵심국가 카자흐스탄은 과거 사회주의권 붕괴 과정에서 정권의 근본적인 교체나 국제사회의 제재 없이 성공적으로 비핵화를 완료한 경험을 갖고 있다. 소위 카자흐스탄 모델이다. 이후 중앙아시아 각국은 역내 비핵화가 완료된 후 2009년 3월 중앙아시아 비핵지대(Central Asian Nuclear Weapon Free Zone: CANWFZ)를 구성하여 항구적으로 역내 핵위협을 제거하였다. 근미래에 북한 비핵화가 현실화되긴 어려운 건 사실이다. 그러나 향후 중앙아시아의 이런 중요한 경험을 북한에 적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 중앙아시아와의 긴밀한 협력과 관여를 통해 이들 국가를 한반도 평화 구축의 중요한 관여자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작업이 선행되어야 장기적으로 북한이 비핵화를 추진하고 개혁개방을 추진할 때 중앙아시아의 경험과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다. 추진 과정 및 방법

북방국가들에 대한 전략적 가치를 재평가한 바탕 위에서, ‘포괄적 평화협력’, ‘외교 다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유라시아 지역에서 미중 갈등에 노출된 신북방 국가들과 공동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독자적인 ‘완충지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중 간 경쟁과 갈등의 틈바구니에 끼여 있는 상당수 국가들은 미중 한쪽에 줄서기보다는 양국 모두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고, 양자택일의 압력 속에서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sup>334)</sup> 이 완충지대는 전통 안보 측면에서 신북방지역에서 미중 충돌 리스크를 완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신안보 측면에서 감염병 방지 등 공통 이슈에 대한 대응을 주도한다.

이런 구상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한국형 세계전략’의 역동적 추진이기도 하다.<sup>335)</sup> 유라시아 신북방지역 전체를 염두에 두고 중견국 한국이 주도하여 미중 갈등에 공동 대응하는 플랫폼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런 협력 채널은 최종적으로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다만 이 협력채널이 단일 체제일 필요는 없으며 이슈와 필요에 따라 다자간, 양자 간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 따라서 평화 전략 실현을 위한 협력 추진 과제는 세 가지로 제안할 수 있다. 첫째, 한국 주도의 역내 다자 채널 구축, 둘째, 미래 지향적 양자 협력 플랫폼 구축, 셋째, 신북방 국가 협력을 통한 한반도 긴장 완화 유도 등이며, 각 과제는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방안들을 포함한다.

## (1) 한국 주도의 역내 다자 채널 구축

### (가) 중간국 대화체 건설

북방국가는 열강에 속하는 러시아와 중국(동북3성)을 제외하면 대개 중간국이다. 중간국은 군사력, 경제력 등이 강대국에 미치지

334) “[바이든 시대, 북·중의 시선 ‘메가 아시아’를 완충지대로 미중 新냉전 그림자 걷어라,” 『아주경제』, 2021.6.10., <<https://www.ajunews.com/view/20210610085256717>> (검색일: 2021.7.23.).

335) 조한범·배기찬·이수형, 『변화하는 통일환경에 따른 대북·통일정책 개선과제: 신한반도체제 구상을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19), pp. 185~188.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역량이 있어 국제사회에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를 의미한다. 중간국은 강대국과 다르게 역내 패권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강대국 간 대립을 중재하기도 하고, 강대국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섭하거나 설득해야 하는 대상이기도 하다. 역내에서 강대국 간 경쟁이 격화될 경우 중간국들은 선택을 강요받으며 정치 경제 외교 측면에서 일정한 손실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한다. 결국 중간국은 국제적 경쟁 상황보다는 협력 상황에서 보다 많은 이익을 얻기에, 강대국 경쟁이 격화되면 중간국 간 공동대응을 할 필요성이 높아진다.

한국은 유라시아에서 가장 높은 민주주의의 수준과 강한 경제력을 지닌 중간국이다. 이에 한국은 유라시아 중간국 대화체를 주도하면서 역내 정치안보적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역내 안보를 안정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 중간국 대화체는 미중, 미러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유라시아에서 평화 협력을 주도하는 목표를 위해 활동하며 핵무기 보유국에 대한 핵무기 축소, 재래식 군비 축소, 역내 패권적 군사적 행동 자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미중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한국이 그간의 ‘담론 추종자’에서 ‘담론 제시자’로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sup>336)</sup> 한국이 주도하는 이 유라시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이 중간국 대화체는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기존 강대국이 반대할 명분과 이유도 크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 유라시아 패권국이 아니며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1)은 중간국 대화체 구상을 구체화하여 ‘한국-중앙아시아 다이얼로그 플러스(+)’ 협의체를 제안했다. 이는 기존의 ‘한-중앙아 협력포럼’에 몽골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상화

336) 오영주, “코로나19 이후 국제협력의 방향과 한국 외교,”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코로나19 이후 국제정세』 (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0), p. 44.

담 형식의 협의체로 출범시키고, 기존의 각료급이 참여하는 ‘한-중앙아 협력포럼’은 그 산하에 배치하는 방식이다. 유라시아 대륙에 존재하는 SCO, 일대일로 정상회담, CICA(Conference on Interaction and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in Asia, 아시아 교류 및 신뢰 구축 회의) 등에 대응해 냉전 종식 이후 상황을 반영한 중견국가 주도형 유라시아 대화 협의체를 탄생시키자는 것이다.<sup>337)</sup> 이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중간국 대화체 제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플러스(+)'가 몽골을 포함시키는 명칭으로 적절한지는 판단할 필요가 있다.

#### (나) 신안보 공동대처 플랫폼 결성 주도

한국은 코로나19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한 방역모범국이다. 발달된 의료시스템, 뛰어난 의료진의 역량, 우수한 방역물품 공급 능력, 방역수칙을 따르는 성숙한 시민의식 등이 어우러진 결과다. 특히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게 다수의 경제활동을 크게 제약하지 않으면서도 이루어낸 성과이기 때문에 더욱 그 가치가 크다. 이런 한국의 능력은 날로 중시되고 있는 신안보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공동대처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이기도 하다. 한국은 2019년 4월 우즈베키스탄에 보건의료협력센터를 설립하여 운영을 시작했고 코로나19 방역물자(진단키트, 개인보호장비)를 지원하였다. 또한 보건 ODA 사업으로 우즈벡 국립아동병원 및 몽골 국립진단치료 센터를 지원했다. 2019년 6월에는 보건의료산업 진출 활성화를 위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보건의료협력 사절단을 파견하고 기업상담회를 개최했으며 2020년 9월에는 한-러 보건의료협력포럼을 개

33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1년 국제전략 환경 변화와 신북방정책 추진전략』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1), p. 76.

최하기도 했다.

보건 의료와 관련해서 성공적 방역모범국인 한국이 아시아 역내 보건 관련 보건 안보 협력 거버넌스를 제안할 경우 호응과 성과를 올릴 것이기에 현재 미국 주도로 운영되고 있는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Golbal Health Security Agenda: GHSA)을 벤치마킹해서 신남방 및 신북방 국가들에 ‘아시아 보건 안보 이니셔티브(Asian Health Security Initiative)’를 만들 필요가 있다.<sup>338)</sup> 감염병 예방 등 보건 의료뿐만 아니라 다른 신안보의 분야인 기후 변화, 황사 및 미세먼지, 사이버 안보 등의 영역에서도 한국이 주도하는 역내 협력 플랫폼을 만들 수 있다. 아시아 전체를 총괄하는 협의체의 설립이 어렵다면, 우선 신북방 국가들을 대상으로 신북방 보건안보 이니셔티브를 설립하고 미국, 일본 등 관심이 있는 국가들에도 개방된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지구온난화 등 기후 문제가 부각됨에 따라 최근 글로벌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탄소중립’ 이슈에 대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도 필요하다. 탄소중립 대응은 환경 이슈를 넘어서 향후 2050년까지 에너지, 경제통상, 외교안보, 사회문화의 대전환(great transformation)을 위한 핵심적인 의제로 다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21년 6월 현재 전 세계 137개 국가가 에너지를 포함한 사회경제시스템의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을 하겠다는 선언에 동참했듯이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한국은 동북아에서 ‘동북아 탄소중립 이니셔티브’, ‘한-유라시아 탄소중립 이니셔티브’ 등 글로벌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국가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전략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sup>339)</sup>

---

338) 이규창 외, 『감염병 공동대응을 위한 남북인도협력: 코로나19를 중심으로』(서울: 통일연구원, 2020), pp. 42~43.

339) 추장민,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토론문.”

## (다)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정례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신북방 국가들과의 협력체로 기존의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 채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sup>340)</sup>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는 2016년 4월 모스크바에서 최초로 개최된 이래 회원국을 순회하면서 연례적인 유라시아 정치 포럼이다. 이 회의에는 신북방지역 국가 대부분과 이란 등 중동국가, 인도네시아 등 다수의 신남방지역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기에 신남방과 신북방을 연계하는 대표 협의체로 발전할 여지가 크다. 한국 주도로 창설된 이 협의체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한국이 신남방과 신북방 연계 협력 프로그램을 선언하거나 또는 한국 주도로 코로나 및 디지털 전환 대응 관련 특정 기금을 조성하자는 제안 등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sup>341)</sup>

## (2) 미래지향적 양자협력 플랫폼 구축

### (가) 북방 주요국과의 정상회담 및 고위급 회담 정례화

전략적 상호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상회담 정례화가 필요하다. 북방국가 중 한국에 의미가 큰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 최소 4개국과는 정례적으로 양자 정상회담 또는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면서 새로운 신북방 협력 어젠다와 협력 비전을 협의해 나가야 한다. 2017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하여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으면서 9개 다리(9-Bridge) 등 한러 간 협력에 대한 의미 있는 어젠다가 도출된 바가 있다. 그러나 한국은 현재 북방 주요국

(통일연구원 최종보고회 토론회, 2021.10.12.), p. 1.

34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1년 국제전략 환경 변화와 신북방정책 추진전략』, pp. 77~78.

341) 위의 책, p. 77.

들과 이런 이슈를 정례적으로 논의할 고위급 대화 채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치외교안보 논리가 경제적 계산에 우선하는 대부분의 북방 국가와 전략적 합의를 이루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대통령을 비롯한 최고위급의 동방포럼 등에 대한 꾸준한 참여와 정상회담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 (나) 한러 2+2(외교, 국방) 전략대화체 신설

한반도에 영향력이 큰 러시아와는 정상회담 이외에도 한·러 외교·국방장관(2+2)회담을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sup>342)</sup> 러시아와는 극동 개발, 남북러 철도 연결 및 에너지 수송관 건설, 나선 개발, 북극 협력 등과 같은 거대 프로젝트를 협의 중인데, 이 프로젝트들은 경제적 요소뿐만 아니라 외교안보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러시아와 개설되어 있는 청와대 안보실과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간 정례 안보대화를 활성화시키면서 이를 토대로 ‘2+2’ 회의체 결성으로 한러 외교안보 협력 플랫폼을 다원화해야 한다. 이런 한러 외교, 국방 대화체 활성화를 통해 최근 러시아 항공기의 잦은 한국 방공식별구역(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KADIZ) 침범문제를 다루는 한·러 양국 공군 간 ‘비행정보 교환용 직통전화( 핫라인)’ 설치 등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sup>343)</sup>

또한 이 채널을 통해서 2021년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미사일 지침 종료에 대한 러시아의 우려를 협력 확대의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다. 미사일 지침으로 한국의 미사일 주권을 제약해 온 한미 미사일 지침이 종료됐으나 주변국들은 내심 한국의 미사일 능력 강

342) 중국과 러시아, 일본과 러시아 간에는 이미 외교·국방에 관한 전략대화체(2+2)가 운영되고 있다.

34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1년 국제전략 환경 변화와 신북방정책 추진전략』, p. 38.

화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한국은 ‘자강’에 대한 논변과 함께 이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동시에 제시함으로써 실리와 명분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주변국들이 첨예한 군비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한국만 이상적 낙관론에 기초하여 군사적 준비태세를 방기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함과 동시에 한국은 ‘안보 딜레마’의 위협을 줄이고 역내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협력안보, 즉 역내 다자안보체제 구축을 지지하고 적극 추진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피력해야 한다. 이때 역내 다자안보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해당 사안에 대해 가장 의지가 강한 러시아와 적극적인 협력과 연대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up>344)</sup>

#### (다) 다자·양자 공공외교 채널 활성화

공공외교(Public Diplomacy)란 “외국 국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자국의) 역사, 전통, 문화, 예술, 가치, 정책, 비전 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외교관계를 증진시키고, 국가이미지와 국가브랜드를 높여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높이는 외교활동”을 말한다. “정부 간 소통과 협상 과정을 일컫는 전통적 의미의 외교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문화예술, 원조, 지식, 언어, 미디어, 홍보 등 다양한 기제를 활용하여 외국 대중(Foreign Public)에게 직접 다가가 그들의 마음을 사고, 감동을 주어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 공공외교의 기본 개념이다.<sup>345)</sup> 공공외교는 다양한 형태의 공식적·비공식적 활동 모두를 포괄하며 전통외교에 비해 외교활동의 수행 주체가 확장된다는 특징을 가진다. 공공외교의 주체는 지방 정부, 기업, 다양한 민간 조직이며 자국의

344) 장세호, “전환기적 국제질서와 대러 외교안보 협력방안,” p. 7.

345) 외교부, “공공외교란,” <[https://www.mofa.go.kr/www/wpge/m\\_22713/contents.do](https://www.mofa.go.kr/www/wpge/m_22713/contents.do)> (검색일: 2021.9.1.).



가치, 제도, 문화 등 소프트파워가 강조되고 디지털 매체가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공공외교의 활성화는 전통안보와 신안보 상황이 동시에 엄중해지고 있는 동북아 정세를 완화시키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아무래도 미중 경쟁 격화 속에서 중앙정부는 외교적 움직임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때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지방정부, 민간 조직에서 한류 등 소프트파워를 중심으로 신북방 국가들을 상대로 공공외교를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경기도가 최근 지자체 차원의 공공외교를 주도하는 경기국제평화센터를 설립하고 평화를 핵심 가치로 국제교류와 협력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특히 평화를 남북협력을 중심으로 좁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넓은 의미의 적극적 평화를 추구하면서, 남북협력과 함께 동아시아 주요국을 대상으로 공공외교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역할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는 역할 설정이 필요하다.<sup>346)</sup>

한국의 북방 공공외교는 신북방지역에서 국제공공재 창출의 지향을 목표로 동북아공동체 형성을 공동 연구할 국제기관의 설립, 북방지역 평화·경제포럼의 주기적 개최, 극동·시베리아지역 공동개발을 위한 동북아(한·러·중·일) 컨소시엄 구성, 북·중·러 3국 접경지대의 평화·번영지대 제안, 동북아 청소년들의 체험 캠프(공동학습, 협동놀이, 창업경진대회 등), 유라시아 청년축전(영화제, 가요제, 전시회, 스포츠대회 등)의 주기적 개최 등을 제안할 수 있다.<sup>347)</sup>

---

346) 이성우, “한국 공공외교와 지방정부의 역할: 경기도를 중심으로,” 『신북방정책과 지방정부의 공공외교』(크라스키노포럼 제4차 정책포럼/제3회 국제평화토론회 자료집, 2021.5.7.), p. 88.

347) 김창진, “북방정책의 새로운 접근과 공공외교 전략,” p. 67.

### (3) 북방국가와의 협력을 통한 한반도 긴장 완화

근미래에 남북 및 북미 관계가 획기적으로 진전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듯 한반도 정세의 경색국면에서는 유라시아 대륙과 연계 및 소다자협력을 강화해 우회적으로 북한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중국의 동북3성과 극동러시아를 통한 남·북·중, 남·북·러 3자 협력이 논의되어 왔다.

이런 경제협력 차원과는 별개로 외교안보 차원에서의 북방 협력체는 궁극적으로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위에서 제안한 한국-북방국가와의 다자·양자 채널은 아세안이나 상하이협력기구(SCO)가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 하는 역할이나, 러시아가 중인 국경 분쟁을 중국이 미얀마 사태를 중재하는 방식을 모델로 장기적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북방국가와의 채널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한반도 평화를 가져오는 데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한 우선 ‘한-중앙아 협력포럼’이나 ‘한국-중앙아시아 다이얼로그 플러스(+)' 협의체 안에서 ‘한반도-중앙아 비핵화 분과’를 운영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정부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중앙아시아 비핵화 모델의 한반도 적용 가능성을 탐구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를 비롯한 유라시아 핵문제 이슈에 대해 당사들에게 비핵화 노력을 촉구하거나 비핵화 공동성명을 낼 수도 있다. 역대 핵보유국인 러시아와 중국을 옹저버로 하여 의견을 나누고,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핵문제의 당사자인 미국과 북한도 참가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는 미국과 북한의 핑퐁게임으로 고착된 느낌이다. 물론 미래의 한반도 비핵화 역시 북미에 달려 있고,

더 나아가 역내 핵보유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지만, 한국-중앙아 비핵화 논의 플랫폼은 한반도 핵문제를 유라시아 역내 문제로 격상시키고 비핵화의 물꼬를 제3지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촉구하고자 하는 의미 있는 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IV-11〉 근미래 신북방정책 외교안보 전략 목표: 전통 안보와 신안보를 포함하는 포괄적 평화협력 구상

외부 환경	추진 과제	세부 방안
1. 미중 경쟁 및 미리 대립 격화와 중러 관계 밀착	(1) 한국 주도의 역내 다자 채널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간국 대화체 건설(한국-중앙아 다이얼로그 플러스 협의체 건설)</li> <li>• 신안보 공동대처 플랫폼 결성 주도 (신북방 보건 안보 이니셔티브, 동북아 탄소중립 이니셔티브)</li> <li>•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정례화</li> </ul>
2. 한반도 정세의 경색 국면 지속 3. 감염병 방지 등 신안보 이슈 대두	(2) 미래지향적 양자협력 플랫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방 주요국과의 정상회담 및 고위급 회담 정례화 (최고위급 동방포럼 참여)</li> <li>• 한러 2+2(외교, 국방) 전략대화체 신설</li> <li>• 다자·양자 공공외교 채널 활성화 (공동연구기관 설립, 북방 평화경제 포럼 개최, 유라시아 청년 축전 등)</li> </ul>
4. 신정부 출범에 따른 신북방정책 불확실성 증가	(3) 북방국가와의 협력을 통한 한반도 긴장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중앙아 협력포럼’이나 ‘한국-중앙아시아 다이얼로그 플러스(+)' 협의체 산하에 한반도-중앙아 비핵화 논의 플랫폼 운영</li> </ul>

출처: 저자 작성.

# V. 결론





본 연구는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의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진행됐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의 II장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기 추진된 신남방정책 및 신북방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경제통상, 사회문화, 외교안보 분야별로 분석했다. 다음으로,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위한 중·장기 전략과 정책과제를 인적·문화, 공동번영, 공동의 안보확립 등 세 가지 측면에서 고찰한 후,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을 위한 근미래 환경을 전망했다.

본 연구의 III장에서는 신남방정책의 근미래 전략에 대한 분석을 경제통상, 사회문화, 외교안보 분야별로 진행했다. 우선, 경제통상 분야에서 △신남방지역의 높은 경제성장률, △신남방 국가들의 산업공업화 정책 추진, △세계화 둔화와 글로벌 통상환경 재편 대응, △디지털 전환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 및 미래동력 확보 등을 신남방정책의 추진 배경으로 제시했고,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신남방정책 경제통상 분야에서의 추진 목표를 △고성장하는 신남방 경제를 기회 요인으로 활용, △신남방 산업화 및 경제성장 달성 지원, △인프라 건설에 대한 투자 및 지원, △소그룹 자유무역주의 대응과 새로운 가치사슬 구축, △디지털 전환 및 환경·기후·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 목표로 제시했다. 다음으로,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사람 공동체 실현을 위한 상호 이해와 교감, △MZ세대에 대한 이해, △아세안 공동체 실현에 기여하는 파트너십 지향 등을 신남방정책의 추진 배경으로 분석한 후, △교육 및 연구 ODA 확대, △문화 ODA 확대, △한류와 디지털의 결합 확대, △보건·의료 협력 확대를 구체적인 추진 목표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신남방정책의 근미래 전략적 환경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신남방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외교안보 협력의 한계를 분석했다. 또한, 비전통 안보 및 인간안보 문제가 신남방정책의 중요한 추진환경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바탕으로 △한국의 지역전략 개념 확대, △중견국 외교 강화, △비전통안보 및 인간안보에서의 협력 확대, △인도와의 외교안보 협력 모색이라는 추진 목표를 제시했다.

본 연구의 IV장에서는 경제통상, 사회문화, 외교안보 분야별로 신북방정책의 근미래 전략을 분석했다. 우선,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신북방지역 국가들의 디지털 경제 및 혁신산업 육성, △러시아의 극동지역 및 중국의 동북지역 개발을 추진 배경으로 제시했고, 이어서 △신북방 국가 디지털 혁신 협력의 이원화, △유라시아 경제 편입을 위한 러시아 극동 및 중국 동북지역의 거점화를 추진 목표로 제시했다. 다음으로,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보건·의료분야의 협력 수요 증가, △극동지역 중심의 관광 활성화 필요, △한국 대중문화 콘텐츠 및 한류의 지속적 확산을 정책 추진의 필요성으로 분석했고, 이를 기반으로 △의료보건 및 헬스케어 분야 패키지형 협력, △극동 중심의 관광기반 공고화 및 신북방·동북아평화 조성 기여, △소프트파워 강화를 통한 상호신뢰기반 구축을 추진 목표로 설정했다. 마지막으로,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미중 경쟁 및 미러 대립 격화, △중러 관계 밀착, △한반도 정세의 경색 국면 지속, △감염병 방지 등 신안보 이슈의 대두, △신정부 출범 등의 상황 속에서 평화와 번영을 표방하는 신북방정책이 더욱 중요해졌음을 강조했고, △전통 안보와 신안보를 포함하는 포괄적 평화협력 추진, △신북방 국가들과의 협력과 연대로 외교의 다변화 추구를 추진 목표로 제시했다.

제II, III, IV장에서 진행한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의 근미래 환경과 전략,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의 경제통상, 사회문화, 외교안보 분야별 근미래 전략 분석은 미중 전략경쟁구도 속에서 한반도 분단체제와 동아시아 패러독스 해소를 위해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역내

다자협력관계 형성을 추구하는 한국 정부에 다음과 같은 정책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1. 근미래 신남방정책 추진방안

첫째, 신남방정책의 경제통상 분야에서 한국 정부는 신남방 각국 정부의 경제정책과 환경의 변화를 깊이 이해하고 각국의 성장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파트너국가로서의 장점을 부각해야 한다. 특히, 신남방 각국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이 추동력을 갖기 위해서는 정부 뿐 아니라 각국 기업과 국민들이 실질적 혜택을 기대하도록 해야 한다. 즉, 산업공업화를 추진하는 각 국가의 산업정책과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협력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다. 코로나19로 무너진 현지 공급망 복구 및 인프라 건설에 적극적으로 투자함으로써 한국은 신남방 국가들에 전략적 협력파트너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남방지역의 디지털 네이티브의 부상과 디지털 전환 정책을 감안해 ICT 산업과 기술, 인력 육성, 인프라 개발, 전자상거래, 핀테크, 디지털 교육 등 플랫폼 기반의 디지털 경제 영역에서의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신남방지역의 디지털 전환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특히, 비전통안보와 인간안보가 중요시되는 현재 신남방 국가들과 환경·기후·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여, 해양폐기물, 산림보호, 한-메콩 생물 다양성 센터 구축, 산불재난관리 등의 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사회문화 분야의 협력을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동남아 10개국과 인도는 신남방지역이라는 틀 안에 있지만 각각의 사회문화적 차이가 존재한다. 게다가 국내에 아직까지 신남방지역 국가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여건



이 조성되지 않은 점도 한국과 신남방지역 국가들과의 상호 이해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교육 및 연구, 문화에 대한 ODA를 확대함으로써 각 국가의 교육 인력을 양성할 뿐 아니라, 문화 협력과 관광 활성화를 통한 교류 증진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K-Pop, K-Drama 등 한류의 확산과 디지털을 결합하여 영화나 앨범 공동 제작 등 양방향 문화교류 활성화 사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최근 신남방지역 내 MZ세대가 급부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류와 디지털의 결합은 사회문화적 교류의 장을 확대하고 상호 이해의 폭을 확대하는 데에 이바지할 것이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계기로 한국은 신남방 국가들과의 보건·의료 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 한국은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ICT 기술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정보 공유, 투명성, 정확성을 준수하며 적절한 대응체계와 신속한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을 수립했다. 이러한 ICT 기술에 기반한 K-방역 모델은 신남방 국가들의 의료보건체계 개선에 있어 유망한 협력 모델이 될 수 있다.

셋째, 포괄성과 지리적 지역성을 기반으로 한국형 인도-태평양에 대한 관점(KOIP)을 도입해야 한다. 이미 한미동맹의 지역동맹 역할을 논의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국의 지역전략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괄하는 범위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역전략의 확대는 한국의 지역적 위상을 제고할 뿐 아니라, 한반도 문제를 지역화하여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이해당사자를 확대하고 한반도 문제를 더욱 안정적으로 다룰 수 있게 할 것이다. 또한, 중견국 외교를 강화하여 중소국가를 견인하는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한국 정부는 아세안, 서남아, 오세아니아 별로 각각의 전략대화를 주도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후 각 지역의 개별 국가들의 이익에 따라 참여국가들을 소그룹화한다면 비전통안보 및 인간

안보 분야 협력에서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비전통 안보 및 인간안보 협력에서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팬데믹을 포함한 보건협력, △디지털 및 사이버 안보 협력, △해양협력에 집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도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서 경제협력보다 정치안보협력을 우선시하는 인도의 상황을 고려해 경제적 협력 외에도 해양안보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동시에 방위산업 및 전략산업, 우주산업 분야의 협력 강화도 고려해야 한다.

## 2. 근미래 신북방정책 추진방안

첫째, 신북방정책의 경제통상 분야에서 한국은 신북방지역 국가들의 디지털 경제 및 혁신산업 육성 현황을 감안해 공동 디지털 생태계를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혁신산업 협력의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그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기술협력 수요에 따른 협력 모색을 지양해야 한다. 즉, 러시아 등 기술 선진국들의 기술 수요를 파악하고 공동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을 형성함으로써 혁신산업 협력의 확장성을 높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러시아 극동지역의 선도개발구역 및 중국 동북의 한중 국제협력시범구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각국 정부와 적극적인 정책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이와 같은 경제협력을 통해서 러시아 극동과 중국 동북을 향후 한국이 극동지역과 동북지역을 넘어 유라시아 경제로 진출하는 거점지역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둘째, 신북방정책의 사회문화 분야에서 한국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중앙아시아 각 국가와 의료보건 시스템을 구축하고 방역체계를 협력해야 한다. 현재 한국 정부는 2020년 K-방역모델을 발표하고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지역은 의료

보건체제가 부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이 국제표준화된 K-방역모델을 보급함으로써 의료보건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다만, 신북방 국가들이 비록 의료보건분야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국가별로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특수성을 고려해 장기적인 보건 협력을 추진해야 함을 주의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의료보건 협력은 일회성이 되거나 단순한 지식 전달의 차원에서 진행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의료보건 협력의 토대를 닦는 데에 중점을 뒀야 한다. 다음으로, 극동지역의 크루즈관광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우 크루즈 여행이 관광산업에서 크게 발전되지 못했지만, 크루즈 산업은 글로벌 관광산업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과 러시아, 일본 등을 잇는 환동해 크루즈는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신북방지역 국가들과의 문화교류를 확대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대북 제재가 일부 완화되면 크루즈를 통해 남·북·러를 연결하는 방식의 관광사업도 추진할 수 있다. 한국의 포항이나 강릉에서 출발하여 북한의 금강산과 러시아의 사할린을 연결하는 노선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류의 확산을 계기로 신북방 국가에서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접점을 확대해야 한다. 해당 국가에 설립된 한국문화원의 문화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정교화하여 한국의 문화적 강점을 보여주는 데에 그치지 않고, 현지문화와 어우러지는 행사를 진행한다면, 해당 국가 국민들이 문화적 동질성을 느끼고 다양한 연령층이 한국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코로나19가 소멸되는 시점을 계기로 각국의 한국에 대한 관광 수요와 교류 증가 확대에 기여할 것이다.

셋째, 외교안보적 관점에서 한국 정부는 포괄적 평화협력과 외교 다변화를 추진해야 한다. 근미래 환경은 신북방정책 추진에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신북방정책이 표방하는 가치와 비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신북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는 추진 전략을 정교화하고 세부 과제를 세분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미중 간 경쟁 구도 속에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신북방 국가들과 공동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독자적인 완충지대를 형성해야 한다. 즉, 유라시아 신북방지역 전체를 염두에 두고 한국이 주도하여 미중경쟁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협력 플랫폼을 형성하는 것이다. 또한 한국은 구체적으로 △한국 주도의 역내 다자 채널 구축, △미래지향적 양자 협력 플랫폼 구축, △신북방 국가 협력을 통한 한반도 긴장 완화 유도 등을 진행해야 한다.

### 3. 평가 및 시사점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은 한국 외교의 양 날개이다. 평화번영의 국제질서 수립에 기여하기 위한 현 정부의 강한 의지가 투영된 대외 정책이다.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은 2017년 수립되었고 추진되어 오다가 작년 코로나로 인해, 모든 다른 국가들의 정책처럼 어려움에 처했다. 이제 ‘위드 코로나(With Corona)’로 가는 상황에서, 또 문재인 정부의 5년 임기 말 신남북방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평가할 시점이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체계는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아래 북한과의 신경제지도, 유라시아와의 신북방정책과 함께 인도와 동남아와의 신남방정책 등 3축으로 이루어진다. 문재인 정부의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외교의 핵심 코드는 ‘플러스’이다. 플러스는 지역적으로 우리가 자리한 동북아를 넘어 신북방·신남방지역까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능동적, 건설적, 긍정적인 기여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신남방·신북방정책은 이전 정부들의 대외정책과 가장 큰 차이이다. 또 어찌면 이번 정부가 북핵문제를 제외하고 외교적으로 성과를 낸다면 그 업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영역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 스스로의 외교적 상상력과 추진력이 요구된다. 국제질서는 비록 국가의 규모, 경제력과 군사력 같은 경성적 종합국력에 좌우되지만 그럼에도 국제사회를 상대로 대외명분을 내세우고 연성적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다자안보와 경제공동체를 주요 모티브로 삼는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는 이번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 최상위에 자리함으로 신남방·신북방정책과의 시너지를 내기 위한 연결점을 찾아야 한다.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은 선진국 위상에 부합하는 한국의 국가발전전략이자 세계전략이다. 동시에 한국 국가위상의 고양에 따라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과 기여의 의무도 커졌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특히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의 핵심적 지향점인 3P 즉 평화(Peace), 번영(Prosperity), 그리고 사람(People)에 대한 적절한 전략의 추진 및 역내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성찰적 반성이 필요하다.

신남방지역의 경우, 싱가포르 동남아연구소(ISEAS)의 2021년 조사(2021 State of Southeast Asia Survey)에 따르면 동남아시아에 대한 코로나19 보건의료지원에 한국이 ‘가장 큰 도움(most help)’을 주었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5.4%에 불과했다. 한국은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그리고 미국보다 뒤처졌다. 또한 한국이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국가(most influential economic power)’라고 응답한 경우는 0.6%에 그쳐 호주(0.3%)와 인도(0.1%)보다 앞섰을 뿐이다. 반면 중국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79.3%로 압도적이었으며,

아세안(9.8%), 미국(7.4%), 일본(4.4%), 그리고 EU(1.3%) 순이었다. 역내 ‘규칙기반 질서(rule-based order)’ 분야 평가에서는 응답자의 비율이 EU(32.4%)를 선두로 미국(28.6%), 아세안(16.9%), 일본(10.5%), 중국(3.6%), 뉴질랜드(2.7%), 호주(2.3%) 순서였으며, 한국은 최하위권(0.4%)을 기록했다. 미중 전략경쟁의 위협을 분산시키기 위해 협력할 대상국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도 EU, 일본, 인도, 한국 순이었으며, 영국이 뒤를 이었다.<sup>348)</sup>

한국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한 신남방정책에도 불구하고 역내 각국 국민들의 한국의 위상, 역할, 기여에 대한 인식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는 결국 신남방정책이 역내 각국 국민들 즉, 사람(People)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에 대한 투자는 신남방정책 추진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아세안과 인도의 경우 영토 및 영해 문제로 중국과의 긴장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고려도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한미동맹과 한중경제관계의 이중성이라는 근본적 딜레마에 처해있음을 고려해도 신남방지역 국가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신남방정책의 효과성에는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교착과 북핵문제로 인해 신북방정책의 추진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으며,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을 고려할 경우 신북방정책의 기원이 30년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에서 성과와 아울러 한계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 중국과 러시아는 신북방정책의 핵심 대상국가에 해당한다. 특히 신북방정책의 대상

348) William Choong, “The ROK’s New Southern Policy: Peace and the Politics of Positioning,”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과 평화변영의 국제질서』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2021.10.7.), pp. 55~57.

지역인 중국 동북은 대북제재는 물론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의 ‘자발적 봉쇄’, 그리고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의 전면교착으로 인해 구조적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로 초래된 한중관계 경색국면이 점차 완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중국 동북에 대한 정책추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중국 동북지역에 대한 신북방정책은 가시적 성과도출에 한계를 보였다는 평가를 피하기 힘들다.

30년을 넘어선 한러관계에도 불구하고 특히 러시아 측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될 필요가 있다.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서방의 제재에 직면해 있는 러시아는 한국이 미국과 유럽 등 친서방 지향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경제적으로 러시아는 한국의 12번째 교역대상국에 그치고 있으며, 반면 러시아에 있어 한국은 6번째 교역대상국이다. 또한 러시아가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시베리아횡단철도(Trans Siberian Railway: TSR)와 한반도종단철도(Trans Korean Railway: TKR) 연결사업은 성사되지 못하고 있으며, 한반도와 러시아를 연계하는 육상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공사도 실현되지 못 했다. 러시아의 입장에서 한러관계에서 무역, 에너지와 인프라, 금융협력, 사회 및 보건의료협력, 그리고 문화 및 교육분야의 교류는 한계를 보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sup>349)</sup> 러시아는 한미동맹 등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신북방정책 추진을 위해 보다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보여 줄 것을 원하고 있다. 구소련 시기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CIS권 중앙아시아와 몽골 역시 보다 적극적인 한국과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349) Victoria V. Panova, “ROK Vision and Strategy of New Northern Policy and Relations with Russia,”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과 평화변명의 국제질서』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2021.10.7.), pp. 53~54.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선결되어야 할 몇 가지 과제가 있다. 우선 역내 영향력 있는 국가로서 한국의 위상을 확고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 일본은 신남방지역과 신북방지역에 대한 선제적이고도 적극적인 진출을 통해 상대적으로 확고한 위상을 정립하고 있으며, 영향력도 크다. 후발주자로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지름길은 보다 많은 기여와 노력을 경주하는 일이다. 국제적으로 친화력 있는 국가이미지의 형성은 중·장기적 차원의 과제에 해당한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헌과 기여의 확대, 그리고 입체적인 공공외교의 활성화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또한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 추진에 있어 평화(Peace)와 번영(Prosperity) 분야의 적절한 균형상태의 유지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국제질서의 다국화 및 무국화 경향과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는 구도에서 단기적 이해관계 관철을 위한 번영 중심의 전략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과 함께 역내 조화로운 국제질서 형성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한국의 역할이 필요하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람(People)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이 경주될 필요가 있다. 동서독관계와 남북관계 및 양안관계 사례의 교훈은 양적인 접촉보다 질적인 접촉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다. 동서독은 장기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양독 간 ‘내적인 끈’의 형성에 성공했으며, 결국 서독의 ‘매력’은 동독을 견인해 통일에 성공할 수 있었다. 반면 남북한과 중국-대만 간의 사례의 경우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관계개선이 이루어졌지만, 결과적으로 내적인 신뢰의 형성에는 한계를 보였다. 남북관계의 상징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북한에 의해 파괴되었으며, 대규모 교역관계에도 불구하고 중국-대만 간 외교안보적 불신은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한 양적 차원을 넘어 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교류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sup>350)</sup> 민주주의, 경제, 그리고 한류 등 한국의 ‘매력’을 활용한 함께하는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통해 역내 각국 국민들과 신뢰를 형성하고 공감대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 분단체제는 한국 외교의 가장 큰 제약으로 작용해 왔으며, 북한문제를 프리즘으로 국제문제를 해석하는 관성이 형성된 구조적 배경이었다. 2021년 한국은 선진국그룹에 공식진입했으며, 첨단 기술과 한류를 통해 세계 선도적 위상을 정립하고 있다. 4·19 혁명과 광주민주화운동 등 시민저항에 기반을 둔 한국 민주주의 역시 일정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신생국의 역사에서 전례를 찾기 힘들다는 점에서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은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 그리고 문화분야에서 세계가 인정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국은 한반도와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형 세계전략의 본격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은 한국형 세계전략의 입구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성과 연속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 이미 한국은 선진국이자 세계국가로 도약했다는 점에서 한국형 세계전략은 향후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상태의 달성과 한국의 국가발전, 그리고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과 기여를 위한 국가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향후에도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의 기조는 유지되어야 하며 발전적으로 진화되어야 한다.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성찰적 평가를 바탕으로 보다 본격적인 한국형 세계전략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350) 조한범 외, 『국제 평화경제 사례와 한반도』 (서울: 통일연구원, 2020), p. 227.

# 참고문헌

## 1. 단행본

- 고재남. 『러·중의 유라시아 협력 동향과 신북방정책 추진 전략』. 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9.
- \_\_\_\_\_.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아 3국 순방 성과 및 향후 과제』. 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9.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코로나19 이후 국제정세』. 서울: 국립외교원, 2020.
- 김이선 외. 『2018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2019.
- 나용우·이우태·김주리·김유철·이진영·권재범.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서울: 통일연구원, 2020.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1년 국제전략 환경 변화와 신북방정책 추진 전략』.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1.
- 류정아. 『신남방지역(아세안 10개국, 인도) 문화교류 활성화 방안』.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0.
- 문진영 외. 『해외 주요 지역별 우리나라의 소프트파워 활용현황과 인식도 분석』.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0.
- 문진영·나승권·이재호·이성희·김은미.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와 한국의 분야별 협력방안』.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9.
- 박변순. 『아세안의 시간: 동남아시아 경제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서울: 지식의날개, 2019.
- 박지원.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현황과 한국의 협력방안』. 서울: KOTRA, 2017.

- \_\_\_\_\_.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산업 협력방안』. 서울: KOTRA, 2018.
- 배궁찬. 『ASEAN 연구기행』. 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1.
- 백우열·이기태·이재현·정구연. 『쿼드 국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대응』.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2019.
- 세종연구소. 『해양 동남아 국가와의 협력 강화 전략 연구』. 미간행 정책연구보고서, 2020.
- 안상수·김이선·마경희·문희영·이명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2015.
- 외교부. 『한 눈에 보는 아세안경제공동체』. 서울: 외교부, 2016.
- \_\_\_\_\_. 『2020 주요외교계기 기념사업 결과보고서』. 서울: 외교부, 2020.
- 외교부·한국국제교류재단. 『2019 지구촌 한류현황 I (아시아·대양주)』. 제주: 한국국제교류재단, 2019.
- 이규창·나용우·이상신·이우태·조성은. 『감염병 공동대응을 위한 남북 인도협력: 코로나19를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20.
- 이수훈·김열수·김근식·이수형. 『이명박 정부 안보정책의 세부 실천 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10.
- 이충열·이종하·이선호·강성범. 『신남방지역 주요국의 핀테크 발전과 협력방안: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0.
- 이현태 외. 『남·북·중 경제협력 방안 연구』.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9.
- 이현태·이상훈·김준영·윤규섭. 『13·5 기획 시기 한국의 중국 동북지역 경제협력 과제와 전략』.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7.
- 장영신·곽성일·곽소영·박은빈·문성만·남상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화와 한국의 협력방안』.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0.

- 정영식 외. 『신남방정책 2.0 수립 연구』.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0.
- 정은이·원동욱·이기현·이상숙. 『한반도 평화변영과 남북중 협력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18.
- 조성일·탁상우·윤규현. 『서울시 코로나19 대응 방역 정책모형: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해외공유 모델 개발’ 연구용역 보고서』. 서울: 서울특별시 해외도시협력담당관, 2021.
- 조한범·배기찬·이수형. 『변화하는 통일환경에 따른 대북·통일정책 개선과제: 신한반도체제 구상을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19.
- 조한범·신종호·김유철·김영한·조상현·정기웅. 『국제 평화경제 사례와 한반도』. 서울: 통일연구원, 2020.
- 주 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 『2018 선도개발구역 및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제도』. 주 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 2018.
- 최인아 외.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협력 방향』.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0.
- 최진우 외. 『아세안 지역 한류콘텐츠 활성화 방안』.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1.
-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글로벌 한류 트렌드 2021』. 서울: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21.
- \_\_\_\_\_. 『2021 해외한류 실태조사: 분석편』. 서울: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21.
-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엮음. 『2020 한류 파급효과 연구』. 서울: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21.
-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2015 대한민국 한류백서』. 서울: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2016.
- 한-아세안센터. 『2020 ASEAN & KOREA in Figures(한-아세안 통계집)』. 서울: 한-아세안센터 정보자료국, 2021.

- 한중도시관 관리위원회. 『한중도시관 자료집』. 창춘: 한중도시관, 2021.
- 한홍열·윤성욱·박지원·정은이. 『남북러 지역개발 정책과 산업 정책 연계 방안』.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9.
- 해외문화홍보원. 『2019년 국가이미지 조사 보고서』. 세종: 해외문화홍보원, 2019.
- \_\_\_\_\_. 『2020년 국가이미지 조사 보고서』. 세종: 해외문화홍보원, 2020.
- 현승수·이우태·이재영·김규륜·이현태. 『중·러 협력과 한반도 평화·변영』. 서울: 통일연구원, 2020.
- KOTRA. 『2019 세계시장 진출전략 III: 동남아대양주·서남아·중동·CIS』. 서울: KOTRA, 2018.
- ADB. *ASEAN 2030: Toward a Borderless Economic Community*. Tokyo: Asian Development Bank Institute, 2014.
- ASEAN. *ASEAN Comprehensive Recovery Framework*. Jakarta: ASEAN Secretariat, 2020.
- \_\_\_\_\_. *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 2025*. Jakarta: The ASEAN Secretariat, 2017.
- \_\_\_\_\_. *Mid-Term Review: ASEAN Economic Community Blueprint 2025*. Jakarta: The ASEAN Secretariat, 2021.
- \_\_\_\_\_. *Mid-Term Review Report of The AEC Blueprint 2025*. Jakarta: The ASEAN Secretariat, 2021.
- ASEAN-Japan Centre. *Global Value Chains in ASEAN-Automobiles*. Tokyo: ASEAN-Japan Centre, 2020.
- Cooley, Alexander. *Great Games, Local Rules: The New Great Power Contest in Central Asi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 Cornell University, INSEAD, and WIPO. *The Global Innovation Index 2020: Who Will Finance Innovation?* Ithaca, Fontaine bleau, and Geneva, 2020.
- Cruise Lines International Association. *State of The Cruise Industry Outlook 2020*. Washington D.C.: Cruise Lines International Association, 2019.
- ERIA. *The Comprehensive Asian Development Plan 2,0 (CADP 2,0): Infrastructure for Connectivity and Innovation*.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ASEAN and East Asia, 2015.
- EY. *Are You Reframing Your Future or Is the Future Reframing You? Megatrends 2020 and Beyond*. EYQ 3rd edition. London, UK: Ernst & Young Global Limited, 2020.
- IMD World Competitiveness Center. *IMD World Digital Competitiveness Ranking 2020*. IMD World Competitiveness Center, 2020.
- Internet and Mobile Association of India. *Digital India: Present, 2025 and 2035*. Mumbai: Internet and Mobile Association of India, 2020.
- ISEAS. *The State of Southeast Asia: 2021 Survey Report - ISEAS*. Singapore: ISEAS-Yusof Ishak Institute, 2021.
- NASSCOM and ZINNOV. *Indian Tech Start-Up Ecosystem - On the March to a Trillion Dollar Digital Economy*. Noida: NASSCOM, 2020.
- Pew Research Center. *Unfavorable Views of China Reach Historic Highs in Many Countries*. Washington, DC: Pew Research Center, 2020.
- United Nations. *World Economic Situation and Prospects as of mid-2021*. New York: United Nations, 2021.

- WHO. *Digital Health for the End Tb Strategy: An Agenda for Action*. Geneva: WHO, 2015.
- WIPO. *Global Innovation Index 2021: Tracking Innovation through the COVID-19 Crisis*. Geneva: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2021.
- World Bank. *The Digital Economy in Southeast Asia: Strengthening the Foundations for Future Growth*. Washington D.C.: World Bank, 2019.
- WTO. *Global Value Chain Development Report 2019: Technological Innovation, Supply Chain Trade, and Workers in a Globalized World*. World Trade Organization, 2019.

## 2. 논문

- 권재범. “중국의 인도양 진출과 인도의 대응 분석: 인도-인도양 연안국 간의 안보·전략적 관계를 중심으로.” 『아태연구』. 제28권 1호, 2021.
- 김동수. “한중국제협력시범구의 출범과 의미.” 『중국산업경제브리프』. 통권 제74호, 2020.
- 김창진. “북방정책의 새로운 접근과 공공외교 전략.” 『신북방정책과 지방정부의 공공외교』. 크라스키노포럼 제4차 정책포럼/제3회 국제평화토론회 자료집, 2021.5.7.
- 김현욱. “한미정상회담분석.”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021-09, 2021.6.4.
- 김홍구·이미지. “태국 2020: 의심받는 ‘타이식 민주주의’와 정치과정의 변화.” 『동남아시아연구』. 제31권 1호, 2021.
- 마리나 쿠쿨라. “한국의 북방정책에 대한 러시아의 시각: 극동지방 중심.” 『신북방정책과 지방정부의 공공외교』. 크라스키노포럼 제4차 정책포럼/제3회 국제평화토론회 자료집, 2021.5.7.

- 문기홍. “군부 권위주의 체제와 민주화: 미얀마의 민주화 과정과 민주주의 후퇴 현상을 중심으로.” 『아시아리뷰』. 제11권 2호, 2021.
- 문진영·나승권·이재호·이성희·김은미.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와 한국의 분야별 협력방안.” 『KIEP 정책연구브리핑』. 2020.
- 박사명. “대학의 동남아 관련 학과 증설을 위한 청원.” 미간행, 2019.
- 박재적. “인도·태평양 지역 소다자 안보협력: 과거, 현재, 미래.” 『통일연구』. 제23권 1호, 2019.
- 박지원. “러시아 혁신성장 정책의 평가와 협력시사점.” 『KOTRA Global Market Report』. 19-084, 2019.
- \_\_\_\_\_. “유라시아경제연합과 디지털경제: 경제연합의 촉매요인 분석.” 『중소연구』. 제43권 3호, 2019.
- 박지원·최진형. “한·러 경제협력과 산업협력 신모델 구축: 화학·제약 산업을 중심으로.” 『KOTRA Global Marketing Report』. 19-021, 2020.
- 백용훈. “아세안(ASEAN)의 보건 위기 대응과 협력: 감염병과 보건안보 (Health Security).” 『동아연구』. 제39권 2호, 2020.
- 서승원. “한국과 일본의 대아세안 안보정책: 신남방정책과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비전, 그리고 역외 중간국의 전략적 영향력.” 『비교일본학』. 제48권, 2020.
- 성원용. “신북방정책과 남북러 삼각협력: 과제와 발전 전망.” 『IDI 도시연구』. 제16권, 2019.
- \_\_\_\_\_. “북방정책에서 신북방정책까지: 한국의 의도, 전략, 실적, 한계.” 『신북방정책과 지방정부의 공공외교』. 크라스키노포럼 제4차 정책포럼/제3회 국제평화토포론회 자료집, 2021.5.7.
- 송민근. “한국 新북방정책과 유라시아 주요 국가와의 협력방안 모색: 중국, 몽골, 러시아를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7권 7호, 2019.



- 신준호·이동준·하지훈. “우리나라 신남방정책 주요 교역국과 무역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건전한 통관질서 확립을 위한 관세사 제도의 개선과 관세행정의 대응』. (사)한국관세학회·관세국경관리연수원·중앙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중앙대학교 한국연구재단 신남방시장 진출연구 일반공동연구팀 공동주최 (사)한국관세학회 2020년 정책세미나 및 춘계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2020.6.27.
- 오종혁. “한·중 국제협력시범구 추진 현황 및 진출 방안.”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중국 진출 활성화 포럼 발표자료집, 2021.7.28.
- 유다중. “한·러 간 크루즈산업 협력 현황과 발전 전망.” 『KMI 북방물류 동향리포트』. 제83호, 2019.
- 윤상철. “신남방지역의 보건의료 협력 현황과 협력 방안.”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남방정책의 발전방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관 세미나 발표 자료, 2020.10.14.
- 이성우. “한국 공공외교와 지방정부의 역할: 경기도를 중심으로.” 『신북방정책과 지방정부의 공공외교』. 크라스키노포럼 제4차 정책포럼/제3회 국제평화토론회 자료집, 2021.5.7.
- 이원석. “2021년, 달라지는 한국의 FTA 환경은?” 『통상이슈브리프』. 제1호, 2021.
- 이재현. “기로에 놓인 동아시아 지역협력: 아세안+3와 EAS를 중심으로.”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제52호, 2013.
- \_\_\_\_\_. “인도-퍼시픽, 새로운 전략 공간의 등장.”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2015-15, 2015.
- \_\_\_\_\_. “문재인 정부의 미래지향적 아세안 외교 정책 제안.”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2017-17, 2017.
- \_\_\_\_\_. “동아시아 다자협력 활성화를 위한 문재인 정의 정책 제안.”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2017-22, 2017.
- \_\_\_\_\_. “미-중 전략 경쟁 속 아세안 잠재력 극대화: 내적 단결과 지역

- 중소국가 연대.”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2020-15, 2020.
- 이진영. “한국 정부의 공공외교와 공적개발원조(ODA)의 정합성: 신남방정책(New Southern Policy)을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제28권 2호, 2020.
- 이혁구. “한국과 대만의 對아세안 경제정책 비교.” 『비교경제연구』. 제26권 2호, 2019.
- 이현태·김준영. “한국과 중국 동북지역의 경제 협력: 현황, 정책, 시사점.” 『만주연구』. 제29호, 2020.
- 전제성·박사명·김현경. “한국 대학의 동남아시아 관련 교육과정: 현황과 대안.” 『동아연구』. 제40권 1호, 2021.
- 전종호. “방산수출 지원정책에 관한 정책네트워크 연구: T-50 인도네시아 수출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혁신연구』. 제24권 1호, 2016.
- 정구연·이재현·백우열·이기태. “인도-태평양 규칙기반 질서 형성과 쿼드협력의 전망.” 『국제관계연구』. 제23권 2호, 2018.
- 진병서. “한국, 지정학적 동맹보다 지경학적 동맹이 중요하다.” 『나라경제』. 6월호, 2021.
- 최윤정. “아세안 외교전략 재조명: 네트워크 이론의 적용과 실제.” 『세종정책연구』. 2020-08, 2021.
- \_\_\_\_\_. “아세안·인도 정세와 2022년 전망.” 세종연구소. 『정세와 정책』. 2022년 1월호(특집호-제7호), 2021.
- \_\_\_\_\_. “인도의 디지털·그린 통상 환경과 양국 기업 협력 방안.” 『인도의 경제통상 환경 변화와 한-인도 기업간 협력 방안』. KOTRA 주최 2021 한-인도 통상투자협력포럼 발표자료, 2021.9.28.
- \_\_\_\_\_. “코로나19에 대한 인도 정부의 대응과 대내외 주요 변화 및 시사점.” 『세종정책브리프』. no. 2021-12, 2021.

- \_\_\_\_\_. “RCEP 타결과 신남방 경제 지형의 변화.” 『세종정책브리프』, no. 2020-23, 2020.
- \_\_\_\_\_. “2019년 아세안 정세 평가와 2020년 전망.” 세종연구소. 『정세와 정책』, 2019년 제31호, 2019.
- 최재덕.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상호연계 모색: 지정학과 지경학의 상호보완성을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7권 4호, 2019.
- Choong, William. “The ROK’s New Southern Policy: Peace and the Politics of Positioning.”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과 평화번영의 국제질서』,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2021.10.7.
- Panova, Victoria V. “ROK Vision and Strategy of New Northern Policy and Relations with Russia.”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과 평화번영의 국제질서』,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2021.10.7.
- Acharya, Amitav. “The Myth of ASEAN Centrality?” *Contemporary Southeast Asia*, vol. 39, no. 2, 2017.
- Aijaz, Rumi. “India’s Smart Cities Mission, 2015–2021: A Stocktaking.” *ORF Special Report*, no. 155, August 2021.
- ASEAN Secretariat. “ASEAN Economic Integration Brief.” no. 8, November 2020.
- Djalante, Riyanti et al. “Review and Analysis of Current Responses to COVID-19 in Indonesia: Period of January to March 2020.” *Progress in Disaster Science*, vol. 6, 2020.
- Korolev, Alexander. “On the Verge of an Alliance: Contemporary China–Russia Military Cooperation.” *Asian Security*, vol. 15, no. 3, 2019.

- Prakash, Amit. “Boiling Point.” *Finance & Development*, vol. 55, no. 3, 2018.
- Shambaugh, David. “U.S.–China Rivalry in Southeast Asia: Power Shift or Competitive Coexistence?” *International Security*, vol. 42, no. 4, 2018.
- Singh, Bhubhindar and Henrick Zhizhao Tsjeng. “ASEAN Outlook on Indo–Pacific: Seizing the Narrative?” *RSIS Commentary*, no. 016, 2020.
- Womack, Brantly. “International Crises and China’s Rise: Comparing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and the 2017 Global Political Crisis.” *The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vol. 10, no. 4, 2017.

### 3. 기타 자료

#### 〈신문〉

『뉴스1』. 『뉴스웍스』. 『뉴시스』. 『더 구루』. 『리더스경제』. 『매일경제』. 『부산일보』. 『세계일보』. 『아시아경제』. 『아주경제』. 『연합뉴스』. 『전자신문』. 『중앙일보』. 『중앙SUNDAY』. 『파이낸셜뉴스』. 『한국 무역신문』. 『한국일보』. 『KBS 뉴스』.

*Bloomberg, BusinessToday, In, CNBC, East Asia Forum, Eurasia Review, Khmer Times, Livemint, OTT List, The ASEAN Post, The Diplomat, The Economic Times, The Geopolitics, The Hindu, The Interpreter, The Japan Times, The Times of India, The Wire, Ukraine Open for Business(Open4Business), Reuters, Vietnam Investment Review, World Politics Review.*

## 〈웹사이트〉

### 국문

- 교육통계서비스 <<https://kess.kedi.re.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s://www.kiep.go.kr>>.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http://www.bukbang.go.kr>>.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https://immigration.go.kr>>.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http://www.nsp.go.kr>>.  
외교부 <<https://www.mofa.go.kr>>.  
외교안보연구소 <<https://www.ifans.go.kr>>.  
주 아세안 대한민국 대표부 <<https://overseas.mofa.go.kr/asean-ko/index.do>>.  
주 알마티 대한민국 총영사관 <<https://overseas.mofa.go.kr/kz-almaty-ko/index.do>>.  
중한산업원 <<http://www.ccksp.com>>.  
청와대 <<http://www.president.go.kr>>.  
포항시 <<https://www.pohang.go.kr>>.  
한국국제교류재단 <<https://www.kf.or.kr>>.  
한국관광공사 <<https://kto.visitkorea.or.kr>>.  
한국관광 데이터랩 <<https://datalab.visitkorea.or.kr>>.  
한국콘텐츠진흥원 <<https://www.kocca.kr>>.  
한리혁신센터 <<https://kric.kitech.re.kr>>.  
해양수산부 <<https://www.mof.go.kr>>.  
KOTRA 해외시장뉴스 <<https://news.kotra.or.kr>>.  
K-stat(한국무역협회) <<https://stat.kita.net>>.  
ODA Korea(국제개발협력위원회) <<http://www.odakorea.go.kr>>.

## 영문

- Abhipedia <<https://abhipedia.abhimanu.com>>.
- ASEAN <<https://asean.org>>.
- Asia Society <<https://asiasociety.org>>.
- Atlantic Council <<https://www.atlanticcouncil.org>>.
- Bain & Company <<https://www.bain.com>>.
- Bank of America <<https://business.bofa.com>>.
- Carnegie Moscow Center <<https://carnegie.ru>>.
- Centre for Monitoring Indian Economy Pvt. Ltd. <<https://www.cmie.com>>.
-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CSIS) <<https://www.csis.org>>.
- CIS Legislation <<https://cis-legislation.com>>.
-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https://crsreports.congress.gov>>.
- Department of Commerce, Government of India <<https://commerce.gov.in>>.
- Digital Kazakhstan <<https://digitalkz.kz/ru>>.
-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ASEAN and East Asia(ERIA) <<https://www.eria.org>>.
- GHS Index <[www.ghsindex.org](http://www.ghsindex.org)>.
- Government of India <<https://aatmanirbharbharat.mygov.in>>.
- India Brand Equity Foundation(IBEF) <<https://www.ibef.org>>.
- International Energy Agency(IEA) <<https://www.iea.org>>.
- International Monetary Fund(IMF) <<https://www.imf.org>>.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ITU) <<https://www.itu.int>>.
-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https://www.trade.gov>>.
- Invest India <<https://www.investindia.gov.in>>.

Make in India <<https://www.makeinindia.com>>.  
McKinsey & Company <<https://www.mckinsey.com>>.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https://www.mofa.go.jp>>.  
Numbeo <<https://www.numbeo.com>>.  
Observer Research Foundation <<https://www.orfonline.org>>.  
Pew Research Center <<https://www.pewresearch.org>>.  
Press Information Bureau, Government of India, <<https://pib.gov.in>>.  
JSC Far Eastern Development Corporation <<https://erdc.ru/en>>.  
Sollers <<https://www.sollers-auto.com>>.  
Statista <<https://www.statista.com>>.  
Telecom Regulatory Authority of India(TRAI) <<https://traigov.in>>.  
The Government Public Relations Department, Thailand <<https://thailand.prd.go.th>>.  
Th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ISEAS) <<https://www.iseas.edu.sg>>.  
The Republican Scientific and Practical Center of Medical Technologies, Informatization, Management and Economics of Public Health, <<http://belcmt.by/en>>.  
The Soft Power 30 <<https://www.softpower30.com>>.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USAID) <<https://www.usaid.gov>>.  
World Bank Blogs <<https://blogs.worldbank.org>>.  
World Economic Forum <<https://www.weforum.org>>.  
World Health Organization(WHO) <<https://www.who.int>>.  
WHO Coronavirus (COVID-19) Dashboard <<https://covid19.who.int>>.  
World Trade Organization(WTO) <<https://www.wto.org>>.  
WTO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Database <<https://www.tfadatabase.org>>

Worldometers <<https://www.worldometers.info>>.

## 러시아어

NTI 2035 <<https://www.nti2035.ru/markets>>.

Prim-Travel <<https://prim-travel.ru>>.

REGNUM <<https://regnum.ru>>.

(RIA Novosti) <<https://ria.ru>>.

ГАРАНТ(GARANT) <<http://www.garant.ru>>.

## <기타>

### 국문

김동묘. “2021년 벨라루스 산업 개관.” KOTRA 해외시장뉴스. 2021.9.8.

김동환. “[KDI 기고] 아세안의 떠오르는 다크호스, 인도네시아.”  
KOTRA 해외시장뉴스. 2020.5.1.

김태형. “2021년 필리핀 산업 개관.” KOTRA 해외시장뉴스. 2021.7.2.

동 훈. “중국, 창춘시에 한중 국제협력시범구 조성.” KOTRA 해외시장  
뉴스. 2020.10.29.

우상민. “코로나로 직격탄 맞은 연해주 관광산업의 현재와 전망.”  
KOTRA 해외시장뉴스. 2020.5.18.

조주연. “인도 제조업 혁신에 기여하는 AI.” KOTRA 해외시장뉴스.  
2021.7.20.

문화체육관광부. “신북방 문화·인적 교류 확대방안.” 북방경제협력  
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 2020.6.23.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  
(2021년9월말 현재).” 2021.10.19.

보건복지부. “K-방역모델을 세계의 표준으로 만들 길잡이 나왔다.”  
2020.6.11.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R&D와 국가방역체계 간 연계가 강화된다.” 2016.4.8. 보도자료.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2018.12.12. \_\_\_\_\_, “중국 동북지역에서의 한중 경제교류협력 강화방안.”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제6차 회의 개최, 2019.11.13.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 우즈베크 부총리와 정상순방 성과 창출 방안 논의.” 2020.12.6. 보도자료.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개최.” 2018.11.8. \_\_\_\_\_,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개최.” 2019.4.30. \_\_\_\_\_,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2019.12.20.

외교부. “신남방정책과 호주의 인도-태평양 전략간 접점을 모색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호주 아세안 정책대화 개최.” 2021.2.25. 보도자료.

\_\_\_\_\_. “정부, 다 함께 안전한 세상을 위한 개발협력 구상 추진.” 2020.6.29. 보도자료.

\_\_\_\_\_. “한-미 아세안 정책대화 개최.” 2021.5.13. 보도자료.

인도대사관. “Suggestions for Strengthening New Southern Policy by Expanding the India Connection.” 미공개 내부자료, 2020.

장세호. “전환기적 국제질서와 대리 외교안보 협력방안.” 통일연구원 신북방정책 전문가 좌담회 발표문, 2021.8.31.

주 아세안 대한민국 대표부. 『WEEKLY ASEAN』, 2021-20호, 2021.5.28. \_\_\_\_\_, 『WEEKLY ASEAN』, 2021-21호, 2021.6.4.

주 알마티 대한민국 총영사관. “카자흐스탄 ‘한류’ 동향 및 한국소개 현황.” 2008.12.31.

중소벤처기업부. “코리아 스타트업, 인도 진출에 성공하다.” 2018.7.9.  
 보도자료.

추장민.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통일연구원 최종보고회 토론회, 2021.10.12.

최준환. “아세안 인공지능(AI) 중심지를 꿈꾸는 베트남.” KOTRA 해외  
 시장뉴스. 2021.10.5.

포항시. “포항시, 한러일 잇는 환동해 크루즈 첫발 뚫다!” 2019.12.18.

한국관광공사. “관광공사,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사무소 개소.” 2017.7.12.  
 보도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2019 케이팝 월드 페스티벌 인 우즈베키스탄,  
 ‘케이팝의 또 하나의 비상.’” 2019.6.28.

\_\_\_\_\_. “모스크바에서 열린 러시아 K-콘텐츠 엑스포,  
 첫 개최에 1만 관람객 열광.” 2019.9.6.

\_\_\_\_\_. 『WEEKLY GLOBAL(위클리글로벌)』. 제216호,  
 2021.

한국콘텐츠진흥원 인도네시아 비즈니스센터. 『필리핀 콘텐츠 산업동향』.  
 2020년 6호, 2020.12.3.

## 영문

ASEAN. “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 June 23, 2019.

\_\_\_\_\_. “ASEAN Plus Three Senior Health Officials Reaffirm  
 Cooperation to Stop Spread of 2019-nCoV.” February 4,  
 2020.

\_\_\_\_\_. “(Joint Media Statement) The 2019 Special Meeting of  
 The ASEAN-Republic of Korea Ministers Responsible for  
 Culture and Arts.” 2019 Special AMCA Plus ROK-Meeting.  
 October 24, 2019.

- ASEAN Coordinating Committee on Electronic Commerce. “ASEAN Digital Integration Framework Action Plan (DIFAP) 2019–2025.” ASEAN, July 2018.
- ASEAN University Network. “The Relevance of Higher Education in the Digital Era.” Joint Statement on 18th AUN and 7th ASEAN+3 Educational Forum. May 4, 2018.
- IMF. “Fault Lines Widen in the Global Recovery.”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July 2021.
- Cimino–Isaacs, Cathleen D. and Michael D. Sutherland.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Status and Recent Development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November 19, 2020.
- Ministry of Defence of India. “India and South Korea Sign two Landmark MoUs to Boost Defense Cooperation.” September 3, 2010.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Republic of Korea. “Republic of Korea–India Joint Statement: Towards A Strategic Partnership.” January 25, 2010.
- Press Information Bureau, Government of India. “Delhi Declaration of the ASEAN–India Commemorative Summit to Mark the 25th Anniversary of ASEAN–India Dialogue Relations.” January 25, 2018.
- Telecom Regulatory Authority of India. ““Indian Telecom Services Performance Indicator Report” for the Quarter ending October – December, 2020.” April 27, 2021.
-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Myanmar Integrated Country Strategy.” April 12, 2019.
- WTO. “Global Trade Rebound Beats Expectations but Marked by

Regional Divergences.” Press Release. October 4, 2021.  
\_\_\_\_\_. “Trade Set to Plunge as COVID-19 Pandemic Upends Global Economy.” Press Release. April, 2020.  
Yarrow, Noah and Riaz Bhardwaj. “Indonesia’s Education Technology during COVID-19 and beyond.” World Bank Blogs. May 19, 2020.

## 러시아어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Развити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26 декабря 2017 г. № 1640.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тратегия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Байкальского региона на Период до 2025 года.” РАСПОРЯЖЕНИЕ от 28 декабря 2009 г. N 2094-р.

“О реализац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рограммы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Развитие туризма в Приморском крае» на 2013–2021 годы» за 2018 год.”



# 최근 발간자료 안내

## 연구보고서

### 2019년도 연구보고서

#### <연구총서>

2019-01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전략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전망: 미국의 적대국 관계정상화 사례와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이기태 외	8,000원
2019-02	남북관계 2023: 도전요인과 대북정책 추진방향	김갑식 외	17,500원
2019-03	한반도 평화협정의 법적 쟁점과 과제	도경옥, 안준형	8,500원
2019-04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이재영, 김주리	8,000원
2019-05	화해협력 이론과 사례 그리고 한반도	서보혁 외	12,000원
2019-0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중협력방안	이재영 외	11,500원
2019-07	북한 여성의 일상생활과 젠더정치	조정아 외	11,000원
2019-08	북한 변화의 변수와 경로: '핵문제'와 '개혁·개방'의 조합을 중심으로	박영자 외	11,000원
2019-09	남북연합 연구: 이론적 논의와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이무철 외	15,000원
2019-10	뉴노멀시대 미중관계 변화와 한국의 대북·통일전략	신중호 외	18,000원
2019-11	남북한 인도협력 방안과 과제: 인도·개발·평화의 트리플 넥서스	홍석훈 외	9,000원
2019-12	남북 사회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류거버넌스 구축방안: 체육교류를 중심으로	이우태 외	9,000원
2019-13	분권형 대북정책 추진 전략과 실천과제: 대북교류협력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중심으로	나용우 외	10,000원
2019-14	북한 외교정책: 정책패턴과 북핵외교 사례분석	김진하 외	10,000원
2019-15	김정은 정권 핵심집단 구성과 권력 동학	오경섭 외	9,500원
2019-16	북한이탈주민 가치적응 실태연구: 지역사회통합 중심으로	김수경 외	7,500원
2019-17	변화하는 통일환경에 따른 대북·통일정책 개선과제: 신한반도체제 구상을 중심으로	조한범 외	14,500원
2019-18	남북교류협력 재개 과정에서의 신변안전 보호에 관한 연구 - 영사접견 기능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	이규창 외	11,500원
2019-19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대북 정책	이상신 외	24,000원
2019-20	한반도 평화와 남북 협력 종합연구 총론: 평화·경제·화해 협력 구상	서보혁	10,000원
2019-21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쟁점과 이행방안	서보혁 외	14,000원
2019-22	2019 한국인의 평화의식	박주화 외	19,000원

2019-22-01	평화역시 문항별 분석	박주화	18,500원
2019-22-02	평화역시 문항별 테이블	박주화	14,500원
2019-23	평화교육의 실태와 쟁점: 통일교육과의 접점을 중심으로	조정아 외	12,000원
2019-24	북한 실태 연구: 도시경제의 네트워크와 로지스틱스	홍 민 외	10,500원
2019-25	김정은 시대 서부 주요 도시의 기업현황 및 가동률 결정요인 분석	정은이 외	14,000원
2019-26	남북경협 발전 잠재력과 정책 과제	김석진, 홍제환	10,000원
2019-27	한반도 평화·번영 실현을 위한 국경 협력	현승수 외	14,000원
2019-28	한반도 접경국과의 초국경 관광·교통 협력	최장호 외	10,000원
2019-29	주변국의 사이버 환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채재병 외	8,500원
2019	제3세대 인권과 북한	인도협력연구실 편	16,500원

### 〈정책연구시리즈〉

2019-01	한반도 평화협정문 구상과 제안	김상기 외	
2019-02	국제전략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신남방정책	이기태, 배정호	
2019-03	국제 비교를 통해 본 북한의 생활수준	김석진, 홍제환	
2019-04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가 한국인의 주요 인접국가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미동맹과 한일관계를 중심으로	이상신 외	

### 〈Study Series〉

2019-01	North Koreans' Current Living Conditions Based on UNICEF Survey Results: With a Focus on the Status of Infant Nutrition	Hong, Jea Hwan	
2019-02	The Impact of Sanctions on the Enjoyment of Human Rights	Do, Kyung-ok·Baek, Sangme	
2019-03	South Koreans' Perception on Peace: With a Focus on Peace, War, the Way Peace is Realized, and the Attitude for Inter-Korean Reconciliation	Kim, Kap-Sik·Park, Juhwa	

### 2020년도 연구보고서

#### 〈연구총서〉

2020-01	평화경제 실현방안: 국제협력을 중심으로	김석진, 홍제환	10,000원
2020-02	남북한 주민 왕래 및 이주와 혼인에 관한 법적 연구	이규창, 문선혜	10,000원
2020-03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에 관한 연구	김수암 외	9,000원
2020-04	평화-인권-발전의 트라이앵글: 이론적 검토와 분석틀	홍석훈 외	11,000원
2020-05	중·러 협력과 한반도 평화·번영	현승수 외	11,500원
2020-06	한반도 평화번영과 북일관계 연구	이기태 외	8,000원

2020-07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 정치적 배경과 법적 기반 분석	민태은 외	8,500원
2020-08	남북기본합정 체결방향과 과제	도경욱 외	9,000원
2020-09	남북연합 구상과 추진방안	이무철 외	11,000원
2020-10	새로운 한반도 구상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김갑식 외	13,000원
2020-11	평화공감대 확산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박주화 외	12,500원
2020-12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정성윤 외	15,500원
2020-13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정은이 외	11,000원
2020-14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나용우 외	14,500원
2020-15	해외의 시각으로 본 신남방·신북방정책의 평가와 과제	나용우 외	17,500원
2020-16	2020 한국인의 평화의식	박주화 외	14,500원
2020-16-01	2020 한국인의 평화의식: 문항별 분석	박주화	16,500원
2020-16-02	2020 한국인의 평화의식: 문항별 테이블	박주화	16,500원
2020-17	'통일에 대한 태도'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박주화 외	12,500원
2020-18	평화경제의 비전과 추진방향: 남북 육상·해양협력을 중심으로	서보혁 외	20,000원
2020-19	국제 평화경제 사례와 한반도	조한범 외	11,500원
2020-20	북한의 발전전략과 평화경제: 사회기술시스템 전환과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홍 민 외	18,000원
2020-21	강대국 경쟁과 관련국의 대응: 역사적 사례와 시사점	신종호 외	23,000원
2020-22	북한의 인구변동: 추세, 결정요인 및 전망	홍제환 외	14,000원
2020-23	체제전환 과정에서의 인구구조 변화 연구	최장호 외	7,000원
2020-24	'지식경제시대' 북한의 대학과 고등교육	조정아 외	13,000원
2020-25	KINU 통일외식조사 2020: 주변국 인식 비교연구	이상신 외	24,500원
2020-26	김정은 정권 통치담론과 부문별 정책 변화: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담화·연설 분석	오경섭 외	14,500원

### 〈정책연구시리즈〉

2020-01	감염병 공동대응을 위한 남북인도협력	이규창 외
2020-02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분석과 국내외 정책 전망	민태은 외

### 〈Study Series〉

2020-01	The Peace Agre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Legal Issues and Challenges Do, Kyung-ok·Ahn, Jun-hyeong
2020-02	Variables and Pathways of Changes in North Korea: Focused on Different Combination of 'Nuclear Issues' and 'Reform·Opening' Park, Young-Ja·Jeong, Eun Mee·Han, Ki Bum
2020-03	Daily Lives of North Korean Women and Gender Politics Cho, Jeong-ah·Yee, Ji Sun·Yi, Hee Young
2020-04	2019 Annual Reports of Attitude of Koreans toward Peace and Reconciliation Park, Juhwa et al.



## 2021년도 연구보고서

### <연구총서>

2021-01 남북 민생협력의 효율적 추진방안: 추진체계, 사업기획 및 성과관리	김석진·홍제환 8,000원
2021-02 북한의 사회불평등 연구: 건강 및 교육 불평등과 인권	최규빈 외 9,000원
2021-03 국가상징의 문화적 형상과 북한의 브랜드 전략	이지순 외 9,000원
2021-04 남북 지식협력: 현황 및 추진방향	김수암 외 9,500원
2021-05 유네스코 공동등재를 활용한 남북 문화유산협력	이우태 외 11,000원
2021-06 미국의 평화정책과 전망: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한미관계	민태은 외 10,000원
2021-07 평화·통일 공공외교 추진기반 조성을 위한 민간의 역할과 개선방안: 주변 4국을 중심으로	전병근 외 14,500원
2021-08 동아시아 평화·번영을 위한 비전통 안보 협력	이재영 외 11,500원
2021-09 국제협력 성패 결정요인에 대한 이론 연구	정성운 10,500원
2021-10 북한의 정보화와 주민생활 변화	정은미 외 10,500원
2021-11 김정은 지배체제 구축과 권력 안정화	오경섭 외 10,500원
2021-12 김정은 정권의 핵 외교와 대외정책 변화	김진하 외 18,000원
2021-13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 경제정책, 대외무역, 주민생활	홍제환·김석진 10,000원
2021-14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사회정책: 복지과 통제를 중심으로	정은미 외 9,500원
2021-15 KINU 통일외식조사 2021: 통일·북한 인식의 새로운 접근	이상신 외 22,500원
2021-16 통일준비를 위한 북한의 SDGs 소개와 지표분석	황수환 외 16,000원
2021-17 남북 재해재난 공동관리시스템 구축 필요성과 추진방향	나용우 외 16,500원
2021-18 남북 접경지역 재해·재난 대응력 제고를 위한 '방재전이공간(TSDP)' 조성방안 기본 연구	김형수 외 9,500원
2021-19 북한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I: 여성과 섹슈얼리티	박영자 외 13,500원
2021-20 북한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II: 모성과 양육	이윤진 외 11,000원
2021-21 평화의 인권·발전 효과와 한반도	서보혁 외 11,000원
2021-22 미중 전략경쟁과 한국의 대응: 역사적 사례와 시사점	신중호 외 23,500원
2021-23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주변국 협력 방안	이기태 외 13,000원
2021-24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일본의 대한민국 협력 방안	최희식 외 11,000원
2021-25 세계질서의 재편과 신한반도체제	박은주 외 19,000원
2021-26 북한발전모델과 한반도 컨센서스	이재영 외 23,000원
2021-27 한반도 군비경쟁과 평화정착	장철운 외 14,000원
2021-28 한반도 생활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협력 방향 모색	최지영 외 16,500원
2021-29 북한 일상생활 공동체의 변화	최지영 외 12,000원
2021-30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김갑식 외 12,000원
2021-31-01 평화공감대 확산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박주화 외 10,000원
2021-31-02 2021 한국인의 평화의식	박주화 외 11,500원

2021-32	한반도 평화·비핵 프로세스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이무철 외	14,000원
2021-33	한반도 신경제구상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정은이 외	14,000원
2021-34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조한범 외	16,500원

### 〈정책연구시리즈〉

2021-01	2020년 미 대선 이후 한미관계 전망에 대한 여론조사	이상신 외
---------	--------------------------------	-------

### 〈Study Series〉

2021-01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Suk-Jin Kim
2021-02	North Korea's Income-Population Puzzle	Jea Hwan Hong · Suk-Jin Kim
2021-03	North Korea's College and University and Higher Education System in an 'Era of Knowledge Economy'	Jeong-ah Cho · Choon Geun Lee · Hyun-suk Oum
2021-04	A Study on the Access to Information of the North Korean People	Soo-Am Kim et al.

### KINU Insight

2018-01	2018년 김정은 신년사 분석과 정세 전망	홍 민 외
2019-01	2019년 김정은 신년사 분석과 정세 전망	홍 민 외
2019-02	김정은 정권의 정보화 실태와 특징: ICT 부문을 중심으로	정은미
2019-03	미국의 INF조약 탈퇴 의미와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안보 전략에 대한 함의	김주리
2019-04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문화예술적 표상과 시사점	이지순
2019-05	중국의 4차 산업혁명과 북한에 주는 함의	이재영
2019-06	한반도 국제정세의 역동성과 한국의 대응 방향	서보혁
2019-07	신한반도 체제 구상의 이해	조한범
2019-08	최근 한반도 정세 평가와 정책 과제	김갑식 외
2020-01	북한의 제7기 제5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분석과 정세 전망	홍 민 외
2020-02	평화의 경제적 가치: 2018 남북 간 주요 군사합의를 중심으로	장철운
2020-03	미국의 對北성공 관계정상화 프로세스와 대북정책	김유철
2020-04	대북제재 강화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 북중무역 감소의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최지영
2021-01	북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분석	홍 민 외
2021-02	김정은 시대 주요 전략·정책용어 분석	홍 민 외
2021-03	2014-2020년 북한시장의 소비자물가 및 환율 변동: 추세, 특징, 시사점	최지영

## 북한인권백서

---

북한인권백서 2018	한동호 외	2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8	한동호 외	24,000원
북한인권백서 2019	김수경 외	2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9	김수경 외	24,500원
북한인권백서 2020	이규창 외	21,5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20	이규창 외	27,000원
북한인권백서 2021	오경섭 외	21,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21	오경섭 외	27,000원

## 연례정세보고서

---

2018	2019 한반도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2019	2020 한반도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2020	2021 한반도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2021	2022 한반도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 정기간행물

---

통일정책연구, 제27권 1호 (201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7, No. 1 (2018)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7권 2호 (201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7, No. 2 (2018)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8권 1호 (201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8, No. 1 (2019)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8권 2호 (201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8, No. 2 (2019)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9권 1호 (2020)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9, No. 1 (2020)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9권 2호 (2020)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9, No. 2 (2020)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30권 2호 (2021)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30, No. 2 (2021)	10,000원

## 기타

---

2018	한반도 평화체제 및 비핵화 관련 자료집	박주화, 윤혜령 53,500원
2018	북한의 건강권	이금순 외
2018	The Right to Health in North Korea	Lee, Keumsoon et al.
2018	미·중·일·러 한반도 정책 연구 네트워크 다이렉토리	김진하 외
2020	동서 화해사상으로 본 통일공동체의 상과 과제	김범수 외
2020	DMZ 접경지역의 비평화 실태에 관한 인문학적 연구: 전략촌을 중심으로	정근식 외
2021	국제 평화문서 번역집	서보혁·용혜민 엮음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협동연구총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통일연구원 발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
- 나)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3, E-Mail: books@kinu.or.kr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 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kinu.or.kr

##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